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보고서 2013-31-08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 진미정 · 송유진 · 김가희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노인·아동·장애인 생활시설 중심으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송유진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31-08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발 행 일 2013년
저 자 김 유 경 외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경성문화사
가 격 9,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71-0 93330

발간사

우리나라 가구·가족변화 특징은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로 평균 가구원수는 2010년 2.69명으로 감소하였고, 주된 가구유형은 2인가구로 자리잡고 있다. 가구 유형은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1/5을 차지하고, 1세대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2세대 이상 가구는 감소하여 가구분화가 지속화되고 있고, 부부와 자녀중심의 핵가족화가 과반수를 초과하여 가구규모 및 가구유형 등에 다각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가정책은 가구 및 가족의 변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 주거정책 등 주요 사회정책이 4인 가구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1~2인 가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여 정책 효과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화 이후 한국의 가구 및 가족이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동양상을 보이는 지를 분석하고, 그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등을 파악하며,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국가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목적은 한국의 가구 및 가족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의미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수행 및 보고서 집필을 위한 연구진의 구체적인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요약(김유경)
제1장 서론(김유경)
제2장 이론적 배경(김가희·김유경)

제3장 가구·가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김유경)
제4장 가구·가족 변화실태와 정책적 함의(김유경·김가희)
제5장 선진국의 가구·가족변동과 대응사례(진미정)
제6장 가구·가족의 변화전망과 의미 분석(송유진)
제7장 가구·가족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김유경·진미정·송유진·김가희)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다.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위하여 검독을 해주신 김미숙 연구위원과 박세경 연구위원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 1

요약 ····· 3

제1장 서 론 ·····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4

제2장 이론적 배경 ····· 21

제1절 가구·가족변화의 개념 및 인식·태도 ····· 23

제2절 가구 및 가족변화 원인 ····· 30

제3절 가구 및 가족변화 관련 연구동향 분석 ····· 51

제3장 가구·가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 57

제1절 지역별 가구 및 가족구조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 59

제2절 지역별 가구주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 86

제3절 시사점 ····· 95

제4장 가구·가족 변화실태와 정책적 함의 ····· 97

제1절 가족형성 및 해체 변화 ····· 99

제2절 가족관계 변화 ····· 166

제3절 가족기능 변화 ····· 184

제4절 정책적 함의 ····· 202

제5장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동과 대응사례 ····· 205

제1절 선진국의 가구·가족변동 원인 ····· 207

제2절 선진국의 가구·가족변동 실태 ····· 216

제3절 선진국의 가족정책 실태 ····· 238

제4절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동의 특성 및 전망 ····· 245

제6장 가구·가족의 변화 전망과 의미 분석 ····· 251

제1절 가족변화의 원인 전망 ····· 253

제2절 가족형성과 해체의 변화 전망 ····· 256

제3절 가족관계의 변화 전망 ····· 269

제4절 가족기능의 변화 전망 ····· 272

제5절 가구·가족 전망 및 정책적 의미 분석 ····· 279

제7장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 283

제1절 가구·가족변화 관련 정책방향 ····· 285

제2절 가구·가족변화 관련 정책적 대응방안 ····· 286

참고문헌 ····· 309

부 록 ····· 315

부록 1.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 315

부록 2.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 322

표 목차

〈표 1- 1〉 전화조사내용 ····· 17
〈표 2- 1〉 성별 평균 초혼연령(1970~2010) ····· 31
〈표 2- 2〉 합계출산율의 변화(1970~2010) ····· 32
〈표 2- 3〉 OECD국가의 합계출산율 비교(2008년) ····· 32
〈표 2- 4〉 평균수명 변동추이(1970~2010) ····· 33
〈표 2- 5〉 노인인구 대비 유소년인구비율(1970~2010) ····· 33
〈표 2- 6〉 OECD국가의 노인인구비율 비교(2010년) ····· 34
〈표 2- 7〉 평균수명 변동추이(1983~2010) ····· 34
〈표 2- 8〉 결혼에 대한 태도변화 추이(1998~2012) ····· 36
〈표 2- 9〉 성 및 연령별 미혼율 변화추이(1970~2010) ····· 36
〈표 2-10〉 우리나라 기혼부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변화 추이(1991~2012) ····· 37
〈표 2-11〉 자녀관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2010) ····· 38
〈표 2-12〉 성역할에 대한 태도(2012) ····· 39
〈표 2-13〉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변화 추이(2002~2012) ····· 40
〈표 2-14〉 부모부양 책임자에 대한 견해(1983~2012) ····· 41
〈표 2-15〉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에 대한 태도(2005) ····· 42
〈표 2-16〉 부모부양 및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책임에 대한 태도(2010) ····· 42
〈표 2-17〉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1970~2012) ····· 44
〈표 2-18〉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1970~2012) ····· 45
〈표 2-19〉 전국 시도 간 인구이동 변동추이(1970~2009) ····· 45
〈표 2-20〉 교육정도별 이동률 변동추이(1995~2005) ····· 46
〈표 2-21〉 도시화율 변화추이(1970~2010) ····· 47
〈표 2-22〉 전체 인구대비 수도권 인구비율 변화추이(1970~2010) ····· 47
〈표 2-23〉 5세 이상 인구의 성별 학력 구성비(1970~2010) ····· 48
〈표 2-24〉 고등교육기관 취학률(1970~2003) ····· 49

〈표 2-25〉 성 및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추이(1970~2012) ····· 49
〈표 2-26〉 혼인상태 및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추이(1981~2012) ····· 50
〈표 2-27〉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변화추이(1971~2012) ····· 50
〈표 2-28〉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중 여성비율 변화추이(1983~2012) ····· 50
〈표 4- 1〉 가족형성에 대한 견해 ····· 103
〈표 4- 2〉 연도별 미혼남녀(20~44세)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 조건 ····· 104
〈표 4- 3〉 배우자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 ····· 105
〈표 4- 4〉 현재 배우자를 만난 경로 ····· 106
〈표 4- 5〉 기혼남성의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 107
〈표 4- 6〉 기혼여성의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 107
〈표 4- 7〉 가족주기 각 단계의 시작 및 종결당시 부인1)의 평균연령 ····· 111
〈표 4- 8〉 가족주기 각 단계별 기간 ····· 114
〈표 4- 9〉 가족주기 중 부부만의 기간, 자녀양육기간, 여자 노인만의 기간 ····· 115
〈표 4-10〉 이혼에 대한 태도변화 추이(1998~2012) ····· 116
〈표 4-11〉 기혼남녀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한다'에 대한 태도변화 추이(2006~2012) ·· 117
〈표 4-12〉 전체 기혼가구 대비 사별가구와 성별 기혼가구주 대비 사별가구주 비율 (1975~2010) ····· 118
〈표 4-13〉 성별 사별인구수의 변화(1970~2010) ····· 118
〈표 4-14〉 40대 남자의 사망구성비(1970~2010) ····· 119
〈표 4-15〉 성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 및 사망원인순위의 변화추이(1990~2010) ····· 120
〈표 4-16〉 총 이혼건수와 조이혼율(1970~2010) ····· 120
〈표 4-17〉 이혼사유의 변화추이(1970~2010) ····· 121
〈표 4-18〉 평균 이혼연령과 동거기간 및 15세 이상 동거부부의 이혼비율(2000~2010) 121
〈표 4-19〉 전체 1인가구 중 이혼·사별가구 분포(1985~2010) ····· 122
〈표 4-20〉 전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의 변화 및 유형(1970~2010) · 123
〈표 4-21〉 1인 가구유형별 근로유형 ····· 124
〈표 4-22〉 1인 가구유형별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사직 또는 폐업 경험 및 이유 ····· 125

〈표 4-23〉 1인 가구유형별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평균 근로기간 및 한 달 평균 근로일수 ····· 125
〈표 4-24〉 1인 가구유형별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26
〈표 4-25〉 1인 가구유형별 미취업자(근로능력자)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기간 127
〈표 4-26〉 1인 가구유형별 주택소유형태 ····· 127
〈표 4-27〉 1인 가구유형별 평균 재산보유 및 부채규모 ····· 128
〈표 4-28〉 1인 가구유형별 월평균 경상소득·소비수준 및 생활비 ····· 129
〈표 4-29〉 1인 가구유형별 빈곤 및 사회보장수준 ····· 130
〈표 4-30〉 1인 가구유형별 지난 1년간 근심·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 ····· 131
〈표 4-31〉 1인 가구유형별 평균 가족관계 만족도 ····· 131
〈표 4-32〉 1인 가구유형별 평균 생활만족도 ····· 132
〈표 4-33〉 1인 가구유형별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유형 ····· 133
〈표 4-34〉 1인 가구유형별 건강보험 미가입 유형 및 의료급여 서비스의 문제점 ····· 134
〈표 4-35〉 1인 가구유형별 건강보험 미납경험 및 문제점 ····· 135
〈표 4-36〉 1인 가구유형별 월 평균 총 민간의료 보험료 지출액 ····· 136
〈표 4-37〉 1인 가구유형별 우울정도 ····· 136
〈표 4-38〉 1인 가구유형별 자아존중감 ····· 137
〈표 4-39〉 연도별 한부모가구의 변화 및 유형(1970~2010) ····· 138
〈표 4-40〉 미성년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2000~2012) ····· 138
〈표 4-41〉 한부모가족유형별 근로유형 ····· 139
〈표 4-42〉 한부모가족유형별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사직 또는 폐업 경험 및 이유 ····· 140
〈표 4-43〉 한부모가족유형별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평균 근로기간 및 한 달 평균 근로일수 ····· 141
〈표 4-44〉 한부모가족유형별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41
〈표 4-45〉 한부모가족유형별 미취업자(근로능력자)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기간 ····· 142
〈표 4-46〉 한부모가족 유형별 주택소유형태 ····· 142

〈표 4-47〉 한부모가족유형별 평균 재산보유 및 부채규모 ····· 143
〈표 4-48〉 한부모가족유형별 월평균 경상소득·소비수준 및 주관적 최저생계비 ····· 144
〈표 4-49〉 한부모가족유형별 빈곤 및 사회보장수준 ····· 145
〈표 4-50〉 한부모가족유형별 지난 1년 간 근심·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 ····· 146
〈표 4-51〉 한부모가족유형별 가족구성원의 문제해결방식 ····· 147
〈표 4-52〉 한부모가족유형별 평균 가족관계 만족도 ····· 147
〈표 4-53〉 한부모가족유형별 평균 가족생활만족도 ····· 148
〈표 4-54〉 한부모가족유형별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유형 ····· 149
〈표 4-55〉 한부모가족유형별 건강보험 미가입 유형 및 의료급여 서비스의 문제점 ····· 150
〈표 4-56〉 한부모가족유형별 건강보험 미납경험 및 문제점 ····· 151
〈표 4-57〉 한부모가족유형별 월 평균 총 민간의료 보험료 지출액 ····· 151
〈표 4-58〉 한부모가족유형별 우울정도 ····· 152
〈표 4-59〉 한부모가족유형별 자아존중감 ····· 152
〈표 4-60〉 연도별 조손가구의 변화(1995~2010) ····· 153
〈표 4-61〉 연도별 새싹가구의 변화(1985~2010) ····· 154
〈표 4-62〉 조손·새싹가구의 발생원인(2000~2010) ····· 154
〈표 4-63〉 조손 및 새싹가족의 근로유형 및 임금 근로자의 노조 가입여부 ····· 155
〈표 4-64〉 조손 및 새싹가족의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사직 경험 및 이유 ····· 155
〈표 4-65〉 조손 및 새싹가족의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평균 근로기간 및
한 달 평균 근로일수 ····· 156
〈표 4-66〉 조손 및 새싹가족의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56
〈표 4-67〉 조손 및 새싹가족의 주택소유형태 ····· 157
〈표 4-68〉 조손 및 새싹가족의 평균 재산보유 및 부채규모 ····· 157
〈표 4-69〉 조손 및 새싹가족의 평균 가구소득·소비수준 및 생활비 ····· 158
〈표 4-70〉 조손 및 새싹가족의 빈곤 및 사회보장수준 ····· 158
〈표 4-71〉 조손 및 새싹가족의 지난 1년 간 근심·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 ····· 160
〈표 4-72〉 조손 및 새싹가족의 가족구성원의 문제해결방식 ····· 160
〈표 4-73〉 조손 및 새싹가족의 평균 가족관계 만족도 ····· 161

〈표 4- 74〉 조손 및 새싹가족의 평균 가족생활만족도 ····· 161
〈표 4- 75〉 조손 및 새싹가족의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유형 ····· 162
〈표 4- 76〉 조손 및 새싹가족의 건강보험 미가입 유형 및 의료급여 서비스의 문제점 · 163
〈표 4- 77〉 조손 및 새싹가족의 건강보험 미납경험 및 문제점 ····· 164
〈표 4- 78〉 조손 및 새싹가족의 월 평균 총 민간의료 보험료 지출액 ····· 164
〈표 4- 79〉 조손 및 새싹가족의 우울정도 ····· 165
〈표 4- 80〉 조손 및 새싹가족의 자아존중감 ····· 165
〈표 4- 81〉 성 및 연령별 가족관계의 중요도(1순위) ····· 169
〈표 4- 82〉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 ····· 171
〈표 4- 83〉 부부간 의사결정권 변화 ····· 172
〈표 4- 84〉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변화 ····· 173
〈표 4- 85〉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 변화 ····· 173
〈표 4- 86〉 성 및 연령별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견해(찬성비율) ····· 174
〈표 4- 87〉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1998~2012) ····· 175
〈표 4- 88〉 자녀가치관의 변화 ····· 176
〈표 4- 89〉 자녀를 기르는 의미 ····· 177
〈표 4- 90〉 자녀양육방식 변화 ····· 177
〈표 4- 91〉 자녀양육책임 범위 변화 ····· 178
〈표 4- 92〉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1998~2012) ····· 178
〈표 4- 93〉 성 및 연령별 자녀에 대한 견해(찬성비율) ····· 179
〈표 4- 94〉 자녀와의 관계만족도(1970~2012) ····· 180
〈표 4- 95〉 성 및 연령별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책임 범위에 대한 견해 ····· 182
〈표 4- 96〉 부모와의 동거형태(1998~2012) ····· 183
〈표 4- 97〉 부모와의 교류 변화(1998~2012) ····· 183
〈표 4- 98〉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998~2012) ····· 184
〈표 4- 99〉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상 지위 변화 ····· 186
〈표 4-100〉 가구주의 소득유형별 평균소득 및 분포 변화 ····· 187
〈표 4-101〉 가구주의 가계지출 분포 변화 ····· 189

〈표 4-102〉 사회적 여건 마련시 출산의향 변화 ····· 193
〈표 4-103〉 가족부양에 대한 견해 ····· 195
〈표 4-104〉 자녀돌봄 분담방식 ····· 196
〈표 4-105〉 배우자와 돌봄 노동 분담의 공평성 인지 변화 ····· 197
〈표 4-106〉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주로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 변화 ····· 198
〈표 4-107〉 65세 이상 노인 돌봄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 199
〈표 4-108〉 돌봄이 필요한 65세 미만 기타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사람 변화 ····· 199
〈표 4-109〉 돌봄이 필요한 65세 미만 기타 가족원으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 200
〈표 4-110〉 가족변화 전·후 가족의 기능변화 정도 ····· 201
〈표 5- 1〉 배우자 유무 및 유형으로 본 가구구성 비율 ····· 220
〈표 5- 2〉 자녀유무 및 자녀수에 따른 이혼 분포(2007 또는 가장 최근 년도 자료 기준) · 224
〈표 5- 3〉 0~14세 아동의 거주유형별 분포(2007년 기준) ····· 228
〈표 5- 4〉 주 활동 별 하루 사용 시간 비율: 15세 이상 남성 인구(1999~2008) ····· 235
〈표 5- 5〉 주 활동 별 하루 사용 시간 비율: 15세 이상 여성 인구(1999~2008) ····· 236
〈표 5- 6〉 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2011) ····· 241
〈표 6- 1〉 결혼에 대한 태도: 사회조사 결과 ····· 257
〈표 6- 2〉 결혼에 대한 태도: 전화조사 결과 ····· 258
〈표 6- 3〉 동거에 대한 태도: 사회조사 결과 ····· 260
〈표 6- 4〉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의 태도 ··· 261
〈표 6- 5〉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의 태도 ····· 261
〈표 6- 6〉 이혼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 결과 ····· 263
〈표 6- 7〉 재혼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 결과 ····· 264
〈표 6- 8〉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 264
〈표 6- 9〉 공동체가족의 증가가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변화 ····· 268
〈표 6- 10〉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범위에 대한 견해 ····· 270
〈표 6- 11〉 '부부보다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하다'에 대한 견해 ····· 271
〈표 6- 12〉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273
〈표 6- 13〉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책임 수준에 대한 견해 ····· 277

그림 목차

[그림 1- 1] 연도별 가구원수의 변화 ····· 12
[그림 1- 2] 지역별 1인가구 비율 ····· 12
[그림 1- 3] 연구흐름도 ····· 19
[그림 2- 1] 성별 가족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에 대한 인식 ····· 27
[그림 2- 2] 연령별 가족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에 대한 인식 ····· 27
[그림 2- 3] 성별 가족변화로 가족 생활 중 가장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한 인식 ····· 27
[그림 2- 4] 연령별 가족변화로 가족 생활 중 가장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한 인식 ····· 27
[그림 2- 5] 성별 가족변화가 사회적 문제인지에 대한 태도 ····· 28
[그림 2- 6] 연령별 가족변화가 사적 문제 인지에 대한 태도 ····· 28
[그림 2- 7] 성별 가족변화의 국가적 정책대응 필요도에 대한 태도 ····· 29
[그림 2- 8] 연령별 가족변화의 국가적 정책대응 필요도에 대한 태도 ····· 29
[그림 3- 1] 연도 및 지역별 가구수 ····· 60
[그림 3- 2] 연도 및 지역별 가구증가율 ····· 60
[그림 3- 3] 연도 및 수도권·특광역시·도지역별 가구수 ····· 62
[그림 3- 4] 연도 및 수도권·특광역시·도지역별 가구증가율 ····· 62
[그림 3- 5] 연도 및 특별시·6대광역시별 가구수 ····· 63
[그림 3- 6] 연도 및 특별시·6대광역시별 가구증가율 ····· 63
[그림 3- 7] 연도 및 9대도지역별 가구수 ····· 64
[그림 3- 8] 연도 및 9대도지역별 가구증가율 ····· 65
[그림 3- 9] 연도 및 가구원수별 분포: 전국 ····· 66
[그림 3-10] 연도 및 가구원수별 분포: 동부 ····· 67
[그림 3-11] 연도 및 가구원수별 분포: 읍·면부 ····· 67
[그림 3-12] 연도 및 가구원수별 분포: 수도권 ····· 70
[그림 3-13] 연도 및 가구원수별 분포: 특·광역시 ····· 70
[그림 3-14] 연도 및 가구원수별 분포: 도지역 ····· 71
[그림 3-15] 연도 및 지역별 평균 가구원수 ····· 73

[그림 3-16] 연도 및 수도권·특광역시·도지역별 평균 가구원수 ····· 74
[그림 3-17] 연도 및 특별시·6대광역시별 평균 가구원수 ····· 75
[그림 3-18] 연도 및 9대도지역별 평균 가구원수 ····· 75
[그림 3-19] 연도 및 세대구성별 분포: 전국 ····· 76
[그림 3-20] 연도 및 세대구성별 분포: 동부 ····· 77
[그림 3-21] 연도 및 세대구성별 분포: 읍·면부 ····· 78
[그림 3-22] 연도 및 세대구성별 분포: 수도권 ····· 79
[그림 3-23] 연도 및 세대구성별 분포: 특·광역시 ····· 80
[그림 3-24] 연도 및 세대구성별 분포: 도지역 ····· 81
[그림 3-25] 연도 및 가구유형별 분포: 전국 ····· 82
[그림 3-26] 연도 및 가구유형별 분포: 동부 ····· 83
[그림 3-27] 연도 및 가구유형별 분포: 읍·면부 ····· 84
[그림 3-28] 연도 및 가구유형별 분포: 수도권 ····· 84
[그림 3-29] 연도 및 가구유형별 분포: 특·광역시 ····· 85
[그림 3-30] 연도 및 가구유형별 분포: 도지역 ····· 86
[그림 3-31] 연도 및 가구주의 성별 분포: 전국 ····· 87
[그림 3-32] 가구주의 성별 분포: 동부 ····· 88
[그림 3-33] 가구주의 성별 분포: 읍·면부 ····· 88
[그림 3-34] 연도 및 가구주의 성별 분포: 수도권 ····· 88
[그림 3-35] 가구주의 성별 분포: 특광역시 ····· 89
[그림 3-36] 가구주의 성별 분포: 도지역 ····· 89
[그림 3-37]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전국(3개 집단) ····· 90
[그림 3-38]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전국(10세 간격) ····· 90
[그림 3-39]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동부(3개 집단) ····· 90
[그림 3-40]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동부(10세 간격) ····· 90
[그림 3-41]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읍·면부(3개 집단) ····· 91
[그림 3-42]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읍·면부(10세 간격) ····· 91
[그림 3-43]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수도권(3개 집단) ····· 91

[그림 3-44]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수도권(10세 간격) ····· 91
[그림 3-45]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특광역시(3개 집단) ····· 92
[그림 3-46]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특광역시(10세 간격) ····· 92
[그림 3-47]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도지역(3개 집단) ····· 92
[그림 3-48]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도지역(10세 간격) ····· 92
[그림 3-49] 연도 및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전국 ····· 93
[그림 3-50] 연도 및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동부 ····· 94
[그림 3-51] 연도 및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읍면부 ····· 94
[그림 3-52] 연도 및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수도권 ····· 94
[그림 3-53] 연도 및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특광역시 ····· 95
[그림 3-54] 연도 및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도지역 ····· 95
[그림 4- 1] 결혼에 대한 태도변화 추이 ····· 100
[그림 4- 2] 재혼에 대한 태도변화 추이 ····· 100
[그림 4- 3]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 101
[그림 4- 4] 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 ····· 101
[그림 4- 5] 성별 재혼에 대한 태도 ····· 102
[그림 4- 6] 연령별 재혼에 대한 태도 ····· 102
[그림 4- 7] 부부간 혼인유형변화 추이 ····· 102
[그림 4- 8] 성별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 166
[그림 4- 9] 연령별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 166
[그림 4-10] 성별 '가족'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항목에 대한 의견 ····· 167
[그림 4-11] 연령별 '가족'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항목에 대한 의견 ····· 167
[그림 4-12] 성별 '가족'에 대한 견해 ····· 168
[그림 4-13] 연령별 '가족'에 대한 견해 ····· 168
[그림 4-14] 부모부양가치관 ····· 181
[그림 4-15] 가족 중 부모부양 책임자 ····· 181
[그림 4-16] 가구소득유형 변화(2005년, 2010년) ····· 188
[그림 4-17] 연도별 자녀필요도 변화 ····· 190

[그림 4-18] 자녀관의 변화 ····· 191
[그림 4-19] 현존자녀수와 이상 자녀관 변화 ····· 192
[그림 4-20] 향후 출산계획 ····· 193
[그림 4-21] 향후 자녀 계획 있을 시 희망자녀수 ····· 193
[그림 4-22] 가족부양 및 성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2005년, 2010년) ····· 194
[그림 5- 1] 선진국의 조혼인율의 변화 추이(1970~2009) ····· 217
[그림 5- 2] 선진국의 초혼 비율 변화 추이(1970~2008) ····· 218
[그림 5- 3] 선진국의 초혼 연령 변화 추이(2008년 기준) ····· 219
[그림 5- 4] 부분적 동거' 비율 변화 추이(2001~2003) ····· 221
[그림 5- 5] 선진국의 조이혼율 변화 추이(1970~2008) ····· 222
[그림 5- 6] 이혼 전 결혼지속 년수 변화(1980~2008) ····· 223
[그림 5- 7] 자녀유무에 따른 이혼 및 별거 비율
(2007 또는 가장 최근 년도 자료 기준) ····· 225
[그림 5- 8] 유자녀 이혼 및 별거 비율의 변화 추이(1980~2000) ····· 226
[그림 5- 9] 자녀규모의 변화 추이(1970~2011) ····· 229
[그림 5-10] 혼외 출산 비율(2009) ····· 230
[그림 5-11] 혼외 출산 비율의 변화 추이(1970~2009) ····· 230
[그림 5-12] 가구규모별 분포(2000년대 초중반) ····· 231
[그림 5-13] 여성 취업률과 모성 취업률 비교(2009) ····· 232
[그림 5-14] 국가별 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수준 비교(2011) ····· 234
[그림 5-15] 18세 이상 여성 인구의 주당 돌봄 활동 시간(1999~2008) ····· 237
[그림 5-16] 18세 이상 남성 인구의 주당 돌봄 활동 시간(1999~2008) ····· 238
[그림 5-17]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2009) ····· 239
[그림 5-18] 무급 및 유급 모성휴가(육아휴직포함) 기간(2011~2012) ····· 242
[그림 5-19] 무급 및 100% 유급 부모휴가 기간(2011~2012) ····· 243
[그림 5-20] 3~5세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 비율 ····· 244
[그림 5-21]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 비율 ····· 244

Abstract

The Changes in the Family and Household Structures and Social Welfare Policies

Changes in family and household structures in Korea are characterized by nuclear and small families, and major household type has been a two-person household as the averag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reduced to 2.69 in 2010. One-person households account for one-fifth of all households. One-generation households have increased in number. On the other hand, households with more than two generations have reduced, and then, household differentiation has been continued.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size and type of households because nuclear families consisting of a couple and their children have majo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basic data to establish appropriate national policies by analyzing how families and households in Korea have time-sequentially changed after industrialization,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family life and taking political measur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provide basic data to establish effective national policies by analyzing chronological changes in families and households in Korea and deriving political meaning and measure based on changes in families and households.

The political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uild infrastructure such as paradigm shift, shift to a universal caregiving model, family stability and diversity, and improvement of statistical and research tools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families. Second,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in response to changing family types, and family competence should be enhanced by life-cycle.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explore policies to maintain and control family formation and support population and to expand family policies including various family life cycles in order to maintain a sustainable society.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martial relationship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and to enhance family cohesion for exploring desirable family relations with a shift to small and nuclear families. Fifth,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local community-oriented caregiving networks, to ease the parental burden,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caregiving culture in families, and to take measures to reduce conflicts from various perspectives for strengthening family caregiving and support functions. Sixth, policies to minimize family disorganization and to prevent economic, psychological and emotional vulnerabilities should be explored in response to family disorganization, and it will be necessary to enhance various family protection functions and to change the structure of living space with a shift to small families.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가구·가족변화 특징은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로 평균 가구원수는 2010년 2.69명으로 감소하였고, 주된 가구유형은 2인가구로 자리잡고 있다. 가구유형은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1/5을 차지하고, 1세대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2세대 이상 가구는 감소하여 가구분화가 지속화되고 있고, 부부와 자녀중심의 핵가족화가 과반수를 초과하여 가구규모 및 가구유형 등에 다각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 이후 한국의 가구 및 가족이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동양상을 보이는 지를 분석하고, 그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등을 파악하며,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국가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목적은 한국의 가구 및 가족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의미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1970~201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자료 및 가족관련 통계자료를 재분석하고,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가구·가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는 211%의 증가를 보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5% 미만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집중과 교육 및 취업생활로 인한 가족분거 등으로 인한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평균 가구원수는 2010년 2.69명으로 개인주의화에 따른 자녀분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증가, 만혼현상, 이혼율 증대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한 1~2인 가구의 급증과 1세대 중심의 핵가족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40년간 우리나라의 가족변화는 소가족화를 의미하는 가족규모의 축소,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이행되는 가족세대의 단순화 등의 특징을 보인다.

가구주는 생계부양과 관련이 높으므로 가구주 구성의 변화는 정책적인 의미를 가진다. 40년 간 가구주의 연령구성은 중년층 이하는 감소하고 장년층과 노년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서 가구주의 고령화 현상을 의미한다. 남성가구주가 여성보다 3배 정도 많으나 여성가구주의 증가속도가 빨라져서 이는 이혼·사별 등의 해체에서 오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며, 실제 가구주의 혼인상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30년간 이혼·별거로 가구주가 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 가구주도 증가하고 있어서 가족형성과 가족주기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2. 가구·가족의 변화실태와 정책적 함의

가족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인 결혼가치는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변하여 전통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누구나 반드시 결혼

을 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개인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필요성에 대한 의식 약화와 함께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주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이혼 및 재혼 의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어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며, 이혼이나 사별 후 자녀를 키우면서 일생을 홀로 보내기보다는 재혼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가족형성의 지연과 가족가치의 약화는 가족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변화 측면에서 가족주기의 변화 양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형성기부터 자녀의 양육기를 거쳐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시기까지 가족주기의 전기단계는 단축되는 반면, 자녀의 결혼이 완료되어 부부만이 남는 시기와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자 남은 여생을 보내는 가족주기의 후기단계는 점차 연장되는 추세이다.

가족변화에 밀접하게 영향 받는 영역은 가족관계로 우리나라 부부관계는 가부장적인 구조가 지배적으로 이러한 가부장적 가치관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갈등적인 요인들을 제공한다. 날로 증가하는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주가계부양자로서 남편, 가사담당자로서 부인'의 부부간 성역할분담이 현실적으로 많이 변화하였음에도 아직 전통적 가치관에 지배를 받고, 그 결과 가족이 사회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한편, 가족기능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위로서 가족행동을 의미하며 그 행동의 결과가 사회의 유지, 존속이나 가족성원의 욕구충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는 소가족화·핵가족화, 가족해체 등으로 가족 돌봄 및 부양기능을 비롯하여 재생산 및 사회보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되는 추세로 가족대신에 사회가 가족

돌봄 및 부양기능 등을 어느 정도 분담하는 사회적 책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동과 대응사례

OECD 32개국을 대상으로 한 Family Database 자료를 활용하여 선진국의 가구·가족변화 원인과 경향을 보면 먼저 혼인율은 1970~2009년 약 40년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아졌고, 특히 전체 평균은 1970년 8.0에서 2009년 5.0으로, 한국은 9.20에서 7.13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혼인적령인구의 감소, 자발적, 비자발적 비혼인구의 증가, 혼인 대신 동거 등 다른 가족유형을 선택하는 인구증가 등의 현상과 관련된다.

가구유형을 OECD 전체 평균기준으로 보면, 부부가구(자녀포함) 57.6%, 한부모가구 9.1%, 1인가구 27.7%, 기타 유형 가구가 7.0%이었고, 한부모가구의 84.5%가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다.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현상 중 개인화 현상은 가족영역에서의 책임과 부담의 완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아동이나 노인에게는 돌봄의 공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개인화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확고한 추세로 나타나며, 가족제도와 전통이 공고한 일본, 대만,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 인구학적 변화에도 반영된다.

4. 가구·가족의 변화전망과 의미 분석

미래 가족변화의 원인은 경제 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 정책적 변화, 인구학적 구성, 가치관의 변화로 요약된다.

가족형성전망과 관련하여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남녀 간 불평등이 어떻게 조율되고 변화하는가에 따라 결혼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

며, 연령별 가치관 차이는 결혼의 당위성이 계속 낮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동거는 많은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결혼과 동등한 합법적 결합으로 인정된다. 아직까지는 동거가 사회적으로 공식적,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통계로 집계되지 않지만, 동거에 대한 찬성도가 40% 가량 되고 젊은 연령일수록 찬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족해체 및 재구성과 관련하여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젊은 연령대의 허용도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이혼과 재혼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에는 동거,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재혼으로 인한 복합가족 뿐 아니라 가족이 공간적으로 떨어져서 사는 분거가족과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공동체가족 등이 다양하게 출현할 전망이다. 미래 가족관계는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부모-자녀 관계보다는 부부 중심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기능과 관련하여 결혼과 자녀의 중요성이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자녀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의 요건이 되도록 사회적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면 출산수준은 높아질 수도 있다.

가족의 돌봄 기능에서 자녀 돌봄의 주된 기능은 가족에서 쉽게 벗어날 것 같지 않은 반면 노부모의 경우는 같이 살면서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가족과 사회, 정부가 분담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래가족변화와 관련하여 자발적 선택여부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1. 정책방향

가구·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다변화되는 가족유형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하고, 생애주기별로 가족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유지를 위해 가족형성 및 부양인구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다양한 가족생활주기를 포괄하는 가족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가족화·핵가족화에 따른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정립하고, 다섯째, 가족 돌봄·부양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가족해체에 대응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다양한 가족의 보호기능 강화 및 소가족화에 따른 주거 공간 구조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가구·가족 변화 관련 정책적 대응방안

정책적 대응방안은 크게 가족 변화 관련 패러다임의 전환 및 기반 마련, 가족변화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형성 약화 및 가족주기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대응방안 모색, 소가족화·핵가족화에 따른 바람직한 가족관계 모색, 가족 돌봄 및 부양기능 강화를 통한 가족안정화 제고, 가족해체와 미래 다양한 가족의 대응방안 모색 등 총 6개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가구·가족변동, 가족변화, 가족형성 및 해체, 가족관계, 가족기능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가구·가족변화의 두드러진 현상은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이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가구분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1980년 4.62명에서 2010년 2.69명으로 30년 간 1.93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가구유형은 1990년 이후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는 4인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하여 4인가구 중심에서 2인가구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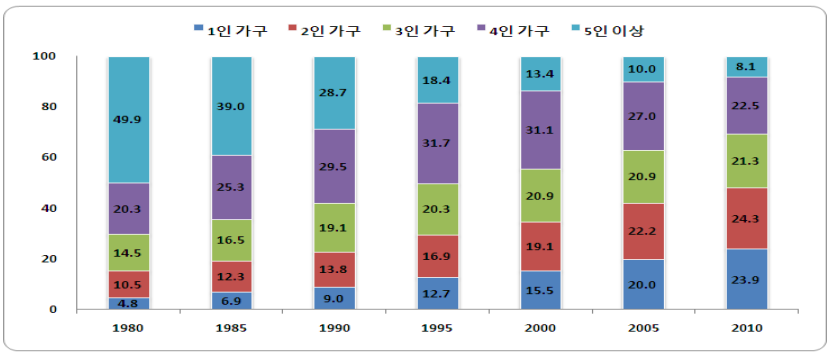
한편, 1인가구 비율은 1980년 4.8%에서 2010년 23.9%(4,142천 가구)로 30년 간 5배 증가하였다(그림 1-1 참조). 특히 2010년 1인 가구의 연령 및 성별 분포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1/5인 19.2%가 70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고, 성별 분포는 여자가 53.5%, 남자는 46.5%이며, 그 중에서 남자는 30대, 여자는 70세 이상에서 비율이 높았다(통계청, 2010). 지역별로도 읍·면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은 27.1%로 동지역(23.1%)보다 4.0%pt 높았고, 시도별로는 전남이 28.9%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20.3%로 가장 낮았다(그림 1-2 참조).

가구변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특징은 세대가구의 단순화 현상이다. 1세대 가구는 증가한 반면, 2세대 이상 가구는 감소하여 가구 분화가 계속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1세대 가구는 1980년 8.3%에서 2010년 17.5%로 30년간 2배로 늘어난 반면, 주된 세대 유형인 2세대 가구는 동

기간 68.5%에서 51.3%로 17.2%pt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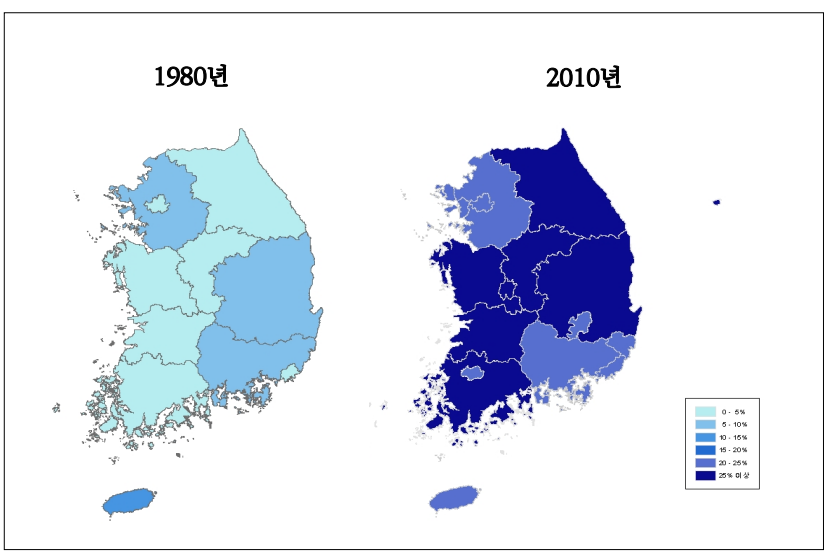
[그림 1-1] 연도별 가구원수의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1980~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1-2] 지역별 1인가구 비율



자료: 통계청(1980, 2010). 인구주택총조사.

가족유형과 관련하여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유형인 핵가족 비율은 1980년 68.3%에서 2010년 61.6%로 30년 간 6.7%pt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가구규모 및 가족구조 등이 소가족화 핵가족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국가정책은 가구 및 가족의 변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복지 및 주거정책 등 주요 사회정책이 4인 가구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1~2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서 정책 효과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의 가구 및 가족이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동양상을 보이는 지를 분석하고, 그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등을 파악하며,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국가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가구 및 가족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의미 및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0~2010년 가구 및 가족의 시계열적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가구·가족변동의 정책적 의미를 파악한다.

둘째, 가구·가족의 변화가 가족형성 및 해체, 가족관계, 가족기능 등 전반적인 가족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셋째,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동 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가구·가족의 변화를 전망하여 정책적 의미를 분석한다.

셋째, 변동추이와 가족영역별 변화 양상, 선진국 사례 및 가구·가족 변화전망을 기반으로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전체 7개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론을 제외하면 6개 핵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영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가구 및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3장은 지역별로 가족규모 및 가족유형 그리고 가구주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제4장은 가구 및 가족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진단한다. 제5장은 주요 선진국의 가구 및 가족 변동양상과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제6장은 가구 및 가족변화의 향후 전망과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가족 및 가족변화에 대한 이론, 변화추이와 실태, 선진국의 사례분석, 변화전망 등을 중심으로 가구 및 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가. 가구·가족변화 원인진단 및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제2장은 가구 및 가족변화의 개념을 살펴보고 범위를 정리하며 인구학적, 가치관적 및 사회적 요인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가구·가족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가구 및 가족변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나. 가구·가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제3장은 가족규모, 세대구성 및 가구·가족유형 그리고 가구주 특성을 전국 및 2대 지역(동부, 읍·면부), 수도권, 7대 특별시·광역시, 9대 도지역을 중심으로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한다.

다. 가구·가족의 변화실태와 정책적 함의

가구·가족변화가 가족형성 및 해체, 가족관계, 가족기능 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전반에 미치는 정책적 함의를 진단한다.

라.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동과 대응사례

아시아권, 유럽 및 북남미 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가구·가족변동 원인을 검토하고, 가구·가족변동 실태와 대응정책 등을 분석하며 변동 특성 및 전망을 진단한다.

마. 가구·가족의 변화전망과 의미 분석

향후 가구·가족변화의 주요 요인을 전망하는 한편, 가족형성과 해체,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 등의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적 의미를 분석한다.

바.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가족 및 가족변화에 대한 이론, 변화추이와 실태, 선진국의 사례분석, 변화전망 등을 중심으로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을 도출하고, 세부적으로는 가족 변화 관련 패러다임의 전환 및 기반 마련, 가족변화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형성 약화 및 가족주기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바람직한 가족관계 모색, 가족안정화 제고, 가족해체 및 다양한 가족의 대응방안 등 총 6개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가. 문헌고찰

가구·가족 변화 관련 개념과 원인 및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각종 기존문헌을 고찰하였다. 문헌연구 대상에는 각종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모두 포함하였다.

나. 통계자료 및 기존자료 재분석

1970~201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및 가족관련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국 및 2대 지역, 수도권, 7대 특별시·광역시, 9대 도지역별로 가족규모, 세대구성 및 가족유형, 가구주 특성을 시계열로 분석한다. 또한, 가족관련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구·가족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한다.

다. 전화조사

일반국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와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의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20세~65세 미만의 성인남녀이고, 조사시기는 2013년 7월 22~8월 5일까지 15일간 실시되었다.

〈표 1-1〉 전화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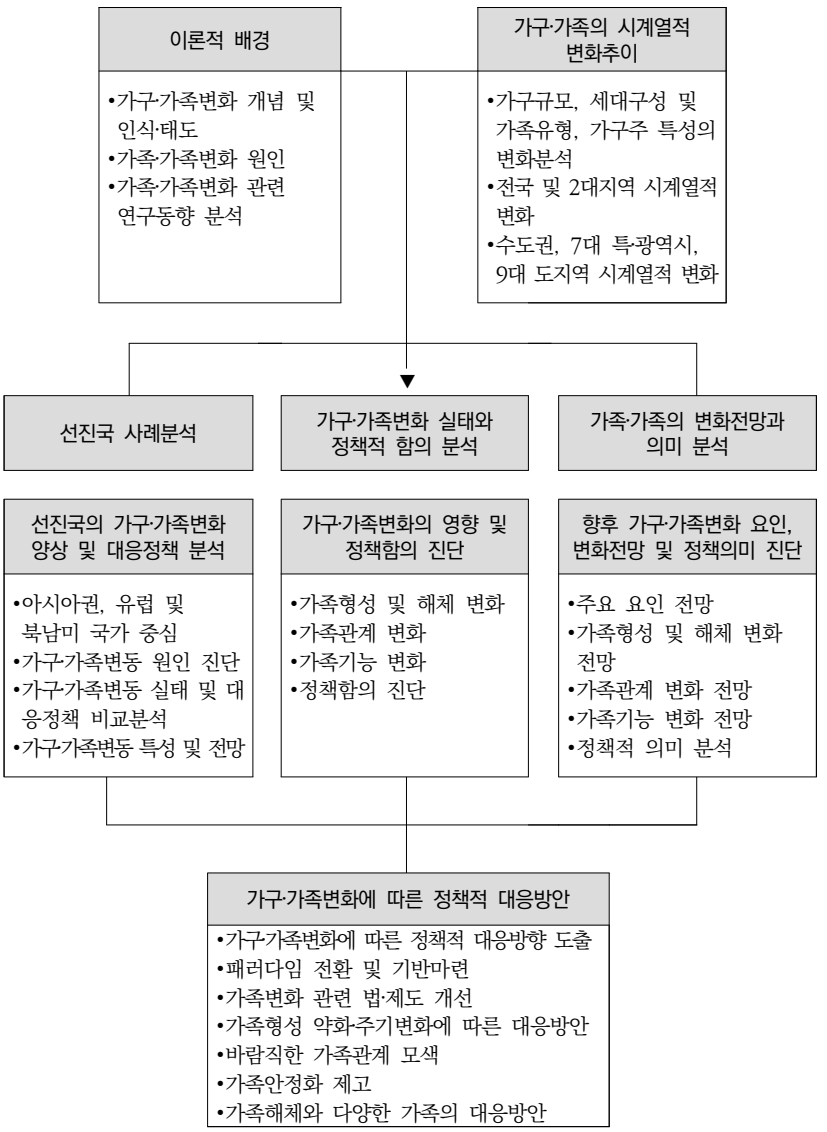
부 문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응답자 일반사항 (10개 항목)	① 총가구원수 ② 동거가족 ③ 가구형태 ④ 자녀수와 연령 ⑤ 최종학력 ⑥ 취업여부 ⑦ 직업 ⑧ 종사상지위 ⑨ 월평균가구소득 ⑩ 사회적 지위
가족인식 및 태도 (3개 항목)	① 가족개념 ② 가족항목 ③ 가족에 대한 견해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개 항목)	① 혼인가치관 ② 이혼가치관 ③ 재혼가치관 ④ 혼인에 대한 견해 ⑤ 자녀가치관 ⑥ 자녀양육 의미 및 범위 ⑦ 자녀에 대한 견해 ⑧ 노부모부양 책임 및 범위 ⑨ 가족부양에 대한 견해 ⑩ 가족관계 중요도 ⑪ 가족내 부부역할 등
부 문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
응답자 일반사항 (10개 항목)	① 총가구원수 ② 동거가족 ③ 가구형태 ④ 자녀수와 연령 ⑤ 최종학력 ⑥ 취업여부 ⑦ 직업 ⑧ 종사상지위 ⑨ 월평균가구소득 ⑩ 사회적 지위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개 항목)	① 가족변화 원인 ②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영향 ③ 1인가구 증가의 영향 ④ 한부모 및 조손가족으로 인한 사회변화 ⑤ 공동체가족으로 인한 사회변화 ⑥ 가족변화의 사회적 문제 인식 ⑦ 가족변화의 국가의 정책적 대응필요 ⑧ 소가족화 및 핵가족의 정책욕구 ⑨ 1인가구의 정책욕구 ⑩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정책욕구 ⑪ 공동체가족의 정책욕구
향후 가족변화 전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3개 항목)	① 가족변화 원인 ② 가족변화로 인한 영향 ③ 가족변화의 정책대응
가족생활실태 (7개 항목)	① 혼인 및 주거 등의 변화경험여부 ② 변화유형 ③ 발생년도 ④ 변화원인 ⑤ 가족기능변화 ⑥ 가족생활의 어려움 ⑦ 정책욕구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의 조사내용은 응답자 일반사항, 가족인식 및 태도,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이고,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는 응답자 일반사항,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향후 가족변화 전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족의 생활실태 등으로 구성되었다(표 1-1 참조).

라. 워크숍 개최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고서 검독자를 포함한 원내외 전문가와 전체 연구진이 참여하여 세 차례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워크숍은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워크숍은 연구의 중간단계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연구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워크숍은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내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3〕 연구흐름도


이론적 배경
•가구·가족변화 개념 및 인식·태도
•가족·가족변화 원인
•가족·가족변화 관련 연구동향 분석
가구·가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가구규모, 세대구성 및 가족유형, 가구주 특성의 변화분석
•전국 및 2대지역 시계열적 변화
•수도권, 7대 특·광역시, 9대 도지역 시계열적 변화
선진국 사례분석
가구·가족변화 실태와 정책적 함의 분석
가족·가족의 변화전망과 의미 분석
선진국의 가구·가족변화 양상 및 대응정책 분석
•아시아권, 유럽 및 북남미 국가 중심
•가구·가족변동 원인 진단
•가구·가족변동 실태 및 대응정책 비교분석
•가구·가족변동 특성 및 전망
가구·가족변화의 영향 및 정책함의 진단
•가족형성 및 해체 변화
•가족관계 변화
•가족기능 변화
•정책함의 진단
향후 가구·가족변화 요인, 변화전망 및 정책의미 진단
•주요 요인 전망
•가족형성 및 해체 변화 전망
•가족관계 변화 전망
•가족기능 변화 전망
•정책적 의미 분석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 도출
•패러다임 전환 및 기반마련
•가족변화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형성 약화·주기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바람직한 가족관계 모색
•가족안정화 제고
•가족해체와 다양한 가족의 대응방안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가구·가족변화의 개념 및 인식·태도

제2절 가구 및 가족변화 원인

제3절 가구 및 가족변화 관련 연구동향 분석

2 이론적 배경

제1절 가구·가족변화의 개념 및 인식·태도

1. 가구의 개념 및 범위

통계청의 정의에 의하면 가구는 혈연이나 비혈연의 끼니를 함께 하는 주거 생활단위로서 혈연관계나 심리적 관계보다 공동생활의 주거단위로서의 성격이 강조된다(정경희, 2012).

가구(household)의 사전적 정의는 '한집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경제적 단위'로 보통 생계단위를 구성하는 일군에 국한된 개념으로 사용된다. 통계조사 기술상 가구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비혈연 관계인이 모여 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의 소속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설인구를 시설별로 통계조사 단위를 설정, 집단가구 또는 준가구라 칭하기도 하나, 이는 편의상의 명칭이며 가구는 아니다. 따라서 가구는 크게 일반가구와 집단가구(준가구)로 나누고, 다시 일반가구는 보통가구와 단독가구로, 보통가구는 혈연·비혈연 가구로 나눈다(네이버 두산백과사전 2013. 6. 10).

① 보통가구: 2명이상이 모여서 생계유지의 방편으로 형성된 단위를 개체로 이루어진 가구임.
② 혈연가구: 혈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거나 또는 혈연인과 비혈연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복합가구임.
③ 비혈연가구: 비혈연관계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보통 한집안에서 기

거하며 자취하는 가구, 즉 다방·음식점 기타의 업소 등에서 주인과는 별도로 기거하는 종업원가구 등이 여기에 속함. 어느 특정한 통계조사에서는 이러한 가구를 준가구로 인정하여 조사하기도 함.

④ 집단가구(준가구): 소수가구 외에 공동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인구를 집단인구라 하는데, 이러한 인구의 생계단위인 시설을 하나의 통계조사단위로 정하여 집단가구 또는 준가구라고 함. 예를 들면 군막사·교도소·기숙사·보육원 등이 해당됨.

2. 가족의 개념 및 범위

가족(family)의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부부를 중핵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 하는 생활공동체'로 요약 할 수 있다. 가족에는 타출자도 포함되며, 이 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주거 및 가계의 공동을 조건으로 하는 가구의 개념과 구별된다. 가족은 대가족과 소가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핵가족, 부부가족, 확대가족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네이버 두산백과사전 2013. 6. 10).

가족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하고 있는 민법에 따르면 가족은 호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된 자이다. 즉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결혼, 혈연, 입양에 의하여 이루어진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1인가구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지만, 통계청 정의에 의하여 주거단위로서의 가구로는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최근 급격한 가구·가족의 변화로 비정형 가구·가족이 등장하면서 가구·가족에 대한 정의가 변화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구·가족의 변화는 '다양한 가족', '가족의 다양성' 등으로 대변되고 있으며, 가족정책 및 가족지원서비스 발굴·확대 필요성의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

구원·가족정책전략센터, 2012).

3. 가구 및 가족변동의 개념과 범위

가족관련 현상은 형태, 행동, 가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된다. 가족변동은 이들 중 어느 한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의 변화, 행동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한다(최재율, 1983). 따라서 가족변화란 형태, 행동, 가치의 변화 양상과 함께 이들 상호관의 관계와 기타 관련 있는 변수 간의 상호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안호용·김홍주, 2000).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구변동과 가족변화와의 관계를 보면, 가구변동이란 인구·사회·가치관적 요인에 의해 가구규모 및 가구구성 등 가구의 구조적인 외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구변동은 개인주의화에 따른 자녀분가 현상과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만혼현상, 이혼율의 증대 및 저출산 등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1~2인 가구 중심의 소가족화와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중심의 가족형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소가족화·핵가족화의 가구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가족은 돌봄과 부양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며, 재생산 기능 또한 축소되고 개인중심 가치와 가족결속력 약화로 가족응집력 등 가족관계가 약화되고 이혼 허용적 규범 확산과 함께 양성평등적 관계가 높아지면서 이혼·별거 등의 증대로 가족해체와 가족분거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구변동은 가족기능과 가족관계 등 가족생활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의 확산 등의 가족변화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구·가족의 변동의 개념은 가구의 구조적 형태적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의 내적변화의 현상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가구변동으로 인한 가족형성 및 해체 변화, 가족관계 및 기능 변화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4.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 가족변화원인 및 가족생활 영향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1인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비혈연가족 증가 등의 가족변화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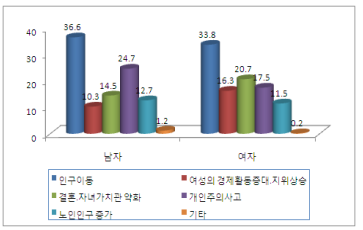
성별로는 남성은 가족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산업화·도시화로 교육·취업으로 인한 인구이동이 3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개인주의적 사고로의 변화가 24.7%로 많았으며, 결혼 및 자녀가치관 약화도 14.5%로 많았다. 여성도 교육·취업으로 인한 인구이동이 3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결혼 및 자녀가치관 약화가 20.7%로 높았으며, 개인주의 사고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대·사회적 지위상승도 16~18%로 많은 편이었다. 따라서 남녀 모두 우리나라 가족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사회적 요인과 가치관적 요인을 지적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50대 연령층은 가족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교육·취업으로 인한 인구이동을 응답한 비율이 32~43%로 가장 높은 데 비해, 60대 연령층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가 29%로 가장 높아서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20~30대는 결혼 및 자녀가치관 약화를, 40~50대는 개인주의적 사고로의 변화를 응답한 비율이 높아서 연령별 가치와 관심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즉 50대 이하는 사회적 요

인을 지적한데 비해, 60대는 인구적 요인을 지적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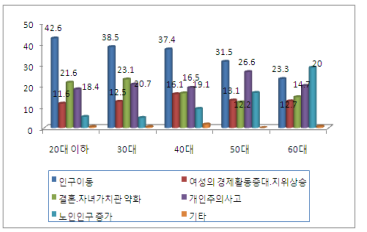
〔그림 2-1〕 성별 가족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림 2-2〕 연령별 가족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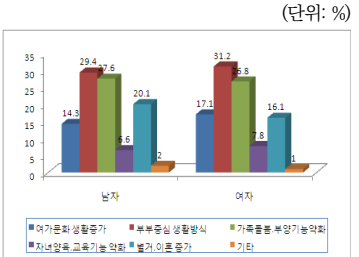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가족변화로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성별로는 남녀 모두 부부중심의 생활방식과 가족 돌봄 및 부양기능의 약화를 응답한 비율이 각각 28~29%와 27~31%로 높았으며, 이외에도 남성은 별거·이혼 증가도 20.1%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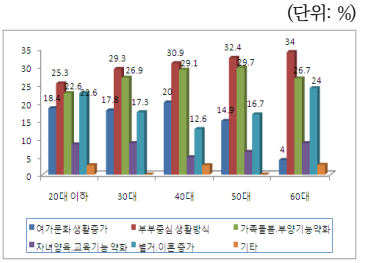
〔그림 2-3〕 성별 가족변화로 가족생활 중 가장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림 2-4〕 연령별 가족변화로 가족생활 중 가장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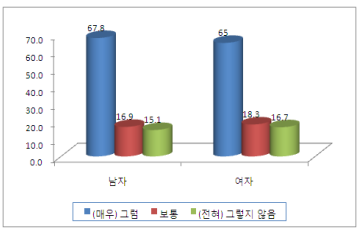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가족변화로 인한 부부중심의 생활방식과 가족 돌봄 및 부양기능 변화를 응답한 비율이 23~34%로 높았으며, 이외에 20대 이하와 60대는 별거·이혼의 증가가 높았고, 40대는 부부와 자녀 중심의 여가문화 생활의 증가를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나. 가족변화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태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핵가족화 및 1인가구, 한부모 및 비혈연가족 증가와 같은 가족변화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은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67.8%로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다 4.5배 높아서 가족변화에 대한 사회문제 인식이 높았다. 여성도 두 비율 간에 3.9배 차이를 보여서 사회적 문제 인식이 높았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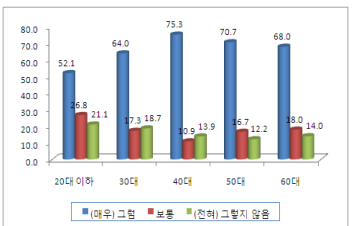
〔그림 2-5〕 성별 가족변화가 사회적 문제인지에 대한 태도

(단위: %)



〔그림 2-6〕 연령별 가족변화가 사적 문제 인지에 대한 태도

(단위: %)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연령별로는 가족변화가 사회적 문제라는 응답은 40대 연령층이 7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60대, 30대, 20대 이하 순으로 높아서 가족변화에 대한 사회문제 인식은 장년 및 노인연령층이 높은 데 비해

20대 젊은 연령층이 가장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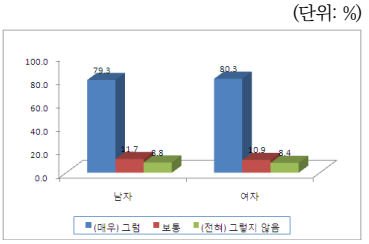
다. 가족변화의 정책적 대응 필요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가족변화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은 필요하다는 비율이 79.3%로 2/3 이상이 필요도를 보였으며, 여성은 80.3%로 남성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문제인식과 정책적 대응 필요도를 비교 했을 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문제 인식은 높은 데 비해 정책 필요도가 다소 낮았고, 여성은 사회적 문제인식에 비해 정책 필요도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50대가 8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30대, 60대, 20대 이하 순으로 높아서 중장년층은 정책적 대응 필요도가 높은데 비해 20대 젊은 연령층과 노년층은 저조하였다. 특히 노년층은 가족변화의 사회적 문제인식에 비해 정책 필요도는 낮아서 타 연령층에 비해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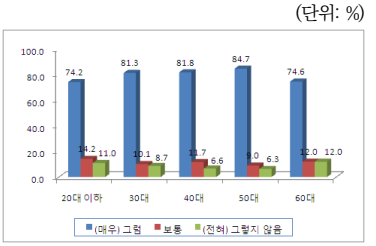
〔그림 2-7〕 성별 가족변화의 국가적 정책대응 필요도에 대한 태도

(단위: %)



〔그림 2-8〕 연령별 가족변화의 국가적 정책대응 필요도에 대한 태도

(단위: %)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제2절 가구 및 가족변화 원인

가구 및 가족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중 우리나라의 가족변화를 반영하는 인구학적 측면과 가치관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요인 등 세 가지 측면(이영분·양심영, 1999; 김승권 외, 2000; 최연실, 2001)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구학적 측면

인구학적 측면의 가족변화 원인은 크게 초혼연령, 저출산 현상, 평균수명 연장 및 고령화, 중년세대 조기사망 등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가. 초혼연령 상승

초혼연령은 결혼시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성 및 연도별로 시계열적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초혼연령은 1970년 27.1세에서 1980년 27.3세로 10년간 0.2세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27.8세로 동 기간 0.5세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29.3세로 동 기간 1.5세가 증가하여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2010년에는 31.8세로 10년간 2.5세가 증가하여 초혼연령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은 1970년 23.3세에서 1980년 24.1세로 10년간 0.8세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24.8세로 동 기간 0.7세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26.5세로 1.7세 증가하여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2010년에는 28.9세로 2.4세 증가하여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대체로 40년간 초혼연령의 변화는 여성이 남성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2-1〉 성별 평균 초혼연령(1970~2010)

(단위: 세)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남자	27.1	27.4	27.3	27.8	27.8	28.4	29.3	30.9	31.8
여자	23.3	23.6	24.1	24.8	24.8	25.3	26.5	27.7	28.9

자료: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70~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1990~201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나. 저출산 현상

우리나라 출산수준은 산업화, 도시화, 사망수준의 저하 등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가족계획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가족계획 정책은 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데 가족계획사업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출산억제를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1962~1989년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다가 1982년 출산력이 대체출산 수준 이하로 저하되기 시작하자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1996년을 기점으로 인구증가억제 정책에서 인구복지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가족계획 정책 결과가 잘 반영되어 있는데, 40년간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이었고 1980년에는 2.82로 10년간 38% 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1.57로 44.3% 감소하여 1980년대보다 감소폭이 컸으며, 2000년에는 1.47로 6.4%로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며, 2010년에는 1.23으로 동 기간 56.9% 감소하여 2000년대는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표 2-2〉 합계출산율의 변화(1970~2010)

(단위: 여자 천명당)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합계출산율	4.53	3.43	2.82	1.66	1.57	1.63	1.47	1.08	1.23

자료: 통계청(1970~2010). 국가통계포털 출산동향.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OECD국가를 비교할 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5로 OECD 평균인 1.71보다 0.56이 낮은 수준이었다.

〈표 2-3〉 OECD국가의 합계출산율 비교(2008년)

(단위: 여자 천명당)

구분	한국[1)]	일본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프랑스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15	1.37	1.38	1.41	1.77	1.91	1.96	2.00	1.71

주: 1) 한국은 2009년 수치임.
자료: OECD(2008). Factbook.

다. 평균수명 연장 및 고령화

평균수명은 보건수준의 향상, 영양 및 환경개선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향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평균수명은 가족주기와도 밀접하여 가족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40년간 평균수명의 변화를 보면 1970년 61.9세에서 1980년 65.7세로 10년간 3.8세 증가하였고, 1990년 71.3세로 동 기간 5.6세로 증가폭이 컸으며, 2000년에는 76.0세로 4.7세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80.8세로 4.8세 증가하여 199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40년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19.3세 늘어났으며, 남녀모두 동 기간 18.5세가 늘어나 전국보다 0.18세가 적었다. 동 기간 평균수명의 남녀 간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6.8~8.4세가 많은 것으로 났다.

〈표 2-4〉 평균수명 변동추이(1970~2010)

(단위: 세)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	61.9	63.8	65.7	68.4	71.3	73.5	76.0	78.6	80.8
남자	58.7	60.2	61.8	64.4	67.3	69.6	72.3	75.1	77.2
여자	65.6	67.9	70.0	72.8	75.5	77.4	79.6	81.9	84.1
차이(여-남)	6.9	7.7	8.3	8.4	8.2	7.8	7.3	6.8	6.9

자료: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고령화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와 유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볼 수 있다. 40년간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1970년 3.1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1.04%로 40년간 28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유소년인구비율은 1970년 42.5%에서 2010년 16.14%로 동 기간 64.4%의 감소를 보였다.

〈표 2-5〉 노인인구 대비 유소년인구비율(1970~2010)

(단위: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노인인구비율	3.10	3.50	3.80	4.30	5.10	5.90	7.20	9.10	11.04
유소년인구비율	42.50	38.60	34.00	30.20	25.60	23.40	21.10	19.20	16.14

자료: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노인 인구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이 11.0%에 비해 일본이 22.5%로 2배 높았고, 미국은 12.8%로 한국과 차이가 미미하였다.

〈표 2-6〉 OECD국가의 노인인구비율 비교(2010년)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영국
노인인구비율	11.0	22.5	16.5	20.5	20.6	17.3	12.8	16.6

자료: 1) UN(2006). World Population Prospects.
2)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라. 중년세대 조기사망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영양 및 환경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사망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은 가족의 부양담당자로서 중요한 의무를 갖는 연령층임을 감안할 때 가족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표 2-7〉 평균수명 변동추이(1983~2010)

(단위: 성별 인구 천명당)

연도	성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1983	남자	2.3	3.1	4.3	7.7	11.0	15.6	23.3	36.3
	여자	1.3	1.7	2.1	3.2	4.5	6.7	9.5	15.0
1985	남자	2.3	2.7	4.0	6.9	10.2	13.9	20.9	32.3
	여자	1.1	1.3	1.7	2.8	4.0	5.8	8.5	13.0
1990	남자	1.9	2.5	3.7	5.4	9.0	12.3	17.0	26.6
	여자	0.8	1.0	1.4	2.0	3.4	4.7	6.8	11.0
1995	남자	1.6	1.9	2.9	4.6	6.7	10.2	15.0	22.5
	여자	0.7	0.7	1.0	1.6	2.3	3.6	5.5	8.9
2000	남자	1.0	1.3	2.1	3.5	5.5	8.1	12.3	18.7
	여자	0.5	0.6	0.9	1.3	1.8	2.7	4.3	7.0
2005	남자	0.7	1.0	1.5	2.6	4.3	6.4	9.0	14.6
	여자	0.4	0.5	0.7	1.0	1.5	2.2	3.2	5.4
2010	남자	0.8	0.9	1.03	2.2	3.5	5.3	7.7	11.1
	여자	0.5	0.5	0.7	0.9	1.4	1.9	2.5	4.0

자료: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연령 및 성별로 사망률의 추이를 보면 35~59세 남성의 사망률은 1983년 4.3~23.3에서 2010년 1.03~7.7로 27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타 연령층에 비해서 10배 까지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 연령층에 여성의 사망률은 1983년 2.1~9.5에서 2010년 0.7~2.5로 동 기간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타 연령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동일연령층에서 남녀 간에 사망률을 비교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3배까지 높았다. 이는 가족주기로 볼 때 남편이 사망하고 여성이 상당기간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가치관적 측면

가족변화와 밀접한 부분이 가족가치관이다. 가족가치관은 크게 혼인가치관, 자녀가치관, 부부관계가치관, 가족부양가치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혼인가치관

혼인가치관을 잘 보여주는 지표는 결혼에 대한 태도와 미혼율에서 파악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긍정적인 태도는 1998년 73.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64.7%로 12년간 8.8%pt가 감소하였다. 중립적인 태도는 30%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부정적인 태도는 1998년 1.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3.3%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1998년 33.6%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0년 21.7%로 1/5에 불과하였다.

〈표 2-8〉 결혼에 대한 태도변화 추이(1998~2012)

(단위: %)

구분	반드시 해야 함	하는 것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	하지 않는 것이 좋음	하지 말아야 함	잘 모르겠음	계
1998	33.6	39.9	23.8	1.1	0.2	1.4	100.0
2002	25.6	43.5	27.2	1.7	0.2	1.8	100.0
2006	25.7	42.0	27.5	1.8	0.4	2.6	100.0
2008	23.6	44.4	27.7	2.4	0.5	1.4	100.0
2010	21.7	43.0	30.7	2.8	0.5	1.3	100.0
2012	20.3	42.4	33.6	1.5	0.3	1.9	100.0

자료: 통계청(1998~2012). 사회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독신자의 증가로 미혼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성 및 연령별로 미혼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남성은 1970년 20대가 9.2%로 30대의 0.5%보다 18배 높았는데 비해, 2010년에는 20대 7.8%, 30대 3.7%로 40년간 30대의 미혼율이 7배 증가하였다. 여성은 1970년 20대가 4.4%로 30대 0.1%보다 44배 높았고, 2010년에는 20대 6.4%, 30대 2.0%로 동 기간 30대 미혼율이 20배 증가하여서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9〉 성 및 연령별 미혼율 변화추이(1970~2010)

(단위: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남자	20대	9.2	9.8	10.6	10.9	10.7	10.2	6.0	8.9	7.8
	30대	0.5	0.4	0.5	0.7	1.1	1.6	1.7	3.2	3.7
여자	20대	4.4	5.1	6.2	6.6	6.7	6.8	5.3	7.1	6.4
	30대	0.1	0.1	0.2	0.3	0.5	0.6	0.7	1.4	2.0

자료: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70~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1990~201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나. 자녀가치관

자녀가치관은 자녀필요성 및 자녀관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등의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태도는 1991년 90.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46.3%로 21년간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태도는 1991년 8.5%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53.5%로 동 기간 6배 높아졌다. 특히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비율은 1997년 9.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6.0%로 15년간 6.6%pt 높아졌다.

〈표 2-10〉 우리나라 기혼부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변화 추이(1991~2012)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져야함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모르겠음	계(수)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1991	90.3	8.5			1.2	100.0(7,448)
1997	73.7	26.0	16.6	9.4	0.3	100.0(5,409)
2000	58.1	41.5	31.5	10.0	0.4	100.0(6,408)
2003	54.5	44.9	32.3	12.6	0.6	100.0(6,593)
2006	53.8	46.2	34.1	12.1	-	100.0(5,386)
2009	55.9	44.1	32.7	11.4	-	100.0(4,867)
2012	46.3	53.5	37.5	16.0	0.3	100.0(4,536)

자료: 1) 공세권 외(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조남훈 외(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의 의견에 대해 전체와 남녀 모두 5점 만점에서 4.0점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각각 3.7점으로 보통과 그렇다의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는 전체와 남녀 모두 3.6점으로 중간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녀양육태도를 보면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에 대해 각각 3.6점으로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고,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에 대해 전체와 남녀는 각각 3.5점으로 중간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는 각각 3.7점으로 보통과 그렇다의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2-11〉 자녀관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2010)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자녀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4.0	4.0	4.0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3.7	3.7	3.7
자녀양육태도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3.7	3.8	3.9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	3.6	3.6	3.6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5	3.5	3.5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	3.7	3.7	3.7
(분석대상수)		(4,754)	(2,368)	(2,386)

주: 점수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음)~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됨.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다. 부부관계가치관

부부관계가치관을 부부간의 성역할과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간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내는 남편의 경력 쌓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이 66.4%, 반대가 33.6%로 찬성이 반대보다 2배 높았다.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에 대해 찬성이 46.7%, 반대가 53.3%로 반대가 찬성보다 6.6%pt 높았다.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분담해야한다'에 대해 찬성이 75.4%, 반대가 24.6%로 찬성이 반대보다 3배 높았다. '불경기 때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 해고시켜야 한다'에 대해 찬성이 21.5%, 반대가 78.5%로 반대가 찬성보다 약 4배 높았다.

전반적으로 부부간의 역할에 대해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와 함께 취업 및 가사분담 등에 대해서는 다소 양성평등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성역할에 대한 태도(2012)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아내는 남편의 경력 쌓기에 도움을 주어야 함	3.3	30.3	57.9	8.5	100.0 (10,052)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봐야 함	7.0	46.3	41.0	5.7	100.0 (10,052)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분담해야 함	1.2	23.4	61.5	13.9	100.0 (10,049)
불경기 때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 해고시켜야 함	33.0	45.5	20.0	1.5	100.0 (10,050)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부관계에서 가사분담 영역은 지금까지 여성이 전담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승과 경제활동이 높아지면서 가사분담이 양성평등적인 형태로 개선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면 부인이 전적으로 분담해야 한마다는 의견이 2002년 7.2%에서 소폭으로 감소하여 2012년

5.3%를 보였고,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2년 58.7%에서 2010년 46.7%로 12.0pt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2년 30.7%에서 20102년 45.3%로 14.6%pt 증가하여 최근에 오면서 가사분담에 대한 양성평등적인 가치관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2-13〉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변화 추이(2002~2012)

(단위: %)

구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계
2002	7.2	58.7	30.7	2.8	0.5	100.0
2006	5.9	59.4	32.4	1.9	0.3	100.0
2008	6.7	59.8	32.4	0.9	0.2	100.0
2010	6.4	54.9	36.8	1.6	0.3	100.0
2012	5.3	46.7	45.3	2.2	0.4	100.0

자료: 통계청(2002~2012). 사회조사결과.

라. 가족부양가치관

가족부양가치관을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부양 담당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 1983년에는 가족이 71.7%로 2/3 이상을 상회하였고, 스스로 해결은 20.5%, 사회 및 기타는 7.8%로 미미하였다. 가족 중에서는 장남과 아들모두가 43.8%로 거의 과반수에 근접하였고, 딸을 포함한 자녀 모두는 27.1%에 불과하였다. 1994년에는 가족이 87.3%로 소폭 증가한데 비해, 스스로 해결과 사회 및 기타는 각각 9.9%와 2.9%로 감소하였다. 가족 중에서는 장남과 아들모두가 31.0%로 감소하였고, 딸을 포함한 모든 자녀는 29.1%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능력 있는 자녀라는 응답도 27.2%로 많은 편이었다.

2002년에는 부모부양의 책임자로 가족이 70.7%로 다소 감소하였고, 스스로 해결도 9.6%로 감소한데 비해, 사회 및 기타가 19.5%로 약 7배 높아서 노부모 부양을 사회화하려는 태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 중에서는 장남과 아들모두가 2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능력 있는 자녀, 모든 자녀 순이었다. 2010년에는 가족이 36.0%로 1983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스스로 해결도 감소한데 비해 사회 및 기타는 52.9%로 동 기간 약 7배 높아졌다. 가족 중에서는 모든 자녀가 25.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능력 있는 자녀, 장남과 아들 모두 순으로 나타나서 장남 또는 아들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이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2-14〉 부모부양 책임자에 대한 견해(1983~2012)

(단위: %)

구분	가족					스스로 해결	사회 및 기타	계
	소계	장남	아들모두	아들딸 모두	능력 있는 자녀			
1983	71.7	22.1	21.7	27.1	-	20.5	7.8	100.0
1988	79.3	25.2	17.8	35.8	-	15.8	5.0	100.0
1994	87.3	19.6	11.4	29.1	27.2	9.9	2.9	100.0
1998	89.9	22.4	7.0	15.0	45.5	8.1	2.0	100.0
2002	70.7	15.1	13.9	20.5	21.2	9.6	19.5	100.0
2006	63.4	12.4	5.1	31.8	14.1	7.8	28.7	100.0
2008	40.7	7.0	2.7	24.3	6.7	11.9	47.4	100.0
2010	36.0	5.0	2.8	23.1	5.1	12.7	51.3	100.0
2012	33.2	2.3	1.3	25.0	4.6	13.9	52.9	100.0

자료: 통계청(1983~2012). 사회조사결과.

가족부양에 대한 견해를 보면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는 찬성이 67.3%, 보통이 27.1%, 반대가 5.5%로 전통적인 남성부양관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도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찬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다소

높아서 주목된다.

〈표 2-15〉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에 대한 태도(2005)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그저 그럼	대체로 그럼	매우 그럼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0.4	5.1	27.1	54.2	13.1	0.1	100.0(5,973)
남자	0.6	6.0	29.5	51.5	12.3	0.04	100.0(2,738)
여자	0.3	4.3	25.1	56.4	13.7	0.2	100.0(3,235)

자료: 여성부(2005). 2005년 제1차 가족실태조사.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를 보면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에 대해 전체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였고,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3.5점, '딸도 아들과 똑같이 나이 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도 3.6점으로 전반적으로 부모부양 태도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성별로도 전체와 유사하였다.

〈표 2-16〉 부모부양 및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책임에 대한 태도(2010)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남자	여자
부모부양 태도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3.4	3.4	3.3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3.5	3.5	3.5
	딸도 아들과 똑같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3.6	3.6	3.6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책임 태도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3.5	3.5	3.5
	부모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3.2	3.2	3.2
	부모는 필요하다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3.0	3.0	3.0
(분석대상수)		(4,754)	(2,368)	(2,386)

주: 점수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음)~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됨.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책임에 대한 태도는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3.5점으로 중간을 약간 초과하였고, '부모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3.2점, '부모는 필요하다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는 3.0점으로 대체로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책임범위로 대학교육부터 자녀결혼과 그 이후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점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성별로도 비슷하였다.

3. 사회적 측면

사회적으로 가족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산업화 및 도시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산업화 및 도시화

우리나라 산업화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와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통해 알 수 있다.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의 변화추이를 보면 1970년에는 농림어업이 50.4%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35.2%로 1/3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은 14.4%로 미미하였다. 1980년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43.5%로 거의 과반수에 근접하였고, 농림어업은 34.0%로 1/3 정도로 줄어들었고, 광공업도 22.5%로 다소 증가하였다. 1990~2000년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큰 폭으로, 광공업은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서 2010년에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76.4%로 40년간 114.2% 증가한데 비해, 농림어업은 6.6%로

동 기간 86.9%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리고 광공업은 2012년 17.0%로 동 기간 2.6%pt 증가하였다.

〈표 2-17〉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1970~2012)

(단위: %, 명)

구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계(수)
1970	50.4	14.4(13.2)	35.2	100.0(9,574)
1980	34.0	22.5(21.6)	43.5	100.0(13,683)
1990	17.9	27.6(27.2)	54.5	100.0(18,085)
2000	10.6	20.4(20.3)	69.0	100.0(21,156)
2005	7.9	18.1(18.0)	73.9	100.0(22,856)
2010	6.6	17.0(16.9)	76.4	100.0(23,829)
2012	6.2	16.7(16.6)	77.1	100.0(24,681)

자료: 통계청(1970~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의 변화추이를 보면, 1970년 농립어업숙련종사자가 50.3%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과 서비스·판매직이 각각 20.4%와 18.8%로 많은 편이었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직은 미미하였다. 1980년 이후 2000년대까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직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서 2010년에는 서비스·판매직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2.5%와 21.5%로 많았고, 다음은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 사무직, 단순노무직,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순으로 많았다. 특히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직은 40년간 357.4%와 170.7%의 증가를 보였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87.9% 감소하였다.

〈표 2-18〉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1970~2012)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 조작원	단순 노무직	계(수)
1970	4.7	5.8	18.8	50.3	20.4		100.0(9,574)
1980	5.3	9.3	22.4	34.0	29.0		100.0(13,683)
1990	8.7	13.0	25.7	17.8	34.8		100.0(18,085)
2000	18.6	11.9	26.0	10.0	23.5	10.0	100.0(21,156)
2010	21.5	15.7	22.5	6.1	20.7	13.5	100.0(23,829)
2012	21.3	16.6	22.5	5.8	20.8	13.0	100.0(24,681)

자료: 통계청(1970~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우리나라 도시화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시도 간 이동률과 도시화율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시도 간 이동률은 1970년대에는 4.0~6.6%에서 1980년대 7.3~7.6%로 증가하였고, 1990년대와 2000년대는 6.2~6.7%와 5.9~6.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한창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1980년대에는 시도 간에 높은 이동을 보이다 도시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2000년대로 오면서 이동이 줄어드는 경향을 반영한다.

〈표 2-19〉 전국 시도 간 인구이동 변동추이(1970~2009)

(단위: 천명, %)

구분	1971~74	1975~79	1980~84	1985~89	1990~94	1995~99	2000~04	2005~09
시도 간 이동자수	1,354	2,415	2,886	3,146	2,930	2,849	2,915	2,841
시도 간 이동률	4.0	6.6	7.3	7.6	6.7	6.2	6.1	5.9

자료: 이태직(2010). 국내인구이동 추계모형 개선방안 검토. 재인용

이동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교육정도별 시도 간 이동률의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1995년에 24.6%에서 200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20.4%로 교육에 의한 이동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별로 보면 모든 학력 층에서 전체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감소폭은 미취학과 초등학교는 전체보다 낮았으나, 중학교 이상은 전체보다 높았고 고등학교와 대학은 감소폭이 타 학력층보다 높았다. 이는 해외유학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시도 간 이동이 감소하는 데서 오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20〉 교육정도별 이동률 변동추이(1995~2005)

(단위: %)

구분	1995(B)	2000	2005(A)	B-A
전체	24.6	22.5	20.4	-4.2
초등학교	18.5	17.0	15.1	-3.4
중학교	18.6	15.0	13.2	-5.4
고등학교	27.2	23.4	19.2	-8.0
대학	33.7	28.2	25.6	-8.0
대학교 이상	35.3	33.5	30.0	-5.3
미취학	13.9	12.8	11.8	-2.1

자료: 이태직(2010). 국내인구이동 추계모형 개선방안 검토. 재인용

우리나라 도시화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1970년 41.1%로 과반수에도 못 미치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82.0%로 40년간 도시화율이 2배 높아졌다.

도시화는 학교 및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및 경기·인천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전체 인구대비 수도권 인구비율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비율은 1970년 28.3%에 불과하다가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그리고 2010년에 49.1%로 거의 과반수로 증가하여 40년간 약 2배 높아졌다. 이와 같이 수도권 인구의 집중은 분거가족의 증가를 의미하여 가구 및 가족생활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2-21〉 도시화율 변화추이(1970~2010)

(단위: %)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도시화율	41.1	48.4	57.2	65.4	74.4	78.5	79.7	81.5	82.0

자료: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70~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1990~201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표 2-22〉 전체 인구대비 수도권 인구비율 변화추이(1970~2010)

(단위: %)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수도권 인구비율	28.3	31.5	35.5	39.1	42.8	45.3	46.3	48.2	49.1

자료: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70~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1990~201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여성의 지위상승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성별 학력 구성비와 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국회위원 중 여성비율과 공무원 비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 학력 구성비의 변화추이를 보면, 여성은 1970년 초등학교 이하가 84.6%로 대다수를 차지하다 1980년대 이후 2010년까지 중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0년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가 66.8%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그중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는 33.9%로 1/3을 차지하여 40년간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가 827.8%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는 동 기간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가 240.1% 증가한데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표 2-23〉 5세 이상 인구의 성별 학력 구성비(1970~2010)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초등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초등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1970	61.1	15.2	15.2	8.5	84.6	8.2	5.6	1.6
1980	42.8	19.8	25.4	12.0	67.0	16.5	12.9	3.6
1990	23.3	17.6	38.9	20.1	43.0	20.3	28.4	8.3
2000	15.1	12.3	41.6	31.0	30.4	14.3	37.3	18.0
2010	10.1	9.3	34.3	46.3	22.3	10.9	33.9	32.9

자료: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70~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1990~201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문대학은 1970년 1.0%에서 1990년 6.8%, 2000년에 19.6%로 20년간 거의 20배 증가하여 여성의 학력수준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대학교는 1970년 3.9%에서 1990년 15.4%, 2000년에 30.1%로 동 기간 7.7배 증가하였고 취학률은 전문대보다 대학교가 더 높아서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39.3%에서 1990년 47.0%로 7.7%pt 증가하였고, 2000년 48.6%, 2010년 49.2%로 과반수에 이르며, 2012년에 49.7%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남성과 비교할 때 1970년에는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가 지속적으로 차이가 줄어들어서 2010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24%pt 높았다. 여성의 학력증가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것은

결혼 및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임금 노동집약 및 고용불안 등 일자리의 질에서 오는 한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표 2-24〉 고등교육기관 취학률(1970~2003)

(단위: %)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전문대학(여자)	1.0 (0.6)	1.7 (1.1)	3.7 (2.1)	5.6 (4.4)	6.8 (6.0)	13.2 (11.7)	19.6 (17.4)	20.7 (18.2)
교육대학(여자)	0.5 (0.6)	0.3 (0.3)	0.2 (0.4)	0.3 (0.6)	0.3 (0.4)	0.5 (0.8)	0.5 (0.7)	0.5 (0.8)
대학교(여자)	3.9 (2.2)	4.4 (2.9)	7.2 (3.9)	16.5 (11.0)	15.4 (12.4)	22.0 (18.6)	30.1 (27.9)	34.2 (32.9)

주: 1) 취학률=(취학 적령의 재적학생수/취학 적령인구)×100
2)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가 포함됨.
3) 고등교육기관의 취학 적령은 18~21세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2003). 2003 한국의 교육·인적자원 지표.

〈표 2-25〉 성 및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추이(1970~2012)

(단위: %)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전체	57.6	58.3	59.0	56.6	60.0	61.9	61.0	61.9	60.8	61.1
남자	77.9	77.4	76.4	72.3	74.0	76.4	74.2	74.4	72.8	73.0
여자	39.3	40.4	42.8	41.9	47.0	48.4	48.6	50.0	49.2	49.7

자료: 통계청(1970~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여성의 혼인상태 및 연도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보면 미혼여성은 1981년 40.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50.5%로 30년간 10.0%pt 상승하였다. 기혼여성은 1981년 47.7%에서 1985년 소폭으로 감소하다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51.8%로 동 기간 4.1%pt 증가하여 미혼여성이 기혼보다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표 2-26〉 혼인상태 및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추이(1981~2012)

(단위: %)

연도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미혼여성	40.5	41.9	46.8	50.4	47.9	53.6	50.5	51.0
기혼여성	47.7	39.5	45.6	49.5	51.0	51.4	51.8	52.2

자료: 통계청(1970~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국회위원 중 여성비율은 1971년 2.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5.7%로 41년간 6.3배 증가하였다.

〈표 2-27〉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변화추이(1971~2012)

(단위: %)

연도	1971	1981	1988	1996	2000	2008	2012
여성비율	2.5	3.0	2.7	3.0	5.9	13.7	15.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1~2012). 국회의원선거총람.

공무원 중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비율은 중앙공무원이 1983년 0.9%에서 2012년 14.4%로 30년간 16배 증가하였고, 지방공무원은 동 기간 약 8배 증가하였다.

〈표 2-28〉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중 여성비율 변화추이(1983~2012)

(단위: %)

연도	1983	1990	1998	2008	2010	2012
중앙공무원 비율	0.9	1.4	2.8	10.8	12.3	14.4
지방공무원 비율	1.3	1.5	3.3	7.6	8.6	9.9

자료: 1) 행정자치부(1983~1998). 행정자치부통계연보.
2) 행정안전부(2008~2012). 행정안전부통계연보.

제3절 가구 및 가족변화 관련 연구동향 분석

1. 전반적인 연구동향

가. 2000년대 이전 연구동향

우리나라의 가족연구는 1960년대 가족구조, 가족가치, 가족제도 등 전통적 가족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연구를 시작으로, 1970~1980년대에는 본격적인 가족연구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 에는 가족유형에 대한 연구는 가구구성형태 파악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1980년대에는 가족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양이 급증했다. 1980년대 초반 가족구조에 대한 연구는 가족구성형태의 변화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었고, 후반기에는 산업화와 가족형태 변화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시작되어 1990년까지 핵가족 유형에 대비, 노인부양 문제를 중심으로 3세대 동거가족의 가족구조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지속되었다. 1990년대의 가족연구는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이 더욱 세분화·전문화 되었고, 가족유형과 구조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과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시작된 노후에 대한 가족가치관 연구도 이 시기에 확대되었고, 가족복지·가족정책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하였는데, 이는 가족 일반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문제 발상을 예방하기 위한 진정한 사회복지적 관점의 가족정책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나. 2000년대 이후 연구동향

2000년대 들어와서는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의 가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경제 위기로 인한 빈곤, 다양한 돌봄 체계, 영역별 사회서비스의 확대, 이주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구·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형성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변화와 관련해서 김승권 외(2000)는 가족변화 원인을 규명하고, 가족의 변화양상을 구조, 기능, 형성 및 주기, 경제생활, 관계, 해체 및 결손 등의 틀에서 분석하여 21세기 가족변화 전망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승권 외(2005)는 가족변화 원인을 규명하고, 가족의 변화양상을 구조, 기능, 형성 및 주기, 경제생활, 관계, 해체 및 결손 등의 틀에서 분석하여 21세기 가족변화 전망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김승권 외(2005)는 가족변화 관련 주요 이론 및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가치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기존자료 재분석(출산력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인구전환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 가구 및 가족구조 변화 관련 연구동향

최근에는 가구·가족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인가구 연구를 정책대상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노인 1인가구에 관한 연구이고, 주제별 중 가장 활발히 진행된 연구는 주

택과 주거분야라고 할 수 있다(변미리, 2008).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복지, 주거환경, 의사소통,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변미리, 2008; 박은아, 2004; 김현진·김학민·안옥희, 2000; 김행신·이영호, 1998; 이영자·김태현 1999).

2000년 이후 1인가구가 주택과 주거분야의 새로운 정책수요자로 등장하면서 1인가구의 주택 계획 및 수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변미리, 2008; 이지순 외, 2002; 김겸효, 2004; 황미리, 2004; 주택산업연구원, 2007; 성진용, 2008).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은 법과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3~4인 가구 중심의 아파트 주택공급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서민주택 공급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인이나 주택관련 연구 이외에도 1인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이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다(변미리 외, 2008).

정경희(2012)는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 이해라는 목표를 가지고, 최근 가족변화를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1인가구에 대한 기존자료(센서스 및 한국복지패널)를 사용하였고, 기존자료에서 얻을 수 없었던 부분은 전화조사 및 FGI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인구학적 변화추세, 1인가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 1인가구의 구체적인 생활현황과 가치관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안하였다.

가구변화와 관련해서 김영철(2011)은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국가 및 일본 등을 대상으로 가구관련 주요 변화 등을 살펴보고, 기존자로 재분석(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OECD 가족데이터)을 통해 우리나라 1·2인 가구의 증가요인, 빈곤 및 취업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평균가

구원 수 감소에 따른 빈곤상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하고, 1인 및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현실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의 수정 및 조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최연실(2013)은 한국가족의 변화 양상을 거시적·미시적 측면과 구조적·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한국가족 변화의 거시적 측면의 변화는 인구학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는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미시적 측면의 변화와 내용적 측면은 가족의식과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가족관계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 살펴보았고, 이는 2005년 가족실태조사, 2010년 가족실태조사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구조적 측면 변화는 가족 형태의 변화와, 가족 생활주기의 변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관련보고서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그 간의 많은 연구들이 경험적 성격의 자료 분석에 치중하고, 구체적인 현실 자료를 다루기는 하지만 부분적인 연구주제들을 주로 다루게 되면서 한국가족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조감하는 시도들이 상대적으로 미흡 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가구·가족 변화에 대한 유럽의 가구·가족 변화 동향은 Hantrais, Linda(2004)의 연구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영국 가구유형 구성은 2006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대비 1·2인 가구 65%, 3·4인 가구 29%, 남성 및 여성고령 1인 가구 급속한 증가가 나타나고, 독일은 1·2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3인 이상 가구 큰 폭 감소, 2005년 기준 1·2인 가구 71.4%, 3·4인 가구 24.8%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가구구성 변화는 북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율 1990년 39.6%에서 2009년 48.6에 달하고, 남성 1인가구가 여성 1인가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럽도 2000년대 들어 전통적 가구·가족의 형태에서 1·2인 가구로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구·가족의 변화는

OECD(2011)의 연구로 이어지는데, OECD 국가들의 가구구조 변화는 출산율 하락과 가정형성 지연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유럽국가 또한 우리나라의 가구가족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3. 미래 가족변화 관련 연구동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의 미래에 대한 장기 연구로 4개년 기획연구(2011-2014)를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족의 미래에 대해 향후 20년을 전망하여 가족변화와 삶의 모습에 대한 중장기 예측을 함으로써 새로운 여성·가족정책영역의 발굴과 주요한 가족지원정책의 범주 및 정책설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동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 장혜경 외(2011)는 가족의 변화를 진단하는 환경 분석과 가족 미래 예측요인 발굴로 가족의 미래모습에 대한 사전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분석은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환경스캐닝(Environmental Scanning), 코호트 요인법을 통한 장래인구가구추계, 전문가 조사와 시나리오 기법, 가족의 미래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등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객관적 가족 미래환경 전망, 주관적인 가족 미래환경 전망을 하였고, 이를 통해 가족미래 대응을 위한 여성·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2차 연구로 장혜경 외(2012)는 주요 가족변화환경영역을 중심으로 이들 변인이 가족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는 영역별 가족변동 핵심요인을 도출, 미래가족 변화방향 예측, 가족미래 시나리

오 개발, 시나리오별 내러티브 작성, 일반국민 인식조사 분석 순서로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 1차년도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족의 미래예측 변동요인들을 기반으로 각 요인들의 변동방향이 예측되었고, 이를 통해 미래 가족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제3장 가구·가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제1절 지역별 가구 및 가족구조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제2절 지역별 가구주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제3절 시사점

3 가구·가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제1절 지역별 가구 및 가족구조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1. 가구수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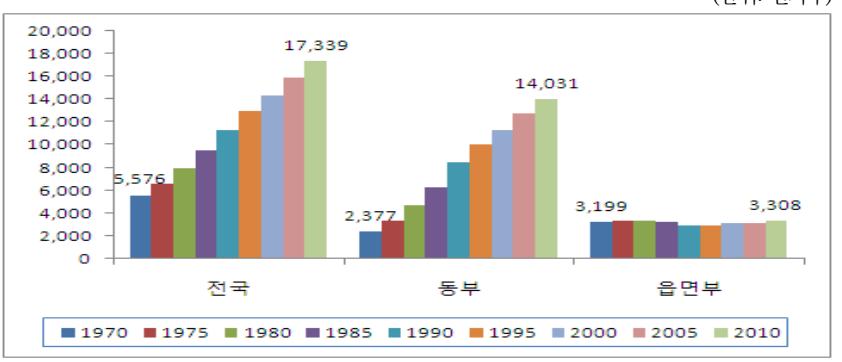
우리나라 가구규모를 연도 및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가구는 1970년 5,576천 가구에서 1980년 7,969천 가구로 10년간 42.92%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11,355천 가구로 동 기간 42.49%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14,391천 가구로 10년 간 26.74%의 증가율을 보여서 2000년 이전에 비해 증가폭이 2/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17,339천 가구로 동 기간 20.49%가 증가하여 2000년대 증가율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전국가구는 1970~1990년대까지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2000~2010년대에는 다소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40년 간 전국 가구규모는 3.1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11.0%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가족분거, 1~2인 가구 증가 및 1세대 중심의 핵가족화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도시지역 가구는 1970년 2,377천 가구에서 1980년 4,670천 가구로 10년 간 96.47%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8,462천 가구로 동 기간 81.20%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11,291천 가구로 10년 간 33.43%의 증가율을 보여서 2000년 이전에 비해 증가폭이 1/3 내외로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14,031천 가구로 동 기간 24.27%가 증가하여 2000년대 증가율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도시지역 가구는 1970~1990년대까지

는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2000~2010년대에는 속도가 다소 완만해져서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40년 간 도시지역 가구규모는 5.9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490.3%로 증가하여 전국보다 2배 많은 증가규모를 보였다. 이는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도시지역의 입구집중과 교육 및 취업생활로 인한 가족분거 때문으로 설명된다.

[그림 3-1] 연도 및 지역별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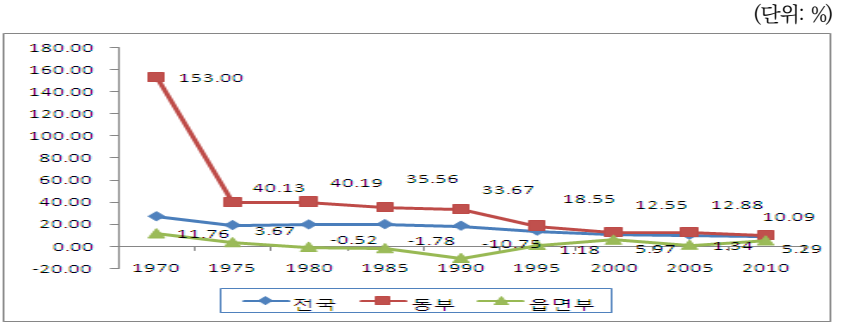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주: 가구수는 일반가구수를 말하며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가 제외된 수치임.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2] 연도 및 지역별 가구증가율

(단위: %)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농촌지역 가구는 1970년 3,199천 가구에서 1980년에는 3,299천 가구로 10년 간 3.13%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2,892천 가구로 동 기간 12.3%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는 3,101천 가구로 10년 간 7.23%의 증가율을 보여서 증감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에는 3,308천 가구로 동 기간 6.68%가 증가하여 2000년대 증가율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농촌지역 가구는 1970~1990년대까지는 증감의 변화를 보이다 2000~2010년대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0년 간 농촌지역 가구규모는 109천 가구가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3.41%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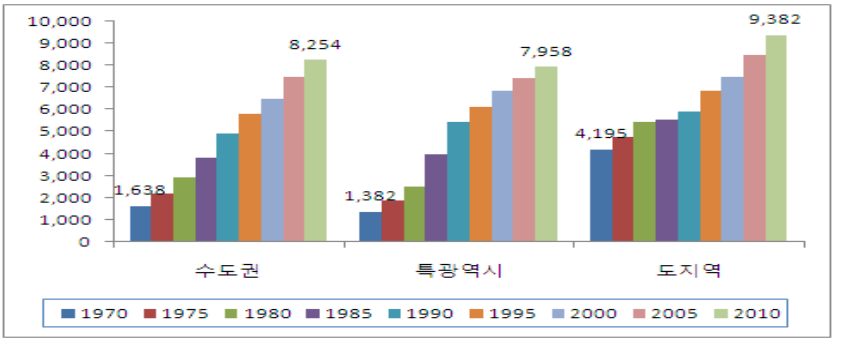
지역별로 40년간 가구변화를 보면 전국과 도시가구는 211~490%의 증가를 보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5% 미만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집중과 인구이동의 결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가구규모를 연도 및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가구는 1970년 1,638천 가구에서 1980년 2,920천 가구로 10년 간 78.27%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4,919천 가구로 동 기간 68.46%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6,502천 가구로 10년 간 32.18%의 증가율을 보여서 2000년 이전에 비해 증가폭이 1/2 내외로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8,254가구로 동 기간 26.95%가 증가하여 2000년대 증가율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수도권 가구는 1970~1990년대까지는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2000~2010년대에는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여서 전국 및 도시와 유사하였다. 40년 간 수도권 가구규모는 5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403.9%로 도시 가구규모의 증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의 가구규모 증가 원인은 도시지역의 가구 증가와 맥을 같이한다.

〔그림 3-3〕 연도 및 수도권·특광역시·도지역별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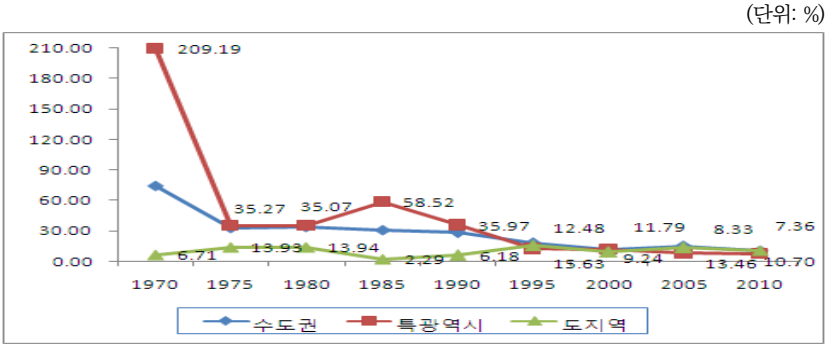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4〕 연도 및 수도권·특광역시·도지역별 가구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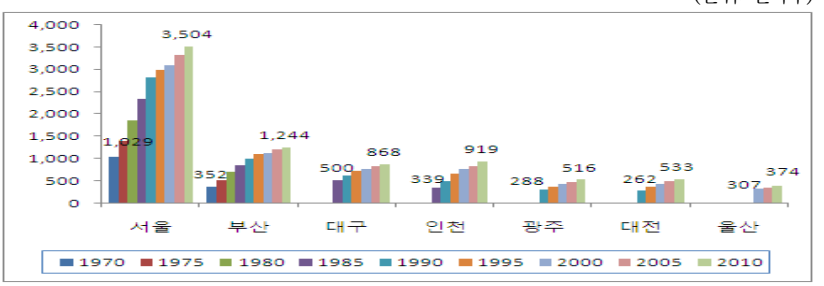
주: 1970년 전국·서울특별시 가구증가율은 1960년 전국·서울특별시 가구 활용하여 산출함.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가구규모는 1970년 1,382천 가구에서 1980년 2,524천 가구로 10년 간 82.63%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5,441천 가구로 동 기간 115.6%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6,842천 가구로 10년 간 25.75%의 증가율을 보여서 1990년대 이전에 비해 증가폭이 1/3 내외로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7,958가구로 동 기간 16.31%

가 증가하여 2000년대 증가율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1990년대를 기준으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차이에서 오는 영향이 가구증가에 반영된 것으로 설명된다.

[그림 3-5] 연도 및 특별시·6대광역시별 가구수

(단위: 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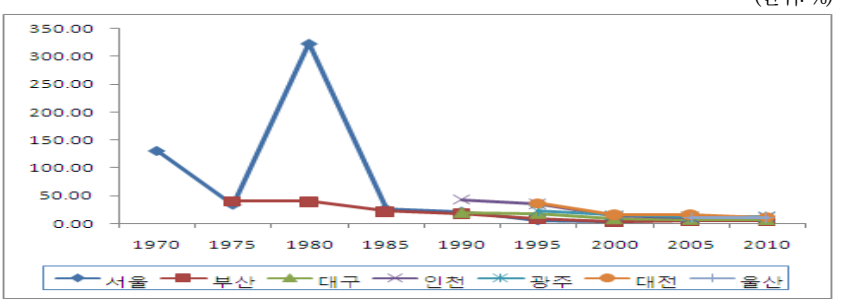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특별시·광역시 가구는 1970~1980년대까지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국 및 도시와 유사하였다. 40년 간 특별시·광역시 가구규모는 약 6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403.9%로 도시 가구규모의 증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 3-6] 연도 및 특별시·6대광역시별 가구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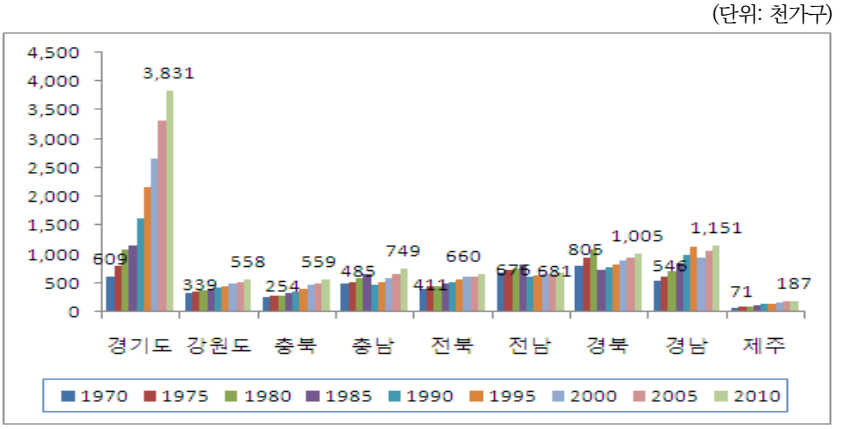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9대 도지역의 가구규모는 1970년 4,195천 가구에서 1980년 5,445천 가구로 10년 간 29.80%가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5,914천 가구로 동 기간 8.6%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7,470천 가구로 10년 간 26.31%의 증가율을 보여서 1970년대의 증가속도로 1980년대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9,382가구로 동 기간 25.60%가 증가하여 2000년대 증가율과 유사하였다. 9대 도지역 가구는 전반적으로 소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1980년대는 증가속도가 다른 기간에 비해 상당히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수도권 및 특별시·광역시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40년 간 9대 도지역의 가구규모는 약 2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23.6%로 수도권과 특별시·광역시 가구증가율의 1/3 미만에 불과하였다. 이는 산업화도시화로 도시지역으로 인구이동이 편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도지역은 가구가 축소되거나 하면서 증가가 지체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7〕 연도 및 9대도지역별 가구수

(단위: 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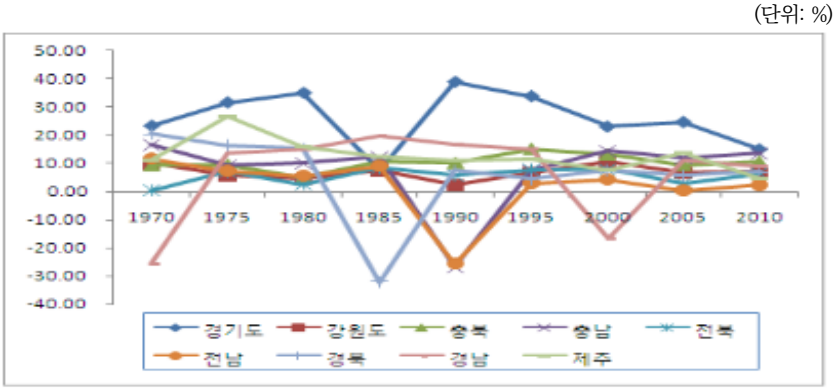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특별시와 6대광역시별로 가구증가율을 보면 40년간 부산이 25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서울이 240.5%로 전국보다 높았다. 또한 25년간 인천은 171.1%, 대구는 73.6%로 인천이 빠른 속도로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10년간 울산의 가구증가율은 21.8%로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한편 9대 도지역별로 40년간 가구증가율을 보면 경기도가 529.1%로 전국보다 2.5배 높았으며, 다음은 제주도 163.4 %, 충북 120.1%이었고, 나머지는 0.74~65%정도로 경상도가 상당히 낮았으며 전남은 거의 정체를 보였다. 지역별 가구증가율도 수도권 및 특정 광역시에 인구집중으로 가구가 일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3-8〕 연도 및 9대도지역별 가구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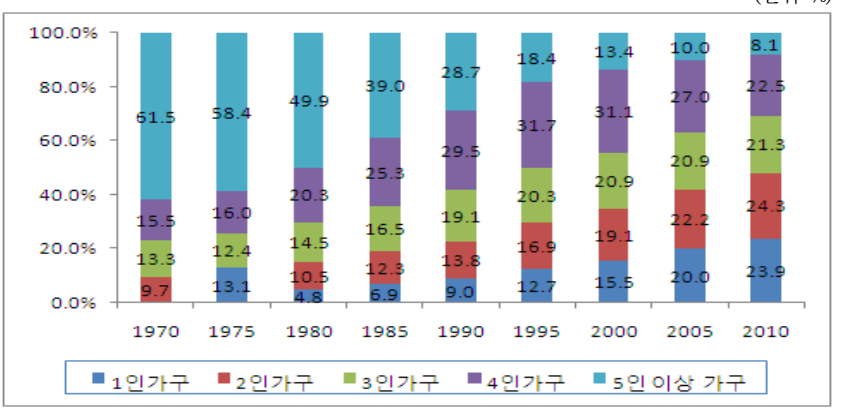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지역별로 가구원수별 가구규모의 분포를 보면, 전국은 1975년 5인 이상 가구는 58.4%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고, 다음은 4인가구, 1~2인가구, 3인가구 순으로 4인 이상가구가 전체의 74.4%로 2/3을 초과하였다. 가구원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2인가구는 24.3%로 가장 많

았고, 다음은 1인가구, 4인가구, 3인가구, 5인가구 순으로 많아서 1~2인 가구가 48.2%로 과반수에 이르며 4인 이상 가구는 30.6%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가구원수의 감소는 소가족화·핵가족화에서 오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3-9] 연도 및 가구원수별 분포: 전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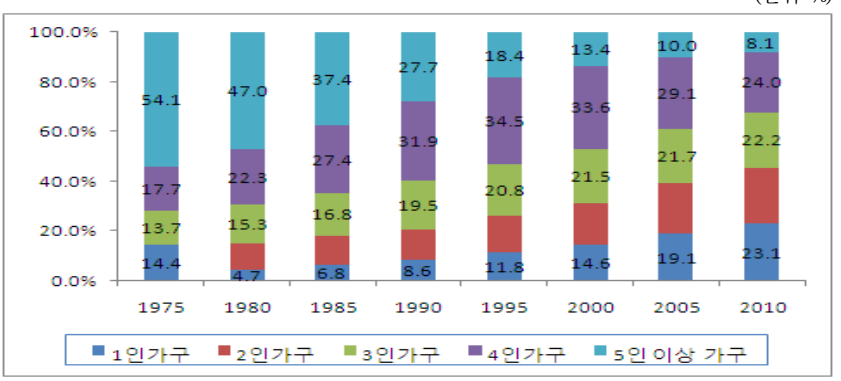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한편, 동부는 1975년 5인 이상가구가 54.1%로 절반을 초과하였고, 다음은 4인가구, 1~2인가구, 3인가구 순으로 많았으며, 가구원의 지속적인 감소결과 2010년에는 4인가구가 2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인가구, 2인가구, 5인 이상 가구 순으로 1~2인가구가 45.6%이었고, 4인 이상가구는 32.1%로 전국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읍·면부는 1975년 5인 이상가구가 62.8%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였고, 다음은 4인가구, 1~2인가구, 3인 가구 순으로 많았고, 소가족화로 2010년 2인가구는 3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순으로 1~2인가구가 58.9%이었고, 4인 이상 가구는 23.7%에 불과하

여서 전국과 유사하였다. 따라서 가구원수별 분포는 지역 간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서 동부와 읍·면부도 소가족화·핵가족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3-10] 연도 및 가구원수별 분포: 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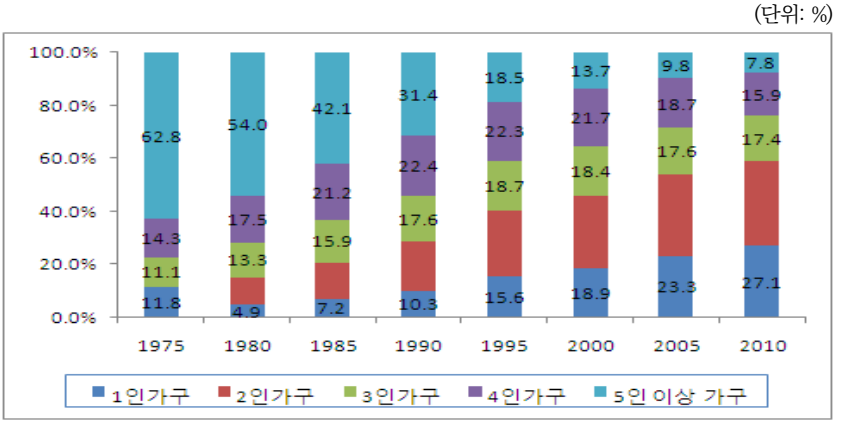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11] 연도 및 가구원수별 분포: 읍·면부

(단위: %)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원수별 가구규모의 변화추이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전국 1인 가구는 1980년 383천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4,142천 가구로 30년간 10.8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981.5%로 전국의 약 5배에 이르고 있다. 2인가구도 동 기간 7.8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680.1%로 전국보다 3배 높았다. 또한 3인가구와 4인가구는 동일하게 5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각각 398.8%와 350.1%로 나타났다. 반면, 5인 이상가구는 1980년 3,974천 가구에서 198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1,398천 가구로 30년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64.8%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1~2인가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3~4인가구는 일정한 증가를 보인데 비해, 5인 이상 가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가족해체 및 분거가족 증가 등으로 인한 소가족화 핵가족화의 변화속도를 반영하고 있다.

동부지역 1인가구는 1980년 220천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3,244천 가구로 30년간 14.7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374.5%로 전국의 약 7배 이르고 있다. 2인가구도 동 기간 6.3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530.8%로 전국보다 2.5배 높았다. 또한 3인가구와 4인가구는 각각 4.4배와 3.2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각각 337.0%와 223.4%로 나타났다. 반면, 5인 이상가구는 1980년 2,193천 가구에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1,140천 가구로 30년간 1/2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48.0%의 감소율을 보였다. 대체로 1인가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뒤이어 2인가구, 3~4인가구 순으로 증가속도가 빠른 데 비해, 5인 이상 가구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동부지역은 전국과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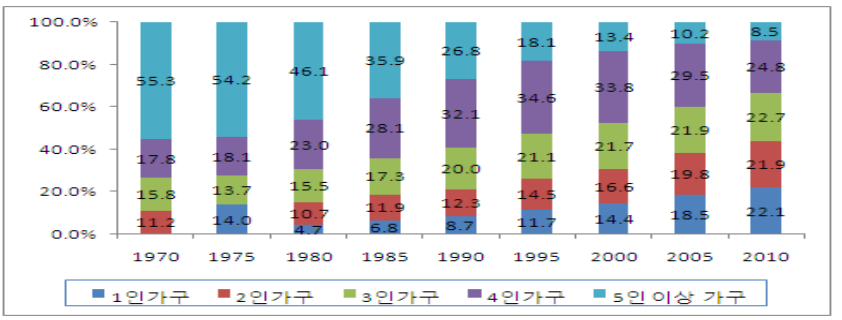
읍·면부지역을 보면, 1인가구는 1980년 163천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898천 가구로 30년간 5.5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450.9%로 전국보다 2배 높았다. 2인가구도 동 기간 3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09.1%로 전국과 유사하였다. 또한 3인가구는 31.2% 증가율로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4인가구는 1980년 577천 가구에서 2005년 이후 감소하여 2010년 525천 가구로 9%의 감소를 보였고, 5인 이상가구는 1980년 1,781천 가구에서 198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259천 가구로 동기간 1/9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85.5%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경향을 보였고, 다음은 2인가구 이었으며, 3인가구는 상당히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비해, 4~5인가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전국과 동부지역과는 차이를 보였다. 읍·면지역은 동부와는 달리 노인 1인가구 급증에서 오는 영향과 함께 교육 및 취업 등으로 가족분거에서 오는 현상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16개시도별로 가구원수별 가구규모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은 1975년에 5인 이상 가구는 54.2%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고, 다음은 4인가구, 1~2인가구, 3인가구 순으로 4인 이상가구가 전체의 72.3%로 2/3을 초과하였다. 지속적인 가구원수의 감소로 2010년에는 4인가구가 2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5인가구 순으로 많아서 1~3인가구는 66.7%를 상회한데 비해, 4~5인 이상 가구는 33.3%에 불과하였다.

[그림 3-12] 연도 및 가구원수별 분포: 수도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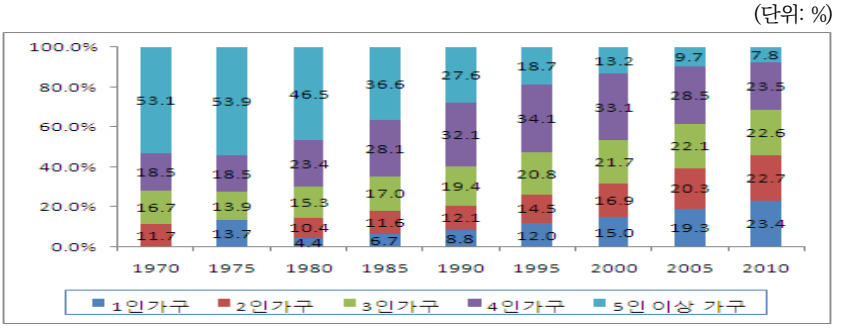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특별시·광역시의 분포를 보면, 1975년에 5인 이상 가구는 53.9%로 절반을 약간 초과하였고, 다음은 4인가구, 1~2인가구, 3인가구 순으로 4인 이상가구가 전체의 72.4%로 2/3을 초과하였다. 지속적인 소가족화로 2010년 4인가구와 1인가구가 많은 편이었고, 이어서 2인가구와 3인가구가 많았으며, 5인가구는 미미하였다. 대체로 특별시·광역시의 가구원수별 분포는 수도권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그림 3-13] 연도 및 가구원수별 분포: 특·광역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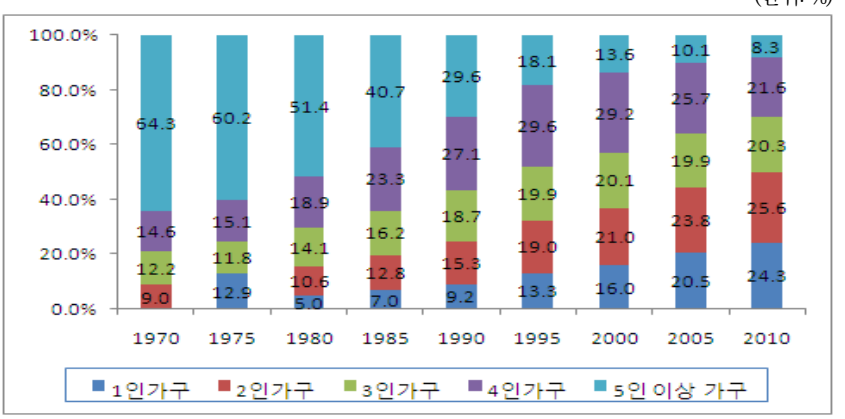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도지역은 1975년에 5인 이상가구가 60.2%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였고, 다음은 4인가구, 1인가구, 3인가구 순으로 4인 이상가구가 전체의 75.3%로 2/3 이상에 해당되었다. 가구원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2010년에는 1가구와 2인가구가 많은 편이었고, 다음은 3인가구와 4인가구가 많았으며, 5인 이상가구는 10% 미만에 불과하였다.

[그림 3-14] 연도 및 가구원수별 분포: 도지역

(단위: %)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반적으로 16개 시도의 가구원수별 분포는 커다란 차이가 없었으며, 1~2인가구 비율은 도지역이 가장 높았고, 특별시·광역시, 수도권 순이었다.

16개시도의 가구원수별 가구규모의 변화추이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수도권 1인가구는 1980년에 138천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823천 가구로 30년간 13.2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221%로 전국의 약 6배 이르고 있다. 2인가구도 동 기간 5.8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477.1%로 전국보다 2배 높았다. 또한 3인가구와 4인가

구는 각각 4배와 3배 증가하였고, 증가율도 313.0%와 205.8%로 나타났다. 반면, 5인 이상가구는 1980년 1,345천 가구에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699천 가구로 30년간 1/2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48.0%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뒤이어 2인가구, 3~4인 가구 순으로 증가속도가 빠른 데 비해, 5인 이상 가구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별시·광역시 1인가구는 1980년에 110천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864천 가구로 30년간 16.9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594.5%로 전국의 약 8배 이르고 있다. 2인가구도 동 기간 6.9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587.5%로 전국보다 약 3배 높았다. 또한 3인가구와 4인가구는 각각 4.6배와 3.2배 증가하였고, 증가율도 363.8%와 216.6%로 나타났다. 반면, 5인 이상가구는 1980년에 1,175천 가구에서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624천 가구로 30년간 1/2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46.9%의 감소율을 보였다. 대체로 특별시·광역시의 가구원수별 변화추이는 수도권과 유사하였다.

도지역 1인가구는 1980년에 273천 가구에서 증가하여 2010년에는 2.279천 가구로 30년간 8.3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734.8%로 전국의 3.5배 이르고 있다. 2인가구도 동 기간 4.2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315.6%로 전국보다 1.5배 높았다. 또한 3인가구와 4인가구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증가율도 148.2%와 97.1%로 나타났다. 반면, 5인 이상가구는 1980년에 2,800천 가구에서 198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775천 가구로 30년간 1/3 미만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72.3%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뒤이어 2인 가구, 3~4인 가구 순으로 증가속도가 빠른 데 비해, 5인 이상 가구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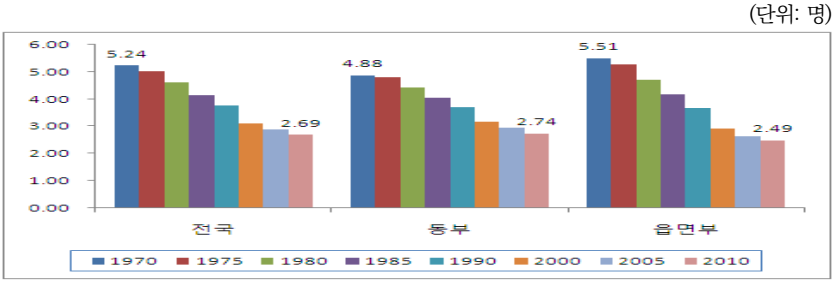
연도 및 지역별로 평균가구원수를 보면, 전국 평균가구원수는 1970에 5.24명에서 1980년 4.62명으로 10년간 0.62명이 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3.77명으로 1980년보다 0.85명이 줄었으며, 2000년에는 3.12명으로 0.65명이 감소하였고, 2010년은 0.43명이 줄어든 2.69명으로 나타났다.

동부는 1970년에 4.88명에서 1980년 4.42명으로 10년간 0.46명이 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3.71명으로 1980년보다 0.71명이 줄었으며, 2000년은 3.18명으로 0.53명이 감소하였고, 2010년은 2.74명으로 동기간 0.44명이 줄어들었다. 읍·면부는 1970년에 5.51명에서 1980년 4.72명으로 10년간 0.79명이 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3.69명으로 1980년보다 1.03명이 줄었으며, 2000년은 2.91명으로 0.78명이 감소하였고, 2010년은 0.42명이 줄어든 2.49명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균가구원수는 전국과 동부에 비해 읍·면부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읍·면부의 평균가구원수는 1970년~1980년까지 동부보다 많다가 1990년 이후 적어지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이와 같은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인구집중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다.

[그림 3-15] 연도 및 지역별 평균 가구원수

(단위: 명)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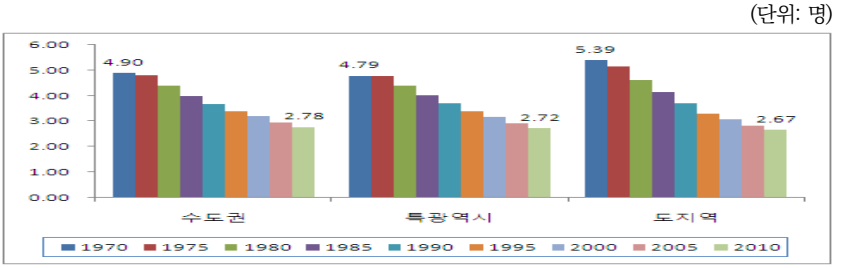
16개 시도별로 평균 가구원수를 보면, 수도권 평균 가구원수는 1970년에 4.90명에서 1980년 4.40명으로 10년간 0.5명이 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3.68명으로 1980년보다 0.72명이 줄었으며, 2000년은 3.19명으로 0.49명이 감소하였고, 2010년은 0.41명이 줄어든 2.78명으로 나타났다.

특별시·광역시는 1970년에 4.79명에서 1980년 4.41명으로 10년간 0.38명이 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3.70명으로 1980년보다 0.71명이 줄었으며, 2000년은 3.17명으로 0.53명이 감소하였고, 2010년은 2.72명으로 동 기간 0.45명이 줄어들었다. 한편, 도지역은 1970년에 5.39명에서 1980년 4.61명으로 10년간 0.78명이 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3.71명으로 1980년보다 0.90명이 줄었으며, 2000년은 3.09명으로 0.62명이 감소하였고, 2010년은 0.42명이 줄어든 2.67명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평균가구원수는 수도권과 특별시·광역시에 비해 도지역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도지역의 평균가구원수는 1970년~1985년까지 수도권과 특별시·광역시보다 많다가 1995년 이후 적어지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도지역의 평균가구원수의 급격한 감소는 읍·면지역과 동일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림 3-16〕 연도 및 수도권·특광역시·도지역별 평균 가구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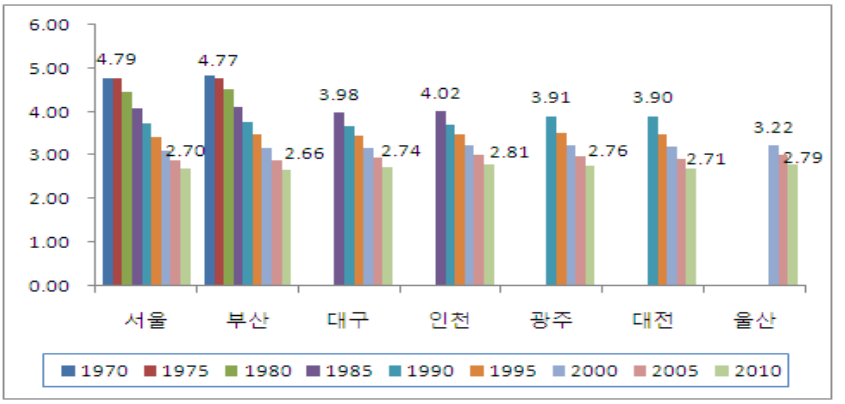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17〕 연도 및 특별시·6대광역시별 평균 가구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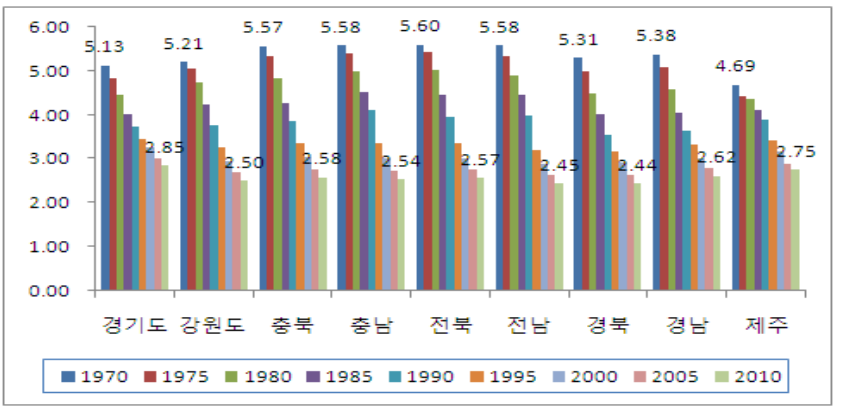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18〕 연도 및 9대도지역별 평균 가구원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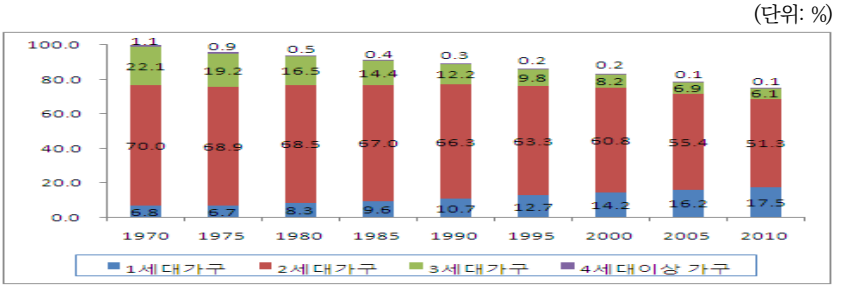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2. 세대구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연도 및 지역별로 우리나라 세대별 가구구성을 보면, 전국은 1980년에는 친족가구가 93.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는 각각 4.8%와 1.5%로 대부분이 친족가구로 이루어졌다. 친족가구 중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가구는 68.5%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은 3세대가구가 16.5%로 많았으며, 1세대가구와 4세대 이상 가구는 미미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핵가족화로 세대별 가구구성은 많은 변화를 보여서 2010년 친족가구는 74.9%로 30년간 18.8%pt감소하였고, 이에 비해 1인가구는 23.9%로 동 기간 19.1%pt 증가하였으며, 비친족가구는 1.2%로 지속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였다. 친족가구 중 2세대가구는 51.3%로 과반수이었고, 이어서 1세대가구는 17.5%로 많았으며, 3~4세대 이상 가구는 미미하였다. 1980년과 비교할 때 2세대와 4세대 이상은 비슷한 분포를 보인데 비해, 1세대는 증가하고, 3세대는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 증가와 세대별 분포 변화는 가족해체와 가족분거 등으로 인한 소가족화와 핵가족화에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그림 3-19] 연도 및 세대구성별 분포: 전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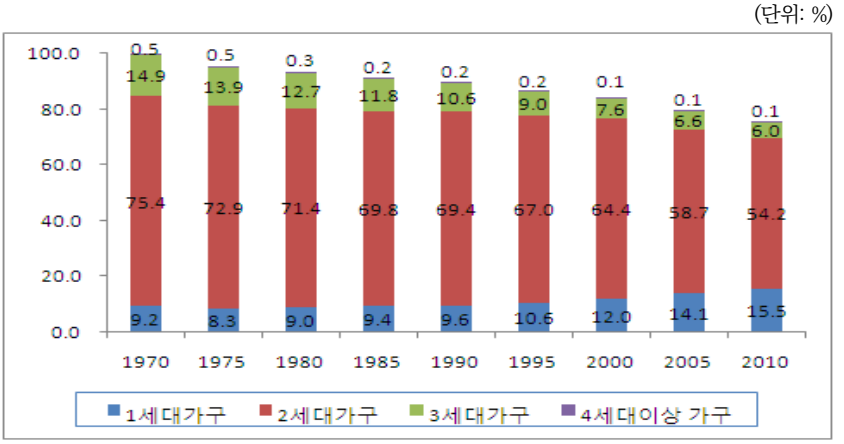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동부는 1980년에 친족가구가 93.4%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데 비해,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는 각각 4.7%와 1.9%로 미미하였다. 친족가구 중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가구는 71.4%로 2/3 이상을 상회하였고, 다음은 3세대가구가 12.0%이었으며, 1세대가구와 4세대 이상 가구는 미미하였다. 지속적인 소가족화로 세대별 가구구성은 변화를 보여서 2010년에 친족가구는 75.8%로 30년간 17.6%pt감소하였고, 1인가구는 23.9%로 동 기간 18.4%pt 증가하였으며, 비친족가구는 1.1%로 지속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였다. 친족가구 중 2세대가구는 54.2%로 과반수를 약간 초과하였고, 다음은 1세대가구가 15.5%로 많았으며, 3~4세대 이상 가구는 상당히 적었다. 30년간 동부지역 친족가구의 세대변화는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3-20] 연도 및 세대구성별 분포: 동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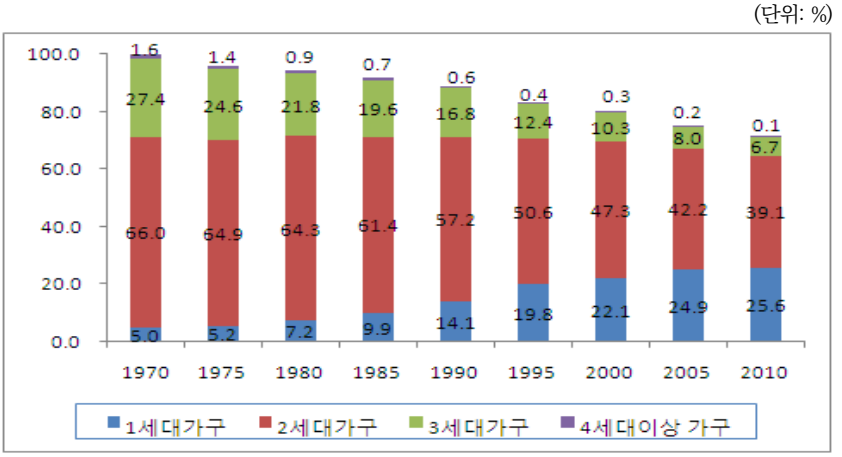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읍·면부지역은 1980년에 친족가구가 84.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는 각각 4.9%와 0.9%로 미미하였다. 친족가구 중

2세대가구는 64.3%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은 3세대가구가 21.8%로 많은 편이었으며, 1세대가구와 4세대 이상 가구는 미미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핵가족화로 세대별 가구구성은 변화를 보여서 2010년에 친족가구는 71.5%로 30년간 22.7%pt감소하였고, 1인가구는 27.1%로 동 기간 22.2%pt 증가하였으며, 비친족가구는 1.4%로 미미하였다. 친족가구 중 2세대가구는 39.1%로 1/3을 약간 초과하였고, 다음은 1세대가구가 25.6%로 많았으며, 3~4세대 이상 가구는 상당히 적었다. 30년간 읍면부지역 친족가구의 세대변화를 보면, 세대분포는 전국 및 동부와 유사하였으나 비율은 다소 차이를 보여서 1세대가구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었으며, 2세대가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부부가구 분포가 높은데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그림 3-21〕 연도 및 세대구성별 분포: 읍면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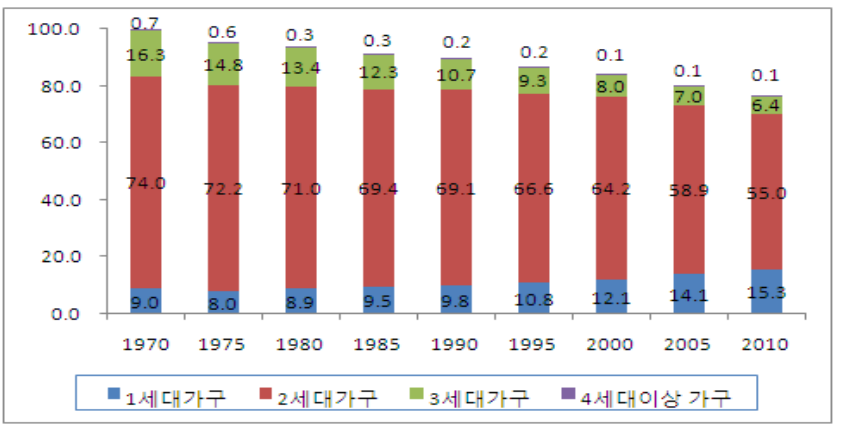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수도권은 1980년 친족가구가 93.6%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데 비해,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는 각각 4.7%와 1.7%로 미미하였다. 친족가구 중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가구는 71.0%로 2/3 이상을 상회하였고, 다음은 3세대가구가 13.4%이었으며, 1세대가구와 4세대 이상 가구는 미미하였다. 핵가족화로 세대별 가구구성은 변화를 보여서 2010년 친족가구는 76.8%로 30년간 16.8%pt감소하였고, 1인가구는 22.1%로 동 기간 17.4%pt 증가하였고, 비친족가구는 1.1%로 지속적으로 미미하였다. 친족가구 중 2세대가구는 55.0%로 과반수를 약간 초과하였고, 다음은 1세대가구가 15.3%로 많았으며, 3~4세대 이상 가구는 상당히 적었다. 30년간 수도권지역 친족가구의 세대변화는 동부지역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3-22] 연도 및 세대구성별 분포: 수도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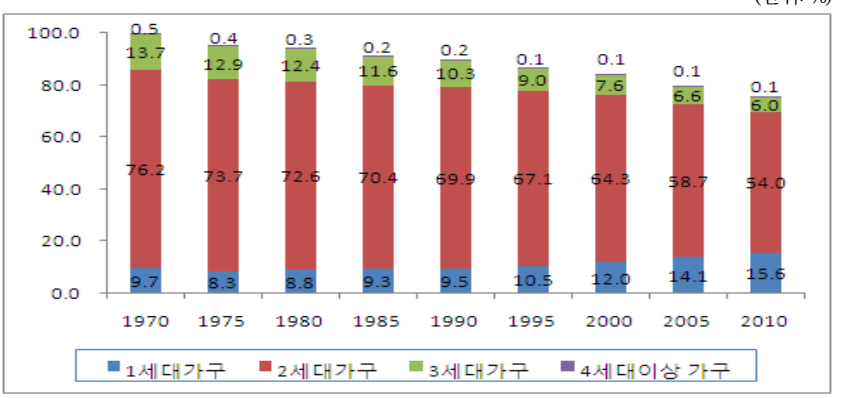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특별시·광역시는 1980년 친족가구가 94.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는 각각 4.4%와 1.6%로 미미하였다. 친족가구 중 2세대가구는 72.6%로 2/3 이상을 상회하였고, 다음은 3세대가구가 12.4%이었으며, 1세대가구와 4세대 이상 가구는 미미하였다. 소가족화로 세대별 가구구성은 변화하여서 2010년 친족가구는 75.7%로 30년간

18.4%pt감소하였고, 1인가구는 23.4%로 동 기간 19.0%pt 증가하였고, 비친족가구는 1.0%로 지속적으로 미미하였다. 친족가구 중 2세대가구는 54.0%로 과반수를 약간 초과하였고, 다음은 1세대가구가 15.6%로 많았으며, 3~4세대 이상 가구는 상당히 적었다. 30년간 특별시·광역시 친족가구의 세대변화는 수도권과 유사하였다.

[그림 3-23] 연도 및 세대구성별 분포: 특·광역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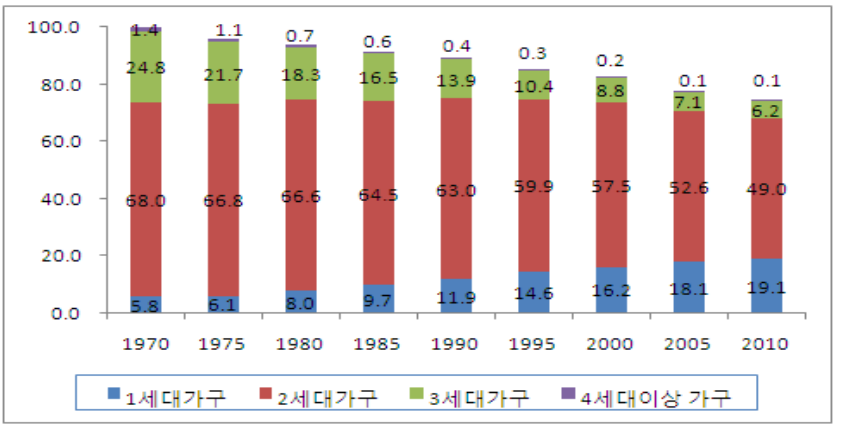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도지역은 1980년에 친족가구가 93.6%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비해,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는 각각 5.0%와 1.4%로 미미하였다. 친족가구 중 2세대가구는 66.6%로 2/3정도이었고, 다음은 3세대가구가 18.3%이었으며, 1세대가구와 4세대 이상 가구는 미미하였다. 지속적인 핵가족화로 세대별 가구구성은 변화하여서 2010년 친족가구는 74.4%로 30년간 19.2%pt감소하였고, 1인가구는 24.3%로 동 기간 19.3%pt 증가하였으며, 비친족가구는 1.3%로 지속적으로 미미하였다. 친족가구 중 2세대가구는 49.0%로 과반수에 다소 못 미쳤고, 다음은 1세대가구가 19.0%로

많았으며, 3~4세대 이상 가구는 상당히 적었다. 30년간 도지역 친족가구의 세대변화를 보면 읍·면부와 유사하였다.

[그림 3-24] 연도 및 세대구성별 분포: 도지역

(단위: %)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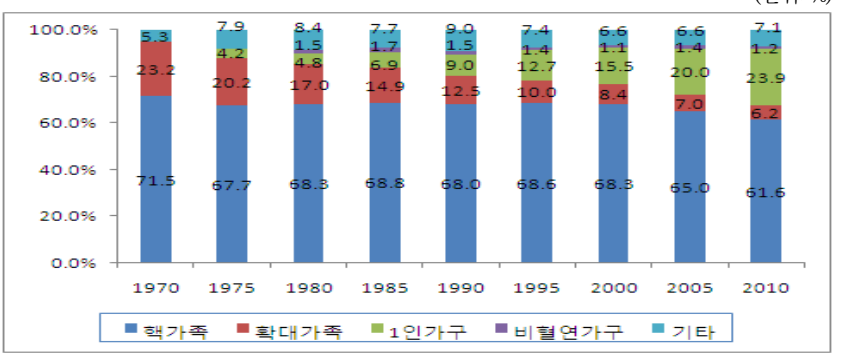
3. 가구 및 가족유형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연도 및 지역별로 우리나라 가구 및 가족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은 1980년에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형태가 68.3%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부부와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 등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확대가족형태는 17.0%로 핵가족의 1/4에 불과하였다. 또한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는 각각 4.8%와 1.5%를 보였다. 지속적인 소가족화로 가구유형은 변화를 보여서 2010년에 핵가족형태는 61.6%로 1980년에 비해 6.7%pt 감소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6.2%로 10.8%pt가 감소하였으며, 1인가구는 23.9%로 약 5배 증가하였고 비혈연가구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가구유형변화는 소가족화·핵가족화에 따른

영향으로 1인가구 및 1~2세대 중심의 핵가족화 형태에 집중된 특성을 보였다.

[그림 3-25] 연도 및 가구유형별 분포: 전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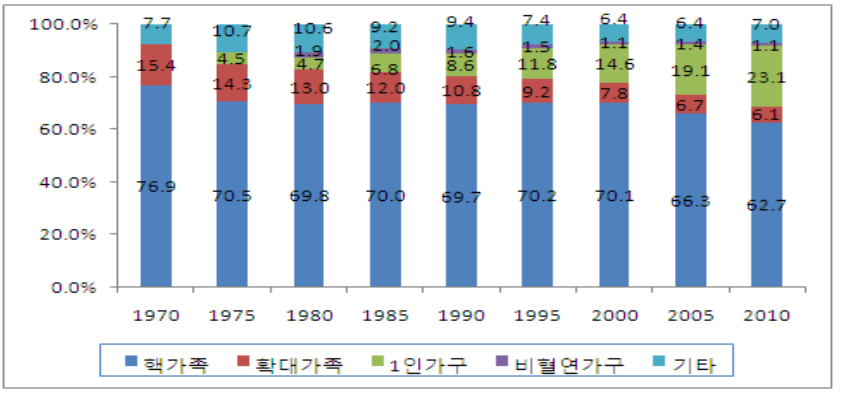
주: 1) 1970년: 1인가구, 비혈연가구 조사 결과 없음; 2) 1970~1990년 기타가구에는 기타 1세대가구, “부부, 양친”, “부부, 편부모”, “부부, 부부의형제자매”, 기타 2세대가구 포함; 3) 1995년 기타가구에는 기타 1세대가구, “부부, 양친”, “부부, 편부모”, “부부, 자녀, 부부의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기타 2세대가구 포함; 4) 2000~2005년 기타가구에는 “부부+형제자매”, “부부+기타친인척”, "가구주+형제자매“, “가구주+기타친인척”, 기타 1세대가구, “부부+양친”, “부부+한부모(편부모)”, “부부+자녀+부부의형제자매”, “조부모+손자녀”, 기타 2세대가구 포함; 5) 2010년 기타가구에는 “부부+미혼형제자매”, “부부+기타친인척”, “가구주+미혼형제자매”, “가구주+기타친인척”, 기타 1세대가구, “부부+양친”, “부부+한부모”,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기타 2세대가구 포함.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동부는 1980년에 핵가족형태가 69.8%로 과반수를 초과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13.0%로 핵가족의 1/5에 불과하였다. 또한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는 각각 4.7%와 1.9%를 보였다. 소가족화로 가구유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2010년에 핵가족형태는 62.7%로 1980년에 비해 7.1%pt 감소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6.1%로 6.9%pt가 감소하였으며, 1인가구는 23.1%로 약 5배 증가하였고 비혈연가구는 비슷하였다. 이와 같이 동부지역의 가구유형변화는 전국과 유사하였다.

〔그림 3-26〕 연도 및 가구유형별 분포: 동부

(단위: %)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읍·면부는 1980년에 핵가족형태가 66.2%로 과반수를 초과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22.7%로 핵가족의 1/3에 불과하였다. 또한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는 각각 4.9%와 0.9%를 보였다. 소가족화로 가구유형은 변화하여 2010년 핵가족형태는 57.0%로 1980년에 비해 9.2%pt 감소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6.8%로 15.9%pt가 감소하였으며, 1인가구는 27.1%로 약 6배 증가하였고 비혈연가구는 비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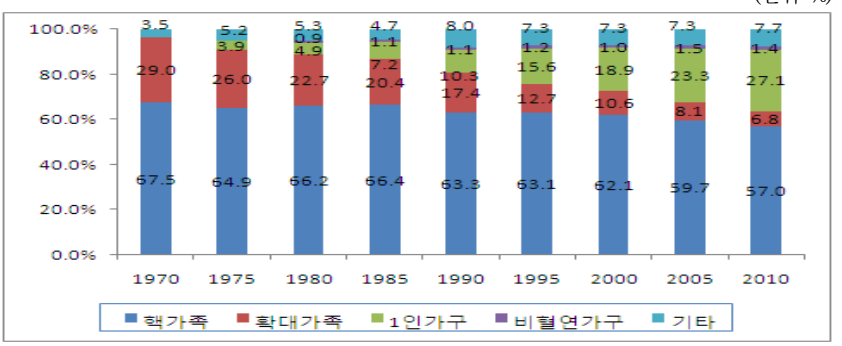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30년간 가구유형의 변화를 보면 가구유형별 분포는 지역간에 차이가 없으나, 읍·면지역이 전국과 동부에 비해 1인가구의 확대가 높아서 핵가족과 확대가족형태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노인 1인가구의 증가에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수도권은 1980년에 핵가족형태가 69.9%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13.7%로 핵가족의 1/5에 불과하였다. 또한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는 각각 4.7%와 1.7%를 보였다. 가구유형은 변화를 보여서 2010년에 핵가족형태는 51.8%로 1980년에 비해 17.8%pt 감소하였는

데 비해, 확대가족형태는 22.6%로 8.9%pt 증가하였으며, 1인가구도 18.3%로 약 4배 증가하였고 비혈연가구는 비슷하였다. 30년간 수도권지역 가구유형 변화는 확대가족과 1인가구가 증가한데 비해 핵가족이 감소하여 전국 및 동부지역 등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의 1인가구 증가는 학업 및 취업 등으로 미혼 1인가구 증가에서 오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그림 3-27〕 연도 및 가구유형별 분포: 읍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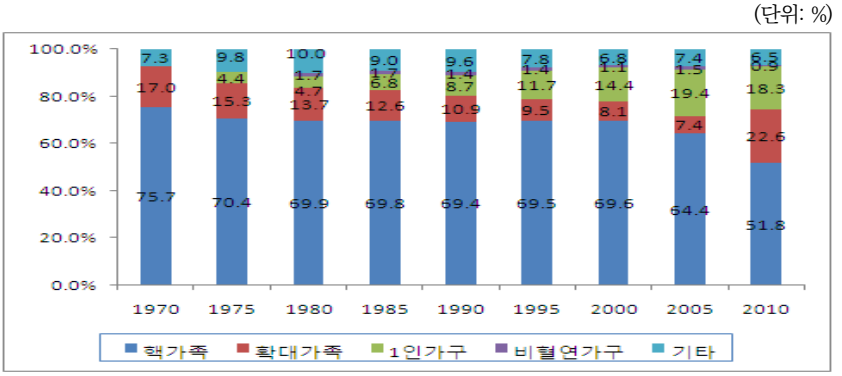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28〕 연도 및 가구유형별 분포: 수도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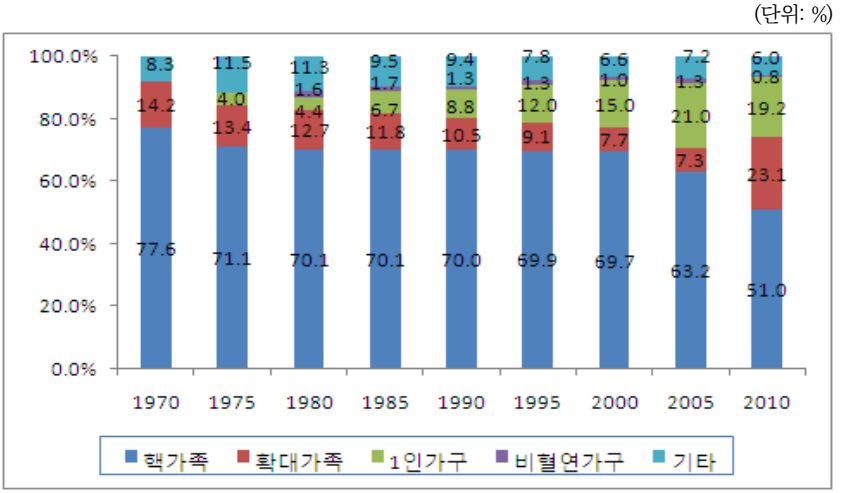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특별시·광역시는 1980년에 핵가족형태가 70.2%로 2/3을 상회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12.7%로 핵가족의 1/5에 불과하였다. 또한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는 각각 4.4%와 1.6%를 보였다. 지속적인 소가족화로 가구유형은 변화를 보여서 2010년에 핵가족형태는 51.0%로 1980년에 비해 19.2%pt 감소하였는데 비해, 확대가족형태는 23.1%로 10.4%pt 증가하였으며, 1인가구도 19.2%로 약 4배 증가하였고 비혈연가구는 지속적으로 미미하였다. 30년간 특별시·광역시의 가구유형변화는 수도권과 유사하였다.

〔그림 3-29〕 연도 및 가구유형별 분포: 특·광역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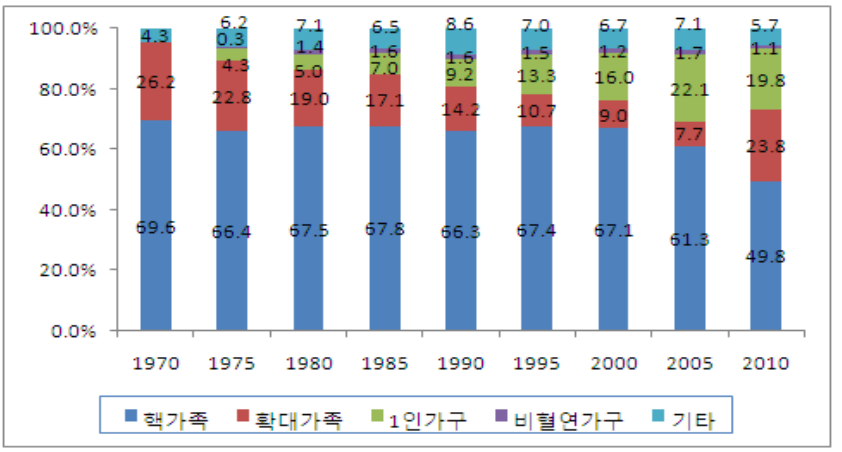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도지역은 1980년에 핵가족형태가 67.5%로 2/3을 상회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19.0%로 핵가족의 1/3에 불과하였다. 또한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는 각각 5.0%와 1.4%를 보였다. 소가족화로 가구유형은 변화를 보여서 2010년에 핵가족형태는 49.8%로 1980년에 비해 17.7%pt 감소하였는데 비해, 확대가족형태는 23.8%로 4.8%pt 증가하였으며, 1인가

구도 19.8%로 약 4배 증가하였고 비혈연가구는 비슷하였다. 동 기간 도 지역의 가구유형변화는 수도권 및 특별시·광역시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그림 3-30] 연도 및 가구유형별 분포: 도지역

(단위: %)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제2절 지역별 가구주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1. 가구주 성 및 연령별 시계열적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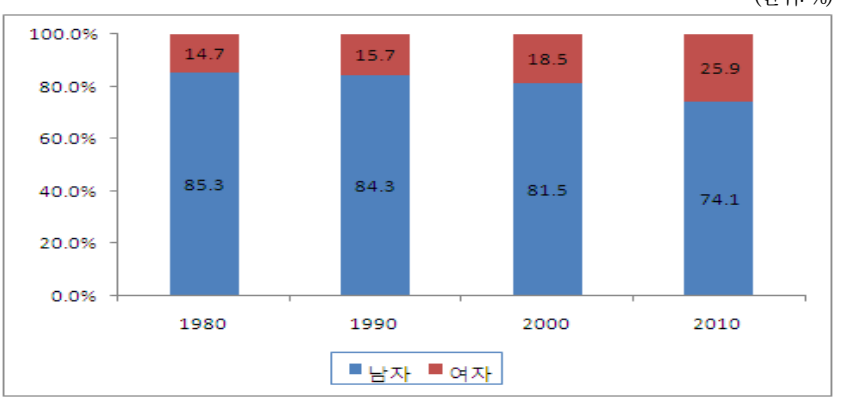
연도 및 지역별로 우리나라 가구주의 성별 구성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에 가구주의 성별분포는 1980년에는 남성 가구주가 85.3%, 여성 가구주는 14.7%로 남성이 여성보다 5.8배 많았으며, 1990년에는 각각 84.3%와 15.7%, 2000년에는 81.5%와 18.5%, 2010년에는 74.1%와

25.9%로 30년 간 가구주의 성별 분포는 남성가구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여성가구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2010년 남성가구주는 여성가구주보다 2.9배로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혼·별거 및 사별로 인한 가족해체로 여성가구주의 증가에서 에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그림 3-31] 연도 및 가구주의 성별 분포: 전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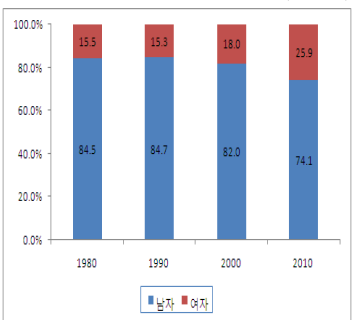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8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30년 간 동부와 읍·면부지역의 가구주의 성별 변화추이는 전국과 유사하였으며, 남녀가구주의 차이는 동부지역은 1980년 남성가구주가 여성보다 5.5배 높았으나, 2010년에는 2.9배로 감소하였고, 읍·면부지역은 1980년 6.4배에서 2010년 2.8배로 줄어들어 동부에 비해 읍·면부지역의 여성가구주 증가속도가 빠름을 시사한다. 이는 읍·면부지역이 동부보다 가족해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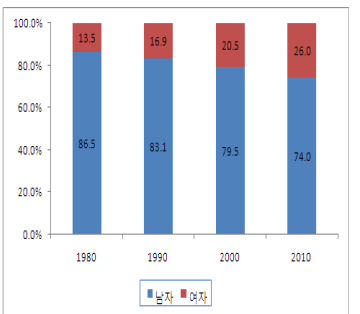
〔그림 3-32〕 가구주의 성별 분포: 동부

(단위: %)



〔그림 3-33〕 가구주의 성별 분포: 읍·면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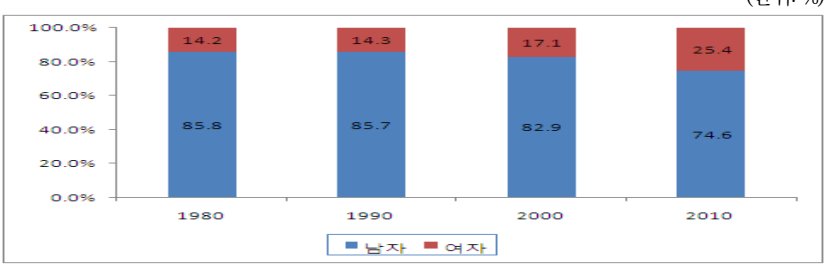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8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수도권지역의 가구주의 성별분포는 1980년에 남성가구주가 여성보다 6배 높았고, 여성가구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2.9배 높아서 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수도권지역의 가구주 성별분포는 전국 및 동부와 유사하였다.

〔그림 3-34〕 연도 및 가구주의 성별 분포: 수도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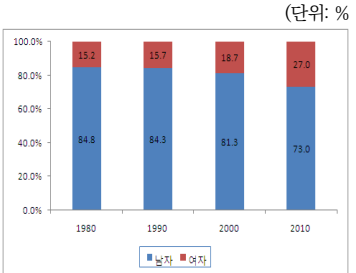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8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특별시·광역시와 도지역의 가구주의 성별분포는 전국과 유사하였으며, 남녀가구주의 차이를 보면 특별시·광역시는 1980년 남성가구주가 여성

보다 5.6배 높았으나, 2010년에는 2.7배로 감소하였고, 도지역은 1980년 5.9배에서 2010년 3배로 줄어들어 특별시·광역시에 비해 도지역의 여성가구주 증가속도가 빠름을 보여준다. 도지역은 읍·면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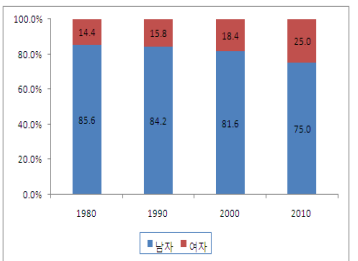
〔그림 3-35〕 가구주의 성별 분포: 특광역시

(단위: %)



〔그림 3-36〕 가구주의 성별 분포: 도지역

(단위: %)



자료: 1) 통계청(198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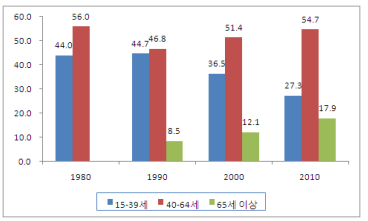
연도 및 지역별로 우리나라 가구주의 연령별 구성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에 가구주의 연령 3개 집단별 분포를 보면 1980년에는 15~39세 연령층이 44.0%, 40~64세 연령층은 56.0%로 중년층 이하보다 장년층이 12%pt 높았고, 1990년에는 각각 46.8%와 44.7%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65세 이상은 8.5%로 1980년에 비해 중년층 이하와 노년층이 증가하고 장년층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에는 15~39세 연령층이 36.5%, 40~64세는 51.4%, 65세 이상은 12.1%로 1990년보다 중년층 이하는 큰 폭으로 감소한데 비해, 장년층과 노년층은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30년간 가구주의 연령구성 변화추이는 1990년의 일시적인 증감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중년층 이하는 감소하고 장년층과 노년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30년간 10세 간격별로 가구주의 연령구성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 일시적인 증감을 제외하고 15~29세와 30~39세 연령층은 감소를, 40~49세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가구주의 연령분포는 인구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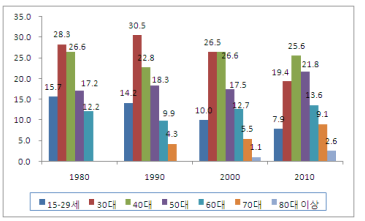
〔그림 3-37〕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전국(3개 집단)

(단위: %)



〔그림 3-38〕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전국(10세 간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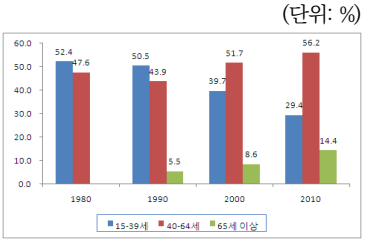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8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동부지역은 30년 간 연령 3개 집단 및 10세 간격별 가구주의 연령구성 변화추이가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중년층 이하는 감소하고, 장년층과 노년층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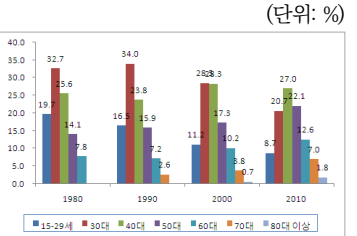
〔그림 3-39〕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동부(3개 집단)

(단위: %)



〔그림 3-40〕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동부(10세 간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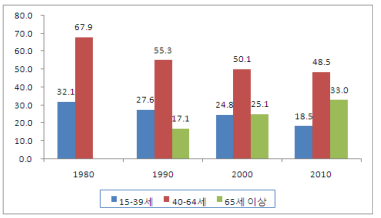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8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읍면부지역은 전국과 동부지역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 30년간 연령 3개 집단 및 10세 간격별 가구주의 연령구성 변화추이는 장년층 이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비해 노년층인구는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산업화도시화로 젊은 연령층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로 노년층 인구의 분포가 높은 데서 오는 영향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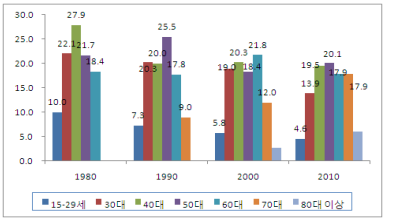
〔그림 3-41〕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읍면부(3개 집단)

(단위: %)



〔그림 3-42〕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읍면부(10세 간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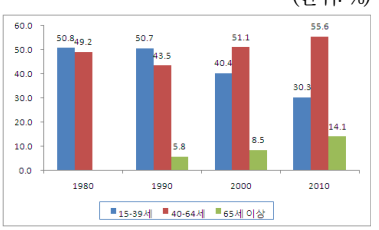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8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수도권지역은 30년 간 연령 3개 집단 및 10세 간격별 가구주의 연령구성 변화추이는 동부지역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중년층 이하는 감소하고, 장년층과 노년층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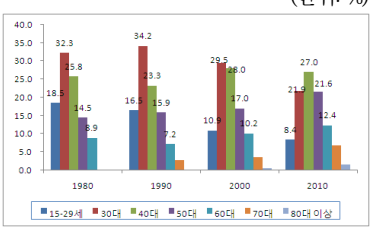
〔그림 3-43〕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수도권(3개 집단)

(단위: %)



〔그림 3-44〕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수도권(10세 간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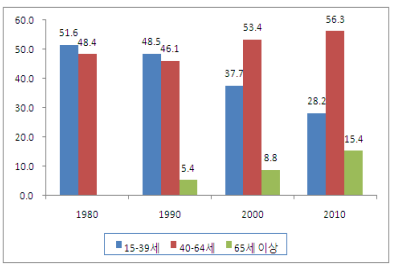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8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7대 특별시·광역시의 30년 간 연령 3개 집단 및 10세 간격별 가구주의 연령구성 변화추이는 동부지역 및 수도권과 동일한 추세를 보여 중년층 이하는 감소하고, 장년층과 노년층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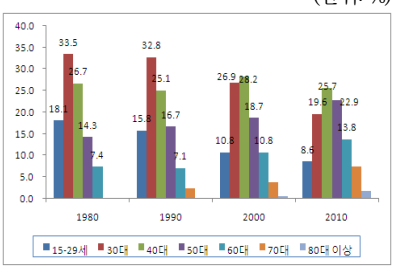
〔그림 3-45〕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특광역시(3개 집단)

(단위: %)



〔그림 3-46〕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특광역시(10세 간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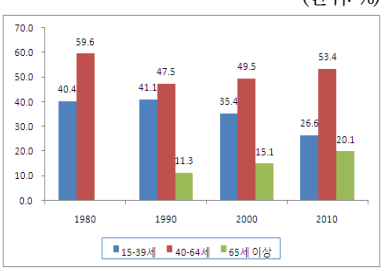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8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16대 도지역의 30년 간 연령 3개 집단 및 10세 간격별 가구주의 연령구성 변화추이는 읍면부지역과 유사하여 장년층 이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비해 노년층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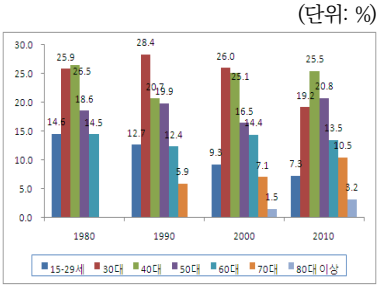
〔그림 3-47〕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도지역(3개 집단)

(단위: %)



〔그림 3-48〕 연도 및 가구주연령별 분포: 도지역(10세 간격)

(단위: %)



자료: 1) 통계청(198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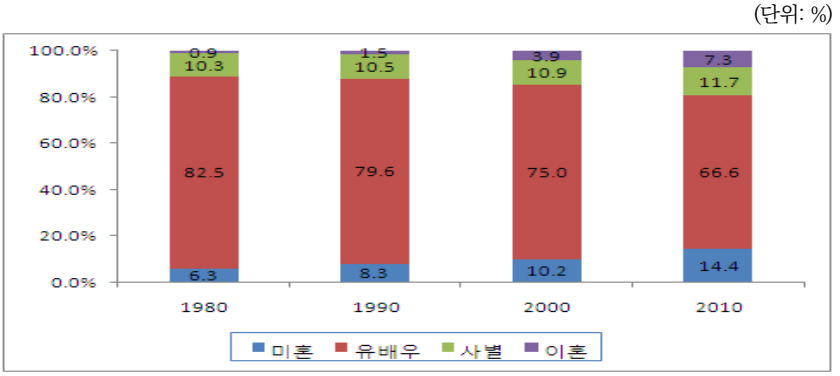
2.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시계열적 변화추이

연도 및 지역별로 우리나라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에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는 1980년 유배우가 82.5%로 대다수의 분포를 보였고, 나머지는 사별이 10.3%, 미혼과 이혼은 6.3%와 0.9%로 이혼·사별로 가구주가 된 비율이 11.2%로 나타났다. 1990~2010년에는 유배우 분포가 점차 감소하고 이혼·사별 및 미혼 가구주의 분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49〕 연도 및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전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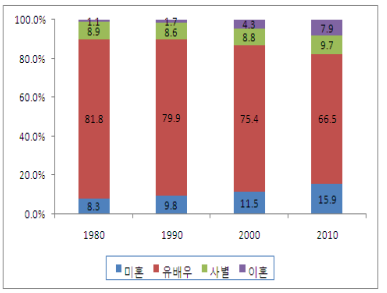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8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30년 간 동부와 읍·면부지역의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변화추이는 전국과 유사하였으며, 동부지역은 동 기간 미혼과 이혼·사별이 동일하게 7.6%pt 증가하였으며, 읍·면부지역은 미혼은 5%pt, 이혼·사별은 11.8%pt로 동부에 비해 읍·면부지역의 가족해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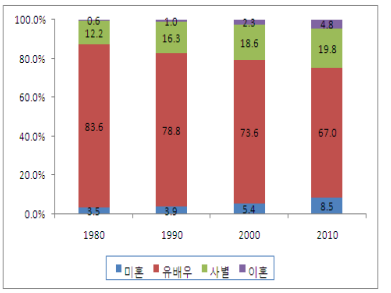
〔그림 3-50〕 연도 및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동부

(단위: %)



〔그림 3-51〕 연도 및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읍면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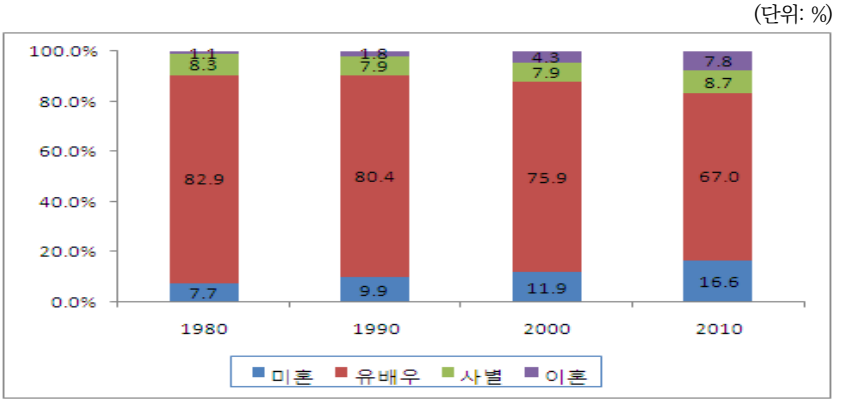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8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수도권 지역은 전국과 유사하여 30년 간 유배우 비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미혼 및 이혼·사별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52〕 연도 및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수도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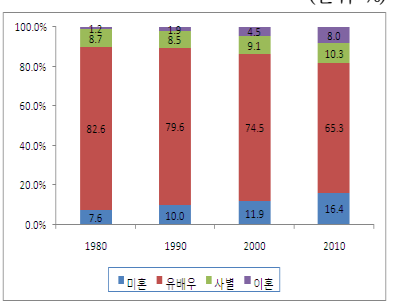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198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30년 간 특별시·광역시와 도지역의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변화추이는 전국과 유사하였으며, 특별시·광역시는 동 기간 미혼과 이혼·사별이 각각 8.8%pt와 8.4%pt 증가하였으며, 도지역은 미혼은 7.1%pt, 이혼·사별은 7.9%pt로 특별시·광역시가 도지역보다 다소 빠른 속도로 해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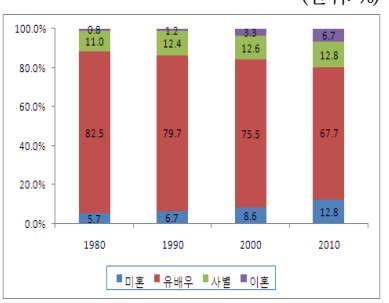
〔그림 3-53〕 연도 및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특광역시

(단위: %)



〔그림 3-54〕 연도 및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도지역

(단위: %)



자료: 1) 통계청(198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제3절 시사점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가구수는 211%의 증가를 보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5% 미만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산업화 및 도시화 등 도시지역의 인구집중과 교육 및 취업생활로 인한 가족분거 등의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평균 가구원수는 2010년 2.69명으로 개인주의화에 따른 자녀분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증가, 만혼현상, 이혼율 증대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한 1~2인 가구의 급증과 1세대 중심의 핵가족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40년간 우리나라의 가족변화는 소가족화를 의미

하는 가족규모의 축소,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이행되는 가족세대의 단순화 등의 특징을 보인다.

1인가구 증가와 관련하여 20대 독신가구, 노인 단독가구 및 비혈연가구의 형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1인가구의 발생은 도시지역에서는 미혼자들에게서, 농촌지역에서는 노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부양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부양까지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 1인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해 단독가구주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 1인가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2인 가구는 자녀가 결혼하여 모두 출가한 노인부부만의 가구 외에도 최근 젊은 연령층이 조기에 안정적 경제적 기반마련을 위해 또는 부부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 딩크(DINK)가족 또는 싱크(SINK)가족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가족형성과 가족주기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가구주는 생계부양과 관련이 높으므로 가구주 구성의 변화는 정책적인 의미를 가진다. 40년 간 가구주의 연령구성은 중년층 이하는 감소하고 장년층과 노년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서 가구주의 고령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부양능력이 떨어짐을 시사하여 다수 가구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와 같은 경향은 도시보다 농촌이 뚜렷하여 지역별로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남성가구주가 여성보다 3배 정도 많으나 여성가구주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이혼·사별 등의 해체에서 오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며, 실제 가구주의 혼인상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30년간 이혼·별거로 가구주가 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 가구주도 증가하고 있어서 가족형성과 가족주기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제4장 가구·가족 변화실태와 정책적 함의

제1절 가족형성 및 해체 변화
제2절 가족관계 변화
제3절 가족기능 변화
제4절 정책적 함의

4 가구·가족 변화실태와 정책적 함의

제1절 가족형성 및 해체 변화

1. 가족형성 및 주기 변화

가. 가족형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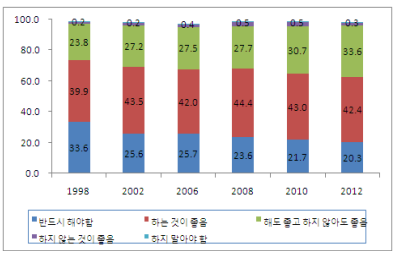
고용과 소득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과 양육 인프라 미흡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형성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보건복지부, 2011). 또한 개인주의 가치관 확대 등으로 혼인의향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가족형성과 관련하여 혼인 및 재혼가치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1998년 33.6%에서 2008년 23.6%로 10년간 10%pt 감소하였고, 2012년 20.3%로 응답자의 1/5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하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는 1998년에 39.9%에서 2008년 44.4%로 10년간 4.5%pt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42.4%로 다소 감소하였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립적인 태도는 1998년 23.8%에서 2012년에는 33.6%로 1/3을 보였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1998년 1.3%에서 2010년에 3.3%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 1.8%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라는 필수적인 가치에서 선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이혼 및 별거, 사별 등 혼인해체가 많아지면서 재혼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재혼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1998년 2.5%에서 2012년 1.3%로 상당히 미미하였고, '하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는 1998년 17.4%에서 2006년 21.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2년에는 18.1%까지 감소하였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립적인 태도는 1998년 52.2%에서 2012년 61.1%로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이에 비해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1998년 19.2%에서 2012년 13.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재혼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가 감소하는 대신 긍정과 중립적인 태도가 증가하여 재혼에 대한 수용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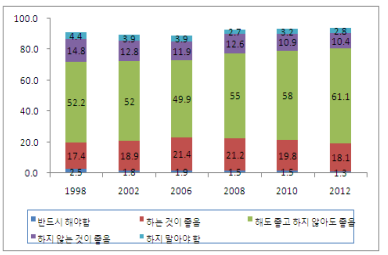
〔그림 4-1〕 결혼에 대한 태도변화 추이

(단위: %)



〔그림 4-2〕 재혼에 대한 태도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1998~2012). 사회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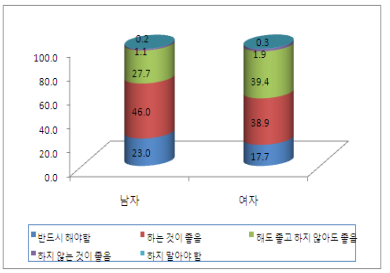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반드시 해야 한다가 23.0%, 하는 편이 좋다가 46.0%로 69.0%인 과반수 이상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데 비해, 여성은 56.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형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고연령층에서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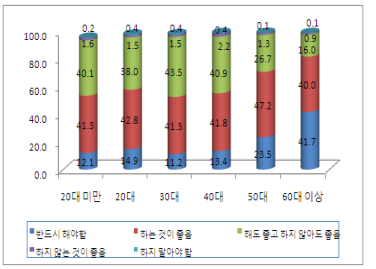
〔그림 4-3〕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



〔그림 4-4〕 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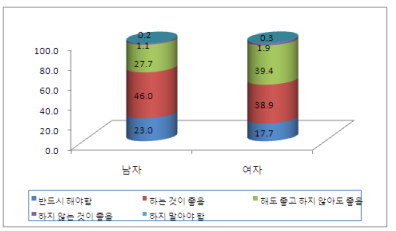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 사회조사.

재혼에 대한 태도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는 23.6%,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립적인 태도는 59.5%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10.3%에 불과하였다. 여성은 긍정적인 태도는 15.2%, 중립적인 태도 62.6%, 부정적인 태도는 16.0%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가 높은 데 비해, 여성은 남성보다 중립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높아서 여성이 남성보다 재혼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재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고 연령층에서 높아서 양극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젊은 연령층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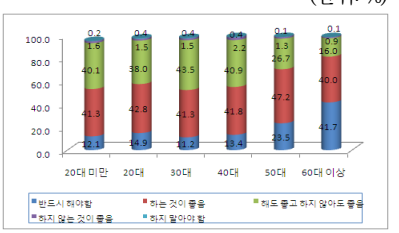
〔그림 4-5〕 성별 재혼에 대한 태도

(단위: %)



〔그림 4-6〕 연령별 재혼에 대한 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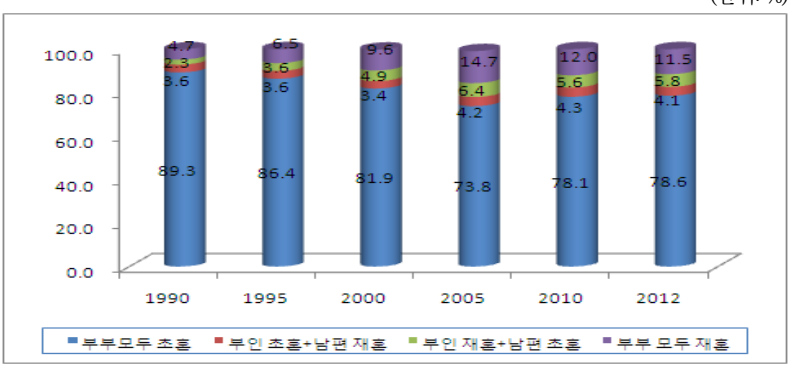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 사회조사.

실제 우리나라 부부의 혼인유형 변화를 보면, 부부모두 초혼은 1990년 89.3%에서 2005년 7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0년부터 증가하여 2012년에 78.6%로 2/3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부부 모두 또는 한편이 재혼인 경우는 1990년 10.6%에서 2005년 25.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0년부터 감소하여 2012년 21.4%로 1/5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이 혼인유형의 변화는 혼인 및 재혼 등 가족형성가치관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7〕 부부간 혼인유형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1990~201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한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혼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결혼은 개인이 가족 간의 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를 찬성하는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고, '노후에 외로우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수 있다'는 61.9%로 높았다.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도 50.6%로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남녀가 이혼 후에는 동거할 수 있다'와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25~36%로 찬성하는 비율이 낮아서 이혼과 자녀생산 등에 대해 전통적인 사회제도와 규범을 중요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1〉 가족형성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점)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수)	평균 점수
결혼은 개인이 가족 간의 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	17.1	45.8	32.7	3.4	1.0	100.0(1,000)	2.77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7.6	36.5	34.7	20.7	0.5	100.0(1,000)	2.31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	5.2	40.9	32.6	21.0	0.3	100.0(1,000)	2.30
남녀가 이혼 후에도 동거할 수 있다	3.6	32.7	37.3	25.3	1.1	100.0(1,000)	2.15
노후에 외로우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수 있다	8.8	53.1	25.4	11.1	1.6	100.0(1,000)	2.61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3.0	21.8	38.4	35.5	1.3	100.0(1,000)	1.92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5.2	45.4	30.0	17.5	1.9	100.0(1,000)	2.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가족형성에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배우자 조건이다. 혼인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배우자 조건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혼남녀가 가장 중요시 하는 배우자 조건을 살펴보면, 미혼남성은 성격이 3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신뢰와 사랑(24.7%), 경제력(9.8%), 건강(8.9%)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이 가장 중요시 하는 배우자 조건은 경제력이 3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뢰와 사랑(23.7%), 성격(22.2%), 직업(9.1%) 순이었다. 경제력은 2005년과 2009년 조사에서 모두 중요한 배우자 조건으로 나타났고, 이 외에 신뢰와 사랑에 대한 중요성은 2005년(19.5%)에 비해 2009년(9.2%)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2〉 연도별 미혼남녀(20~44세)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 조건

(단위: %, 명)

특성	신체적 조건	건강	직업	경제력	성격	가정 환경	신뢰와 사랑	기타	계(수)
미혼남성									
2005	9.4	10.1	1.4	5.5	38.2	6.0	22.5	6.8	100.0(1,208)
2009	13.5	9.0	9.5	15.6	25.7	7.9	12.4	6.4	100.0(1,286)
2012	5.3	8.9	5.3	9.8	36.5	4.9	24.7	4.5	100.0(1,459)
미혼여성									
2005	1.8	4.8	7.1	30.8	23.8	6.5	19.5	5.6	100.0(887)
2009	5.3	8.3	10.5	35.0	18.7	5.3	9.2	7.7	100.0(1,137)
2012	0.5	4.0	9.1	30.3	22.2	6.1	23.7	4.1	100.0(1,149)

자료: 1) 이삼식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이삼식 외(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12).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른 조사결과에서도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배우자 조건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003년에는 성격이 6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소득, 재산 등의 경제력이었으며 또한 신뢰와 사랑, 건강, 직업 등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도 성격이 3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외모 등 신체적 조건, 신뢰와 사랑, 건강,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최근으로 오면서 배

우자 조건으로 성격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성별로도 유사하였다.

〈표 4-3〉 배우자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

(단위: %, 명)

	2003[1]			2010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외모 등 신체적조건	12.3	20.2	5.1	22.2	26.9	17.1
성격	60.0	63.8	56.5	35.4	35.7	35.2
건강	24.1	26.5	21.9	10.2	10.1	10.2
경제력(소득, 재산)	33.6	20.7	45.3	7.3	3.6	11.3
직업(직종/지위)	16.7	10.1	22.7	2.9	1.8	4.1
학력	5.8	5.9	5.8	0.3	0.4	0.3
나이	3.1	3.8	2.5	0.5	0.5	0.5
종교	3.3	3.0	3.6	0.5	0.2	0.8
궁합	5.3	5.8	4.9	1.6	1.7	1.5
신뢰와 사랑	24.1	35.1	22.4	11.8	12.7	10.9
출신지역[2]	1.2	1.4	1.0	0.7	0.6	0.9
가정환경[2]	-	-	-	4.1	4.0	4.3
출생순위(장남 장녀 등)	5.4	3.0	7.6	0.1	-	0.2
장래가능성	-	-	-	0.9	0.1	1.8
기타 (첫눈에 반함 등)	0.1	0.3	-	1.3	1.8	0.8
계 (수)	(7,618)	(3,558)	(4,060)	100.0 (3,035)	100.0 (1,567)	100.0 (1,468)

주: 1) 2003년은 중복응답결과임.
2) 출신지역은 배우자 집안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을 말하며, 가정환경은 부모님, 형제, 친인척, 성장배경 등을 포함.

자료: 1) 여성부(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2)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현재 배우자를 만난 경로는 2003년에는 부모 및 친척소개가 56.6%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은 친구·선배·동료소개가 28.0%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미미하였는데 비해, 2010년에는 친구·선배·동료 소개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모 및 친척소개가 32.8%이었고, 이외에도 직장동료, 학교동창·선후배사이 등 다양한 형태로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현재 배우자를 만난 경로

(단위: %, 명)

	학교 동창·선후배 사이	직장에서	친구·선후배·동료 소개	오프라인모임(서클·동호회 등)	온라인(채팅 등)	부모 및 친척 소개로	결혼정보회사·전문 중매인을 통해서	기타	계(수)
2003	-	6.0	28.0	-	0.3	56.6	4.5	4.6	100.0(2,254)
2010	11.7	11.8	34.4	3.0	0.2	32.8	0.8	5.2	100.0(3,035)

주: 1) 기타에는 이웃어른이 포함됨.
자료: 1) 여성부(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2)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우리사회에서는 주로 결혼을 통하여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결혼연령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는 저출산의 원인 중의 하나가 만혼 및 비혼이기 때문이다. 즉, 만혼은 생식 의학적 측면에서 임신 가능연령을 늦추어서 출산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라는 점에서, 비혼은 결혼과 출산의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간주된다.

가족형성의 시기를 결정하는 결혼연령에 대한 의견을 보면 기혼남성이 생각하는 결혼적정연령은 2006년 25~29세가 58.7%로 과반수를 상회하였으나 2012년에는 30~34세가 70.5%로 만혼화의 경향을 반영한다. 한편,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적정결혼연령은 2006년 25~29세가 77.2%로 1/3을 초과하였으며, 2012년에는 25~29세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34세 연령도 41.9%로 2/5 분포를 보여서 이상적인 결혼연령이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5〉 기혼남성의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계(수)	평균
2006	1.2	58.7	38.8	1.2	100.0(1,334)	29.78
2009	1.1	39.1	55.8	3.9	100.0(971)	29.62
2012	0.2	23.1	70.5	6.2	100.0(1,880)	30.34

자료: 1)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6〉 기혼여성의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계(수)	평균
2006	6.3	77.2	16.1	0.3	100.0(8,705)	27.69
2009	2.8	67.7	28.8	0.7	100.0(9,795)	28.08
2012	1.4	55.2	41.9	1.5	100.0(8,162)	28.74

자료: 1)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가족주기 변화

1) 가족주기의 개념과 단계별 구분

가족주기의 개념과 관련하여 윤현숙 외(2002)는 가족은 결혼에 의해 형성되고 부부의 사망으로 해체될 때까지 수직적 스트레스와 수평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발달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가족생활주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가족생활주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정서적 발달의 기본단위이며, 특유의 단계와 경과를 가진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움직임과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준거틀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김승권 외, 2000).

연구자들의 가족생활주기 구분기준을 보면, 대부분 자녀여부와 자녀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녀여부가 가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과 개인의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가족생활주기는 사회변화로 인하여 형성되는 이혼, 별거 혹은 재혼 등으로 해체된 가정, 확대가정, 동거부부 가정 등의 특수한 상황은 거론되지 않고 있어 가정생활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겠다. 이에 스탬플(Stampfl, 1979)은 가족구성원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이혼율의 증가, 가족 수의 감소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가족생활주기를 제시하였다(김승권 외, 2000).

유영주(1984)는 가족생활주기를 처음 시도하였는데, '첫 자녀' 기준으로 6단계로 나누었다. 국내 연구에서 가족생활주기를 구분할 경우 대부분 유영주의 6단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자녀의 연령이나 가구주의 연령을 임의로 선정하여 실행하고 있다(김승권 외, 2000).

김승권 외(2000)에서는 가족생활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가족형성기는 결혼으로부터 시작하여 첫 자녀를 출생하기까지의 기간이며, 가족확대기는 첫 자녀의 출생에서부터 막내 자녀의 출생까지를 말하며, 가족확대완료기는 막내자녀의 출산부터 자녀의 첫 번째 결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족축소기는 자녀의 첫 결혼시점부터 모든 자녀를 결혼시키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가족축소완료기는 자녀를 모두 떠나보내고 노부부만 남는 빈둥지 시기이며, 가족해체기는 배우자 사망 이후 혼자서 살아가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생활주기 변화요인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표영희(1997)는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주기의 변천은 초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늦게 결혼하여 첫 자녀 출산 연령도 늦어졌으나 더 일찍 자녀 출산을 시작하고 자녀수가 줄고 터울을 짧게 함으로써 단산연령이 빨라지게 되었고, 평균기대수명의 증가와 남편과 아내의 사망 연령이 높아지고 마지막 자녀의 결혼 연령이 빨라짐으로써 마지막 자녀의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사는 기간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는 가족관계면에서도 변화를 초래하여 증가된 탈 양육기 단계에서 부부관계의 재적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시기는 점차 증가되는 핵가족화 영향으로 자식들과 떨어져 노부부만이 함께 살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및 노년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녀 출산기 단축 등과 더불어 현대기술의 발달로 가사노동이 간소화되어지고 30대 여성이 갖게 되는 시간이 증가되어짐에 따라서 가사일이나 자녀 양육이외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혼여성의 직업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 및 요구의 증가와 취미교육, 평생교육, 여가활동 등의 활발한 참여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자녀양육에만 평생을 바치던 과거의 여성상과는 달리 현대사회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발휘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도 연관성을 갖는다고 하겠다(표영희, 1997; 김승권 외, 2000; 윤형숙 외, 2002).

2) 가족주기의 단계별 변화양상

가족주기의 각 단계별 시작 및 종료시점을 결정짓는 가족생애사건을 살펴보면, 제1단계인 형성기는 결혼부터 첫째아 출산시점까지, 제2단계인 확대기는 첫째아 출산부터 막내아 출산시점까지이며, 제3단계인 확대완료기는 막내아 출산시부터 자녀의 결혼시작 시까지, 제4단계인 축소기는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자녀의 결혼이 완료된 시점, 제5단계인 축소완료기는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시점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6단계인 해체기는 배우자 사망으로부터 본인 사망시까지의 기간으로 구분된다.

가) 가족형성기

가족형성기는 부부의 결혼으로부터 시작하여 첫 자녀를 출생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부부만의 생활기간이다. 이 기간은 최근의 결혼코호트일수록 짧아지고 있어 초혼연령 상승의 효과를 보여준다.

가족주기의 첫 단계인 형성기의 시작시점인 초혼연령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22.08세였으나,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23.98세, 1990~1999년 결혼한 부인은 25.35세, 그리고 2000~2009년에 결혼한 부인은 27.13세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형성기인 결혼부터 첫째아 출생시까지의 기간은 1979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는 1.06년, 200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1.03년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만혼화로 결혼 후 자녀를 빨리 출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은 늦게 하지만 첫 자녀의 출산시기

가 빨라졌음을 의미한다.

나) 가족확대기

확대기는 첫 자녀의 출생부터 막내자녀가 출생할 때까지를 말하며, 이는 한 가족의 전체 출산기간을 의미한다. 확대기의 시작시점인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도 초혼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높아져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23.14세였으나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25.01세, 1990~1999년 결혼한 부인은 26.34세, 그리고 2000~2009년 결혼한 부인은 28.16세였다.

〈표 4-7〉 가족주기 각 단계의 시작 및 종결당시 부인[1)]의 평균연령

(단위: %, 명, 세)

초혼연도	초혼 연령	첫째아 출산	막내아 출산	자녀결혼 시작	자녀결혼 완료	남편 사망	본인 사망
1979년 이전	22.08	23.14	27.45	52.83	57.30	69.35	71.31
1980~1989년	23.98	25.01	28.25	54.78	58.10	72.73	75.69
1990~1999년	25.35	26.34	29.48	56.23	59.33	73.63	78.06
2000~2009년	27.13	28.16	30.99	57.50	60.84	77.54	82.24

주: 15~64세 이하 기혼여성 중 초혼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9,055명)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확대기의 소요기간은 1979년 이전 코호트에서는 4년에서 1980년대 결혼코호트에서는 3.2년, 1990년대 3.1년, 200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2.83년으로 나타나 최근의 결혼코호트일수록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혼연령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출산력 저하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 및 출산간격의 단축으로 출산완료시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산완료기의 단축은 기혼부인의 취업과도 관련

이 높아서 여성이 담당하던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 등에 대한 사회적 분담이 요구된다.

다) 가족확대완료기

가족주기상 확대완료기는 막내자녀의 출산부터 자녀의 첫 결혼까지를 말한다. 확대기의 종료시점이면서 확대완료기의 시작시점인 막내아 출산 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27.45세,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28.25세로 높아졌다.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은 29.48세, 2000~2009년 결혼한 부인은 30.99세에 출산을 완료할 것으로 추정된다.

확대완료기의 소요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어 1979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는 25.4년이었으나 1980년대 결혼코호트에서는 26.5년, 1990년대 결혼코호트에서는 26.8년, 200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26.5년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출생아수의 감소 및 출산간격의 단축으로 막내아 출산이 빨라지는 반면, 자녀의 초혼연령은 계속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녀와의 동거기간 확대로 부모의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라) 가족축소기

축소기는 자녀의 첫 결혼시점부터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시점까지의 기간이다. 확대완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시작 시 부인연령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의 경우 52.83세였으나, 2000~200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57.50세로 추정된다.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자녀출산완료

후 자녀결혼 시작 시까지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축소기는 확대기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결혼코호트일수록 점차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첫 결혼부터 마지막 결혼까지의 기간은 최근의 결혼코호트일수록 점차 짧아져 1979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는 4.5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 코호트에서는 3.3년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녀수 감소로 모든 자녀가 결혼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도 그만큼 짧아진 것이라 하겠다.

마) 가족축소완료기

축소완료기는 자녀를 모두 떠나보낸 후 노인부부만이 남는 빈 둥지시기를 말한다. 축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완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완료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57.30세, 2000~2009년 결혼한 부인은 60.84세로 추정된다.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 자녀수 감소가 보다 뚜렷하여 출산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결혼한 젊은 부인일수록 가족축소완료기가 길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소요기간은 1979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는 12.1년에서 200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16.7년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향후 우리 사회에서 노인부부 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 가족해체기

가족해체기는 남편사망 이후 부인 혼자 남는 시기를 말한다. 해체기의 시작시점인 남편 사망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69.35세, 2000~2009년 결혼한 부인들은 77.54세로 추정되었으며, 해체기의 종료시점인 부인 사망시 연령은 같은 기간에 결혼한 부인들 간에 각각 71.31세에서 82.24세로 추정되었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남녀 간 평균수명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해체기는 1979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선 1.96년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4.70년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남편 사망 후 부인이 홀로 보내는 기간이 늘어남을 의미하여 사별 여성노인을 위한 복지 수요가 예상된다.

〈표 4-8〉 가족주기 각 단계별 기간

(단위: 세)

초혼연도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해체기	전체기간
1979년 이전	1.06	4.31	25.38	4.47	12.05	1.96	49.23
1980~1989년	1.03	3.24	26.53	3.32	14.63	2.96	51.71
1990~1999년	0.99	3.14	26.75	3.10	14.30	4.43	52.71
2000~2009년	1.03	2.83	26.51	3.34	16.70	4.70	55.11

주: 15~64세 이하 기혼여성 중 초혼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9,055명)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 가족주기 단계별 주기변화의 특징

최근 우리나라 가족주기는 결혼연령의 상승, 소자녀 출산, 짧은 자녀 터울,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기는 짧아지고, 자녀들을 결혼시킨 후 노인부부 또는 여자노인 혼자 남는 「빈둥지 시기」는 점차 길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 부부만의 기간

결혼코호트별로 살펴보면, 결혼 후 첫째아 출산 전까지의 젊은 부부만의 기간은 1979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는 1.06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1.03년으로 미미하나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배우자 사망시까지 노인부부만의 기간은 1979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는 12.05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16.7년으로 약 4년 길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부만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 부부관계가 중요함을 의미하여 부부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나) 자녀양육 기간

자녀수 감소에 따라 자녀양육기간은 점차 짧아지고 있어 1979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는 34.2년이 소요되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0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32.7년으로 약 2년 정도 짧아졌다. 이는 기혼부인의 취업과도 관련이 높아서 기존 여성이 담당하던 가족 돌봄 및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분담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4-9〉 가족주기 중 부부만의 기간, 자녀양육기간, 여자 노인만의 기간

(단위: 년)

초혼연도	신혼부부 생활기간	자녀 양육기간	노인생활기간		
			소계	노인부부만의 생활기간	여자노인만의 생활기간
1979년 이전	1.06	34.16	14.01	12.05	1.96
1980~1989년	1.03	33.09	17.59	14.63	2.96
1990~1999년	0.99	32.99	18.73	14.30	4.43
2000~2009년	1.03	32.68	21.40	16.70	4.70

주: 15~64세 이하 기혼여성 중 초혼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9,055명)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 가족해체와 다양한 가족

가. 가족해체 변화

1) 가족해체 인식변화

우리나라 가족해체의 주된 요인인 이혼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면,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1998년 60.3%에서 2006년 59.9%, 2010년 56.6%, 2012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와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1998년 37.7%에서 2006년 36.2%, 2010년 41.1%, 2012년 48.7%로 증가하여 이혼 허용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0〉 이혼에 대한 태도변화 추이(1998~2012)

(단위: %)

구분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됨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됨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음	잘 모르겠음	계
1998	19.0	41.3	29.1	8.6	2.0	100.0
2002	16.9	41.5	32.9	6.6	2.2	100.0
2006	19.5	40.4	29.4	6.8	4.0	100.0
2008	16.8	41.8	31.9	7.1	2.4	100.0
2010	15.9	40.7	33.4	7.7	2.4	100.0
2012	13.3	35.4	37.8	10.9	2.7	100.0

주: 조사대상은 1998~2010년은 15세 이상인구, 2012년은 13세 이상 인구임.
자료: 통계청(1998~2012). 사회조사 결과.

한편, '자녀가 있어도 이혼한다'에 반대하는 태도는 남성은 2006년 65.2%에서 2012년 70.0%로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여성도

2006년 56.8%에서 2012년 60.3%로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4-11〉 기혼남녀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한다'에 대한 태도변화 추이(2006~2012)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2006					
남자	21.9	43.3	32.3	2.5	100.0(1,387)
여자	14.2	42.6	40.4	2.8	100.0(8,727)
2009					
남자	25.4	49.5	24.1	0.9	100.0(969)
여자	17.0	50.8	31.4	0.8	100.0(9,792)
2012					
남자	18.4	51.6	28.6	1.4	100.0(1,888)
여자	11.5	48.8	37.2	2.5	100.0(8,167)

자료: 1)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가족해체 원인

가족해체는 크게 사별 및 이혼 등에 의해 진행된다. 해체원인 중의 하나인 사별에 대한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기혼가구 중에서 사별가구의 비율은 1975년 9.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3.6%로 35년간 3.8%pt 증가하였으며, 부인이 사망한 사별 남성가구주는 1975년 2.0%에서 2010년 2.9%로 비슷하였고, 남편이 사망한 사별 여성가구주는 1975년 67.3%에서 증감하다 2010년 48.5%로 18.8%pt 감소하였다.

〈표 4-12〉 전체 기혼가구 대비 사별가구와 성별 기혼가구주 대비 사별가구주 비율 (1975~2010)

(단위: 천가구, %)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 기혼가구	6,277	7,465	8,815	10,414	11,745	12,855	13,857	14,835
전체사별가구	616	818	912	1,196	1,408	1,562	1,832	2,021
사별가구/ 기혼가구	9.8	11.0	10.3	11.5	12.0	12.2	13.2	13.6
사별남성가구주/ 기혼남성가구주	2.0	2.2	1.7	2.1	2.0	2.1	2.5	2.9
사별여성가구주/ 기혼여성가구주	67.3	68.9	65.9	70.8	71.0	64.2	57.9	48.5

자료: 1) 통계청(197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사별 남성인구는 1970년 211천명에서 증감하다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411천명에 이르며, 증가율은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사별 여성인구수는 1,407천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2,550천명으로 사별 남성인구보다 6배 많았다. 증가율은 1975년 6.3%에서 1990년 13.9.%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 이후 증가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 4-13〉 성별 사별인구수의 변화(1970~2010)

(단위: 천명,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남자수	211	206	226	221	283	304	323	380	411
(증가율)		(-2.37)	(9.71)	(-2.21)	(28.05)	(7.42)	(6.25)	(17.65)	(8.16)
여자수	1,407	1,496	1,666	1,788	2,037	2,251	2,350	2,459	2,550
(증가율)		(6.3)	(11.36)	(7.32)	(13.93)	(10.51)	(4.40)	(4.64)	(3.70)

자료: 1) 통계청(198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특히 남성 사망자 중에 40대 조기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데 40대 남성의 사망구성비를 보면 40~44세 연령층은 1970년 여성대비 남성 사망구성비가 171.1%에서 증감을 보이다 2010년에는 238.7%로 여성보다 2배 높은 사망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45~49세 연령층은 1970년 211.0%에서 2000년까지 312.9%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여 2010년 259.4%에 이른다. 또한 이 연령층은 40~44세보다 사망구성비가 높다가 1980~1990년대 비슷한 수준에 근접하더니 2000대 오면서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4-14〉 40대 남자의 사망구성비(1970~2010)

(단위: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40~44	171.1	184.8	210.5	247.4	264.5	289.0	278.2	254.8	238.7
45~49	211.0	193.6	220.0	255.5	264.5	287.8	312.9	278.8	259.4

주: 여자사망률에 대한 남자사망률 백분비임.
자료: 통계청(1970~2010). 인구동태통계연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가족해체 등으로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 및 사망원인 순위의 변화추이를 보면 남성은 1990년 13.2%에서 2010년 41.4%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년 간 3배 높아졌다. 여성은 1990년 6.3%에서 2010년 21.0%로 동기간 3배 높아져서 남성과 비슷한 증가수준을 보였다.

〈표 4-15〉 성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 및 사망원인순위의 변화추이(1990~2010)

(단위: 인구 10만명 당)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자살사망률	9.8	11.8	14.6	24.7	31.2
남 (순위)	13.2 (10)	16.2 (10)	20.3 (7)	32.9 (12)	41.4 (9)
여 (순위)	6.3 (12)	7.4 (11)	8.9 (8)	16.4 (15)	21.0 (12)

자료: 통계청(1990~2010). 사망원인통계연보.

가족해체 원인 중의 하나인 이혼건수와 이혼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총 이혼건수는 1970년 11.63천 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16.9건으로 40년 간 10배 증가하였으며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의 비율은 1970년 3.9%에서 2010년 35.8%로 40년간 9배 증가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6〉 총 이혼건수와 조이혼율(1970~2010)

(단위: 천건, 천명당)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총이혼건수	11.6	16.5	23.7	38.2	45.7	68.3	119.5	128.0	116.9
조이혼율	0.4	0.5	0.6	1.0	1.1	1.5	2.5	2.6	2.3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3.9	5.7	5.9	9.9	11.4	17.1	36.0	4 0.7	35.8

자료: 통계청(1990~2010). 한국의 사회지표.

이혼사유의 변화추이를 보면 1975년에는 부부간 불화와 가족간 불화 때문이 72.9%로 가장 높았고, 1980~1990년대도 비슷한 경향이 지속되다가 2000년대에 오면서 부부 불화 때문은 소폭 감소하는 대신 경제문제가 증가하여 점차 이혼사유가 배우자 부정, 정신·육체적 학대, 성격차이 등 부부문제 외에 경제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7〉 이혼사유의 변화추이(1970~2010)

(단위: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부부불화[1)]	72.9	72.6	79.7	84.8	84.9	83.1	74.6	70.8	66.0
경제문제	5.0	5.2	3.6	3.0	2.0	3.0	10.7	14.9	12.0
건강문제	5.7	5.2	3.3	1.6	1.5	0.9	0.9	0.6	0.7
기타[2)]	16.4	16.9	13.4	10.6	11.6	13.0	13.7	13.7	21.3

주: 1) 부부불화에는 1970~1985년까지 부부간 불화와 가족 간 불화로 구분되다가 1990년부터 부부간 불화에 가족 간 불화가 포함되고, 2000년 이후에는 부부간 불화 항목에 배우자 부정, 정신·육체적 학대, 성격차이로 세분화됨; 2) 기타에는 미상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1970~2010). 인구동태통계결과.

우리나라 부부의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은 2000년 40.1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45.9세로 12년간 5.8세가 높아졌고, 여성은 2000년 36.5세에서 2012년 42.0세로 동 기간 5.5세 높아졌다.

이혼한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2000년 10.9년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2년 13.7년으로 이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이혼한 부부 중에서 15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비율은 2000년 29.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40.9%로 높아져서 이는 자녀양육 및 가족 안정기에 이혼을 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4-18〉 평균 이혼연령과 동거기간 및 15세 이상 동거부부의 이혼비율(2000~2010)

(단위: 세, 명, %)

구분	2000	2003	2005	2008	2010	2012
평균이혼연령						
남자	40.1	41.3	42.1	44.3	45.0	45.9
여자	36.5	37.9	38.6	40.5	41.1	42.0
평균 동거기간	10.9	11.9	12.0	12.8	13.0	13.7
15년 이상 동거부부의 이혼비율	29.5	32.7	33.4	37.3	38.2	40.9

자료: 통계청(2000~2012). 인구동태통계연보.

나. 다양한 가족의 생활과 문제

1) 1인 가구

가) 특성

1인 가구의 특성변화를 보면, 전체 1인 가구 중 사별로 인한 1인 가구는 1985년 34.0%에서 2000년 35.1%로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여 2010년 29.2%로 25년 간 4.8%pt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이혼으로 인한 1인 가구는 1985년 4.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13.4%로 동 기간 2.7배 늘어났다.

〈표 4-19〉 전체 1인가구 중 이혼·사별가구 분포(1985~2010)

(단위: 천가구, %)

구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단독가구	660.9	1,021.5	1,642.4	2,224.4	3,170.7	4,142.2
사별단독가구	224.8	353.7	583.1	781.3	1,002.0	1,208.5
(구성비)	(34.0)	(34.6)	(35.5)	(35.1)	(31.6)	(29.2)
이혼단독가구	32.3	54.5	101.2	218.7	372.9	556.4
(구성비)	(4.9)	(5.3)	(6.2)	(9.8)	(11.8)	(13.4)

자료: 1) 통계청(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1인가구 중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노인 1인가구의 비중과 유형을 보면, 노인 1인 가구 비율은 1985년 17.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25.7%의 비율을 보였고, 가구유형별로는 65~69세 노인 1인 가구는 1985년 48.9천 가구에서 2010년 273.0천 가구로 5.6배 증가하였고, 70~74세는 동 기간 8.5배, 75세 이상은 16.3배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점차 노인 1인가구가 후기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0〉 전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의 변화 및 유형(1970~2010)

(단위: 천가구, %)

구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단독가구	660.9	1,021.5	1,642.4	2,224.4	3,170.7	4,142.2
전체 노인단독가구	114.6	192.6	349.0	542.7	782.7	1,066.4
(비율)	(17.3)	(18.9)	(21.2)	(24.4)	(24.7)	(25.7)
노인단독가구유형						
65~69세	48.9	82.2	135.3	187.7	234.9	273.0
70~74세	35.3	57.1	111.4	168.5	237.4	300.1
75세 이상	30.3	53.2	102.3	186.5	310.4	493.3

자료: 1) 통계청(197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나) 생활변화

(1) 취업 및 경제생활

1인가구의 취업상태를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의 비율이 61.5%, 근로능력이 없는 미취업자가 0.9%, 무급 가족 봉사자가 0.1% 로 총 1인가구의 62.5%가 미취업자로 나타났고, 취업자는 총 37.5%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취업자의 근로 유형은 '임금근로자(22.9%)', '자영업, 고용주(14.6%)'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낮아지고 자영업 또는 고용주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21〉 1인 가구유형별 근로유형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임금근로자	83.7	46.1	11.1	22.9
자영업, 고용주	5.2	12.2	16.2	14.6
무급 가족 봉사자	0.0	0.0	0.1	0.1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10.5	40.6	71.7	61.5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0.7	1.1	0.9	0.9
계 (수)	100.0 (153)	100.0 (180)	100.0 (1,139)	100.0 (1,472)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1인가구의 취업자 중에서 지난 1년(2011)간 사직 또는 폐업경험은 14.5%로 나타났고, 사직이유는 '계약기간 만료(15.0%)',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13.8%)',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13.8%)',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10.0%)'로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의 사직 이유는 소득 보수가 적어서(23.3%)와 좀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16.7%), 40~50대는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19.2%),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15.4%), 60대 이상은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41.2%), 계약기간 만료(25.0%)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은 사직이유는 임시직, 계약만료, 일자리가 없어서 라는 응답이 약 78%로 60대 이상 1인가구 취업의 상대적 어려움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22〉 1인 가구유형별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사직 또는 폐업 경험 및 이유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사직 또는 폐업 경험 여부				
있다	22.1	24.8	7.7	14.5
없다	77.9	75.2	92.3	85.5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36)	(105)	(312)	(553)
사직 이유				
일자리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	0.0	7.7	4.2	3.8
정리해고	0.0	3.8	0.0	1.3
계약기간 만료	10.0	11.5	25.0	15.0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23.3	7.7	8.3	13.8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6.7	3.8	16.7	8.8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10.0	15.4	41.2	10.0
적성, 지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6.7	3.8	4.2	5.0
근로시간 또는 근로 환경이 나빠서	6.7	7.7	12.5	8.8
자기 사업을 새로 하려고	3.3	7.7	0.0	3.8
결혼, 가족 간병 등의 가사 문제로	3.3	3.8	0.0	2.5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3.3	3.8	12.5	6.3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서	6.7	3.8	4.2	5.0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16.7	19.2	4.2	13.8
기타	3.3	0.0	4.2	2.5
계	100.0	100.0	100.0	100.0
(수)	(30)	(26)	(24)	(80)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1인가구 취업자의 지난 1년(2011)간 평균 근로기간은 11.5개월로 나타났고, 한 달 평균 근로일수는 19.9일로 나타났다.

〈표 4-23〉 1인 가구유형별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평균 근로기간 및 한 달 평균 근로일수

(단위: 개월, 일, 시간,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평균 근로 기간	11.3	11.5	11.5	11.4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22.0	22.6	18.1	19.9
(분석대상수)	(136)	(105)	(312)	(553)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1인가구의 규칙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 간) 보다 4.4시간 높게 나타났고, 비규칙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2시간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규칙적 근로자와 비규칙적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평균 적으로 약 7배 정도 차이가 났다.

1인가구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평균 근로시간 모두 상대적으로 40~50대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24〉 1인 가구유형별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주당 평균 근로시간 (규칙적 근로)	47.6	48.6	37.6	44.4
(분석대상수)	(126)	(82)	(110)	(318)
주당 평균 근로시간 (비규칙적 근로)	7.7	9.0	5.8	6.2
(분석대상수)	(10)	(23)	(202)	(235)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1인가구의 미취업자(근로능력자)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 비율은 0.6%로 매우 낮았고, 마지막 직장 퇴사 후 구직기간 평균 기간은 3.8개월로 나타났다.[1)]

1) 구직과정 중 느낀 어려움은 노동시장 특성(4.0점)이 가장 높게 타났고, 다음은 개인특성(2.7점)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가구특성이 취업에 주는 영향은 1.2점으로 취업에 있어 세 특성 중 가장 낮은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근로능력자) 중 구직자가 기대하는 한 달 수입은 166.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25〉 1인 가구유형별 미취업자(근로능력자)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기간

(단위: %, 명, 개월)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구직활동 여부				
있다	6.3	4.1	0.1	0.6
없다	93.8	95.9	99.9	99.4
계 (수)	100.0 (1)	100.0 (73)	100.0 (817)	100.0 (906)
마지막 직장 퇴사 후 구직기간	3.0	4.3	3.0	3.8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주택소유상태는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1인가구의 주택소유형태는 자가가 36.2%로 1/3을 상회하였고 39.7%는 전세 또는 월세, 전·월세로 무주택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자가 소유는 약 9~42%로 고연령층 일수록 높았고, 전세 또는 월세 등 무주택 비율은 30~80%로 젊은 연령층일수록 높아서 대체로 청년층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1인 가구유형별 주택소유형태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자가	8.5	21.0	42.3	36.2
전세	26.1	15.5	11.3	13.4
전·월세	49.7	45.3	14.6	22.0
월세	4.6	5.0	4.1	4.3
기타	11.1	13.3	27.6	24.2
계 (수)	100.0 (153)	100.0 (181)	100.0 (1,140)	100.0 (1,474)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1인가구의 평균 재산규모는 4,849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었고, 평균 부채구모는 959만원으로 그중 주택관련 부채규모는 269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28%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평균 재산보유규모는 40~50대가 5,57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의 노인 1인가구가 4,7181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부채는 795~1,670만원으로 재산보유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주택관련 부채비율은 19~30%로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20~30대, 40~50대 순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중장년층 1인가의 경우 재산보유나 부채규모가 가장 많았고, 노인 1인가구는 재산과 부채가 가장 적었으며 주거로 인한 부채는 노인가구와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표 4-27〉 1인 가구유형별 평균 재산보유 및 부채규모

(단위: 만원,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평균 재산보유 규모(평균)	4,956.6	5,577.7	4,718.8	4,849.0
(분석대상수)	(153)	(181)	(1,140)	(1,474)
평균 부채규모	1,347.8	1,669.8	795.3	959.1
(분석대상수)	(153)	(181)	(1,140)	(1,472)
평균 주택관련 부채규모	386.3	310.3	241.4	268.8
(분석대상수)	(129)	(148)	(778)	(1,055)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109.9만원으로 201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57.2만원보다 2배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비수준은 105.9만원으로 소득대 생활비 비율은 96.4%로 나타나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였다. 연령별로는 월평균 소득은 83~245만원으로 20~30대 1인가구가 가장 높았고, 노인 1인가구가 가장 적었으며, 가구소비수준은 83~216만원으로 소득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소득대 생활비 비율은 88~

100.8%로 고연령층 일수록 높아서 노인 1인가구가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행태를 보였고, 20~30대 1인가구가 소득보다 다소 낮아서 중장년층과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이러한 소비생활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4-28〉 1인 가구유형별 월평균 경상소득·소비수준 및 생활비

(단위: 만원,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월평균 경상소득 수준	245.2	167.8	82.6	109.9
(분석대상수)	(153)	(181)	(1,140)	(1,474)
월평균 가구소비 수준	216.0	154.6	83.3	105.9
(분석대상수)	(153)	(181)	(1,140)	(1,474)
소득대 생활비 비율(%)	88.0	92.1	100.8	96.4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1인가구의 빈곤 및 사회보장수준을 보면 빈곤경험률은 10.9%로 10가구 중 1가구가 빈곤을 경험하였고, 이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17.1%로 저조한 편이었다. 4대보험 가입률은 52.8~99.8%로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은 높은 편이었으며, 산재보험와 고용보험은 과반수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빈곤경험률은 5.9~20.4%로 40~50대 1인가구는 1/5이 빈곤을 경험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노인 1인가구, 20~30대 순으로 많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3.3~25.5%로 빈곤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4대 보험가입률은 20~30대 연령층은 68.8~100.0%로 전체보다 높았고, 40~50대는 51.3~99.3%로 전체보다 낮았으며, 60대 이상은 31.8~100.0%로 공적연금가입은 전체보다 다소 높았으나 타 연령층에 비해 경제활동이 축소된 관계로 산재와 고용보험은 낮았다.

〈표 4-29〉 1인 가구유형별 빈곤 및 사회보장수준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빈곤수준	5.9	20.4	10.1	10.9
(분석대상수)	(153)	(181)	(1,140)	(1,474)
국기초수급 여부	3.3	25.5	17.6	17.1
(분석대상수)	(153)	(181)	(1,140)	(1,474)
건강보험가입 여부	96.7	73.5	81.2	81.9
(분석대상수)	(153)	(181)	(1,140)	(1,474)
공적연금가입 여부	100.0	99.3	100.0	99.8
(분석대상수)	(141)	(134)	(288)	(563)
산재보험가입 여부	68.8	52.4	31.8	52.8
(분석대상수)	(118)	(82)	(88)	(288)
고용보험가입 여부	70.2	51.3	47.2	60.0
(분석대상수)	(114)	(80)	(36)	(230)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2) 가족생활

1인가구의 지난 1년간 근심·갈등을 초래한 문제가 있는 비율은 66.3%로 2/3 이상이 해당되었다. 그 중 건강이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제적 어려움이 17.6%로 많은 편이었으며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연령별로는 지난 1년간 근심·갈등을 초래한 문제가 있는 비율은 약 36~71%로 고연령층 일수록 높아서 노인 1인가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장년층, 청년층 순으로 많았다. 문제유형은 연령별로도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이외에 청년층은 취업·실업을 지적하였다.

〈표 4-30〉 1인 가구유형별 지난 1년간 근심·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64.1	37.0	29.1	33.7
경제적 어려움	11.1	22.1	17.7	17.6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7.2	2.2	1.4	2.1
자녀교육 혹은 행동	-	2.2	0.3	0.5
가구원의 건강	11.8	30.4	45.9	40.4
가구원의 알코올	-	0.6	0.1	0.1
가구원간 관계	0.7	0.6	1.4	1.2
가구원의 가출	-	-	0.1	0.1
주거관련 문제	1.3	1.1	1.2	1.2
자녀의 결혼문제	3.9	3.3	1.7	2.1
기타	-	0.6	1.1	0.9
계 (수)	100.0 (153)	100.0 (181)	100.0 (1,140)	100.0 (1,474)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1인가구의 평균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 과거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6점 만점에 4.06점으로 중간 이상이었다. 자녀와의 관계는 5.08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자녀들 간의 관계는 5.23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4-31〉 1인 가구유형별 평균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배우자와의 관계	4.56	3.67	3.21	4.06
(분석대상수)	(16)	(12)	(42)	(70)
자녀와의 관계	4.80	4.85	5.10	5.08
(분석대상수)	(10)	(97)	(1,070)	(1,177)
자녀들의 형제자매관계	5.00	5.04	5.24	5.23
(분석대상수)	(2)	(73)	(989)	(1,064)

주: 가족관계만족도는 총 6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은 과거 배우자와의 관계는 4.56점으로 전체보다 높았고, 자녀 및 자녀들 간의 관계만족도는 각각 4.80점과 5.00점으로 전체보다 낮았다. 40~50대 중장년층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및 자녀들 간의 관계만족도 모두 전체보다 낮았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배우자 관계만족도는 3.21점으로 전체보다 낮았으나 자녀 및 자녀들 간의 관계만족도는 5.10점과 5.24점으로 전체보다 다소 높았다.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높은 편이었고,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고연령층 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1인가구의 전체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3점으로 중간 이상이었으며, 7개 항목별로는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은 3.13~3.66점으로 중간이상이었는데 비해, 건강 및 수입은 2.60~2.71점으로 중간 미만이었다.

〈표 4-32〉 1인 가구유형별 평균 생활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건강	3.74	2.99	2.52	2.71
수입	2.97	2.53	2.56	2.60
주거 환경	3.59	3.22	3.52	3.49
가족 관계	3.93	3.41	3.57	3.59
직업	3.48	3.01	3.18	3.19
사회적 친분관계	3.86	3.53	3.65	3.66
여가생활	3.28	3.06	3.12	3.13
전체	3.68	3.22	3.30	3.33
(분석대상수)	(152)	(180)	(1,136)	(1,468)

주: 가족생활만족도는 총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연령별 전체 생활만족도는 3.22~3.68점으로 20~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 60대 이상, 40~50대 순으로 높았다. 항목별로는 연령별 차이를 보여 20~30대는 수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항목 모두 3.28~3.93점으로 중간이었으며, 40~50대와 60대 이상은 건강과 수입을 제외한 5개 항목이 중간 이상으로 전체와 유사하였다.

(3)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

1인가구의 전체 건강보험 가입률은 81.9%로 나타났고, 연령별 건강보험 가입률은 20~30대 96.7%, 40~50대 73.5%, 60대 이상 81.2%로 나타났다. 1인가구 전체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직장가입자 67.5%, 지역가입자 32.5%로 나타났고, 20~30대의 74.3%, 40~50대의 45.9%, 60대 이상의 69.5%가 직장가입자로 나타났다.

전제적으로 40~50대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았고, 직장보험 가입률도 50%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33〉 1인 가구유형별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유형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건강보험 가입여부	가입	96.7	73.5	81.2	81.9
	미가입	3.3	26.5	18.8	18.1
	계 (수)	100.0 (153)	100.0 (181)	100.0 (926)	100.0 (1,474)
건강보험 가입유형	직장가입자	74.3	45.9	69.5	67.5
	지역가입자	25.7	54.1	30.5	32.5
	계 (수)	100.0 (148)	100.0 (133)	100.0 (926)	100.0 (1,207)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1인가구 중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가구는 '의료급여 1종(92.1%)' 대상이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 2종(6.0%)', '국가유공자 무료진료(1.5%)'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가입률은 0.4%로 낮게 나타났다. 1인가구의 약 18%는 차상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의료급여 수급대상의 85.1%는 의료급여 서비스의 문제점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고, 문제점이 있다고 느낀 대상은 '혜택범위의 협소함(7.6%)', '차별대우(4.6%)', '적용기간의 제한(2.7%)'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표 4-34〉 1인 가구유형별 건강보험 미가입 유형 및 의료급여 서비스의 문제점

(단위: %,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건강보험 미가입 유형				
의료급여(1종)	100.0	87.5	93.0	92.1
의료급여(2종)	0.0	10.4	5.1	6.0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0.0	0.0	1.9	1.5
미가입	0.0	2.1	0.0	0.4
계 (수)	100.0 (5)	100.0 (48)	100.0 (214)	100.0 (267)
의료급여서비스 문제점				
특별한 문제없음	80.0	76.6	87.1	85.1
혜택범위가 좁음	0.0	14.9	6.2	7.6
적용기간의 제한	0.0	4.3	2.4	2.7
차별대우	20.0	4.3	4.3	4.6
계 (수)	100.0 (5)	100.0 (47)	100.0 (210)	100.0 (262)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1인가구의 건강보험 미납경험은 1.3%로 낮게 나타났고[2],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미납하였다는 응답이 대부

2) 미납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68.8%)',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12.5%)'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평균 건강보험료 미납기간은 6.8개월로 나타났다.

분인 것에 반해, 40~50대의 경우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12.5%) 내지 않는 다는 응답과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25.0%)라는 응답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89.1%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월 보험료 부담(7.3%)', '보험의 적용범의가 좁음(3.6%)'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표 4-35〉 1인 가구유형별 건강보험 미납경험 및 문제점

(단위: %, 명, 개월)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건강보험 미납경험				
있다	2.7	6.0	0.4	1.3
없다	97.3	94.0	99.6	98.7
계 (수)	100.0 (148)	100.0 (133)	100.0 (926)	100.0 (1,207)
건강보험 문제점				
특별한 문제없음	87.8	81.2	90.5	89.1
월 보험료 부담	9.5	12.8	6.2	7.3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2.7	6.0	3.3	3.6
계 (수)	100.0 (148)	100.0 (133)	100.0 (926)	100.0 (1,207)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1인가구의 민간의료 보험료 한 달 지출 총액은 2.5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 7.4만원, 40~50대 7.7만원, 60대 이상 1.0만원으로 나타나 60대 이상 가구의 민간보험료 지출액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40~50대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민간 보험료 지출액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4-36〉 1인 가구유형별 월 평균 총 민간의료 보험료 지출액

(단위: 만원,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월 평균 총 민간의료 보험료 지출액	7.4	7.7	1.0	2.5
(분석대상수)	(153)	(181)	(1,140)	(1,474)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1인가구의 정신건강은 우울정도와 자아존중감 정도를 척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1인가구의 우울증 측정 척도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1.9점,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2.2점으로 나타나 우울정도와 자아존중감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표 4-37〉 1인 가구유형별 우울정도

(단위: 점,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식욕이 없음	1.3	1.5	1.8	1.7
비교적 잘 지냈다.	3.7	3.6	3.4	3.5
상당히 우울	1.4	1.7	1.8	1.7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1.5	1.7	1.9	1.8
잠을 설침	1.5	1.7	2.0	1.9
외로움	1.4	1.7	1.9	1.8
불만 없이 생활	3.6	3.4	3.4	3.4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1.1	1.2	1.1	1.1
마음이 슬펐다.	1.3	1.4	1.6	1.6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1.1	1.1	1.1	1.1
뭐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	1.2	1.4	1.7	1.6
(분석대상수)	(1,472)	(1,472)	(1,472)	(1,472)
평균	1.7	1.9	2.0	1.9

주: 각 문항은 "①극히드물다, ②가끔 있었다, ③종종 있었다, ④대부분 그랬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38〉 1인 가구유형별 자아존중감

(단위: 점, 명)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3.0	2.5	2.3	2.4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	2.8	2.7	2.7	2.7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3	1.9	1.8	1.7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3.2	2.7	2.2	2.4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8	2.2	2.4	2.3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3.0	2.7	2.7	2.7
대체로 만족	2.8	2.3	2.3	2.3
내 자신을 존경 할 수 있으면 좋겠다.	2.9	2.6	2.5	2.6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	1.2	1.5	1.7	1.6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2	1.3	1.3	1.2
(분석대상수)	(1,472)	(1,472)	(1,472)	(1,472)
평균	2.3	2.3	2.2	2.2

주: 각 문항은 "①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보통이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2) 한부모가족

가) 특성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는 변화추이를 보면, 1970년 10.6%에서 1980~1990년대 감소를 보이다 2000년대 오면서 다시 증가하여 2010년 9.2%에 이른다. 그 중 한부가구는 1995년 18.0%에서 2010년 21.8%로 증가한데 비해, 한모가구는 동 기간 82.0%에서 78.2%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한부가구에 비해 3.6배 많았다.

〈표 4-39〉 연도별 한부모가구의 변화 및 유형(1970~2010)

(단위: 천가구,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총가구	5,576	6,648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한부모가구	592	643	744	848	889	960	1,124	1,370	1,594
(비율)	(10.6)	(9.7)	(9.3)	(8.9)	(7.8)	(7.4)	(7.9)	(8.6)	9.2
한부가구						173	220	287	347
(비율)						(18.0)	(19.6)	(20.9)	(21.8)
한모가구						787	904	1,083	1,247
(비율)						(82.0)	(80.4)	(79.1)	(78.2)

자료: 1) 통계청(1970~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비율은 2000년 70.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는 52.8%로 이혼부부의 과반수가 미성년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40〉 미성년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2000~2012)

(단위: 천건, %)

구분	2000	2003	2005	2008	2010	2012
이혼건수	119.5	166.6	128.0	116.5	116.9	114.3
20세 미만 자녀있음	84.3	114.1	81.2	63.0	62.9	60.3
20세 미만 자녀비율	70.5	68.5	63.4	54.1	53.8	52.8

자료: 통계청(2000~2012). 인구동태통계연보.

나) 생활변화

(1) 취업 및 경제생활

한부모가족 중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의 비율은 27.0%로 일반부부가족(36.5%)보다 낮게 나타났고, 한부모가족의 근로유형은 '임금근로자(65.0%)', '자영업, 고용주(8.0%)'로 나타났다.

〈표 4-41〉 한부모가족유형별 근로유형

(단위: %,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임금근로자	66.7	60.7	65.0	40.0
자영업, 고용주	5.6	14.3	8.0	16.2
무급 가족 봉사자	0.0	0.0	0.0	6.7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27.8	25.0	27.0	36.5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0.0	0.0	0.0	0.6
계 (수)	100.0 (72)	100.0 (28)	100.0 (100)	100.0 (8,433)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부모가족의 취업자 중에서 지난 1년(2011)간 사직 또는 폐업경험은 24.7%로 나타났고, 사직이유는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27.8%)', '계약기간 만료(22.2%)', '건강, 고령 등의 이유(11.1%)'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취업자의 지난 1년(2011)간 평균 근로기간은 11.5개월로 나타났고, 한 달 평균 근로일수는 22.2일로 높게 나타났다. 규칙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보다 5.4시간 더 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규칙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가족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8시간으로 근로시

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한부모가족유형별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사직 또는 폐업 경험 및 이유

(단위: %,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 가족	일반 부부가족
사직 또는 폐업 경험 여부				
있다	28.8	14.3	24.7	10.0
없다	71.2	85.7	75.3	90.0
계 (수)	100.0 (52)	100.0 (21)	100.0 (73)	100.0 (5,305)
사직 이유				
일자리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	6.7	0.0	5.6	9.1
정리해고	0.0	0.0	0.0	1.1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0.0	0.0	0.0	0.8
정년퇴직	0.0	0.0	0.0	0.2
계약기간 만료	26.7	0.0	22.2	14.0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0.0	0.0	5.6	10.4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6.7	33.3	5.6	14.0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0.0	0.0	0.0	5.3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0.0	0.0	5.6	2.8
근로시간 또는 근로 환경이 나빠서	6.7	33.3	5.6	7.6
자기 사업을 새로 하려고	0.0	0.0	0.0	6.1
결혼, 가족 간병 등의 가사 문제로	6.7	0.0	5.6	2.1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13.3	0.0	11.1	6.1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서	6.7	0.0	5.6	2.5
학업, 군입대 등의 이유로	0.0	0.0	0.0	0.8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26.7	33.3	27.8	14.2
출산, 육아 때문에	0.0	0.0	0.0	0.6
기타	0.0	0.0	0.0	2.5
계 (수)	100.0 (15)	100.0 (3)	100.0 (18)	100.0 (528)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43〉 한부모가족유형별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평균 근로기간 및 한 달 평균 근로일수

(단위: 개월, 일,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평균 근로 기간	11.3	11.9	11.5	11.4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22.1	22.2	22.2	21.5
(분석대상수)	(52)	(21)	(73)	(5,305)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44〉 한부모가족유형별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주당 평균 근로시간(규칙적 근로)	43.0	52.4	45.4	47.2
(분석대상수)	(52)	(21)	(73)	(3,718)
주당 평균 근로시간(비규칙적 근로)	8.1	9.0	8.5	7.2
(분석대상수)	(9)	(6)	(15)	(1,587)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부모가족의 미취업자(근로능력자)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 비율은 7.4%로 낮았고, 한모가족보다 한부가족의 구직활동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 직장 퇴사 후 구직기간 평균 기간은 9.5개월로 구직기간이 약 10개월로 길게 나타났고, 이는 일반부부가족의 구직기간(2.9개월)보다 약 3배 높은 기간이었다.

한부모가족의 주택소유형태는 자가가 15.6%이었고, 73.4%는 전세 또는 월세, 전·월세인 무주택으로 일반부부 가족에 비해 자가는 1/4 수준이었고, 무주택은 2.7배 많았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주거생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중 한모가족은 자가 소유가 12.1%, 전세 또는 월세 등 무주택 비율은 77.3%이었고, 한부가족은 25.0%와 62.6%로 한모가족이 한부가족에 비해 주거생활이 훨씬 불안정하였다.

〈표 4-45〉 한부모가족유형별 미취업자(근로능력자)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기간

(단위: %, 명, 개월)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구직활동 여부				
있다	5.0	14.3	7.4	2.2
없다	95.0	85.7	92.6	97.8
계 (수)	100.0 (20)	100.0 (7)	100.0 (27)	100.0 (3,077)
마지막 직장 퇴사 후 구직기간	4.0	4.0	9.5	2.9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46〉 한부모가족 유형별 주택소유형태

(단위: %,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자가	102.1	25.0	15.6	66.3
전세	16.7	16.7	16.7	15.4
전·월세	51.5	41.7	48.9	11.0
월세	9.1	4.2	7.8	1.1
기타	10.6	12.5	11.1	6.1
계 (수)	100.0 (66)	100.0 (24)	100.0 (90)	100.0 (3,530)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부모가족의 평균 재산규모는 4,316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었고, 평균 부채규모는 1,854만원, 그 중 주택관련 부채규모는 473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26%를 차지하였다. 한부모가족의 재산규모는 일반부부가족에 비해 재산규모는 1/4, 부채도 1/2정도 이었으며, 주택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pt 높았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일반부부가족에 비해 재산 및 주택 등 경제규모가 열악한데서 오는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설명된다.

그 중 한모가족의 평균 재산보유규모는 3,960만원, 부채는 1,883만원, 그 중 주택관련 부채규모는 536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29%의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한부가족은 평균 재산규모가 5,296만원으로 전체와 한모가족에 비해 980~1,336만원이 많았고, 부채는 1,775만원이었고, 주택관련 부채비율은 17%로 전체와 한모가족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이는 한모가족이 한부가족에 비해 재산은 적은데 비해 부채는 많고 주택으로 인한 부채비율도 높아서 경제 및 주거생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4-47〉 한부모가족유형별 평균 재산보유 및 부채규모

(단위: 만원,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평균 재산보유 규모(평균)	3,959.6	5,295.8	4,315.9	17,764.9
(분석대상수)	(66)	(24)	(90)	(3,525)
평균 부채규모	1,882.9	1,775.1	1,854.4	3,923.2
(분석대상수)	(66)	(24)	(90)	(3,524)
평균 주택관련 부채규모	536.3	306.4	473.3	1,243.4
(분석대상수)	(53)	(20)	(73)	(3,273)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206.9만원이고, 월평균 가구소비수준은 207만원으로 소득대 생활비 비율은 100.1%로 나타나 소득을 초과하여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일반부부가족의 54%에 불과하였고, 소득대 생활비는 11.4%를 초과하였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와 같은 소비생활구조가 지속될 경우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중 한모가족의 소득수준은 201만원으로 전체와 한부가족에 비해 낮았고, 소비는 203.5만원, 소득대 생활비 비율은 101.2%로 한부가족에 비해 4.2%pt 높았다. 한부가족은 소득이 223만원으로 전체와 한모가족에 비해 높았고, 소비는 217만원, 소득대 생활비 비율은 97.0%로 소득을 초과하지 않았다. 한모가족은 한부가족에 비해 소득과 소비생활구조가 열악하여 빈곤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4-48〉 한부모가족유형별 월평균 경상소득소비수준 및 주관적 최저생계비

(단위: 만원, %,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월평균 경상소득 수준	201.0	223.3	206.9	383.6
(분석대상수)	(66)	(24)	(90)	(3,530)
월평균 가구소비 수준	203.5	216.6	207.0	340.3
(분석대상수)	(66)	(24)	(90)	(3,530)
소득대 생활비 비율(%)	101.2	97.0	100.1	88.7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부모가족의 빈곤 및 사회보장수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빈곤경험률은 24.4%로 일반부부가족에 비해 3.6배 높았고, 그중 한모가족은 24.2%로 한부가족에 비해 다소 낮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41.1%로 일반가족에 비해 10배 높았다. 한모가족은 45.5%로 한부의 29.2%에 비해 16.3%pt 높게 받아서 실제 한모가족의 경우 한부가족보다 빈곤수준이 심각함을 말해준다.

4대보험 가입률은 한부모가족이 46~100%로 일반가족의 71~100%보다 저조하였다. 특히 건강보험가입률이 61%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여 건강위해 가능성이 높으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일반가족보다 저조하여 취업생활과 일자리 질이 열악함을 의미한다. 그중 한모가족은 41~100%로 한부의 60~100%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한부에 비해 한모가족의 경우 일자리의 양과 질의 제한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낮은 데서 오는 결과이며, 건강보험도 전체와 한부가족에 비해 저조하여 한모가족의 건강위해가 예상된다.

〈표 4-49〉 한부모가족유형별 빈곤 및 사회보장수준

(단위: %,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빈곤수준	24.2	25.0	24.4	6.7
(분석대상수)	(66)	(24)	(90)	(3,530)
국기초수급 여부	45.5	29.2	41.1	4.0
(분석대상수)	(66)	(24)	(90)	(3,530)
건강보험가입 여부	56.1	75.0	61.1	96.1
(분석대상수)	(66)	(24)	(90)	(3,530)
공적연금가입 여부	100.0	100.0	100.0	99.9
(분석대상수)	(40)	(18)	(58)	(2,728)
산재보험가입 여부	44.4	60.0	48.3	71.4
(분석대상수)	(45)	(15)	(60)	(1,572)
고용보험가입 여부	40.9	60.0	45.8	74.9
(분석대상수)	(44)	(15)	(59)	(1,331)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2) 가족생활

한부모가족의 지난 1년간 근심·갈등을 초래한 문제가 있는 비율은 80.0%로 일반가족에 비해 19%pt 높았으며, 그 중 한모가족은 82.0%, 한부가족은 75.0%로 한모가족이 전체와 한부가족에 비해 높았다.

문제유형은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교육·행동, 가구원 건강 순으로 많았다. 그중 한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교육·행동 문제가 전체와 한부가족보다 높았고, 한부가족은 가구원의 건강문제가 전체와 한모가족에 비해 높았다.

〈표 4-50〉 한부모가족유형별 지난 1년 간 근심·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

(단위: %,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18.2	25.0	20.0	39.5
경제적 어려움	42.4	29.2	38.9	16.1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1.5	8.3	3.3	3.6
자녀교육 혹은 행동	24.2	12.5	21.1	5.4
가구원의 건강	9.1	16.7	11.1	28.8
가구원의 알코올	-	-	-	0.4
가족 내 폭력	-	-	-	0.1
가구원간 관계	4.5	4.2	4.4	1.6
주거관련 문제	-	4.2	1.1	1.5
자녀의 결혼문제	-	-	-	1.2
기타	-	-	-	1.9
계 (수)	100.0 (66)	100.0 (24)	100.0 (90)	100.0 (3,530)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부모가족의 문제해결방식으로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하는 비율은 42.2%로 과반수에 못 미쳤으며, 의견충돌이 잦은 경우도 14.4%이었으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이에 비해 일반부부가족은 72.2%인 다수가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한부모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 갈등과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 중 한모가족은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하는 비율은 전체와 한부가족에 비해 낮은 데 비해 의견충돌과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비난하는 경우는 28.9%로 타 가족에 비해 높았고, 한부가족은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하는 비율이 높았고, 충돌과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비율은 20.8%로 낮은 편이었다.

〈표 4-51〉 한부모가족유형별 가족구성원의 문제해결방식

(단위: %,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의견충돌이 잦음	15.2	12.5	14.4	4.6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짐	7.6	8.3	7.8	0.8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함	37.9	54.2	42.2	72.2
자주 서로를 비난함	6.1	-	4.4	2.2
가끔 서로를 때림	1.5	4.2	2.2	0.4
(분석대상)	(66)	(25)	(91)	(6,831)

주: 문제해결 방법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부모가족의 평균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 과거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6점 만점에 1.38점으로 불만족이 높았으며 일반가족의 5.36점에 비해 상당히 불만족도가 높았다. 자녀 및 자녀들과의 관계는 각각 2.68점과 2.57점으로 중간 미만으로 일반가족의 5.78점과 5.72점에 비해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다. 그중 한모가족은 전체와 한부가족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한부가족은 낮았다.

〈표 4-52〉 한부모가족유형별 평균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베우자와의 관계	1.43	1.00	1.38	5.36
자녀와의 관계	2.71	2.60	2.68	5.78
자녀들의 형제자매관계	2.63	2.42	2.57	5.72
(분석대상수)	(66)	(25)	(91)	(6,831)

주: 가족관계만족도는 총 6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부모가족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2.20점으로 중간 미만으로 일반가족의 3.52점보다 저조하였다. 7개 항목별로는 건강,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는 전체 만족도보다 높았고, 수입과 여가생활은 낮았다. 모든 항목에서 일반가족보다 낮았다. 한모가족은 건강,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여가생활 등 5개 항목에서 한부가족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한부가족은 수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항목에서 한모가족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표 4-53〉 한부모가족유형별 평균 가족생활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	2.34	2.04	2.26	3.37
가족의 수입	1.51	1.52	1.51	2.78
주거 환경	2.30	2.07	2.23	3.55
가족 관계	2.63	2.33	2.55	3.96
직업	2.32	2.11	2.27	3.38
사회적 친분관계	2.56	2.56	2.56	3.76
여가생활	1.80	1.74	1.79	3.15
전체	2.24	2.11	2.20	3.52
(분석대상수)	(71)	(27)	(98)	(8,006)

주: 가족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3)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61.1%로 일반부부가족의 건강보험 가입률 보다 35%정도 낮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건강보험 가입유형은 직장가입자 49.1%, 지역가입자 50.9%로 나타났다.

한모가족 보다는 한부가족의 건강보험가입률 및 직장가입자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표 4-54〉 한부모가족유형별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유형

(단위: %,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보험 가입여부				
가입	56.1	75.0	61.1	96.8
미가입	43.9	25.0	38.9	3.2
계 (수)	100.0 (66)	100.0 (24)	100.0 (90)	100.0 (3,530)
건강보험 가입유형				
직장가입자	43.2	61.1	49.1	69.3
지역가입자	56.8	38.9	50.9	30.7
계 (수)	100.0 (37)	100.0 (18)	100.0 (55)	100.0 (3,418)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부모가족 중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가구는 '의료급여 2종(60.0%)' 대상과 '의료급여 1종(40.0%)'의 두 유형으로 나타나, 한부모가족의 38.9%는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 수급 가정인 것으로 파악 되어, 일반부부가족의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 수급 가정의 비율(3.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 수급대상의 80.0%는 의료급여 서비스의 문제점이 없다고 있었고, 문제점이 있다고 느낀 대상은 '차별대우(11.1%)', '혜택범위의 협소함(5.7%)', '적용기간의 제한(2.9%)'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표 4-55〉 한부모가족유형별 건강보험 미가입 유형 및 의료급여 서비스의 문제점

(단위: %,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보험 미가입 유형				
의료급여(1종)	34.5	66.7	40.0	37.0
의료급여(2종)	27.1	33.3	60.0	28.6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0.0	0.0	0.0	4.5
미가입	0.0	0.0	0.0	0.0
계 (수)	100.0 (29)	100.0 (6)	100.0 (35)	100.0 (112)
의료급여서비스 문제점				
특별한 문제없음	75.9	100.0	80.0	77.6
혜택범위가 좁음	6.9	0.0	5.7	15.9
적용기간의 제한	3.4	0.0	2.9	1.9
차별대우	13.8	0.0	11.4	4.7
계 (수)	100.0 (29)	100.0 (6)	1000. (35)	100.0 (107)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 미납경험은 3.6%로 낮게 나타났고, 한부모가족의 평균 건강보험료 미납기간은 7.5개월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78.2%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월 보험료 부담(18.2%)', '보험의 적용범의가 좁음(3.6%)'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부모가족이 한 달 간 지출하는 민간의료 보험료 지출 총액은 12.9만원, 일반부부가족은 18.4만원으로 나타나 일반부부의 민간의료 보험 지출액이 5.5만원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한모가족보다는 한부가족의 민간의료 보험료 지출액이 2.6만원 높게 나타났다.

〈표 4-56〉 한부모가족유형별 건강보험 미납경험 및 문제점

(단위: %,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보험 미납경험				
있다	5.4	0.0	3.6	0.8
없다	94.6	100.0	96.4	99.2
건강보험 문제점				
특별한 문제없음	75.7	83.3	78.2	76.7
월 보험료 부담	21.6	11.1	18.2	15.7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2.7	5.6	3.6	7.5
기타	0.0	0.0	0.0	0.1
계 (수)	100.0 (37)	100.0 (18)	100.0 (55)	100.0 (3,418)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57〉 한부모가족유형별 월 평균 총 민간의료 보험료 지출액

(단위: 만원,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월 평균 총 민간의료 보험료 지출액	12.2	14.8	12.9	18.4
(분석대상수)	(66)	(24)	(90)	(3,540)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부모가족의 정신건강 상태는 우울정도와 자아존중감 정도를 척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한부모가족의 우울증 측정 척도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1.8점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2.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가족 보다 한모가족의 우울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아존중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부부가족과 비교했을 때 한부모가족의 우울 수준은 약간 높고 자아존중감은 약간 낮은 수준이다.

〈표 4-58〉 한부모가족유형별 우울정도

(단위: 점,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식욕이 없음	1.4	1.4	1.4	1.2
비교적 잘 지냈다.	3.6	3.7	3.6	3.7
상당히 우울	1.7	1.4	1.6	1.3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1.9	1.7	1.8	1.5
잠을 설침	1.8	1.5	1.7	1.4
외로움	1.7	1.6	1.6	1.2
불만 없이 생활	3.3	3.4	3.3	3.6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1.1	1.1	1.1	1.0
마음이 슬펐다.	1.6	1.4	1.5	1.2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1.0	1.1	1.1	1.0
뭐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	1.6	1.4	1.5	1.2
(분석대상수)	(71)	(27)	(98)	(8,005)
평균	1.9	1.8	1.8	1.7

주: 각 문항은 "①극히드물다, ②가끔 있었다, ③종종있었다, ④대부분 그랬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59〉 한부모가족유형별 자아존중감

(단위: 점, 명)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2.7	2.7	2.7	2.8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	2.6	2.8	2.7	2.8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8	2.1	1.9	1.3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수 있다.	2.9	3.0	2.9	2.9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9	2.3	2.0	1.9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2.8	2.9	2.8	2.9
대체로 만족	2.3	2.4	2.3	2.6
내 자신을 존경 할 수 있으면 좋겠다.	2.8	2.7	2.8	2.8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	1.3	1.3	1.3	1.2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2	1.4	1.3	1.1
(분석대상수)	(71)	(27)	(98)	(8,005)
평균	2.2	2.4	2.3	2.2

주: 각 문항은 "①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보통이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3) 조손·새싹가족

가) 특성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조손가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 가구에서 조손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0.27%에서 2010년에는 0.69%로 15년 간 0.42%pt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 중 조부모가 함께 사는 가구는 42.9%, 조모 또는 조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57.1%의 분포를 보였다.

〈표 4-60〉 연도별 조손가구의 변화(1995~2010)

(단위: %, 천가구)

구분	1995	2000	2005	2010
총가구	12,958	14,312	15,887	17,339
조손가구	35.2	45.2	58.1	119.3
(비율)	0.27	0.32	0.37	0.69
조부모가구				51.2
(비율)				(42.9)
조모(부)가구				68.1
(비율)				(57.1)

자료: 통계청(1990~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새싹가구의 변화를 보면 세대주수는 1985년 4,901명에서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0년대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0년 905명에 이른다. 세대원은 1985년 6,224명에서 2010년에 422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보호자에 의한 양육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표 4-61〉 연도별 새싹가구의 변화(1985~2010)

(단위: %, 명)

구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세대주(수)	4,901	6,696	8,107	6,466	2,755	905
세대원	6,224	7,082	7,011	3,625	1,577	422
계	11,125	13,778	15,118	10,091	4,332	1,327

자료: 보건복지부(1970~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조손·새싹가구의 발생원인은 2000년에는 부모의 질병·사망에 의한 발생이 가장 많았고 최근으로 오면서 부모의 이혼·재혼에 의한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62〉 조손·새싹가구의 발생원인(2000~2010)

(단위: %)

구분	2000	2003	2005	2008	2010	2012
부모의 이혼·재혼	11.6	16.0	19.2	23.5	22.3	24.8
부모의 질병·사망	51.9	49.9	44.9	44.9	48.8	45.9
부모의 가출·실종	31.4	29.6	30.3	25.6	23.4	21.3
기타	5.1	4.5	5.5	6.1	5.4	8.0

자료: 보건복지부(2000~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나) 생활변화

(1) 취업 및 경제생활

조손·새싹가족의 취업상태를 보면, 미취업자의 비율은 68.4%로 나타났고, 모두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않은(못한) 경우였다. 근로자는 총 24.5%로 낮은 비율을 보였고, 취업자의 근로 유형은 '임금근로자(10.5%)', '자영업, 고용주(14.0%)'로 나타났다. 조손·새싹가족의 미취업

자 비율은 약 70%로 한부모가족과 일반부부가족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4-63〉 조손 및 새싹가족의 근로유형 및 임금 근로자의 노조 가입여부

(단위: %,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임금근로자	10.5	65.0	40.0
자영업, 고용주	14.0	8.0	16.2
무급 가족 봉사자	7.0	0.0	6.7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68.4	27.0	36.5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0.0	0.0	0.6
계(수)	100.0 (57)	100.0 (100)	100.0 (8,433)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조손·새싹가족의 취업자 중에서 지난 1년(2011)간 사직 또는 폐업경험은 5.6%로 나타났고, 한부모가족 및 일반반부부가족의 경험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표 4-64〉 조손 및 새싹가족의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사직 경험 및 이유

(단위: %,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있다	5.6	24.7	10.0
없다	94.4	75.3	90.0
계(수)	100.0 (18)	100.0 (73)	100.0 (5,305)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조손·새싹가족 취업자의 지난 1년(2011)간 평균 근로기간은 11.3개월로 나타났고, 한 달 평균 근로일수는 15.3일로 나타났다. 규칙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8.7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보다 적게 나타났고, 비규칙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시간으로 나

타났다. 조손·새싹가구의 평균 근로시간은 한부모가족과 일반부부가족 근로시간의 약 50%정도로 조손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표 4-65〉 조손 및 새싹가족의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평균 근로기간 및 한 달 평균 근로일수

(단위: 개월, 일,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평균 근로 기간	11.3	11.5	11.4
한 달 평균 근로 일수	15.3	22.2	21.5
(분석대상수)	(18)	(73)	(5,305)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66〉 조손 및 새싹가족의 취업자의 지난 1년(201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주당 평균 근로시간(규칙적 근로)	28.7	45.4	47.2
(분석대상수)	(7)	(73)	(3,718)
주당 평균 근로시간(비규칙적 근로)	4.1	8.5	7.2
(분석대상수)	(11)	(15)	(1,587)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조손 및 새싹가족의 주택소유형태는 자가가 57.5%이었고, 27.5%는 전세 또는 월세, 전·월세인 무주택으로 자가 비율은 한부모가족보다 3.7배 높았으나, 일반가족보다는 9%pt 낮았다. 조손 및 새싹가족의 자가 비율은 높은 편이나 1/4는 무주택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손 및 새싹가족의 평균 재산규모는 5,522만원으로 5천만원을 약간 초과하였고, 평균 부채규모는 645만원, 그 중 주택관련 부채규모는 169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26%를 차지하였다. 조손 및 새싹가족은 한부모가족에 비해 재산규모는 다소 많았고, 부채는 적은 편으로 주택 부채율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일반가족에 비해 재산은 1/3, 부채는 1/6정도 이었

으며, 주택 부채율은 6%pt 높았다. 이와 같이 조손 및 새싹가족의 경제수준은 한부모가족보다는 다소 좋은 상태이었으나 일반가족보다는 열악하여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 4-67〉 조손 및 새싹가족의 주택소유형태

(단위: %,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자가	57.5	15.6	66.3
전세	10.0	16.7	15.4
전·월세	12.5	48.9	11.0
월세	5.0	7.8	1.1
기타	15.0	11.1	6.1
계 (수)	100.0 (40)	100.0 (90)	100.0 (3,530)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68〉 조손 및 새싹가족의 평균 재산보유 및 부채규모

(단위: %,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평균 재산보유 규모(평균)	5,522.4	4,315.9	17,764.9
(분석대상수)	(40)	(90)	(3,525)
평균 부채규모	645.0	1,854.4	3,923.2
(분석대상수)	(40)	(90)	(3,524)
평균 주택관련 부채규모	168.8	473.3	1,243.4
(분석대상수)	(32)	(73)	(3,273)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조손 및 새싹가족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155만원이고, 월평균 가구소비수준은 147만원으로 소득대 생활비 비율은 94.9%로 나타나 소득을 초과하지 않았다. 조손·새싹가족의 소득은 한부모가족의 75%, 일반가족의 40% 수준에 불과하였다. 소득대비 생활비는 한부모가족보다는 낮으나 일반가족보다는 6.2%pt 높아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거의 생활비로만 충

당하여 경제생활이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4-69〉 조손 및 새싹가족의 평균 가구소득소비수준 및 생활비

(단위: %,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평균 가구소득 수준	155.0	206.9	383.6
(분석대상수)	(40)	(90)	(3,530)
평균 가구소비 수준	147.1	207.0	340.3
(분석대상수)	(40)	(90)	(3,530)
소득대 생활비 비율	94.9	100.1	88.7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조손 및 새싹가족의 빈곤 및 사회보장수준을 보면, 빈곤 경험률은 17.5%로 한부모가족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일반가족에 비해 2.6배 높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52.5%로 한부모가족에 비해 높았고, 일반가족에 비해 13배 높아서 실제 조손 및 새싹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보다 빈곤수준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표 4-70〉 조손 및 새싹가족의 빈곤 및 사회보장수준

(단위: %,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빈곤수준	17.5	24.4	6.7
(분석대상수)	(40)	(90)	(3,530)
국기초수급 여부	52.5	41.1	4.0
(분석대상수)	(40)	(90)	(3,530)
건강보험가입 여부	80.0	61.1	96.1
(분석대상수)	(40)	(90)	(3,530)
공적연금가입 여부	100.0	100.0	99.9
(분석대상수)	(9)	(58)	(2,728)
산재보험가입 여부	25.0	48.3	71.4
(분석대상수)	(4)	(60)	(1,572)
고용보험가입 여부		45.8	74.9
(분석대상수)		(59)	(1,331)

4대보험 가입률은 조손 및 새싹가족은 25~100%로 한부모가족의 46~100%, 일반가족의 71~100%보다 상당히 저조하였다. 특히 건강보험가입률은 80.0%로 한부모가족보다는 높았으나 일반가족보다는 다소 낮았고, 보호자가 고연령층임을 감안할 때 조손·새싹가족의 건강의 위해가능성이 예상된다.

(2) 가족생활

조손 및 새싹가족의 지난 1년간 근심·갈등을 초래한 문제가 있는 비율은 85.0%로 한부모가족과 일반가족에 비해 5~25%까지 높았다.

문제유형은 가구원의 건강이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제적 어려움이 27.5%로 많았으며, 자녀교육·행동도 10.0%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교육·행동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일반가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조손가족의 경우 보호자의 연령이 높은 데서 건강이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손 및 새싹가족의 문제해결방식으로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하는 비율은 57.5%로 과반수를 상회하였으며, 의견충돌이 잦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은 25.0%로 1/4는 갈등과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조손·새싹가족은 한부모가족보다는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하려는 성향이 높은 편이었으나, 일반가족에 비해서는 충돌과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4-71〉 조손 및 새싹가족의 지난 1년 간 근심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

(단위: %,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15.0	20.0	39.5
경제적 어려움	27.5	38.9	16.1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	3.3	3.6
자녀교육 혹은 행동	10.0	21.1	5.4
가구원의 건강	37.5	11.1	28.8
가구원의 알코올	-	-	0.4
가족 내 폭력	-	-	0.1
가구원간 관계	5.0	4.4	1.6
주거관련 문제	2.5	1.1	1.5
자녀의 결혼문제	2.5	-	1.2
기타	-	-	1.9
계(수)	100.0 (40)	100.0 (90)	100.0 (3,530)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72〉 조손 및 새싹가족의 가족구성원의 문제해결방식

(단위: %,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의견충돌이 잦음	10.0	14.4	4.6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짐	5.0	7.8	0.8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함	57.5	42.2	72.2
자주 서로를 비난함	7.5	4.4	2.2
가끔 서로를 때림	2.5	2.2	0.4
(분석대상수)	(40)	(90)	(3,530)

주: 문제해결 방식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조손 및 새싹가족의 평균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 과거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6점 만점에 4.79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한부모가족보다는 배우자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일반가족보다는 다소 낮

았다. 자녀 및 자녀들 간의 관계만족도는 각각 4.94점과 5.00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한부모가족보다는 높고, 일반가족보다는 낮았다. 이는 조손·새싹가족의 경우 가족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73〉 조손 및 새싹가족의 평균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배우자와의 관계	4.79	1.38	5.36
자녀와의 관계	4.94	2.68	5.78
자녀들의 형제자매관계	5.00	2.57	5.72
(분석대상수)	(53)	(91)	(6,831)

주: 가족관계만족도는 총 6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조손 및 새싹가족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7점으로 중간 정도로 한부모가족보다 높았고, 일반가족보다는 다소 낮았다.

〈표 4-74〉 조손 및 새싹가족의 평균 가족생활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	2.60	2.26	3.37
가족의 수입	2.35	1.51	2.78
주거 환경	3.29	2.23	3.55
가족 관계	3.40	2.55	3.96
직업	3.16	2.27	3.38
사회적 친분관계	3.49	2.56	3.76
여가생활	3.29	1.79	3.15
전체	3.07	2.20	3.52
(분석대상수)	(55)	(98)	(8,006)

주: 가족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로 첨수가 높을 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7개 항목별로는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등 5개 항목은 전체 만족도보다 높았고, 건강과 수입은 낮았다. 한부모가족보다는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일반가족과는 여가생활은 조손·새싹가족이 높은 편이나 나머지 6개 항목에서는 낮았다.

(3)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

조손·새싹가족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82.5%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부부보다는 높고 일반부부가족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가입유형은 직장가입자 30.3%, 지역가입자 69.7%로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손·새싹가구의 취업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75〉 조손 및 새싹가족의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유형

(단위: %,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보험 가입여부			
가입	82.5	61.1	96.8
미가입	17.5	38.9	3.2
계 (수)	100.0 (40)	100.0 (90)	100.0 (3,530)
건강보험 가입유형			
직장가입자	30.3	49.1	69.3
지역가입자	69.7	50.9	30.7
계 (수)	100.0 (33)	100.0 (55)	100.0 (3,418)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조손·새싹가족 중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가구는 모두 의료급여 대상이었고 비율은 '의료급여 1종이 85.7%, 의료급여 2종은 14.3%로 타나났다.

의료급여 수급대상의 71.4%는 의료급여 서비스의 문제점이 없다고 느

끼고 있었고, 문제점이 있다고 느낀 대상은 모두 '혜택범위의 협소함(28.6%)'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표 4-76〉 조손 및 새싹가족의 건강보험 미가입 유형 및 의료급여 서비스의 문제점

(단위: %,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보험 미가입 유형			
의료급여(1종)	85.7	40.0	37.0
의료급여(2종)	14.3	60.0	28.6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0.0	0.0	4.5
미가입	0.0	0.0	0.0
계 (수)	100.0 (7)	100.0 (35)	100.0 (112)
의료급여서비스 문제점			
특별한 문제없음	71.4	80.0	77.6
혜택범위가 좁음	28.6	5.7	15.9
적용기간의 제한	0.0	2.9	1.9
차별대우	0.0	11.4	4.7
계 (수)	100.0 (7)	100.0 (35)	100.0 (107)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조손·새싹가족의 건강보험 미납경험은 3.0%로 낮게 나타났고,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75.8%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월 보험료 부담(18.2%)', '보험의 적용범의가 좁음(6.1%)'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조손·새싹가족이 한 달 간 지출하는 민간의료 보험료 지출 총액은 2.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부부가족(18.4만원)과 한부모가족(12.9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표 4-77〉 조손 및 새싹가족의 건강보험 미납경험 및 문제점

(단위: %, 명, 개월)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보험 미납경험			
있다	3.0	3.6	0.8
없다	97.0	96.4	99.2
계 (수)	100.0 (33)	100.0 (55)	100.0 (3,418)
건강보험 문제점			
특별한 문제없음	75.8	78.2	76.7
월 보험료 부담	18.2	18.2	15.7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6.1	3.6	7.5
기타	0.0	0.0	0.1
계 (수)	100.0 (33)	100.0 (55)	100.0 (3,418)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78〉 조손 및 새싹가족의 월 평균 총 민간의료 보험료 지출액

(단위: 만원,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월 평균 총 민간의료 보험료 지출액	2.1	12.9	18.4
(분석대상수)	(40)	(90)	(3,540)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조손·새싹가족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정도와 자아존중감 정도를 척도를 분석 해 보았다. 조손·새싹가족의 우울증 측정 척도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1.8점으로 우울한 정도가 가끔 있는 것 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2.2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79〉 조손 및 새싹가족의 우울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식욕이 없음	1.6	1.4	1.2
비교적 잘 지냈다.	3.4	3.6	3.7
상당히 우울	1.7	1.6	1.3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1.8	1.8	1.5
잠을 설침	1.8	1.7	1.4
외로움	1.5	1.6	1.2
불만 없이 생활	3.2	3.3	3.6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1.1	1.1	1.0
마음이 슬펐다.	1.5	1.5	1.2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1.1	1.1	1.0
뭐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	1.6	1.5	1.2
(분석대상수)	(55)	(98)	(8,005)
평균	1.8	1.8	1.7

주: 각 문항은 "①극히드물다, ②가끔 있었다, ③종종있었다, ④대부분 그랬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80〉 조손 및 새싹가족의 자아존중감

(단위: 점, 명)

구분	조손·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2.4	2.7	2.8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	2.6	2.7	2.8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6	1.9	1.3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수 있다.	2.5	2.9	2.9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2.4	2.0	1.9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2.7	2.8	2.9
대체로 만족	2.2	2.3	2.6
내 자신을 존경 할 수 있으면 좋겠다.	2.7	2.8	2.8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	1.6	1.3	1.2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2	1.3	1.1
(분석대상수)	(55)	(98)	(8,005)
평균	2.2	2.3	2.2

주: 각 문항은 "①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보통이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자료: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제2절 가족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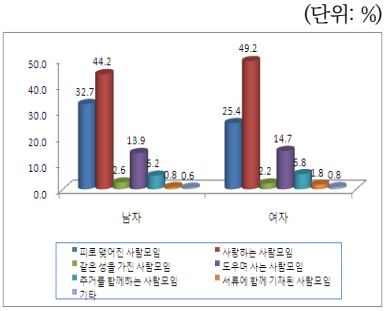
1. 가족관계의 범위 및 유형

가. 가족인식 및 태도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을 보면, 성별로는 남녀 모두 '가족'의 의미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응답이 44~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조상을 같이하는 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25~33%로 많았고,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도 많은 편이었다.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 '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여성은 남성보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응답이 많아서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 의미로 혈연의식이 높은 데 비해, 여성은 사랑이라는 가족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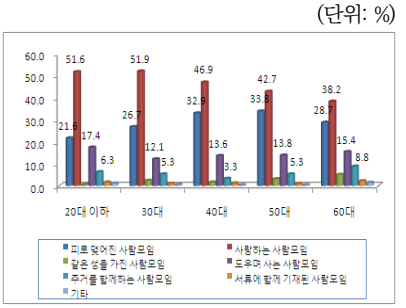
〔그림 4-8〕 성별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림 4-9〕 연령별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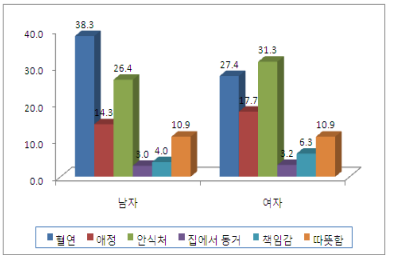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모두 '가족'의 의미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응답이 38~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조상을 같이 하는 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22~34%로 많았다. 특히 20~30대는 '가족'의 의미로 사랑을 중요시하는 데 하는 비해, 40~50대는 혈연관계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보였다.

'가족'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항목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혈연'이 3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안식처', '애정', '따뜻함' 순으로 많은 데 비해, 여성은 '안식처'가 3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혈연', '애정', '따뜻함' 순으로 높아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족' 의미로 혈연의식이 높은 데 비해 여성은 안식처라는 가족기능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연령층은 '안식처'가 가장 많았고, 30대~60대 연령층은 '혈연'이 많아서 20대 젊은 연령층과 중장년층 이상 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애정'은 40~60대의 장년층 이상에서 높아서 '가족' 의미 또는 가치는 젊은 연령층과 중년층 이상에서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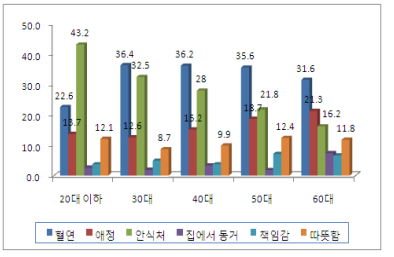
〔그림 4-10〕 성별 '가족'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항목에 대한 의견

(단위: %)



〔그림 4-11〕 연령별 '가족'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항목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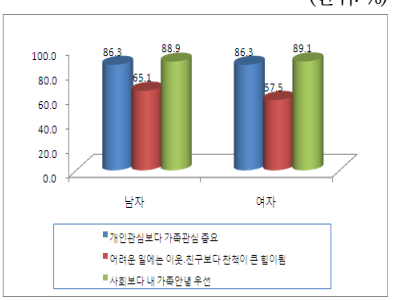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가족'의 우선순위와 비중을 보면, 성별로는 남녀 모두 '개인적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을 더욱 중요시 한다'와 '사회보다 내 가족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가 각각 86%와 89%로 높은 데 비해 '어려운 일에는 이웃·친구보다 친척이 더 큰 힘이 된다'는 58~65%로 낮아서 가족의 우선순위에 비해 친척보다 이웃·친구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개인적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을 더욱 중요시 한다'와 '사회보다 내 가족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가 높았고, '어려운 일에는 이웃·친구보다 친척이 더 큰 힘이 된다'는 낮았다. 특히 이들 항목은 장년층 이상에서 높은 경향을 보여 중년층 이하보다 가족의 우선순위와 비중이 높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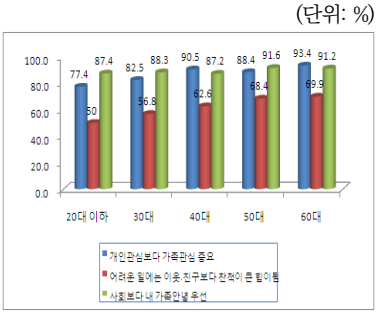
〔그림 4-12〕 성별 '가족'에 대한 견해

(단위: %)



〔그림 4-13〕 연령별 '가족'에 대한 견해

(단위: %)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나. 가족관계 중요도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관계 중요도는 배우자가 6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친부모, 자녀 순으로 나타나서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이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도 전체와 유사하였고,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친부모의 중요도가 높은데 비해, 여성은 배우자와 자녀의 중요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서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29세 이하는 타 연령층에 비해 친부모의 중요도가 2.7배까지 높았고, 30대는 친부모와 자녀 중요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40대 이상은 타 연령층에 비해 배우자의 중요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외에 자녀중요도도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가족중요도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가족생활주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4-81〉 성 및 연령별 가족관계의 중요도(1순위)

(단위: %, 명)

구분	친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손자녀	계(수)
전체	23.8	64.3	8.9	1.1	0.9	0.5	0.2	0.3	100.0(1,000)
성									
남자	32.3	60.9	4.6	0.4	0.6	0.8	0.0	0.4	100.0(504)
여자	15.1	67.7	13.3	1.8	1.2	0.2	0.4	0.2	100.0(496)
연령									
29세 이하	42.6	50.0	3.7	2.6	0.5	0.5	0.0	0.0	100.0(190)
30~39세	27.7	60.7	10.7	0.5	0.5	0.0	0.0	0.0	100.0(206)
40~49세	15.6	71.6	10.3	0.4	0.4	0.8	0.4	0.4	100.0(243)
50~59세	16.9	70.2	9.8	0.4	1.3	0.4	0.4	0.4	100.0(225)
60~69세	17.6	66.9	9.6	2.2	2.2	0.7	0.0	0.7	100.0(1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2. 부부관계의 변화

부부관계는 가족관계의 근간을 이루고, 부부간의 역할관계나 권력구조 등은 부부관계의 구조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부간의 역할분담이나 가족 내 의사결정행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부부행위를 평가함으로서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부부역할에 대한 가치관, 부부역할 이데올로기,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 등은 과정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관적 인지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다(김승권 외, 2000).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변화를 가족 내 부부 역할, 부부간 의사결정권, 가사분담 태도 및 실태변화,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견해,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등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남편은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가사를 맡는다'는 의견은 2003년 38.6%에서 2006년 일시 감소하다 2009년 40.2%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부인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는다'는 견해는 2003년 33.6%에서 2006년 감소하다 2009년 33.4%로 소폭 증가하였다. '남편이 맡는다'는 1% 미만으로 미미하였고, 공동부담은 2003년 4.2%에서 2006년 7.4%로 약 2배 증가하다 2009년 5.9%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과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아야 한다'는 견해는 2003년 18.4%에서 2006년 24.2%로 상승하다 2009년 10.8%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남편이 맡는다와 공동부담은 미미하였다. 또한 남편과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맡는다는 2003년과 2006년 1%로 미미하다 2009년 5.8%로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남편은 경제부양자, 부인은 양육·가사자라는 전통적인 모델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는 맞벌이 경우나 누가 돈을 버는 것과 상관없이 전통모델을 고수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으로 오면서 남편과 부인 상관없이 집에 있는 사람이 양육·가사를 맡는다는 견해에 미미하나 소폭 증가추세를 보여서 향후 가정 내 부부역할의 변화를 말해준다.

〈표 4-82〉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명)

구분	① 남편은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가사를 맡음 ② 남편·부인 모두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음 ③ 남편·부인 모두 돈을 벌며, 남편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음 ④ 남편·부인 모두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가사를 맡음 ⑤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음 ⑥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음 ⑦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가사를 맡음 ⑧ 남편과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
2003	38.6	33.6	0.6	4.2	18.4	0.7	2.4	1.4	100.0(9,882)
2006	29.7	32.2	0.6	7.4	24.2	0.7	3.9	1.3	100.0(8,905)
2009	40.2	33.4	0.8	5.9	10.8	0.6	2.4	5.8	100.0(9,311)

자료: 1) 김승권 외(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부 간 의사결정권은 2003년 일상생활비 지출은 부인결정과 부부공동이 93.2%로 대다수를 이루었고,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부공동과 부인결정이 95.4%로 대다수에 해당되었으며, 주택매매 및 이사와 투자 및 재산증식은 부부공동이 각각 74.2%와 69.1%로 2/3 이상에 해당되었다. 2006~2012년도 부부 의사결정 양상도 대체로 2003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미미하나 일상생활비 지출과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부부공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주택이나 재산에서도 부부공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성이 주로 가계와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주택 또는 재산증식 등은 부부가 함께 결정하

는 구조를 보였다.

〈표 4-83〉 부부간 의사결정권 변화

(단위: %)

구분	일상 생활비 지출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2003	6.8	27.1	66.1	14.5	74.2	11.3	16.1	69.1	14.8	4.5	59.4	36.0
2006	5.7	29.0	65.3	14.2	74.7	11.2	16.1	67.8	16.1	3.1	57.7	39.3
2009	6.0	26.6	67.4	12.8	75.4	11.8	15.5	67.5	17.0	3.5	54.2	42.4
2012	5.3	28.9	65.6	13.2	75.7	11.2	16.5	70.0	13.6	3.0	59.5	37.4

주: 분석대상은 2003년 9,892명, 2006년 8,903명, 2009년 9,311명, 2012년 8,315명임.
자료: 1)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과 '부인이 주로 하나 남편 분담'을 합친 부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2002년 65.9%에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52.0%로 과반수를 다소 상회하였고, 공평하게 분담은 2002년 30.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45.3%로 거의 과반수에 접근하고 있으며, 남편이 부담하는 비율은 2002년 3.3%에서 2012년 2.5%까지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가사분담 태도는 최근으로 오면서 부인의 분담형태는 점차 감소하고 부인과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남편의 가사참여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84〉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구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02	7.2	58.7	30.7	2.8	0.5
2006	5.9	59.4	32.4	1.9	0.3
2008	6.7	59.8	32.4	0.9	0.2
2010	6.4	54.9	36.8	1.6	0.3
2012	5.3	46.7	45.3	2.1	0.4

자료: 통계청(2002~2012). 사회조사결과.

실제 우리나라의 가사분담형태는 태도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부인이 분담하는 비율은 2002년 88.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81.9%로 10년간 7%pt가 줄어들었으며,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2002년 8.1%에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5.5%로 동기간 2배 높아졌다. 남편이 분담하는 비율은 2002년 3.0%에서 2012년 2.6%로 미미하였다.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에 비해 실제 가사분담은 대다수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형태는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성 분담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하였다.

〈표 4-85〉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 변화

(단위: %)

구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02	37.9	51.0	8.1	2.5	0.5
2006	36.5	53.2	7.9	1.9	0.4
2008	35.7	53.8	9.0	1.2	0.3
2010	34.7	53.0	10.3	1.7	0.4
2012	29.8	52.1	15.5	2.2	0.4

자료: 통계청(2002~2012). 사회조사결과.

가족 내 부부 역할에 대해 '아내는 남편이 경력을 쌓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은 53.1%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남편의 일은 돈을 버는 것, 아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인 남성부양자 모델에 찬성하는 비율은 42.4%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하는 것이 좋다'는 31.9%로 1/3 정도는 양성불평등적인 가부장적 잔재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맞벌이 가정임에도 부인이 가사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도 16.5%로 적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의식에서 아직도 가부장적인 양성불평등적 성향이 높았으며 이는 가사분담과 사회성취, 가족부양 책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가부장적 양성불평등적 인식이 높았으며, 저연령층에 비해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양성불평등적 성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86〉 성 및 연령별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견해(찬성비율)

(단위: %, 명)

구분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하는 것이 좋다	아내가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아내 책임이다	(분석대상수)
전체	53.1	42.4	31.9	16.5	100.0(1,000)
성					
남자	45.8	41.5	31.2	17.5	100.0(504)
여자	60.5	43.3	32.7	15.5	100.0(496)
연령					
29세 이하	31.1	17.9	16.3	11.6	100.0(190)
30~39세	41.3	32.5	26.7	10.2	100.0(206)
40~49세	58.8	45.7	35.0	13.6	100.0(243)
50~59세	60.9	53.8	38.7	21.8	100.0(225)
60~69세	78.7	66.9	44.9	29.4	100.0(1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부부관계를 만족도를 통해서 보면, 부부관계만족도는 1998년 58.8%에서 2010년 65.5%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불만족도는 1998년 8.5%에서 2010년 7.4%로 미미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과거 가부장적 가치에 근거한 양성불평등적 관계에서 민주적인 관계로 전환되면서 부부 간에 평등성이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87〉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1998~2012)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1998	27.3	31.5	32.8	6.4	2.1	100.0
2002	34.6	26.1	31.8	5.2	2.3	100.0
2006	29.6	27.7	33.0	6.8	2.9	100.0
2008	28.8	36.9	28.0	4.6	1.7	100.0
2010	28.7	36.2	27.7	5.7	1.7	100.0
2012	30.5	35.0	26.6	5.6	2.3	100.0

자료: 통계청(1998~2012). 사회조사결과.

3. 부모-미혼자녀관계의 변화

부모에게 자녀의 의미는 부모와 자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녀가치관의 변화를 보면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즐거움이다'는 2005년과 2010년 각각 4.1점과 4.0점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였고,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는 동 기간 3.5점과 3.7점으로 중간이상으로 다소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는 같은 기간 3.9점에서 3.7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자녀와의 성공일치 정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88〉 자녀가치관의 변화

(단위: 점, 명)

구분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분석대상수)
2005	4.1	3.5	3.9	(5,973)
2010	4.0	3.7	3.7	(4,754)

주: 5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의미임.
자료: 1) 여성가족부(2005). 2005년 제1차 가족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한편, 자녀를 기르는 의미에 대해 '가족결속을 든든하게 하기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 등이 높았다. 성별로도 유사하였으며, 이외에 남성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와 결혼한 부부라는 사회적 인정에 자녀의 양육 의미를 두었다. 연령별로는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고연령층은 자녀 양육 의미를 가족결속을 든든하게 하지 위해서가 높았고, 젊은 연령층은 자녀를 키우는 일의 즐거움에 의미를 두어 연령별로 자녀에 대한 의미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50대는 결혼한 부부라는 사회적 인정에, 60대는 가문의 대를 잇기에 의미를 두었다.

부모와 성장기 자녀관계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과 자녀양육 범위,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등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양육방식은 2003년에는 자녀를 지원하고, 부모가 정한 규칙을 설명하여 이해하고 따르도록 하는 민주적·합리적인 양육방식이 74.8%로 2/3 이상에 해당되었고, 일부는 자녀양육 방법이 없으며 지나친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규칙을 만들어 자녀를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서 2003~2006년 간 자율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자율성이 많은 양육방식이 감소하는 대신 민주적·합리적인 양육방식이 증가한 경향을 보여서 부모와 자녀 간에 민주적인 관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89〉 자녀를 기르는 의미

(단위: %, 명)

구분	가문의 대를 잇기	가족 결속을 든든하게 하기	노후 안심	자녀를 키우는 일의 즐거움	결혼한 부부라는 사회적 인정	나의 꿈을 이루어 줄 후계자	기타	계(수)
전체	6.7	42.0	2.8	37.5	5.8	2.3	2.9	100.0(1,000)
성								
남자	9.5	38.9	2.6	35.9	7.1	3.8	2.2	100.0(504)
여자	3.8	45.2	3.0	39.1	4.4	0.8	3.6	100.0(496)
연령								
29세 이하	5.8	36.3	3.2	46.3	4.7	3.7	0.0	100.0(190)
30~39세	4.9	40.3	1.9	41.3	4.9	2.9	3.9	100.0(206)
40~49세	6.2	40.3	2.5	40.3	5.3	1.6	3.7	100.0(243)
50~59세	4.4	50.2	2.7	28.9	9.3	0.9	3.6	100.0(225)
60~69세	15.4	41.9	4.4	28.7	3.7	2.9	2.9	100.0(1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표 4-90〉 자녀양육방식 변화

(단위: %, 명)

구분	규칙을 만들어 자녀통제, 자율성 없음	자녀양육방법 부재, 지나친 자율성 부여	그냥 내버려 두며, 자녀에게 요구도 반응도 없음	자녀 지원, 부모 규칙 설명하여 이해하고 따르도록 함	계(수)
2003	9.7	13.5	1.9	74.8	100.0(10,147)
2006	8.5	11.6	1.1	78.8	100.0(9,426)

자료: 1) 김승권 외(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책임 범위는 2003년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가 32.1%로 많았으며,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도 일부 나타났다. 2006~2012년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며, 최근 9년간의 변화는 부모의 자녀양육책임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그리고 취업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자녀가 혼인 할 때까지는 감소하여 이는 최근 만혼화 및 결혼기피 현상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표 4-91〉 자녀양육책임 범위 변화

(단위: %, 명)

구분	자녀가 고등졸업 까지	자녀가 대학졸업 까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언제 까지	기타	생각해 보지않음/ 모르겠음	계(수)
2003	8.3	40.2	11.5	32.1	6.3	0.6	1.0	100.0(11,106)
2006	8.6	46.3	11.9	27.0	5.5	0.1	0.5	100.0(10,117)
2009	9.6	49.6	12.2	23.1	5.0	0.1	0.4	100.0(9,075)
2012	8.9	49.6	15.7	20.4	4.6	-	0.8	100.0(10,058)

자료: 1) 김승권 외(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1998년 상담 대상은 친구동료가 56.4%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은 스스로 해결,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많았으며, 2002~2012년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최근 변화는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으로 친구동료가 가장 많았으나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신, 부모에게 상담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증가하여 성장기 자녀 중 1/5 정도는 부모와 어느 정도 신뢰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짐작된다.

〈표 4-92〉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1998~2012)

(단위: %)

구분	부모	형제자매	친구동료	스스로 해결	기타	계(수)
1998	12.0	7.3	56.4	16.8	5.9	100.0
2002	11.9	6.2	59.8	16.7	5.4	100.0
2006	18.0	5.6	49.9	17.2	4.2	100.0
2008[1)]	21.9	4.8	53.6	13.9	5.8	100.0
2010[2)]	20.7	6.2	51.1	16.9	5.1	100.0
2012[2)]	24.0	5.2	44.5	21.9	4.5	100.0

주: 1) 2008년 기타에는 스승, 선후배, 상담가, 성직자, 기타 포함.
2) 2010년, 2012년 기타에는 스승, 선후배 포함.
자료: 통계청(1970~2012). 사회조사결과.

최근 자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보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는 8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다'라는 자녀를 통한 부모의 성취는 57.2%로 높은 편이었으며, '노후를 위해 자식이 필요하다'는 48.8%로 거의 절반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삶에서 자녀가 가장 우선이다' 등 자녀의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는 32~35%로 낮은 편이었고, '노후에는 자식과 함께 살고 싶다'는 16.1%로 미미하였다.

이는 부모에게 자녀의 필요도와 자녀를 통한 성취감은 높으나 가족관계에서 자녀가 절대 우위는 아니며 노후에 대비해 자녀가 필요하나 자녀와 비동거를 선호하여 과거 자녀중심의 가치에서 점차 부부 또는 부모중심의 가치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93〉 성 및 연령별 자녀에 대한 견해(찬성비율)

(단위: %, 명)

구분	성인이라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를 위해서는 자식이 필요하다	자식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다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삶에서 자녀가 가장 우선이다	노후에는 자식과 함께 살고 싶다	(분석대상수)
전체	80.9	48.8	57.2	32.1	34.7	16.1	100.0(1,000)
성							
남자	82.7	45.8	53.4	32.9	32.7	20.4	100.0(504)
여자	79.0	51.8	61.1	31.3	36.7	11.7	100.0(496)
연령							
29세 이하	76.3	58.9	62.1	41.1	27.9	21.6	100.0(190)
30~39세	69.9	41.3	44.2	25.7	26.7	8.3	100.0(206)
40~49세	83.1	40.7	49.8	25.1	34.6	15.2	100.0(243)
50~59세	89.3	48.0	61.8	33.3	35.6	18.7	100.0(225)
60~69세	86.0	61.8	75.7	39.7	55.1	17.6	100.0(1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부모와 미혼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1998년 65.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72.2%를 보였고, 불만족도는 1988년 5.5%에서 2010년에는 4.3%로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며 자녀양육방식의 민주화, 부모와 자녀의 독립적인 가치 확대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표 4-94〉 자녀와의 관계만족도(1970~2012)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1998	31.7	33.5	29.3	4.9	0.6	100.0
2002	39.1	30.0	26.6	3.6	0.7	100.0
2006	33.7	31.9	29.2	4.3	0.9	100.0
2008	34.6	38.1	23.8	3.0	0.6	100.0
2010	33.1	39.1	23.6	3.6	0.7	100.0
2012	34.8	38.2	22.7	3.6	0.7	100.0

자료: 통계청(1970~2012). 사회조사결과.

4. 노부모-성인자녀관계의 변화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는 부모 부양으로 설명되며, 먼저 부모부양 가치관과 부모부양 책임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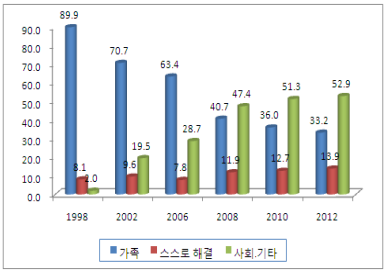
가족부양가치관은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부양 담당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 1998년에는 가족이 89.9%로 대다수이었고, 스스로 해결과 사회 및 기타는 각각 8.1%와 2.0%로 미미하였다. 가족 중에서는 장남과 아들모두가 29.4%로 1/3에 못 미쳤고, 딸을 포함한 모든 자녀는 15.0%에 불과하였으나, 능력 있는 자녀라는 응답은 45.5%로 거의 과반수에 근접하였다.

2008년에는 부모부양의 책임자로 가족이 40.7%로 절반수준으로 감소

하였고, 스스로 해결과 사회 및 기타는 각각 11.9%와 47.4%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노부모 부양을 사회화하려는 태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 중에서는 장남과 아들모두가 9.7%로 감소한데 비해 아들딸 모두는 24.3%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가족이 33.2%로 1998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스스로 해결과 사회 및 기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6.8% 분포를 보여 2/3을 상회하였다. 가족 중에서는 모든 자녀가 25.0%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미미하여 장남 또는 아들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이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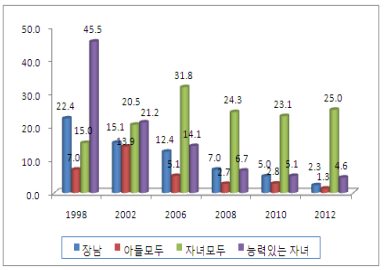
〔그림 4-14〕 부모부양가치관

(단위: %)



〔그림 4-15〕 가족 중 부모부양 책임자

(단위: %)



주: 1) 분석대상은 1998~2010년에는 15세 이상인구, 2012년은 13세 이상 인구임.
2) 부모부양 가치관에서 기타에는 스승, 선후배 포함.
자료: 통계청(1998~2012). 사회조사결과.

노부모 부양책임 범위는 노부모가 부양을 원할 때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노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 노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노부모의 능력여부를 떠나서 무엇이든 책임져야 한다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노부모 부양책임 범위로 노부모가 부양을 원할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건강하지 않을 때 등이 많았고, 이외에 남성은 능력여부를 떠나서 무엇이든 책임져야 한다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층은 노부모의 능력여부를 떠나서 무엇이든 책임져야 한다, 경제

적 능력이 없을 때, 부양을 원할 경우가 많았고, 고연령층은 건강하지 않을 때 책임져야 한다가 많은 편이었다.

〈표 4-95〉 성 및 연령별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책임 범위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노부모의 능력여부를 떠나서 무엇이든 책임져야 한다	노부모가 경제적 능력 없을 때 책임져야 한다	노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 책임져야 한다	노부모가 원할 경우에 책임져야 한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타	계(수)
전체	16.8	21.9	27.0	31.9	1.4	1.0	100.0(1,000)
성							
남자	21.8	22.4	20.8	31.3	2.0	1.6	100.0(504)
여자	11.7	21.4	33.3	32.5	0.8	0.4	100.0(496)
연령							
29세 이하	22.6	23.7	16.8	35.8	0.5	0.5	100.0(190)
30~39세	21.8	20.4	21.8	34.5	1.5	0.0	100.0(206)
40~49세	14.8	22.6	29.6	30.9	1.6	0.4	100.0(243)
50~59세	12.4	17.3	34.2	32.4	0.9	2.7	100.0(225)
60~69세	11.8	27.9	32.4	23.5	2.9	1.5	100.0(1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실제 우리나라 노부모의 동거형태는 1998년 자녀와의 동거가 49.2%, 비동거는 50.8%로 비슷한 비율에서 자녀와의 동거가 점차 감소하고 비동거가 증가하여 2011년에는 자녀와의 비동거가 동거보다 2.7배 많았는데, 이는 가족부양가치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부모와의 교류 중 연락빈도는 1998년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은 74.5%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83.6% 분포를 보였다. 이에 비해 부모와의 만남은 거의 매일이 1998년 12.3%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는 9.4%를 보이는 반면,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비율은 1998년 65.0%에서 2011년 85.4%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만남의 빈도가 적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96〉 부모와의 동거형태(1998~2012)

(단위: %, 명)

구분	자녀와 동거	자녀비동거	계(수)
1998	49.2	50.8	100.0(2,372)
2004	38.6	61.4	100.0(3,278)
2008	27.6	72.4	100.0(10,798)
2011	27.3	72.7	100.0(10,674)

자료: 1) 정경희 외(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경희 외(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명화 외(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4) 정경희 외(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97〉 부모와의 교류 변화(1998~2012)

(단위: %, 명)

구분	1998	2004	2008	2011
부모와의 전화통화				
거의 매일	22.6	29.7	25.4	23.9
일주일 한두번	51.9	49.8	53.7	59.7
한달에 한두번	20.1	17.1	16.2	14.9
일년에 몇번	3.6	2.3	4.2	0.9
거의 하지 않음	1.8	1.2	0.6	0.7
부모와의 만남				
거의 매일	12.3	11.4	10.9	9.4
일주일 한두번	28.5	29.7	34.9	38.9
한달에 한두번	36.5	36.2	30.0	46.5
일년에 몇번	19.2	20.4	7.1	4.2
거의 하지 않음	3.5	2.3	1.0	1.0
계(수)	1000.0 (2,094)	100.0 (2,892)	100.0 (14,310)	100.0 (10,153)

자료: 1) 정경희 외(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경희 외(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명화 외(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4) 정경희 외(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1998년 본인부모는 53.4%에서 2010년 63.2%로 증가하였고, 배우자부모는 1998년 43.2%에서 2010년 51.1%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본인부모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표 4-98〉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998~2012)

(단위: %)

연도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1998	본인부모	23.0	30.4	40.2	5.6	0.9	100.0
	배우자부모	18.2	25.0	47.2	7.8	1.8	
2002	본인부모	32.7	28.4	34.4	3.7	0.9	100.0
	배우자부모	25.0	23.6	42.6	6.6	2.1	
2006	본인부모	27.3	29.6	37.4	4.5	1.1	100.0
	배우자부모	23.0	24.5	43.5	6.3	2.7	
2008	본인부모	26.6	37.9	31.1	3.6	0.8	100.0
	배우자부모	20.2	32.2	39.8	5.9	1.9	
2010	본인부모	26.1	37.1	31.5	4.3	1.0	100.0
	배우자부모	19.5	31.6	39.8	6.7	2.4	
2012	본인부모	28.5	35.5	30.6	4.3	1.1	100.0
	배우자부모	20.2	30.9	39.6	6.6	2.6	

자료: 통계청(1970~2012). 사회조사결과.

제3절 가족기능 변화

가족기능이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및 행위로서 '가족행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사회의 유지·존속,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 및 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가족기능은 시대, 문화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3)4)]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적 및 출산기능,

3) 정서적 가족기능론은 가족기능을 고유기능, 기초기능, 부차적 기능 등으로 구분하며 고유

경제적 기능,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정서적 기능, 여가활동기능 등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김승권 외, 2000). 특히 가족기능은 가족구성원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개별가족원은 사회변화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변화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즉 가족기능은 이를 수행하는 개별가족원의 존재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족형태 및 가족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승권 외, 2000). 이와 같이 핵가족화·소가족화 등 가족변화는 가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기능변화는 주요 기능인 경제적 부양, 재생산 및 가족돌봄과 부양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적 부양 기능

가족의 경제적 부양기능은 주된 경제부양 책임자인 가구주를 중심으로 경제활동과 고용상태, 그리고 가구주의 소득유형별 분포 및 가구소비 지출구조 변화 등을 통해 경제적 부양기능의 변화를 진단코자 한다.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는 2008년 취업이 74.0%에서 2010년 77.0%로 3.0%pt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76.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비취업은 2008년 26.0%에서 2010년과 2012년은 22.3%와 23.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한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는 2008년에는 상용근로자가 53.0%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은 고용주·자영업자가 27.8%로 1/4를 초과하였고, 임시직·일용직은 17.8%로 1/5에 근

기능에는 애정, 성, 생식·양육기능, 성적통제·종족보존 기능 등을 포함하며, 기초기능에는 생산·소비, 노동력 제공, 경제 질서 유지기능 등을 포함하며, 부차적 기능에는 교육, 보호, 휴식, 오락, 종교 기능 등을 포함(유영주, 1993).

4) 가족기능을 경제공동체기능, 성행위·출산통제기능, 자녀양육·사회화 기능, 정서적 유대·여가기능, 사회보장기능, 지위계승기능 기능, 성역할 사회화 기능, 가사노동 등으로 구분함(함인희, 1995)

접하였다. 2010년에는 2008년 보다 고용주·자영업자는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였고, 상용근로자가 다소 감소한데 비해 임시직·일용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에는 2010년에 비해 고용주·자영업자는 다소 감소한데 비해 상용직과 임시직·일용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가족의 주된 생계 부양자인 가구주의 취업상태는 다소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나 고용상태는 소폭이나 임시직·일용직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고용이 불안정해짐을 시사한다.

〈표 4-99〉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상 지위 변화

(단위: %, 명)

구분	2008	2010	2012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취업	74.0	77.7	76.3
비취업	26.0	22.3	23.7
개(수)	100.0(6,314)	100.0(6,034)	100.0(5,732)
종사상 지위			
고용주자영업자	27.8	27.8	26.3
상용근로자	53.0	47.7	49.0
임시직일용직	17.8	23.2	23.4
기타	1.4	1.3	1.3
계(수)	100.0(4,672)	100.0(4,688)	100.0(4,374)

주: 기타에는 무급가족종사자,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등 포함.
자료: 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재구성
2)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재구성
3)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재구성

가구주의 소득유형별 평균 연간 소득수준과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에는 평균 연간소득은 4,180만원이었고, 그중 근로소득은 77.4%로 전체의 2/3 이상 이었고, 다음은 증여·상속, 경조금, 보상금 등을 포함한 기타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 보험, 정부 보조금 순이었으나 미미하였다. 2010년에는 평균 연간소득은 4,583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9.6%

증가를 보였고, 근로소득은 77.7%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소폭이나 기타소득은 감소한데 비해 보험, 이전소득과 정부보조금은 증가하였다. 2012년 은 평균 연간소득이 4,894만원으로 2010년보다 6.8% 증가하였고, 근로소득은 동일한 분포를 보였으며, 나머지 소득분포는 2010년과 유사하였다.

전반적으로 가구주의 평균 연간소득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근로소득은 2/3을 상회하여 일정한 분포를 보였으며, 소폭이나 기타 소득은 감소하는 데 비해 보험과 이전소득, 정부 보조금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표 4-100〉 가구주의 소득유형별 평균소득 및 분포 변화

(단위: 만원, %, 명)

구분	2008		2010		2012	
	평균소득	비율	평균소득	비율	평균소득	비율
근로소득	3,234	77.4	3,562	77.7	3,801	77.7
재산소득	157	3.8	162	3.5	193	3.9
보험	147	3.5	157	3.4	184	3.8
이전소득	244	5.8	284	6.2	302	6.2
정부 보조금	80	1.9	114	2.5	122	2.5
기타소득	318	7.6	304	6.6	292	6.0
총소득	4,180	100.0	4,583	100.0	4,894	100.0

주: 기타소득에는 증여·상속, 경조금, 보상금, 서고 및 질병 보험금, 퇴직금,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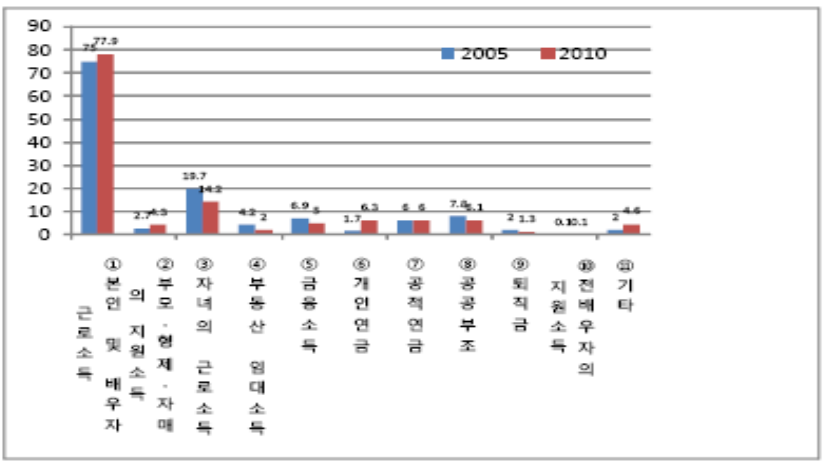
자료: 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재구성
2)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재구성
3)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재구성

다른 한편 가구소득유형을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2005년과 2010년 모두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가 일한 근로소득으로 나타났고, 그 비율은 2005년 75%에서 2010년 78%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3%pt 더 높았다. 반면, 가구소득의 두 번째 유형인 자녀의 근로소득은 2005년에 비해 2010년 약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항목에서도 전반적으로

2005년에 비해 2010년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개인연금은 약 4% 증가하였다.

〔그림 4-16〕 가구소득유형 변화(2005년, 2010년)

(단위: %)



주: 2005년 분석 대상수는 2,925명, 2010년 분석대상수는 2,500명임.
자료: 1) 여성가족부(2005), 1차 가족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2010), 2차 가족실태조사.

가계지출 규모 및 구조의 변화를 보면, 2008년의 가계지출은 월평균 285.6만원으로 기타 소비지출이 2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식료품비 20.7%, 교통통신비 13.7%, 세금사회보장부담금 10.6% 등 순이었으며, 이외에 교육비, 주거비, 교양오락비 등은 미미하였다. 가계지출은 2010년에 305.3만원으로 2008년보다 6.9% 증가하였고, 가계지출구조는 2008년에 비해 2010년에는 미미하나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 소비지출은 증가한 편이고, 세금사회보장부담금은 감소한 편이었으며, 나머지는 차이가 없었다. 2012년의 가계지출은 349.0만원으로 2010년보다 14.3% 증가하였고, 2010년보다 미미하나 가구가사용품비·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세금사회보장부담금, 기타 소비지출 등은 증가하였으며,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는 감소하였고, 교통통신비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전반적으로 가구가족변화로 인한 가계지출은 증가한 반면, 소비구조는 큰 변화는 없으나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및 교육비 등 기본의식주 관련 지출은 다소 줄어드는 대신,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및 교통통신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가족의 소비패턴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4-101〉 가구주의 가계지출 분포 변화

(단위: 만원, %, 명)

구분	2008		2010		2012	
	평균지출	비율	평균지출	비율	평균지출	비율
식료품비	59.2	20.7	66.8	21.9	73	20.9
주거비	9.7	3.4	10.7	3.5	11	3.2
광열수도비	11.9	4.2	12.3	4.0	13	3.7
가구가사용품비·피복신발비	15.6	5.4	16.5	5.4	20	5.7
보건의료비	12.4	4.4	13.0	4.3	16	4.6
교육비	23.9	8.4	24.4	8.0	26	7.5
교양오락비	9.1	3.2	9.6	3.1	12	3.4
교통통신비	39.1	13.7	43.3	14.2	50	14.3
세금·사회보장부담금	30.2	10.6	27.8	9.1	33	9.5
기타 소비지출	74.5	26.1	80.9	26.5	95	27.2
총 가계지출	285.6	100.0	305.3	100.0	349	100.0

주: 기타소비 지출에는 기타, 송금보조, 자가소비액(농촉산·어업), 이자지출 등 포함.

자료: 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재구성
2)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재구성
3)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재구성

2. 재생산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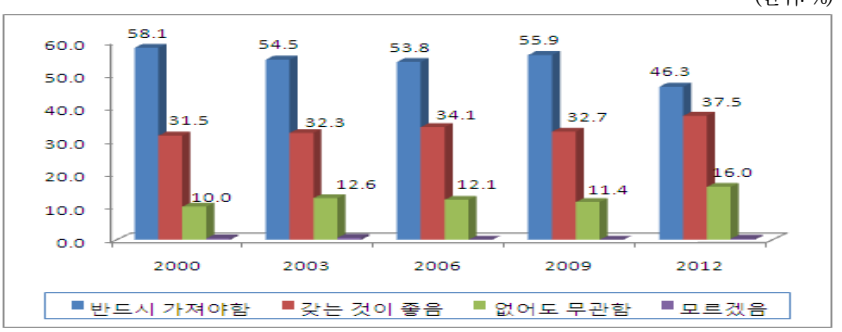
가족의 재생산 기능은 자녀가치관 및 출산행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고용과 소득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과 양육 인프라 미흡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은 가족의 재생산 기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연도별로 자녀필요도를 보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비율은 2000년 58.1%로 과반수를 상회하다가 2009년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

고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6.3%로 12년 간 11.8%pt 줄어들었다. 반대로 없어도 무관하다는 비율은 2000년 10.0%에서 2006년과 2009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6.0%로 동 기간에 6.0%pt 늘어났다. 이는 자녀필요도가 여러 사회·경제적요인 등으로 인해 상당히 희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17] 연도별 자녀필요도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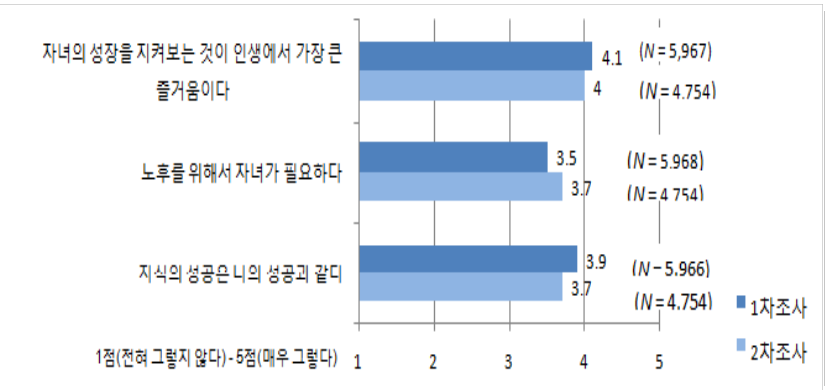
자료: 1)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필요도는 자녀의 의미 및 가치와도 관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5년 1차 조사와 2010년 2차 조사에서 사용한 동일한 문항만을 비교해 보았다. 2005년에는 '자녀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가 4.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식의 송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가 3.9점으로 높았으며, 이어서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 3.5점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도 2005년과 동일하게 자녀성장에 대한 인식이 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노후 및 자녀성공에 대한 인식은 모두 3.7점으로 동일하였다.

전반적으로 5년간에 자녀관에 있어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높아진 반면,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는 인식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8] 자녀관의 변화

(단위: 점)



주: 1) 1차조사는 원자료에서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므로 1차조사 보고서와 총 사례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
2) 2차조사에서는 '모름/무응답'이 없음.
자료: 1) 여성가족부(2005), 제1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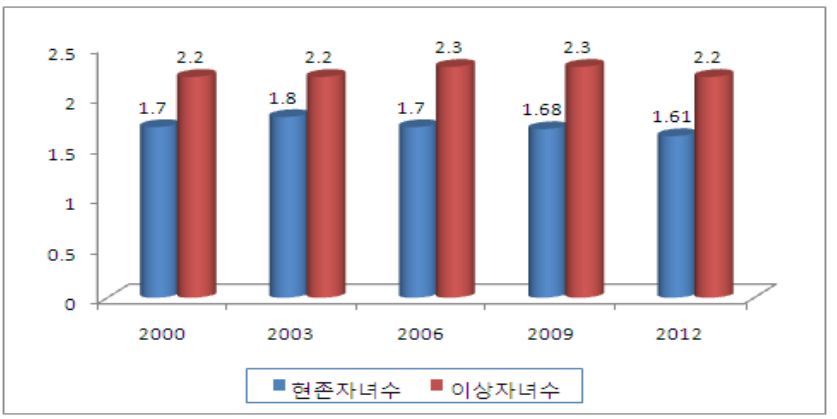
이러한 자녀필요도 및 자녀가치는 현존자녀수 및 이상적인 자녀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현존자녀수는 2000년 1.7명에서 2003년과 2006년 1.8명과 1.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09년 이후 감소하여 2012년 1.6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이상 자녀수는 2000년 2.2명에서 2003년까지 동일 수준을 보이다가 2006년과 2009년에는 2.3명으로 다소 높아지다가 2012년에 2.2명으로 줄어들었다.

현존자녀수와 이상 자녀수의 차이는 2000년 0.5명에서 2003년 0.4명으로 줄어들다 2006년에 0.6명으로 차이가 다소 벌어져 2012년까지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이상 자녀수에 비해 현존 자녀수가

적은 것은 자녀양육부담을 비롯해 양육 환경미흡, 일가정 양립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4-19〕 현존자녀수와 이상 자녀관 변화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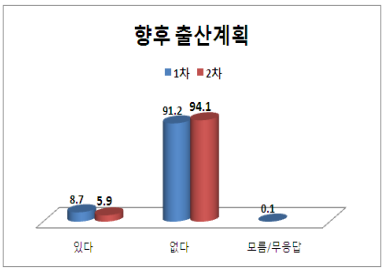


자료: 〔그림 4-16〕과 동일

이와 같은 경향은 실제로 자녀유무별 향후 출산계획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유자녀 가족의 향후 추가 출산계획은 2005년에 8.7%로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5.9%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유자녀 가족의 향후 출산 희망자녀수를 비교 해 본 결과, 1명을 출산하겠다는 비율은 2005년 72.2%에서 2010년 88.4%로 5년간 16.2%pt 높아진 반면, 2명 또는 3명을 출산하겠다는 비율은 2005년 25.7%에서 2010년 11.5%로 동 기간에 14.2%pt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 저출산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으며 점차 규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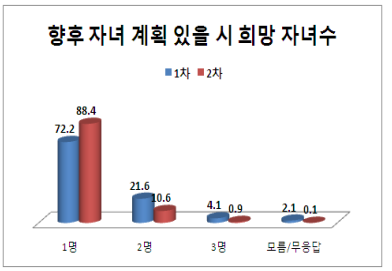
〔그림 4-20〕 향후 출산계획

(단위: %)



〔그림 4-21〕 향후 자녀 계획 있을 시 희망자녀수

(단위: %)



주: 1) 1차는 여성 가구원만의 응답이며, 2차는 모든 가구원의 응답임.
2) 향후 출산 계획은 2차 조사의 경우 1차 조사와의 비교를 위하여 현재 자녀가 있는 3,241명의 응답만을 분석하였음.
3) 희망자녀수는 2차 조사의 경우 1차 조사와의 비교를 위하여 현재 자녀가 있으면서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는 193명의 응답만을 분석하였음. 1차는 여성 가구원만의 응답이며, 2차는 모든 가구원의 응답임.
자료: 1) 여성가족부(2005), 제1차 가족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또한, 출산지원 여건이 마련될 시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2005년에는 응답자의 12.4%가 출산의향을 밝힌 반면, 2010년에는 2.2%에 불과하였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단지 현재의 출산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 외에 출산을 저해하는 다른 개인적·문화적·사회적 요인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102〉 사회적 여건 마련시 출산의향 변화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생각해 본적 없다	모름/무응답
2005	12.4	56.3	31.1	0.2
2010	2.2	647	33.1	-

주: 1차는 여성가구원만의 응답이며, 2차는 모든 가구원의 응답임.
자료: 1) 여성가족부(2005), 제1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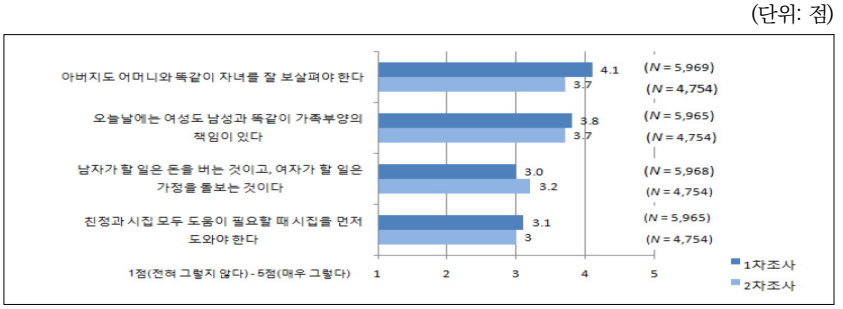
3. 돌봄 및 부양기능

최근 소가족화·핵가족화 등 가족규모 축소 및 가족구조 변화와 세대간 부양의식 약화로 가족돌봄 및 부양 기능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부양가치관과 성역할 분담의 실태, 가족돌봄 실태 및 가족생활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역할 및 가족부양가치관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조사결과,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4.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3.8점으로 높았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와 '남자는 돈을 버는 것, 여자는 가정 돌보는 것'은 3.0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2010년에는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3.7점으로 다소 낮았고, '남자는 돈을 버는 것, 여자는 가정 돌보는 것'은 3.2점으로 다소 높았으며,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와 '도움이 필요할 때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22] 가족부양 및 성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2005년, 2010년)

(단위: 점)



자료: 1) 여성가족부(2005), 1차 가족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2010), 2차 가족실태조사.

이와 같은 경향은 가족부양가치관에 대한 전화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자녀 돌봄에 대해 93.3%가 찬성하였고(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 남성의 가족 부양책임에 대해 89.7%가 찬성하였다(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돌봄, 남성은 부양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표 4-103〉 가족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점)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수)
어머니는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47.5	45.8	5.5	1.0	0.2	100.0 (1,000)
남성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44.6	45.1	9.1	1.0	0.2	100.0 (1,000)
장남이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	5.0	19.8	51.8	22.5	0.9	100.0 (1,000)
결혼한 여자는 친정부모보다 시부모를 우선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5.4	27.7	49.6	16.3	1.0	100.0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자녀 돌봄 유형 즉 밥 먹는 것 도와주기, 옷 입는 것 도와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병원 데려다 주기, 숙제·공부 돌봐주기, 함께 놀아주기, 어린이집·놀이방·유치원·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기, 목욕시키기, 교육시설 알아보기, 학교 준비물 챙기기, 학교·보육시설 등 행사참여·방문·봉사활동 등을 중심으로 성별 분담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04〉 자녀돌봄 분담방식

(단위: %, 명)

자녀돌봄유형	구분	주로 남편	대체로 남편	남편 부인 동일	대체로 부인	주로 부인	기타	계(수)
밥 먹는 것 도와주기	2005	0.3	1.4	13.2	26.3	56.8	1.9	100.0(1,440)
	2010	0.8	0.4	9.7	47.7	38.9	2.5	100.0(1,162)
옷 입는 것 도와주기	2005	-	1.5	11.0	28.7	55.3	2.4	100.0(1,471)
	2010	0.1	0.3	7.4	49.1	40.0	3.0	100.0(1,162)
아플 때 돌봐주기병원 데려가기	2005	0.6	3.8	20.0	24.6	49.7	1.3	100.0(1,598)
	2010	0.1	2.6	14.7	45.5	36.0	1.1	100.0(1,168)
숙제공부 돌봐주기	2005	0.2	3.0	12.6	27.3	55.6	1.3	100.0(1,399)
	2010	0.1	0.8	10.3	47.9	35.8	5.0	100.0(1,162)
함께 놀아주기	2005	0.4	7.7	33.7	24.2	33.0	1.5	100.0(1,565)
	2010	0.1	5.0	30.7	34.2	28.5	1.5	100.0(1,163)
어린이집놀이방유치원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기	2005	1.1	3.8	11.9	24.1	54.9	4.3	100.0(1,214)
	2010	0.1	1.6	11.4	43.0	37.3	6.5	100.0(1,162)
목욕시키기	2005	2.0	8.6	16.7	24.6	45.9	2.2	100.0(1,541)
	2010	0.2	5.1	11.8	44.0	36.0	2.9	100.0(1,162)
교육시설 알아보기	2005	0.1	0.9	13.1	26.4	58.4	1.0	100.0(1,422)
	2010	0.1	0.7	11.1	43.6	39.7	4.7	100.0(1,163)
학교 준비물 챙기기	2005	0.3	1.3	7.6	24.5	64.3	2.0	100.0(1,245)
	2010	0.2	0.8	6.1	46.3	39.2	7.5	100.0(1,168)
학교보육시설 등 행사참여방문봉사활동	2005	0.3	1.3	7.6	24.5	64.3	2.0	100.0(1,245)
	2010	0.2	0.3	7.3	44.7	41.1	6.3	100.0(1,162)

자료: 1) 여성가족부(2005), 제1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전반적으로 10가지유형의 자녀 돌봄은 2005년은 대체로 부인과 주로 부인을 합친 부인이 분담한 비율이 57.2~88.8%에서 2010년에는 62.7~89.1%로 다소 증가한데 비해, 남편과 부인의 공동분담은 2005년 7.6~33.7%에서 2010년 6.1~30.7%로 감소하였고, 주로 남편과 대체로

남편을 합친 남편이 분담한 비율은 2005년 7.6~33.7%에서 2010년 6.1~30.7%로 다소 감소하였다. 따라서 자녀 돌봄 분담은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부인의 분담비율이 높아져 전통적인 성역할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돌봄 노동의 배우자와의 공평성에 대한 인지 변화를 보면, 2005년에는 아내에게 불공평한 편이라는 응답이 51.2%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공평한 편은 44.3%로 과반수에 근접하였으며, 남편에게 불공편한 편은 4.2%로 미미하였다. 이에 비해 2010년에는 아내에게 불공편한 편이 63.9%로 2005년보다 12.7%pt 증가한데 비해, 공편한 편이라는 응답은 32.8%로 11.5%pt 감소하였다. 이는 실제 가족 돌봄의 양성불평등적인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표 4-105〉 배우자와 돌봄 노동 분담의 공평성 인지 변화

(단위: %, 명)

구분	공평한 편	남편에게 불공평한 편	아내에게 불공편한 편	모름/무응답	계(수)
2005	44.3	4.2	51.2	0.2	100.0(1,606)
2010	32.8	3.3	63.9	-	100.0(2,741)

자료: 1) 여성가족부(2005), 제1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한편, 우리나라 돌봄 실태 변화를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가족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대상은 2005년과 2010년 모두 남성노인의 경우는 배우자(부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노인의 경우는 며느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 노인의 돌봄이 주로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2005년에는 친인척과 간병인의 비율이 12.3%를 차지했으나, 2010년에는 2.0%

로 낮아지면서 아들과 손자녀의 간병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가족 내 돌봄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06〉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주로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 변화

(단위: %, 명)

구분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2005		2010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고령자의 배우자	63.3	20.2	65.8	29.8
고령자의 며느리	14.3	25.8	5.5	35.1
고령자의 아들	6.1	9	2.7	10.5
고령자의 손자녀	-	12.4	10.9	11.5
고령자의 친인척	-	5.6	-	-
기타 친인척	-	2.2	-	-
유료간호수발자(간병인)	2	3.4	-	2.0
무료간호수발자(간병인)	-	1.1	-	-
기타	14.3	20.2	14.3	11.3
계 (수)	100.0 (49)	100.0 (89)	100.0 (46)	100.0 (51)

자료: 1) 여성가족부(2005), 제1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노인 돌봄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에서 가장 호소된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과 2010년 모두 약 40%의 비율을 보여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부부 및 형제·자매 갈등의 증가, 직장생활의 어려움, 정신적 스트레스, 개인시간 감소의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는 2005년에 비해 약 10% 높게 나타나 가장 큰 변화를 보였는데, 노인 돌봄으로 인한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 증가가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표 4-107〉 65세 이상 노인 돌봄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단위: %, 명)

구분	2005	2010
아무런 변화가 없다	10.6	7.3
부부 갈등의 증가	3	3.9
형제 자매 갈등 증가	2.3	2.7
경제적 어려움	39.4	39.6
직장생활의 어려움	2.3	3.7
신체적인 고단함	21.2	17.8
정신적 스트레스	12.9	22.3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강화	1.5	-
개인 시간 감소	-	2.6
기타	6.9	-

자료: 1) 여성가족부(2005), 제1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돌봄이 필요한 65세 미만 기타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2005년과 2010년 모두 본인 또는 본인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비율은 2005년 78.1%에서 2010년에는 90.3%로 12.2%pt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돌봄에서 가족 내 돌봄 비율이 높아진 것과 일맥상통하며, 우리사회의 가족 내 돌봄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08〉 돌봄이 필요한 65세 미만 기타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사람 변화

(단위: %)

구분	2005	2010
본인	57.8	75.9
본인의 배우자	20.3	14.4
본인의 자녀	4.7	6.9
본인의 어머니	6.3	2.5
본인의 아버지	1.6	0
본인 조부모	3.1	0
기타	6.3	0.3

주: 돌봄이 필요한 기타 가족원에는 주로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포함됨.
자료: 1) 여성가족부(2005), 제1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돌봄이 필요한 65세 미만 기타 가족원의 돌봄으로 인한 생활변화는 노인 돌봄으로 인한 가족생활변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응답률(2005년 58.7%, 2010년 56.5%)을 보여 돌봄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05년보다 2010년에는 신체적 고단함이 12.4%pt, 정신적 스트레스 4.4%pt, 가족 간의 갈등은 6.3%pt 증가하여 돌봄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 및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4-109〉 돌봄이 필요한 65세 미만 기타 가족원으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단위: %)

구분	2005	2010
아무런 변화가 없다	9.5	0
가족 간의 갈등 증가	1.6	7.9
경제적 어려움	58.7	56.5
직장생활의 어려움	7.9	0
신체적인 고단함	9.5	21.9
정신적 스트레스	7.9	12.3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강화	3.2	0
기타	1.7	1.4

자료: 1) 여성가족부(2005), 제1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4. 가족의 변화 전·후 가족기능 변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 가족의 기능변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족 변화로 인해 가장 변화의 폭이 작은 것은 자녀 출산에 대한 변화(69.6%)였고, 다른 항목들은 40%~50%의 긍정적·부정적 변화 폭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가족의 변화로 인해 좋아지거나 변화가 없음을 느끼는 가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변화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29.1%), 가족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23.4%), 가족원이 여가와

휴식을 취하는 것(17.7%),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13.3%), 가족·친척·이웃이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것(13.3%)순으로 가족의 기능이 나빠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가족을 제외하면, 다른 항목들이 좋아진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과 가족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가족의 경제적 부양과 정서적 지지는 가족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10〉 가족변화 전·후 가족의 기능변화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좋아진 편	변화 없음	나빠진 편	계(수)	평균
자녀를 출산 하는 것	8.7	86.6	4.7	100.0 (127)	3.02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 하는 것	12.3	52.3	35.4	100.0 (130)	2.65
가족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	23.8	47.7	28.5	100.0 (130)	2.93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	17.2	66.4	16.4	100.0 (128)	2.99
가족원이 여가와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	26.3	52.0	21.7	100.0 (129)	3.01
가족·친척·이웃이 힘들 때 힘이 되어 주는 것	31.2	52.3	16.4	100.0 (128)	3.14

주: 1) 본 조사는 1=훨씬좋아짐. 2=좋아진편임, 3= 변화없음, 4=나빠진편임, 5=훨씬 나빠짐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1,2번을 좋아진편으로 3,4번을 나빠진 편으로 나타냄.
2) 본 조사에서의 가족변화란 이혼, 별거, 사별, 재혼, 분가 등을 말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제4절 정책적 함의

최근 소가족화·핵가족화, 맞벌이 가족증가, 가족분거 및 이혼·사별의 증가로 가족결속력이 약화되고 이러한 가족변화 현상은 가족형성부터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에 이르기까지 가족생활의 여러 영역에 걸쳐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인 결혼가치는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변하여 전통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누구나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개인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필요성에 대한 의식 약화와 함께 교육, 군 입대 및 취업 등 혼전역할의 다양화 등에 의해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초혼연령의 상승은 가족주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배우자 선택방법도 중매 혼에서 결혼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되는 자율적인 혼인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부모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으며, 배우자 결정에 있어서도 본인의사에 의한 결정이 지배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배우자 선택기준도 개인의 성격, 가치관 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가족형성에 있어 당사자의 자율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이혼 및 재혼 의식도 점차 달라져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며, 이혼이나 사별 후 자녀를 키우면서 일생을 홀로 보내기보다는 재혼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뚜렷하여 향후 가족형성과정의 변화는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혼 및 재혼을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가족변동의 객관적 현상으

로 보아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전형적이지 않은 이러한 가족형태들의 증가를 문제가족의 증가라기보다는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의미하므로 정책개입도 다양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형성의 지연, 가족가치의 약화는 가족주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변화 측면에서 가족주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가족주기 형성기의 출발점인 결혼은 점차 늦추어지는 추세이나, 소자녀에 대한 선호로 확대기도 단축되고 있으며, 출산간격 또한 짧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확대완료기는 교육기간 연장 및 혼전 취업기회의 확대, 결혼관의 변화 등에 의한 자녀 결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점차 길어지고 있다. 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자녀의 결혼시작시기부터 모든 자녀가 결혼하여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는 축소기는 점차 짧아지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형성기부터 자녀의 양육기를 거쳐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시기까지 가족주기의 전기단계는 단축되는 반면, 자녀의 결혼이 완료되어 부부만이 남는 시기와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자 남은 여생을 보내는 가족주기의 후기단계는 점차 연장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가족주기 단계별로 복지대책 또한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가족변화와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 영역은 가족관계로 이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부부관계는 가부장적인 구조가 지배적으로 이러한 가부장적 가치관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갈등적인 요인들을 제공한다. 날로 증가하는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주가계부양자로서 남편, 가사담당자로서 부인'의 부부간 성역할분담이 현실적으로 많이 변화하였음에도 아직 전통적 가치관에 지배를 받고, 그 결과 가족이 사회변화에 신축적으로 대

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한편, 가족기능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위로서 가족행동을 의미하며 그 행동의 결과가 사회의 유지, 존속이나 가족성원의 욕구충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소가족화·핵가족화, 가족해체 등으로 가족 돌봄 및 부양기능을 비롯하여 재생산 및 사회보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가족대신에 사회가 가족 돌봄 및 부양기능 등을 어느 정도 분담하는 사회적 책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5장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동과 대응사례

제1절 선진국의 가구·가족변동 원인
제2절 선진국의 가구·가족변동 실태
제3절 선진국의 가족정책 실태
제4절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동의 특성 및 전망

5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동과 대응사례

제1절 선진국의 가구·가족변동 원인

1. 선진국의 가족 변화

선진국의 가구구조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추세로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시점이나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OECD에서 수집하는 Family Database(OECD FD)[5]를 활용하였다. OECD FD는 하위 지표들을 계속 수정 혹은 개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가 참고한 통계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OECD 웹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이다.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대략 1960년대를 기점으로 가족에 대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1950년대까지는 전통적인 이성간 결혼, 법률혼 내 출산과 양육이 규범화되었고 이러한 규범이 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있으나, 1960년대 이후 이러한 규범에 맞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Hansson, 2011: 13). 인구학적 변화는 경제발전, 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 취업 증가, 성역할태도의 변화에 기인하며, 이는 일차적으로 출산율과 혼인율의 하락, 이혼율, 재혼율, 동거율의 증가를 동반하였으며, 전통적인 가족규

5) OECD FD는 회원 국가 및 EU 국가들 간의 가족 실태와 가족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동일한 통계 지표 및 통계치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가족 실태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통계치는 OECD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에 통계 자료를 요청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임.

범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친밀성과 관계성에 대한 유연한 태도, 동성 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수용적 태도, 혼외 출산 등 새로운 가족 행동과 현상으로 발전되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동거는 청년층에서 결혼으로 가는 전이과정에서 선택되는 가족행동으로 여겨졌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결혼에 대한 대안적 선택으로 확대되었다(Köppen, 2011).

학자들은 이러한 가족변화, 특히 출산의 지연과 출산율의 하락을 제2차 인구 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이라고 명명하고 그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 및 취업율 증가, 그에 따른 경제적 독립과 가족 내에서의 협상력 확대 등 거시적, 미시적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거나, 피임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자아실현과 성장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대 등 문화적 변화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과 문화와 결합하여 국가마다 유사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상이한 가족변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선진국들을 하나의 주도적인 가족(구)구조와 가족 규범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구)구조와 가족 규범이 공존하는 사회로 변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후기근대 사회를 특징짓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탈 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 of family) 과정은 이러한 가족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Beck & Beck-Gernsheim, 2002). 개인화란 생애과정의 중요한 결정들을 개인이 선택적으로 행사하며 자신의 삶의 구조와 과정을 자율적으로 구성해가는 추세를 의미한다. 가족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규범과 관습에서 벗어나 가족형성 및 해체의 방법과 시기, 친밀성의 대상과 내용, 라이프스타일 등을 선택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가족 변화는 공식적인 영역에서도 반영되어, 1974년 UN의 인구주택센서스의 준거집단은 '결혼'이었으나 1998년에는 '같이 사는 파트너(cohabiting partners)'로 수정되었다(Hansson, 2011: 17).

또한, 가족과 관련된 복잡한 가치 판단과 변화 양상에서 비롯되는 혼돈을 줄이기 위해 가족과 가구(household)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남유럽국가들과 영국에서는 사회학적·법적 가치와 관련된 언급에서는 가족이라는 용어를,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언급에서는 가구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가족과 가구를 구분하지 않거나 가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European Commission, 2002).

가구·가족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가족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정책이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가족정책은 1930년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정책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1960~70년대 가족의 변화에 맞춰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Baran, Dihnelt, Jones, 2013; Wells & Bergnehr, 2013). 가구·가족의 변동과 가족정책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가구·가족의 변동이 특정한 가족정책이 도입되는 배경 원인이 되는 동시에 이러한 정책은 가구·가족의 변화를 추동하거나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백과 백-게른스하임(Beck & Beck-Gernsheim, 2002)이 '제도적 개인주의(xxi)'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듯이, 이차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제도들은 약화되고 개인은 새로운 제도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과 규칙에 적응하게 된다. 즉, 제도가 개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조정되고 개인은 제도를 내재화함으로써 제도적 의존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서구 유럽의 가족정책은 새로운 가족 유형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한 토대가 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가족정책을 살펴

보는 것은 가구·가족의 변동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식이 된다.

본 장에서는 주로 OECD Family Database 통계자료 및 Handbook of Family Policies across the Globe (2013) 자료를 활용하여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동 및 가족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가족의 인구학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을 의미할 때는 주로 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가족의 기능적 측면, 관계적 측면, 그리고 규범적 측면을 의미할 때는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을 때에는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국가별 특징

가족 변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추세는 동일하지만 국가마다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각 국가가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 전통적 문화와 가치관, 이민자를 포함한 인구구성, 가족정책 등의 사회정책과 관련된다. 여러 국가들 중에서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유형화 기준에 따라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미국, 보수적 조합주의 국가인 독일, 사민주의 국가인 노르웨이,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을 선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가. 미국

먼저 미국 가족의 특징을 유럽과 비교한 셜린(Cherlin, 2010)에 따르면, 미국여성들은 유럽여성들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미국여성들은 유럽여성들에 비해 더 빠른 나이에 결혼이나 동거를 시작한다. 둘째, 미국의 혼인율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 비해 높다. 미국여성

의 84%는 40세가 되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결혼을 한다. 셋째, 미국의 혼인이나 동거는 유럽국가에 비해 훨씬 더 불안정하고 빨리 해소된다. 넷째, 미국의 아동들은 유럽의 아동에 비해 부모의 이혼이나 동거해체를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전체 아동의 40%는 15세가 되기 전에 부모의 이혼이나 동거해체를 경험한다. 다섯째, 미국인들은 관계해체 후 재혼이나 동거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여섯째, 미국여성들은 서유럽이나 북유럽 여성들에 비해 더 빠른 나이에 부모가 되고, 10대와 20대에 한부모로 살 확률이 더 높다.

이러한 특징들은 미국인들이 결혼을 중시하는 문화와 표현적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일견 모순된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Cherlin, 2010: 9). 다른 서구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전통적인 결혼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인들은 개인의 성장과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표현적 개인주의 가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결혼을 해체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혼인율과 이혼율이 동시에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혼인과 동거의 안정성 즉 지속성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나. 독일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유형화에 따르면, 독일은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유형에 속한다.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은 계층화를 인정한다는 것과 전통적 가족제도의 존속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1950년대 이후 서독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거나 지원

하는 가족정책 보다는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가족정책을 유지해왔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모성 역할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동독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였으며 따라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였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 이러한 정책과 관행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0~3세 아동의 전일제 보육 비율을 보면 서독지역에서는 6.5%, 동독지역에서는 34.8%로 차이가 크다(Krack-Roberg, Krieg, & Weinman, 2011, Trzcinski & Camp, 2013에서 재인용).

21세기 들어 독일은 심각한 인구학적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심각한 변화는 출산율의 저하이다. 출산율의 저하는 전반적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고학력 여성 인구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8년 현재 서독지역의 40세 이상 여성 중 저학력 집단 11%, 중간학력 집단 16%, 그리고 고학력 집단의 26%가 무자녀이다(Pötzsch, 2011, Trzcinski & Camp, 2013에서 재인용). 이렇게 여성의 학력과 출산율이 반비례하는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조응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고령인구의 증가와 높은 수준의 실업률 역시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지목되었다. 생산인구의 감소는 경기 및 경제지표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독일 정부는 생산인구가 노동시장에 좀 더 오래, 안정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였다. 새로운 사회정책의 핵심은 실업수당 및 공공부조의 수준을 낮춰서 실업인구의 장기적 복지의존성을 낮추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정책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것이었다. 2007년 부모수당 및 부모휴가에 대한 법(The Federal Law of Parental Allowance and Parental Leave)이 제정되어 1986년 이래 지속되어

온 자녀양육수당법(The Federal Law of Child-Raising Allowance)을 대체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전통적인 남성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남성의 양육 참여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고학력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저학력, 저소득 가구나 한부모가구 등 취약 가족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Trzcinski & Camp, 2013).

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인당 GDP가 USD 53,300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로(US Department of State, 2011). 세계 7위의 석유와 가스 수출국이면서, 전체 국가 수입의 26%가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충당되고, 약 250만 명이 관련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Baran et al., 2013). 이러한 경제 수준은 노르웨이가 광범위한 사회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1935~1981년까지 주로 노동당(The Labor Party)이 집권하는 정부를 구성해왔으나 1981~2005년에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집권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다시 'Red-Green'연합이 집권하여 진보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81년과 1986년 여성 수상이 선출되면서 강력한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노르웨이는 동거가 보편화되면서 법률혼의 지위를 대체하고 있으며, 약 50%의 자녀가 법률혼이 아닌 동거관계에서 출생한다(Baran et al., 2013). 0~17세 아동 인구 중 약 63.6%는 법률혼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14%는 동거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16%는 어머니하고만, 2%는 아버

지하고만, 4.4%는 재혼가족에서 살고 있다(Statistics Norway, 2012, Baran et al., 2013에서 재인용).

1940~1960년대까지 노르웨이는 출산율 증가(베이비붐 현상)와 높은 혼인율, 그리고 낮은 이혼율 등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가족 형태를 유지하였으나, 1970년대부터 가족변화가 가시화되어 나타났다. 1993년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고, 2009년에는 여성과 여성이 결혼한 경우, 인공수정에 의해 한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나머지 일방 여성도 부모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 경우 정자기증자를 등록하여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정보를 고지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과 같이 가족과 관련된 규범과 이념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이며, 다양한 가족 유형이 차별없이 수용되는 제도를 발전시켜온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라. 일본

일본의 경우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47~1949년 출생자들이 혼인적령기가 되었던 1970년대 초반에 조혼인율이 10.5까지 높아졌다가 1990년에는 다시 5.9까지 낮아졌고 2009년에 5.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결혼은 도시화와 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1960년대 중반부터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변화하기 시작하였다(Kumagai, 2010). 이 시기부터 이혼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 잠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2년에 조이혼율이 2.30으로 가장 높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2009년 조이혼율 2.01).

일본 가족의 더 두드러진 변화요인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의 속도이

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합계 출산율이 1947년 4.54, 1963년 2.00, 1989년 1.57, 2008년 1.37을 기록하였다. 1971~1974년에 2차 베이비붐 현상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이다. 출산율 저하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미혼인구의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Sano & Yasumoto, 2013). 2010년 현재 남성 인구의 20%, 여성 인구의 11%가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남성 인구의 30%, 여성 인구의 20%가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된다(Sano & Yasumoto, 2013).

고령화 현상 역시 중요한 가족 인구학적 현상이다. 2012년 현재 일본 남성의 기대수명은 79.4세,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9세이다(Sano & Yasumoto, 2013). 65세 이상 인구들을 볼 때, 일본도 1인가구나 부부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2008년 현재 44.1%의 노인들이 자녀세대와 함께 살고 있어 전통적인 일본가족(stem family)의 영향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Kumagai, 2010).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회정책의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졌다. 특히 남성부양자-여성 돌봄자 모델에 근거한 보수적인 가족 전통이 남아있어 가족정책을 2000년대 이후에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09).

일본의 가족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정책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일본 사회의 관행이나 문화와 조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Sano & Yasumoto, 2013). 예를 들어, 여성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실제 사업장의 조직 문화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결과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정책으로 남아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Sano & Yasumoto, 20 13).

가구·가족의 인구학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통적인 이에(家)제도가 여전히 이념과 관행으로 남아있어 실태와 정책, 그리고 이념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 한국과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선진국의 가구·가족변동 실태

1. 가구형성과 해체

가. 가구형성: 결혼과 동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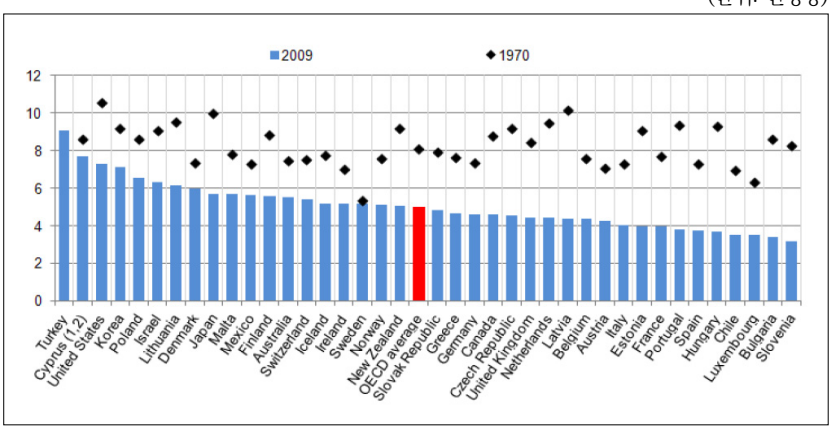
OECD 32개국을 대상으로 한 Family Database 자료에 근거하여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동거 등 가구형성과 해체에 대한 가구·가족변동을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은 1970년과 2009년 약 40년 사이에 혼인율의 변동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혼인율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평균은 1970년 8.0에서 2009년 5.0으로 낮아졌고, 한국은 9.20에서 7.13으로 낮아졌다. 혼인율이 낮아지는 것은 혼인적령인구의 감소, 자발적·비자발적 비혼 인구의 증가, 혼인 대신 동거 등 다른 가족유형을 선택하는 인구의 증가 등과 관련된다.

먼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전체 인구 중 혼인적령인구(약 20~45세)가 감소하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결혼을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인구가 증가하며, 결혼 대신 동거나 사실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혼인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선택들

은 혼인관계가 아닌 대안적 가족유형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가구규모를 축소시키는 현상과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비혼 인구는 1인가구로 생활할 확률이 높고, 동거나 사실혼 역시 법적 혼인관계보다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혼인율의 감소는 가족유형의 다양화와 가구규모의 축소를 동반하게 된다.

〔그림 5-1〕 선진국의 조혼인율의 변화 추이(1970~2009)

(단위: 천명당)



자료: OECD Family Database SF3.1.A. The decline in crude marriage rates between 1970 and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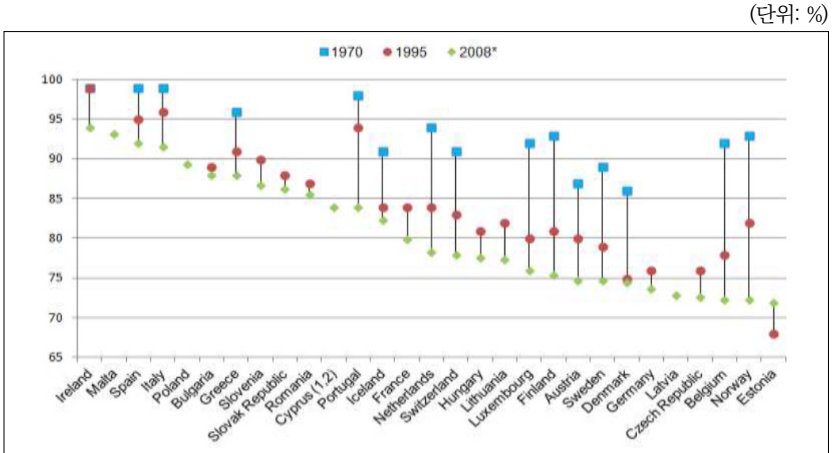
다음 그림은 각 나라의 전체 결혼인구 중 초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과 1995년, 그리고 2008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혼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국가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1970년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체 혼인인구 중 초혼 비율이 85%이상이었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은 95%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1995년에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초혼 비율이 낮아졌고, 특히 북유럽국가의 초혼 비율이 크게 낮아져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는 80% 이하로 낮아졌다.

2008년에는 초혼 비율이 더 낮아졌는데,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낮은 반면, 북유럽국가는 변동 폭이 높았다.

전체 혼인인구 중 초혼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재혼과 삼혼 등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친족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혼율 역시 증가하였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동유럽 국가의 재혼 증가율이 낮은 반면, 북유럽 국가의 재혼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Jokinen & Kuronen, 2011).

〔그림 5-2〕 선진국의 초혼 비율 변화 추이(1970~2008)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SF3.1.B. Proportion of first marri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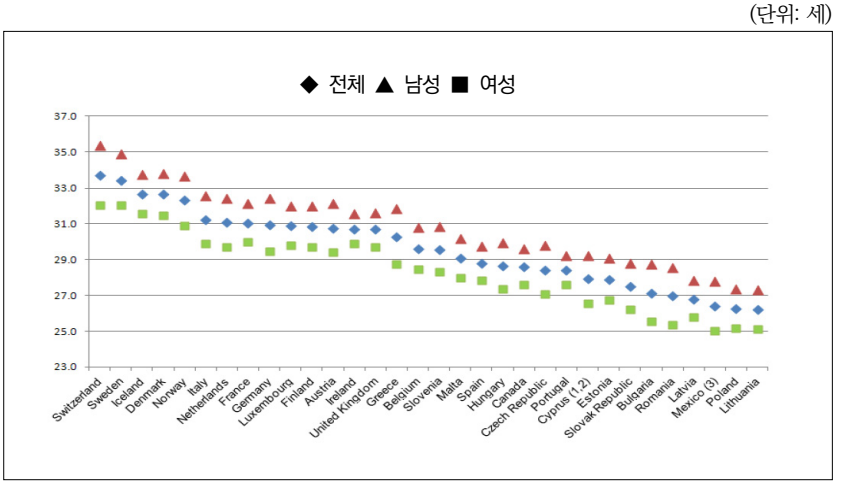
재혼한 가족은 자녀를 기준으로 볼 때, 2명 이상의 어머니(친어머니, 새어머니), 2명 이상의 아버지(친아버지, 새아버지), 8명 이상의 조부모로 형성된 넓은 가족·친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각각의 심리적, 지리적 거리에 따라 유동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부부 양편이 모두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동반하여 재혼한 경우, 복합적 재혼 또는 조각보 가족(patchwork family)이라고 부른다(Nave-Herz, 2004:33, Jokinen & Kuronen, 2011에서 재인용). 유엔에서 실시한 'Gender

and Generation Survey(2005)에 따르면, 유럽 국가 중 재혼가족 비율이 제일 높은 국가는 독일(14%)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4%)로 나타났다(Jokinen & Kuronen, 2011).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20대 초·중반에 원 가족으로부터 독립한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인구의 약 50%는 23세까지, 남성인구의 약 50%는 26세까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다(Hansson, 2011: 21).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빠른 나이에 독립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반면 초혼연령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유럽연합 15개국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7.5세이며, 북유럽국가에서는 30세에 근접한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초혼연령은 1960년에는 24세였으나 2000년에는 30.2세로 높아졌고, 덴마크는 22.8세에서 29.5세로 높아졌으며, 핀란드는 23.8세에서 28세로 높아졌다(Population Statistics, 2006).

[그림 5-3] 선진국의 초혼 연령 변화 추이(2008년 기준)

(단위: 세)



자료: OECD Family Database SF3.1.C. Age at first marriage, year 2008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원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도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 청년층은 20대 초·중반까지는 독립하지만 이는 10년 전에 비해 다소 늦어진 편이다(Hansson, 2011:21).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은 동거와도 관련된다. 동거는 19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유럽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족현상 중의 하나이다(Hansson, 2011: 23). 아래 표를 보면, 20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OECD 평균적으로 혼인한 부부가 49.9%, 동거하는 커플이 6.8%이며, 20~34세 청년층을 기준으로 보면 혼인한 부부가 31.4%, 동거커플이 12.4%로 OECD 평균보다 혼인율이 더 낮고 동거율은 더 높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청년층의 혼인이 늦어지면서 동거가 그 기능을 일부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iernan, 2002).

〈표 5-1〉 배우자 유무 및 유형으로 본 가구구성 비율

(단위: %)

	All ages from 20 years old				ages 20-34[2]				
	Single, living alone	Married	Cohabiting	Other	Single, living alone	Married	Cohabiting	In parental home	Other
Australia[3]	18.5	51.2	8.9	21.4	:	:	:	:	:
Austria	16.5	48.3	6.5	28.7	15.3	32.6	13.7	32.4	6.0
Belgium	19.5	48.6	6.4	25.6	18.8	22.0	5.2	54.1	
Bulgaria	14.0	42.4	4.2	39.4	6.4	18.9	2.8	71.9	
Canada	10.7	39.3	8.9	41.1	:	:	:	:	:
Cyprus[4,5]	6.3	61.7	0.9	41.9	4.1	47.6	2.1	33.8	12.4
Czech Republic	14.8	51.6	2.9	30.7	11.9	39.0	4.2	40.1	4.9
Denmark	24.1	40.8	11.5	23.5	33.7	25.4	28.6	7.6	4.8
Estonia	18.2	43.9	11.8	26.1	14.1	31.8	23.5	27.4	3.2
Finland	19.6	43.6	11.8	25.0	20.8	27.0	28.3	17.7	6.2
France	22.8	44.6	14.4	18.2	19.4	21.3	21.8	37.5	
Germany	16.4	47.5	5.3	30.7	20.3	33.7	13.6	23.9	8.5
Greece	8.0	56.4	1.7	33.9	6.0	36.4	3.1	45.5	8.9
Hungary	12.0	50.9	6.3	30.7	6.6	39.4	11.5	36.0	6.5
Ireland	10.6	53.4	5.9	30.0	5.5	27.6	13.4	45.2	8.3
Italy	10.8	53.9	2.0	33.2	5.8	30.5	3.0	51.1	9.5
Japan	15.4[6]	47.5	2.0[7]	:	:	34.8	:	:	:
Latvia	16.5	58.0	5.5	20.0	7.5	35.0	6.3	51.2	0.0
Lithuania	14.2	55.0	4.1	26.6	15.4	69.2	8.3	0.0	7.1
Luxembourg	19.1	58.2	14.0	8.7	18.0	23.3	11.4	47.2	
Malta	7.0	40.1	2.1	50.8	3.1	31.4	0.8	64.7	
Netherlands	15.8	48.1	9.3	26.9	19.5	29.9	21.9	19.9	8.8
New Zealand[3]	17.6	48.6	9.3[8]	24.5	:	:	:	:	:
Norway	19.3	44.1	10.7	25.8	21.0	25.0	22.7	26.6	4.7
Poland	11.2	56.3	1.3	31.1	8.0	40.7	1.9	43.5	6.0
Portugal	7.0	56.5	4.1	32.4	4.1	40.5	5.9	39.0	10.6
Romania	7.6	56.1	4.3	32.0	3.1	48.8	7.4	31.4	9.3
Slovenia	9.6	52.7	5.4	32.3	3.8	27.5	8.8	57.0	2.8
Slovak Republic	14.6	54.5	1.4	29.4	10.8	40.5	1.7	42.9	4.1
Spain	8.6	53.6	3.3	34.5	5.4	27.3	5.5	52.1	9.7
Switzerland	17.5	49.3	5.9	27.4	20.7	35.2	12.3	21.3	10.5
Turkey	3.9	45.7	0.2	50.3	2.4	37.8	0.0	59.7	
United Kingdom	14.9	47.3	8.7	29.0	11.4	32.2	22.2	24.7	9.6
United States	13.4	52.9	5.5	28.2	:	:	:	:	:
OECD-25	15.2	49.9	6.8	27.9	14.3	31.4	12.4	36.4	7.7

주: 가구유형 비율은 전체 인구 중 배우자 유무 및 유형별 분포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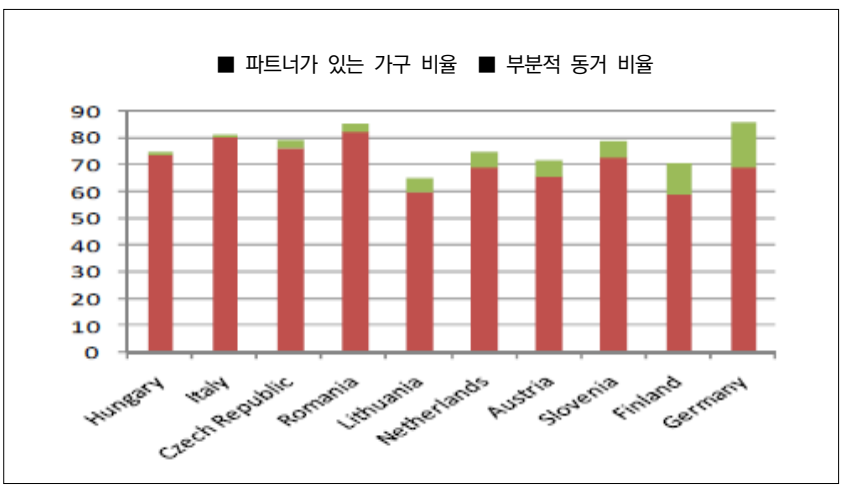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SF3.3.A. Partnership and prevalence of cohabitation, recent years

그런데 동거율이 낮은 국가들이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혼인율이 높기 때문에 동거율이 낮은 국가(그리스, 포르투갈)와 혼인율과 동거율이 모두 낮은 국가(스페인, 이탈리아)로 구분된다. 이러한 통계치를 볼 때 동거가 결혼의 대안적 파트너십이 되는지 여부는 문화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OECD FD에서는 '부분적 동거(living apart together, LAT)'를 하나의 거주유형으로 파악하여 조사한다. 부분적 동거란 각각 자기 자신의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동거커플로 인지하는 상태의 동거를 의미한다. 즉 동거커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생활공간을 공유하지는 않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 관계를 뜻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독일과 핀란드 등과 같은 국가의 경우 이러한 커플을 포함시킬 경우 동거 비율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5-4〕 부분적 동거' 비율 변화 추이(2001~200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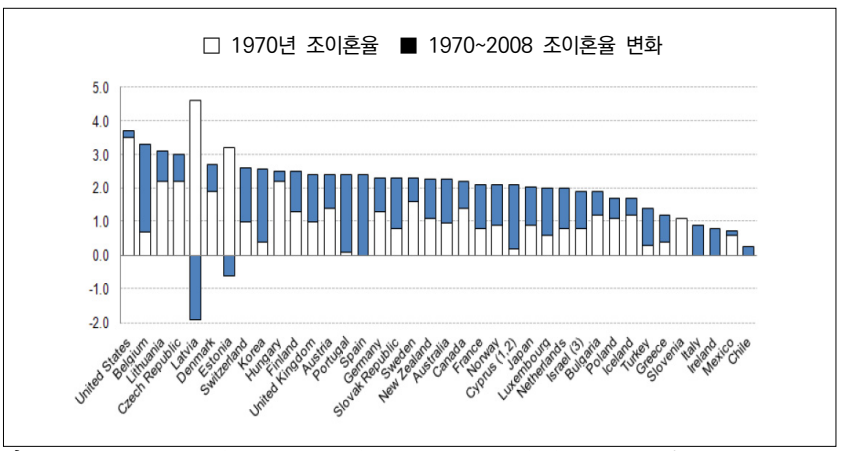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SF3.3.A. Partners "living apart together", year 2001~2003

나. 가구해체: 이혼과 한부모가구

조이혼율은 1970~2008년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아졌는데, 혼인율이 낮아지는 반면,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조이혼율은 1965년 0.8에서 2005년 2.0으로 높아졌다(Jokinen & Kuronen, 2011). 특히 이혼율이 낮았던 보수적인 국가들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벨기에 등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반면 미국과 헝가리처럼 이혼율이 높았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1970년에 높은 이혼율을 보이다가 2008년에는 오히려 이혼율이 하락하였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이혼율을 보이는 국가는 칠레, 멕시코,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등 로마가톨릭이나 그리스정교 등 종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국가들이다.

〔그림 5-5〕 선진국의 조이혼율 변화 추이(1970~2008)

(단위: 천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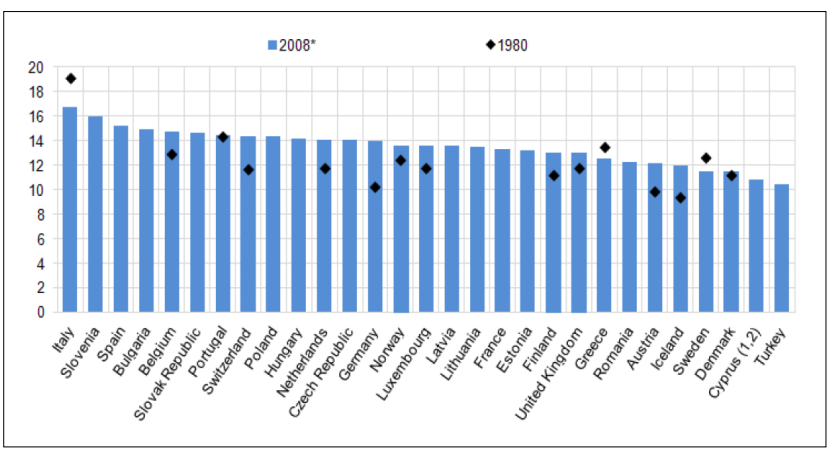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SF3.1.E. The increase in crude divorce rates from 1970 to 2008

이혼한 가정의 평균 결혼지속년수를 살펴보면 대체로 12년~17년 사이가 가장 많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평균 결혼지속년수는 긴 편이고, 스웨덴과 덴마크, 아이슬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의 결혼지속년수는 더 짧아서 결혼이 더 빨리 해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1980년과 2008년의 통계치가 모두 있는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1980년에 비해 2008년의 평균 결혼지속년수가 더 길어 결혼의 지속성이 더 높아진 추세를 보였으나, 이탈리아나 그리스, 스웨덴은 그 반대의 경우로 나타났다.

[그림 5-6] 이혼 전 결혼지속 년수 변화(1980~2008)

(단위: 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SF3.1.F. Mean duration of marriage do divorce, 1980~2008

이혼가정의 평균 결혼지속년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이혼가정은 미성년자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표를 보면, 2007년 기준 이혼가정의 약 37.1~66.4%는 미성년자녀를 포함한 이혼이다.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이혼가정의 37.1%만이 미성년자녀를 포함하는

반면, 비율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는 이혼가정의 66.4%가 미성년자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혼율이 높은 북유럽국가들은 대체로 60% 내외의 이혼가정이 미성년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혼가정의 60.7%가 미성년자녀를 포함하고 있다.

〈표 5-2〉 자녀유무 및 자녀수에 따른 이혼 분포(2007 또는 가장 최근 년도 자료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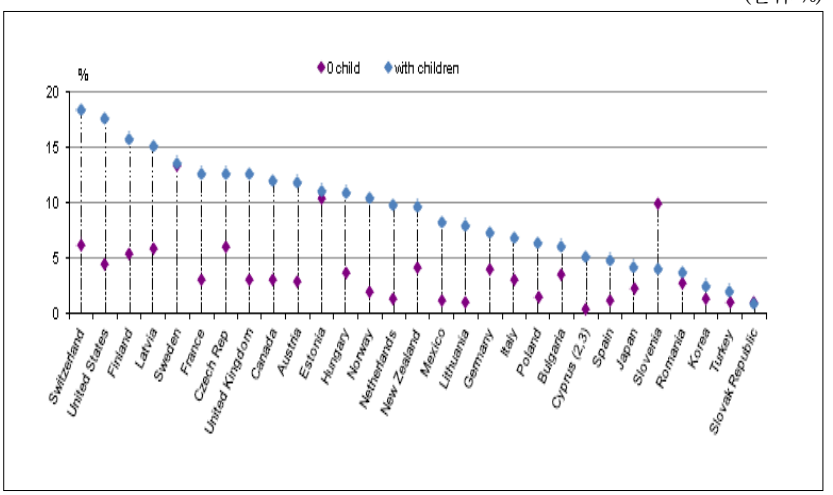
	Divorce without any child	Divorces involving children				
		Total	1 child	2 children	3 or more children	Unknown
Australia	50.7	49.3	18.5	21.2	9.6	..
Austria2	42.5	57.5	23.5	25.3	8.7	..
Bulgaria3	48.0	52.0	39.1	12.0	1.0	..
Cyprus [4,5]	51.2	48.8	26.9	17.5	4.4	..
Czech Republic	40.9	59.1	33.2	23.1	2.8	..
Estonia	47.4	52.6	34.5	15.0	3.1	..
Finland[6]	36.6	63.4	22.1	26.1	15.3	..
France[7]	42.6	57.4	24.4	23.6	9.4	..
Germany	51.0	49.0	26.4	18.1	4.6	..
Greece	29.7	61.4	27.4	27.4	6.6	8.9
Hungary[8]	39.5	60.5	32.8	20.8	7.0	..
Iceland	39.8	60.2	23.5	25.0	11.7	..
Italy	62.9	37.1	26.8	9.3	0.9	..
Japan[9]	43.2	56.8	26.7	22.3	7.8	..
Korea[10]	38.8	60.7	26.8	29.6	4.4	0.5
Latvia	41.8	58.2	41.4	14.1	2.7	..
Lithuania	37.3	62.7	41.9	17.3	3.5	..
Luxembourg	33.6	66.4	25.4	29.4	11.6	..
Mexico	24.3	58.4	28.6	20.7	9.2	1.8
Netherlands	43.8	56.2	20.3	26.8	9.2	..
New Zealand	55.3	44.7	18.0	19.3	7.5	..
Norway[11]	43.8	56.2	23.3	23.8	9.0	..
Poland	38.7	61.3	39.3	17.5	4.4	..
Portugal	29.5	70.5	39.5	24.9	6.2	..
Romania	52.1	47.9	35.3	10.6	1.9	..
Slovak Republic	34.3	65.7	38.5	22.5	4.7	..
Slovenia	48.5	51.5	27.0	22.0	2.5	0.0
Spain	44.9	49.0	31.8	15.1	2.0	6.1
Sweden	42.7	56.6	23.4	22.9	10.3	0.7
Switzerland	54.9	45.1	21.8	18.7	4.6	..
Turkey	43.5	56.5	23.3	19.5	13.7	..
United Kingdom	32.0	54.6	21.9	23.0	9.7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SF3.2.A. Distribution of divorces by the number of children involved, 2007 or the latest year available

이혼가정의 자녀유무 비율을 보면, 유자녀 가정의 이혼비율이 무자녀 가정의 이혼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자녀 가정의 이혼비율은 198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더 높았으며, 특히 스위스와 핀란드에서는 더욱 높았는데, 스위스의 경우, 유자녀 가정의 이혼율이 18.38%, 무자녀 가정의 이혼율이 6.16%이었다.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시계열자료가 있는 국가를 보면, 핀란드를 제외하고 대체로 1990년대 중반에 비해 2000년대 중반에 유자녀 가정의 이혼율이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7] 자녀유무에 따른 이혼 및 별거 비율(2007 또는 가장 최근 년도 자료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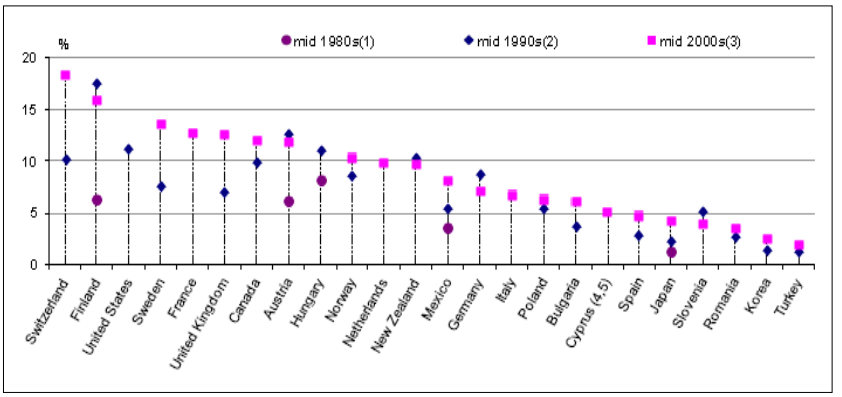


주: ◆ 무자녀 ◆ 유자녀

자료: OECD Family Database SF3.2.A. Proportion of divorced or separated adults with or without children, 2007 or the latest year available

〔그림 5-8〕 유자녀 이혼 및 별거 비율의 변화 추이(1980~2000)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SF3.2.B. Evolution of the percentage of divorced or separated adults with children

이혼가정은 한부모 가구와 1인가구와 연결된다. 1960년대에는 60~70%의 이혼자가 재혼을 선택했으나, 최근에 그 비율은 약 20%에 불과하였다(Hansson, 2011: 28). 이혼자들이 재혼 대신 동거나 부분적 동거(LAT)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재혼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대신 한부모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다음은 0~14세 아동을 기준으로 한부모가구 비율을 살펴 본 것이다. 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을 보면 아동인구의 84.1%는 친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고, 13.1%는 어머니하고만 살고 있으며, 1.9%는 아버지하고만 살고 있고, 나머지 0.8%는 부모와 살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국가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미국은 70.7%의 아동이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고, 22.6%가 어머니하고만 살고 있으며, 3.2%는 아버지만, 3.5%는 부모가 아닌 사람과 살고 있다. 영국도 미국과 비슷하게 부모 모두와 살고 있는 아동은 68.9%이며, 한부모가구에서 사는 아동이 30%이다.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네덜

란드와 같은 북유럽국가들은 한부모가구 비율이 약 20% 이내로 미국과 영국보다 낮은 편이었다. 한국은 0~14세 아동을 기준으로 생산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기의 가족유형이 어떻게 분포되어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통계생산의 문제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진미정, 2012).

아동을 단위로 한 통계 대신 가구를 단위로 한 통계에서 OECD 전체 평균을 보면, 부부가구(자녀포함)는 57.6%, 한부모가구 9.1%, 1인가구 27.7%, 그리고 기타 유형의 가구가 7.0%이었다. 특히 한부모가구 중에서 84.5%가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어머니가구로 나타났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 등 중부유럽 국가들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부유럽 국가들은 모두 평균에 비해 한부모가구 비율이 낮은 대신 1인가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1인가구 비율이 37%를 넘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볼 때, 1인가구가 증가하면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규모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표 5-3〉 0~14세 아동의 거주유형별 분포(2007년 기준)

(단위: %)

	Both father and mother are in the same household	The father and mother are not in the same household	The father of the youngster is in the same household	The mother of the youngster is in the same household
Austria	86.6	0.5	0.9	12.1
Belgium	65.0	4.4	11.0	19.5
Bulgaria	85.2	1.6	2.0	11.1
Czech Republic	80.8	0.6	1.2	17.4
Cyprus [2,3]				
Denmark[4]	81.3	1.4	2.0	15.3
Germany	82.0	0.0	1.7	16.3
Estonia	66.8	6.7	1.1	25.4
Finland	95.2	0.2	0.4	4.1
France	79.5	0.6	2.9	17.0
Greece	93.6	0.2	0.8	5.4
Hungary	82.0	1.0	1.3	15.7
Italy	92.1	0.1	1.0	6.8
Latvia	64.9	2.7	2.2	30.2
Lithuania	72.4	2.0	4.7	21.0
Luxembourg	91.5	0.7	0.7	7.1
Malta	90.0	0.5	0.6	9.0
Japan[4]	87.7	0.0	1.7	10.6
Mexico[4]	87.1	0.0	1.6	11.3
Netherlands	87.4	0.1	1.3	11.2
Poland	82.0	1.1	1.0	15.8
Portugal	86.6	1.8	1.0	10.5
Romania	88.9	1.9	1.4	7.7
Slovenia	87.7	0.9	0.8	10.5
Slovakia	86.4	0.5	1.2	12.0
Spain	91.5	0.7	0.6	7.2
Sweden[4]	78.0	0.0	4.0	18.0
Switzerland[4]	84.7	0.1	2.3	12.9
Turkey	91.5	0.7	0.6	7.2
United Kingdom	68.9	1.1	2.4	27.6
United States[4]	70.7	3.5	3.2	22.6
OECD - 23	84.1	0.8	1.9	13.1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SF1.3.A. Distribution of children aged 0~14 by living arrangements

2. 자녀출산과 가구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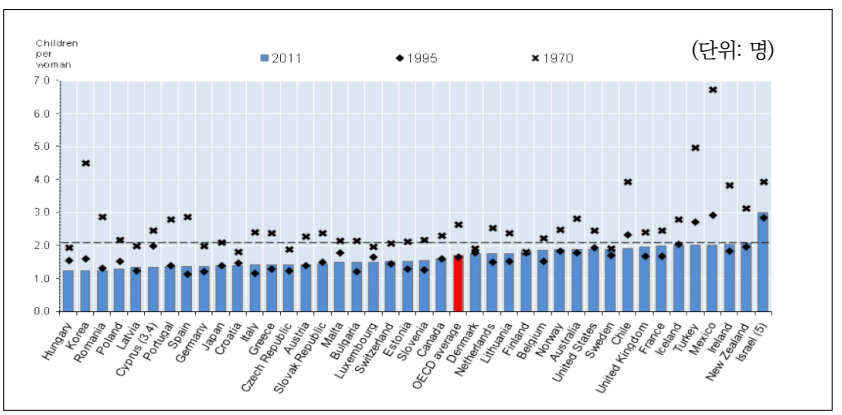
출산율의 저하는 유럽국가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추세이다. 2011년 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은 1.69이며, 1970년 2.67로부터 1.0 가까이

하락한 수치이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1995년과 2011년(1.70)에는 차이가 없어서 이러한 하락은 주로 1970~1995년 사이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9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추가로 출산율이 하락한 국가는 헝가리, 한국, 터키, 멕시코, 칠레 등이며, 네덜란드, 불가리아, 아일랜드 등은 출산율이 유지되었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

총 출산건수 중 혼외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국가 평균 36.3%이며, 한국,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보수적인 국가에서 매우 낮고 대부분의 북유럽국가에서는 50%를 차지하며, 가장 비율이 높은 아이슬란드는 64.1%를 차지한다.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 수용되고 있는 중부유럽이나 북유럽 국가에서는 동거관계 내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외출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동거관계 내 출산 중에서 첫째아 비중이 높고 둘째아 이하 비율이 낮은 것을 보면 첫째아 출산 이후에 동거관계가 결혼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Jokinen & Kuronen,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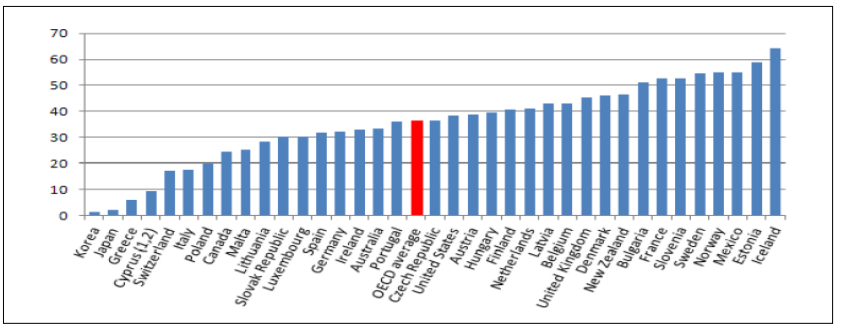
〔그림 5-9〕 자녀규모의 변화 추이(1970~2011)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SF1.1.A. Types of household, latest year

〔그림 5-10〕 혼외 출산 비율(200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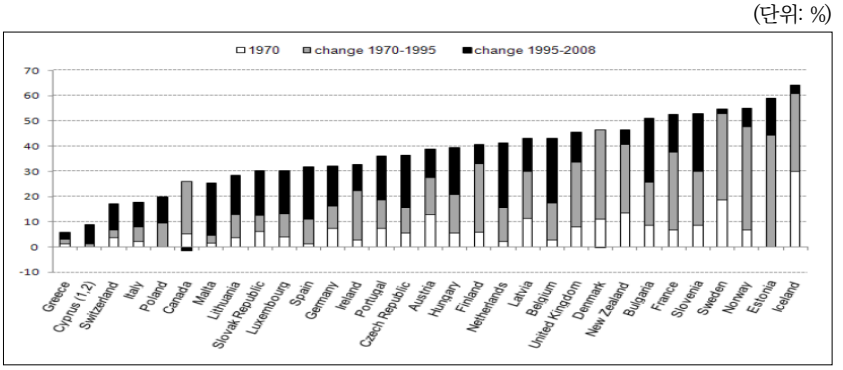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SF2.4.A. Proportion of births out of wedlock, 2009

다음 그림은 1970년과 1995년, 그리고 2009년 사이에 혼외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추세를 보여준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1970~1995년 사이에 혼외출산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는 1995~2009년 사이에 혼외출산 비율이 증가하여 국가마다 추세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5-11〕 혼외 출산 비율의 변화 추이(1970~200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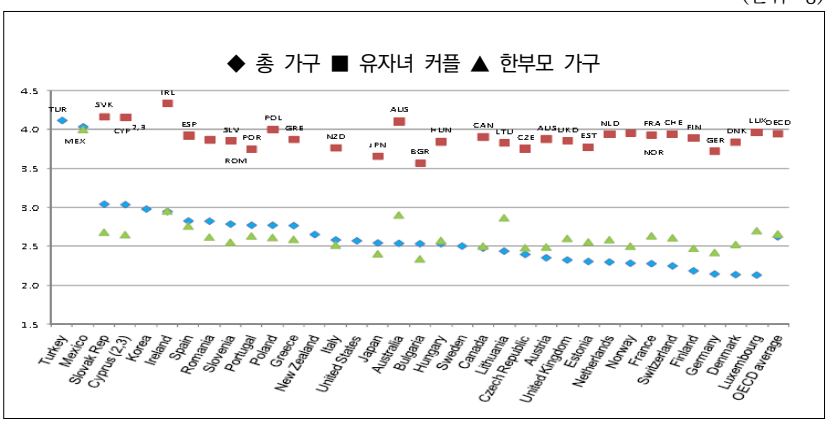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SF2.4.B.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births out of wedlock from 1970 to 2009

다음 그림은 2000년대 중반 OECD 국가들의 평균 가구규모를 전체가구, 유자녀부부가구, 한부모가구 별로 나타낸 것이다. 시계열자료가 아니므로 추세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대략 유자녀부부가구의 경우 3.5~4.0명 규모임을 알 수 있다. OECD 평균을 보면 유자녀 부부가구는 3.9명, 한부모가구는 2.7명이다.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중부와 북부유럽 국가들은 전체 평균 가구규모가 한부모가구 규모보다 낮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가구규모의 변동은 부부가구의 출산율과 1인가구의 비율에 의해 결정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5-12] 가구규모별 분포(2000년대 초중반)

(단위: 명)



자료: OECD Family Database SF1.1.A. Size of households, early or mid-2000s

3. 여성의 경제활동과 돌봄 시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구·가족의 변동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공·사적 영역이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있을 때는 전통적 남성부양-여성 돌봄 모델이 규범으로 수용되었고, 공·사적 영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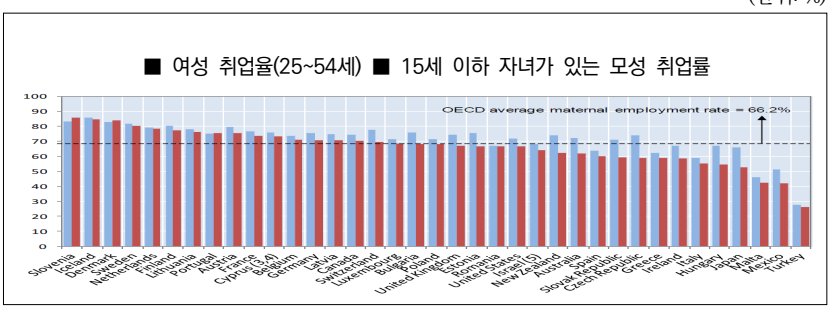
서의 역할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공·사적 영역 즉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거나 갈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가구구조 및 가족생활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다음 그림은 OECD 국가들의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여준다.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OECD 평균이 66.2%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의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7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인 반면 터키, 이탈리아, 몰타 등의 남유럽 국가는 약 40% 전후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정확하게 조사된 바 없으나, 15세 이상 총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2010년 49.4%이며, 생산인구 중에서는 25~29세 여성의 참여율이 69.8%로 가장 높았고, 40대, 50대 순으로 낮아지다가 30대 초반이 54.6%로 가장 낮았다(통계청, 2011). 한국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미루어 볼 때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5-13〕 여성 취업률과 모성 취업률 비교(2009)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LMF1.2.A. Maternal employment rates compaed to female employment rate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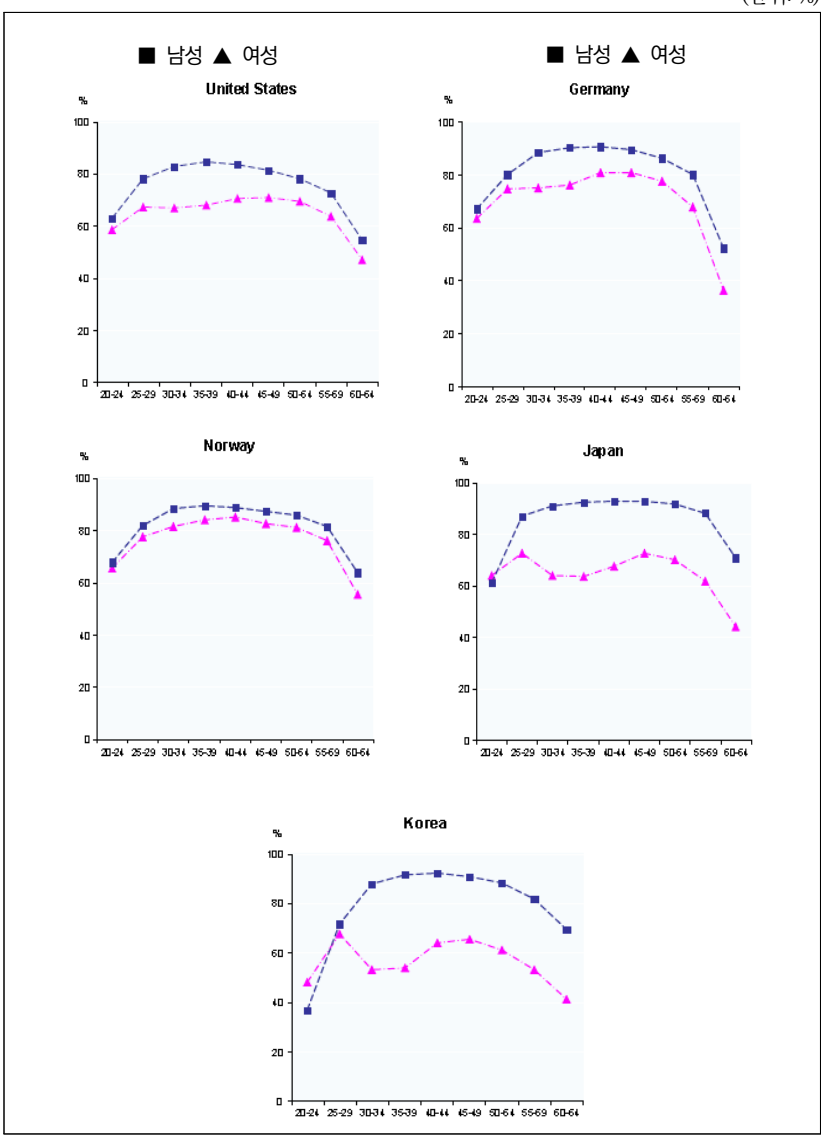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패턴을 살펴보면 [그림 5-14]와 같다. [그림 5-14]는 미국, 독일, 노르웨이, 일본,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별 취업률을 도표화한 것이다. 남성 취업률에 비해 여성 취업률이 낮은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작고, 독일과 미국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며,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아 이인부양자 모델이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나라들은 노년기를 제외하면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완만한데 비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M자 곡선을 보인다. 임신과 출산의 시기인 30대 초반과 후반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두드러지게 낮고, 자녀 양육이 일단락되는 40대에 다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진다. 일본과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 시기에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대신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후 양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재진입하는 경력단절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시간의 사용 양태는 성별 및 취업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15세 이상 남성 인구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보면, OECD 평균적으로 하루 24시간 중 수면 및 개인유지활동에 44.9%, 여가에 22.8%, 유급노동(학업)에 21.0%, 가사노동과 같은 무급노동에 8.0%, 돌봄에 1.8%를 사용한다. 아래 표는 유급노동에 사용되는 비율의 내림 순으로 정리되었는데, 하루 중 유급노동에 사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 일본, 한국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4 참조).

[그림 5-14] 국가별 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수준 비교(2011)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2011

〈표 5-4〉 주 활동 별 하루 사용 시간 비율: 15세 이상 남성 인구(1999~2008)

(단위: %)

	Paid work or study	Unpaid work	Care work	Personal care	Leisure	Unspecified	Total
Mexico	30.0	4.4	3.5	43.7	17.7	0.6	100
Japan	27.4	5.7	0.5	45.6	18.7	2.2	100
Korea	26.5	3.3	1.0	44.9	22.9	1.4	100
Latvia	24.2	8.8	1.2	44.9	20.8	0.3	100
Lithuania	22.4	9.7	1.6	45.3	20.5	0.3	100
Poland	21.7	6.2	1.5	46.6	23.7	0.3	100
Canada	21.5	9.0	2.4	42.5	24.0	0.6	100
Estonia	21.0	11.5	1.8	44.1	21.3	0.3	100
Italy	20.8	6.0	1.4	47.0	23.8	0.9	100
Australia	20.3	10.5	2.2	45.0	20.6	1.4	100
Turkey	20.2	2.6	3.5	46.7	19.8	7.2	100
United States	20.2	9.1	2.1	44.1	23.0	1.4	100
United Kingdom	20.1	9.5	1.6	43.3	24.7	0.9	100
Sweden	20.1	10.0	1.8	42.5	24.4	1.2	100
New Zealand	19.9	11.3	1.1	47.7	19.3	0.7	100
Norway	19.7	9.3	1.8	42.1	26.7	0.4	100
Spain	19.5	9.9	2.3	44.7	23.1	0.5	100
Slovenia	18.9	11.4	1.6	43.8	24.2	0.3	100
France	18.7	8.7	1.5	48.9	19.6	2.6	100
Finland	18.1	9.4	1.6	43.3	26.1	1.0	100
Germany	17.4	9.8	1.4	44.4	25.8	1.2	100
Bulgaria	16.5	11.7	1.2	49.6	20.7	0.3	100
Belgium	15.6	9.7	0.8	44.9	26.5	2.6	100
OECD-18	21.0	8.0	1.8	44.9	22.8	1.5	100

주: 15세 이상 남성 인구의 하루 중 활동 별 사용 시간 비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LMF2.5.A. 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1999~2008

15세 이상 여성 인구를 보면, OECD 평균적으로 하루 24시간 중 수면 및 개인유지활동에 45.7%, 여가에 20.4%, 유급노동(학업)에 12.2%, 가사노동과 같은 무급노동에 15.8%, 돌봄에 4.6%를 사용하였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개인유지 시간이 다소 많은 대신 유급노동, 여가시간이 더 낮았다. 여성들은 무급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4.2%pt가 더 많았고 돌봄 시간도 2.6%pt가 더 많았다. 한국 여성들은 OECD 평균에 비해 유급노

동시간의 비율이 높았고, 무급노동시간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유급노동시간 비율이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한국이며, 낮은 국가는 터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의 순이다. 한국은 남성과 여성 모두 유급노동시간 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는 특성을 보였다.

〈표 5-5〉 주 활동 별 하루 사용 시간 비율: 15세 이상 여성 인구(1999~2008)

(단위: %)

	Paid work or study	Unpaid work	Care work	Personal care	Leisure	Unspecified	Total
Latvia	17.2	16.7	2.4	45.3	18.1	0.3	100
Lithuania	16.9	18.5	2.6	45.6	16.1	0.3	100
Korea	16.7	12.0	4.1	44.6	20.4	2.2	100
Canada	15.1	13.8	4.1	44.1	22.3	0.6	100
Sweden	14.8	14.0	3.0	44.4	23.0	0.9	100
Estonia	14.8	19.2	3.5	43.8	18.3	0.3	100
Japan	14.4	17.6	2.1	46.3	17.3	2.4	100
United States	14.1	14.2	4.0	45.8	20.4	1.6	100
Slovenia	13.8	19.7	2.6	43.9	19.7	0.2	100
Norway	13.4	13.2	3.2	43.5	26.4	0.3	100
Finland	12.8	14.4	3.0	44.3	24.2	1.0	100
Bulgaria	12.4	20.6	2.2	48.5	16.2	0.2	100
Mexico	12.1	22.5	8.6	41.8	14.1	0.8	100
United Kingdom	11.9	16.6	3.6	44.6	22.3	1.0	100
France	11.6	16.3	2.9	49.4	17.3	2.5	100
Poland	11.6	18.8	3.3	46.2	19.8	0.3	100
Spain	11.5	18.6	3.8	46.1	19.5	0.4	100
New Zealand	11.5	17.8	2.9	48.9	18.2	0.7	100
Australia	11.1	17.3	5.3	46.2	18.6	1.6	100
Belgium	10.1	16.1	1.9	46.6	23.1	2.2	100
Germany	10.0	16.3	2.6	45.7	24.3	1.0	100
Italy	9.9	21.2	3.2	46.6	18.3	0.7	100
Turkey	6.1	3.7	22.0	46.8	17.6	3.8	100
OECD-18	12.2	15.8	4.6	45.7	20.4	1.3	100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LMF2.5.A. 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1999~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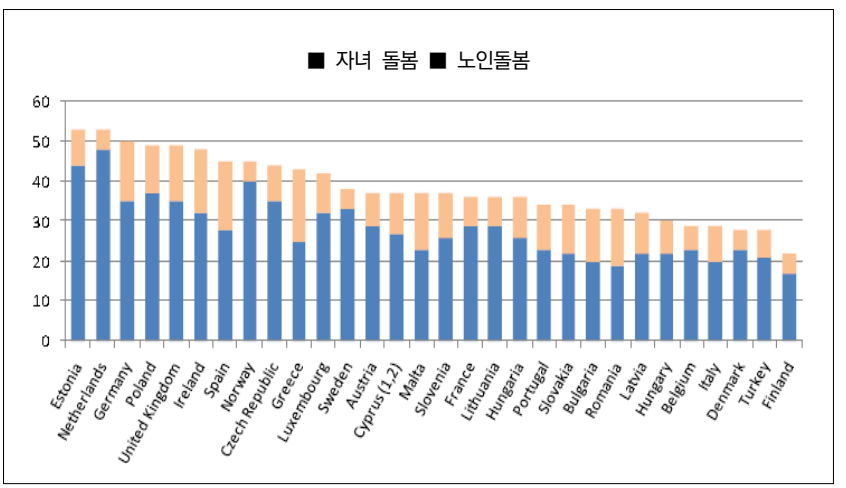
18세 이상 인구의 가정 내 돌봄에 사용되는 시간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주 당 자녀 돌봄과 노인 돌봄에 사용되는 시간을 모두 합쳐 50시간 이상인 국가는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독일이며, 30시간 미만인 국가는 핀란드, 터키, 덴마크, 이탈리아 등이다. 돌봄 시간

중 노인 돌봄에 사용되는 시간보다는 자녀 돌봄에 사용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흥미롭게도 같은 북유럽 국가 중 네덜란드나 노르웨이는 돌봄 시간이 긴 국가에, 핀란드와 덴마크는 돌봄 시간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이러한 돌봄 시간은 각 국가의 제도적인 차이 뿐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들은 대체로 여성에 비해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더 적었다. 자녀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노인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보다 더 많았으나, 상대적인 비율을 보았을 때 여성보다 노인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 비율은 좀 더 높았다. 남성들이 돌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국가는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으로 주 당 약 30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5] 18세 이상 여성 인구의 주당 돌봄 활동 시간(1999~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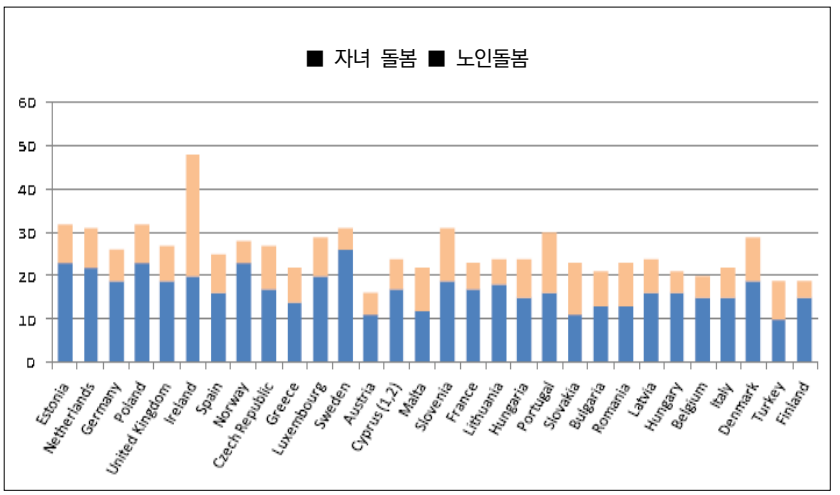
(단위: 시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LMF2.5.D. Average weekly hours allocated to care activities: Women aged 18 and over

〔그림 5-16〕 18세 이상 남성 인구의 주당 돌봄 활동 시간(1999~2008)

(단위: 시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LMF2.5.D. Average weekly hours allocated to care activities: Men aged 18 and over

제3절 선진국의 가족정책 실태

1.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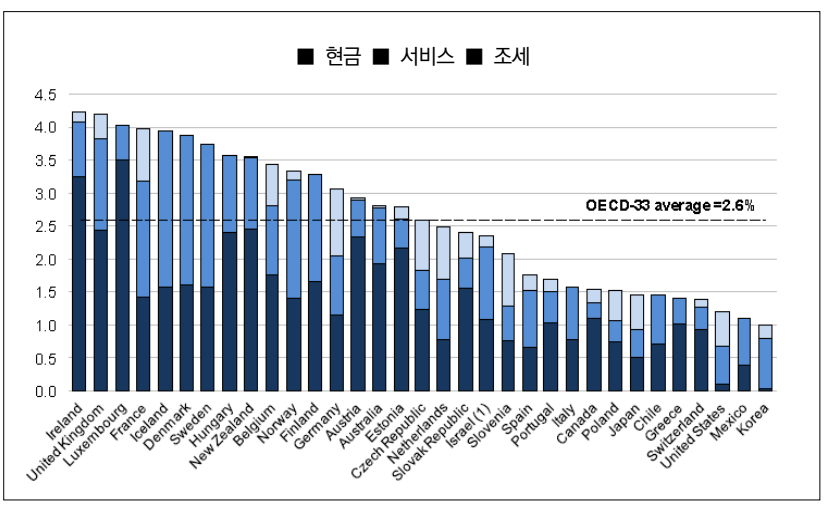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 그리고 조세제도를 통한 혜택을 모두 포함하여 OECD 33개국에서 지출하는 평균 공공지출 규모는 2009년 기준 GDP의 2.6%이다. 지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아일랜드, 영국,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이며 이들 국가의 공공지출 규모는 약 GDP의 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가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이며 GDP의 약 1% 수준이다. 이 통계는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보편적인 양육수당이 도입되기 이전 자료이다. 공공지출 규

모가 낮은 국가들은 한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 미국, 캐나다와 같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이탈리아, 그리스, 멕시코, 칠레 등 로마가톨릭 국가들이 해당된다.

공공지출 규모가 비슷한 국가에서도 그 구성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현금 지원 비중이 큰 반면, 프랑스와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서비스 지원 비중이 더 높다. 조세를 통한 지원 비율이 높은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이다.

[그림 5-17]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2009)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 1.1.A.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in cash, services, and tex measures in per cent of GDP, 2009

2. 모성휴가(출산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휴직제도는 가족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유럽에서는 1960~1970년대에 모성휴가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Jokinen & Kuronen, 2011). 1970~1980년대에는 모성휴가 뿐 아니라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었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사용할 수 있는 성 중립적인 형태로 개선되었다. OECD 국가들을 보면 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의 기간이나 소득대체율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노동기구(ILO)에서는 최소 14주의 모성휴가를 권장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모성휴가 기간은 19주이며, 가장 짧은 국가인 호주에서는 6주, 가장 긴 국가인 불가리아에서는 63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리아는 별도의 육아휴직이 없고 모성휴가가 이를 대체한다.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모성휴가와 연계된 수당이 지급되며, 모성휴가 수당의 소득대체율은 낮게는 20%(영국, 아일랜드)에서 높게는 100%(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대륙 국가들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국가, 그리고 한국)까지 그 편차가 크다.

부성휴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없으며, 모성휴가에 비해 훨씬 짧다. 부성휴가가 도입되어있지 않는 국가들도 많고, 도입 된 경우에도 일주일 미만(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한국)인 경우가 많다. 10주 이상의 부성휴가를 허용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대륙국가와 남유럽 국가들이다.

육아휴직은 모성휴가나 부성휴가에 더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인데, 모성휴가와 마찬가지로 허용되는 기간의 편차가 크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모성휴가에 부가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두 가지 휴가(직)제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벨기에와 같은 국가들은 모성휴가(15주)와 육아휴직(12주)이 모두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영국은 모성휴가(52주)가 긴 대신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13주)이 짧다.

육아휴직 수당도 도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스페인, 그리스 등은 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을 따르는 국가와 남유럽

국가들이다. 평균 소득의 30% 미만의 소득대체율을 가진 국가는 핀란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이며, 그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가진 국가는 덴마크, 포르투갈, 슬로바니아, 스웨덴, 일본 등이다. 소득대체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국가는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다.

〈표 5-6〉 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2011)

(단위: %)

	Maternity Leave	% rate of allowance[2]	FRE paid maternity leave	Paternity leave[3]	% rate of allowance[2]	FRE paid paternity leave	Parental and prolonged period of leave[1]	Maximum length of parental and prolonged period of leave for women[3]	% rate of allowance[2]	FRE paid parental leave	Parental leave (unpaid)	Maternity and parental paid leave (full-rate equivalent)	Maximum length of leave for women
	(1)	(2)	(3)	(4)	(5)	(6)	(7)	(8)	(9)	(10)	(11)	(3)+(10)	(1)+(8) or (7)
Australia	6,0[4]	42,9	2,6	..	..	..	52,0	46,0	0,0	0,0	52,0	2,6	52,1
Austria	16,0	100,0	16,0	0,4	100,0	0,4	104,0	96,0	40,0	41,6	84,7	57,6	112,0
Belgium	15,0	76,9	11,5	2,0	62,3	1,2	12,0		91,7	11,0	10,2	22,5	27,0
Bulgaria	63,0	90,0	56,7	..	..	..			..	..	..	56,7	63,0
Canada	15,0	55,0	8,3	..	..	..	37,0		52,0	19,3	15,8	27,5	52,0
Czech Republic	28,0	68,9	19,3	..	..	..	156,0	136,0	25,3	39,4	87,4	58,7	164,0
Denmark	18,0	53,3	9,6	2,0	55,0	1,1	32,0		53,4	17,1	22,8	26,7	50,0
Estonia	28,0	100,0	28,0	2,0	0,0	0,0	156,0	152,0	51,2	79,9	70,6	107,9	180,0
Finland	17,5	66,9	11,7	7,0	70,0	4,9	156,0	138,5	21,0	32,8	119,7	44,5	156,0
France	16,0	100,0	16,0	2,0	100,0	2,0	156,0	143,0	18,9	29,5	118,2	45,5	159,0
Germany	14,0	100,0	14,0	8,0	67,4	5,4	156,0	148,0	22,3	34,8	107,4	48,8	162,0
Greece	17,0	100,0	17,0	0,4	100,0	0,4	14,0		0,0	0,0	30,3	17,0	31,0
Hungary	24,0	70,0	16,8	1,0	100,0	1,0	156,0	136,0	51,0	79,6	76,7	96,4	160,0
Iceland	13,0	64,6	8,4	13,0	64,6	8,4	26,0	13,0	32,3	8,4	15,6	16,8	26,0
Ireland	48,0	22,5	10,8	14,0	0,0	0,0	14,0		0,0	0,0	14,0	10,8	62,0
Israel (7)	26,0	53,8	14,0									14,0	26,0
Italy	20,0	80,0	16,0	..	..	..	24,0		30,0	7,2	18,2	23,2	44,0
Japan	14,0	65,7	9,2	..	..	..	52,0	44,0	50,0	26,0	12,8	35,2	58,0
Korea	12,8	100,0	12,8	0,4	100,0	0,4	45,6		21,2	9,7	35,9	22,5	58,4
Latvia	19,0	100,0	19,0	2,0	80,0	1,6	52,0		70,0	36,4	15,6	55,4	71,0
Lithuania	21,0	100,0	21,0	4,0	100,0	4,0	156,0	148,0	36,7	57,2	15,7	78,2	169,0
Luxembourg	16,0	100,0	16,0	0,4	100,0	0,4	24,0		42,9	10,3	13,9	26,3	40,0
Malta	14,0	20,0	2,8	..	..	..			..	..	..	2,8	14,0
Mexico	12,0	100,0	12,0	..	..	..			..	..	..	12,0	12,0
Netherlands	16,0	100,0	16,0	0,4	100,0	0,4	26,0		18,8	4,9	20,7	20,9	42,0
New Zealand	14,0	50,0	7,0	..	..	..	52,0	42,0	0,0	0,0	38,0	7,0	56,0
Norway	9,0	100,0	9,0	14,0	85,7	12,0	88,0		32,7	28,8	59,4	37,8	97,0
Poland	24,0	75,0	18,0	2,0	100,0	2,0	156,0		12,4	19,4	134,9	37,4	180,0
Portugal	12,5	100,0	12,5	5,0	100,0	5,0	9,0		100,0	9,0	13,0	21,5	21,5
Romania	21,0	75,2	15,8	..	..	..			..	..	..	15,8	21,0
Slovak Republic	34,0	55,0	18,7	..	..	..	136,0	128,0	22,6	30,7	105,3	49,4	162,0
Slovenia	15,0	100,0	15,0	13,0	26,9	3,5	37,0		100,0	37,0	0,0	52,0	52,0
Spain	16,0	100,0	16,0	3,0	100,0	3,0	156,0	140,0	0,0	0,0	144,0	16,0	172,0
Sweden	10,0	80,0	8,0	10,0	80,0	8,0	80,0		64,3	38,6	20,6	46,6	70,0
Switzerland	14,0	80,0	11,2	..	..	..	..		..	..	0,0	11,2	14,0
Turkey	16,0	70,0	11,2	..	..	..	26,0		0,0	0,0	26,0	11,2	42,0
United Kingdom	52,0	24,4	12,7	2,0	20,0	0,4	13,0		0,0	0,0	13,0	12,7	65,0
United States	12,0	0,0	0,0	..	..	..	..		..	..	..	0,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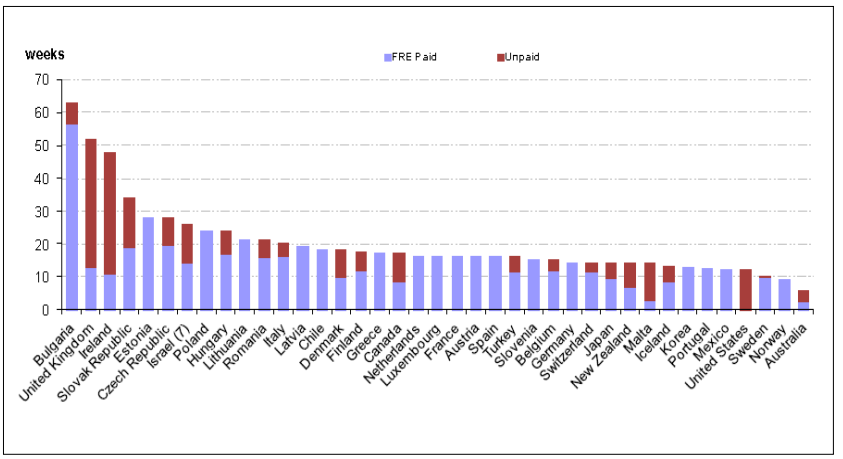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 2.1.A. Full-time equivalent of paid maternity, paternity, and parental leave, 2011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을 고려한 유급 모성휴가 기간이 가장 긴 국가는 벨기에, 에스토니아, 폴란드이며, 무급 모성휴가 기간이 가장 긴 국가는 영국과 아일랜드이다. 유급 및 무급을 모두 합친 휴가 기간이 가장 긴 국가는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급 육아휴직이 가장 긴 국가는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며, 무급 육아휴직이 가장 긴 국가는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이었다.

[그림 5-18] 무급 및 유급 모성휴가(육아휴직포함) 기간(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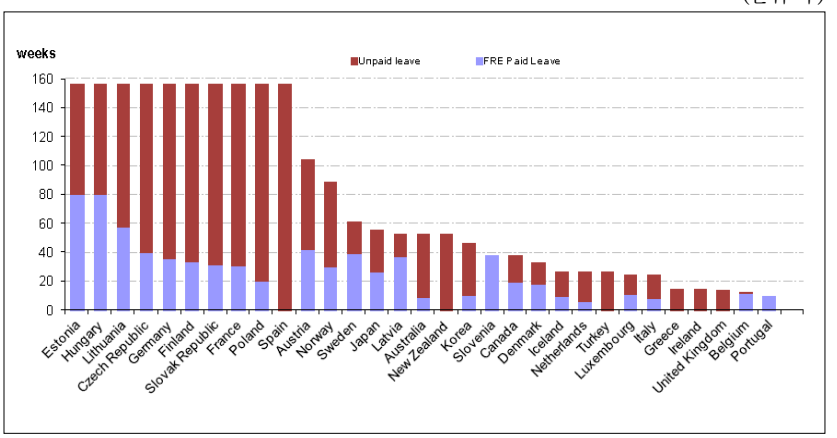
(단위: 주)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 2.1.A. Child-related leave periods by duration of unpaid leave and duration of the full rate equivalent of leave period if paid at 100% of last earnings, 2011/2012: Maternity leave

〔그림 5-19〕 무급 및 100% 유급 부모휴가 기간(2011~2012)

(단위: 주)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 2.1.A. Child-related leave periods by duration of unpaid leave and duration of the full rate equivalent of leave period if paid at 100% of last earnings, 2011/2012: Parental leave

3. 아동 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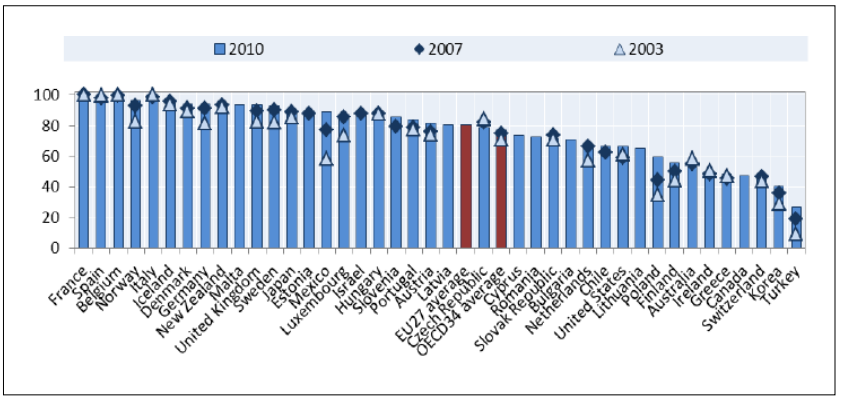
보육시설을 통한 아동 보육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3~5세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 비율은 OECD 평균 77%이며, EU 국가들의 평균은 81.8%이다. 2010년 기준으로 등록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터키, 한국, 스위스, 캐나다, 그리스이며, 가장 높은 국가들은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이다. 2003년 등록율과 2010년 등록률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멕시코와 폴란드로 나타났다.

0~2세 영아들의 보육시설 등록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은 30.1%이며, EU국가 평균은 28.2%이었다. 영아 보육 등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체코공화국,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이다.

특히 한국의 3~5세 보육시설 등록률은 79.8%, 0~2세 영아 등록률은 37.7%로 OECD 평균 등록률을 상회하였다.

〔그림 5-20〕 3~5세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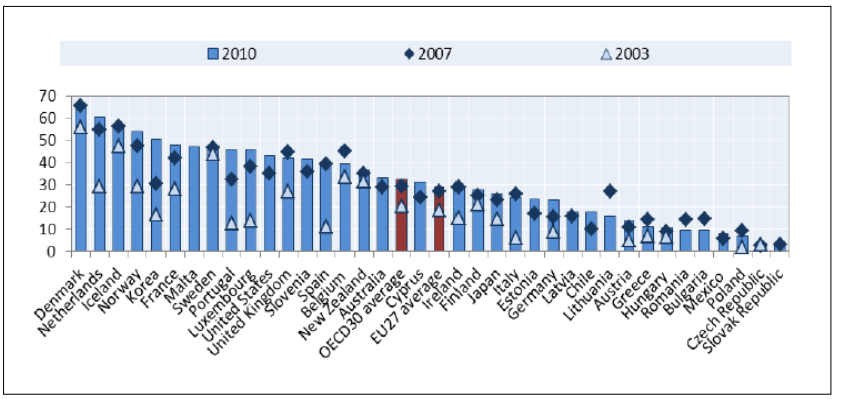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 3.2.A. Enrollment rates of children aged three to five in pre-school educational programmes

〔그림 5-21〕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 비율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 3.2.A. Enrollment rates of children not yet thre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care

제4절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동의 특성 및 전망

1. 개인화 추세에 따른 가족 변화

이상의 통계에 근거하여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혼인율 감소와 동거율 증가, 그리고 이혼율 증가와 한부모가구 증가, 출산율 감소와 1인가구 증가 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1990년대 중반이후로는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속도가 다소 완화되어 유지되고 있다(Jokinen & Kuronen, 2011). 반면 남부유럽, 동부 및 중부유럽의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1990년대 경기침체 및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대와 함께 출산율 하락, 혼인율 저하와 이혼율 증가 등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Kreyenfeld, Anderson, & Pailhé, 2012).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1960년대 이후 서구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문화로 작용하는 개인화와 관련된다. 서구사회의 근대적 혹은 후기 근대적 전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전략과 복지정책 등 개인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에 의해 개인화가 사회 전반에 점점 더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Beck & Beck-Gernsheim, 2002). 개인화 명제를 이론화한 울리히 벡은 개인화가 불안정성과 자유(precarious freedom)를 동시에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규범이나 관습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 무질서나 통합의 부재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족의 영역에서도 한편으로는 책임과 부담의 완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아동이나 노인에게는 돌봄의 공백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화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확고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유교적 가족제도와 전통이 공고한 일본, 대만,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학적 변화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대만, 한국은 유교적 가족제도와 가족주의가 이념적으로 규범화되어있고, 가족중심의 사회제도와 관행이 만연하다. 이들 국가 모두 유교의 전통에 따라 강력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가족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파생된 확대가족의 동거 유형, 효 중심의 부모자녀 관계, 성별 분리의 부부관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가구·가족의 인구학적 변동은 가족과 관련된 실태와 정책, 그리고 이념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Sano & Yasumoto, 2013).

2. 가구·가족 변동의 지역적 편차

출산율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대체 수준 이하의 저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일본, 독일, 스페인과 같이 출산율이 1.3 이하로 낮은 국가와 미국, 프랑스처럼 1.8 이상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있다. 출산율이 높게 유지되는 국가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이민을 수용함으로서 적정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Morgan & Rackin, 2010). 유럽 연합 내에서도 법적 시스템, 복지 구조, 교육제도, 보건정책, 사회경제적 체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구조와 유형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가족변화의 추세와 발달 정도도 다르다(Jokinen & Kuronen, 2011). 북유럽 국가들은 동거, 동거 관계 내 출산 등이 보편화되어있는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좀 더 전통적인 가족 중심이다.

또한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며(Kamagui, 2010),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지역 편차를 설명하는 요인

들을 탐색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거시적인 추세가 가족변동을 이끄는 지배적인 힘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에 저항하는 하위문화와 지역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Therborn, 2004).

3. 인구 변화와 가족정책적 개입

개인화가 가족 변동의 거시적, 이론적 맥락이라면, 선진국의 가족 변화를 추동하는 보다 구체적인 요인은 세계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실업,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가족행동, 특히 청년층의 가족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혼인을 지연하고 동거를 선택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각 국가의 독특한 문화,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가족정책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Kreyenfeld, Anderson, & Pailhé, 2012: 19).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특정한 가족유형을 모델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돌봄을 지원하며, 부모의 일-가족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학자들은 가족정책의 수준에 따라 크게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복지 레짐으로 구분하지만,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에 따라 동일한 복지 레짐 내부에서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기준으로 핀란드는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8.6%로 노르웨이(51.8%), 스웨덴(46.7%), 덴마크(65.7%) 같은 국가들보다 훨씬 낮다. 이렇게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것은 가정양육수당이 보편화되어있고, 활용률이 높기 때문이다(Kurone, Kröger, Jokinen, 2011).

여성의 경제활동과 이혼율 사이의 관계를 보면,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족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반면, 이탈리아처럼 성 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족 안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Jokinen & Kuronen, 2011). 이처럼 가족정책은 경제적인 요인이 가족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가족정책의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국가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혼인이나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자녀 출산이전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가족정책을 가졌거나 남성부양자 모델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을 가진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혼인과 출산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선진국의 가구·가족의 인구학적 변동은 가족정책과의 관련성 하에 분석될 때 보다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4. 동아시아 및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진단과 전망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일본과 한국은 대체로 선진국이 경험한 인구학적 추세를 뒤따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의 저하, 혼인연령의 증가와 미혼인구의 증가, 그리고 이혼율의 증가와 1인가구의 증가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선진국의 인구학적 변화 추세를 보면, 대체로 1960~1970년대에 가구·가족 변동이 본격화되어 1990년대 이후에는 변화 속도가 완만하거나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가구·가족의 변동을 보여주는 인구학적 지표들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에 비해 2000년대 후반 이후 그 변화속도가 다소 늦춰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이 앞으로 계속 전개되기 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진국에서 경험한 인구학적 변화 중 동거 및 혼외출산의 보편화는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낮은 동거비율, 낮은 혼외출산 비율 등은 한국사회의 고유한 가족적 특성을 나타낸다. 가족에 관련된 인구학적 특성은 그 사회의 가족이념과 제도적 속성을 반영한다. 한국사회의 가구·가족 변동은 규범적으로 수용되는 영역과 수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서 그 변화가 일관되지 않은 속도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의 연기, 행복하지 않은 결혼의 해소,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등은 규범적으로 수용되고 있어서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이지만, 미혼출산 및 양육, 장기적 동거 관계, 동성 결혼 등은 규범적으로 수용되지 못하여 훨씬 더디게 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향후 한국의 가구·가족 변동과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훨씬 더 복합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생활문화의 변화를 연구한 옥선화·진미정(2011)에서도 전통문화 중 태교, 돌잔치 등 출산과 관련된 문화는 조기교육 및 소비주의 성향과 결합하여 더 강화되는 반면, 제례의 범위와 방식은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과 관련된 변화가 일관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 진단과 전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제6장 가구·가족의 변화 전망과 의미 분석

제1절 가족변화의 원인 전망
제 2절 가족형성과 해체의 변화 전망
제3절 가족관계의 변화 전망
제4절 가족기능의 변화 전망
제5절 가구·가족 전망 및 정책적 의미 분석

6 가구·가족의 변화 전망과 의미 분석

본 장은 향후 가족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가족형성과 해체, 가족관계, 가족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자 한다.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변화 추이와 현재의 상황에 근거하는 방법도 있고 학자들의 논의에 근거하는 방법도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의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가족 관련 가치관이나 가족의 기능 및 관계에 대한 가치관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전화조사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가구·가족의 변화 전망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분석코자 한다.

제1절 가족변화의 원인 전망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양식 및 가치관 변화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서는 '복합가족(multi-family)'이라는 용어가 생길만큼 가족의 전통적 정의에서 벗어난 가족이 형성되고 있다(김두섭 외, 2005). 난자은행이나 정자은행을 통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가족을 형성하는 예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나 생활양식도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성애자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거나 동거가 결혼과 동

등한 법적, 제도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동성애자, 동거, 난자은행이나 정자은행을 통한 출산 등은 한국사회에서 공공연히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과 재혼의 증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통계청의 보도자료(2012)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매일 1,005쌍이 결혼하고 339쌍이 이혼한다. 이혼의 증가는 재혼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혼과 재혼이 흔하게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 동안 그의 가족이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예도 있으며 결혼을 하고도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무자녀 부부도 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가족이 등장한 배경이나 가족변화의 원인은 경제 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 정책적 변화, 인구학적 구성 및 가치관의 변화로 요약된다. 경제 환경 및 사회구조적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았을 때에는 결혼이 여성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남성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짐에 따라 결혼의 보호적 효과가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주어지는 가사와 자녀양육의 부담이 크게 변화가 없다면 여성의 결혼 지연 혹은 회피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나 경쟁적 자본주의의 여파로 고용안정성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남성 역시 결혼시기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늘어난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출산 역시 지연, 회피 또는 축소하려는 경향이 늘어난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세대구조의 단순화를 야기하였으며,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가중시켰다. 더불어 정보화가 추동하

는 일터와 가정의 통합, 일상적 대화양식의 변화, 느슨한 인간관계 등도 가족의 생활양식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지적된다. 정보화와 교통통신의 발달이 주말부부나 기러기 가족과 같은 새로운 가족관계의 유지를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고선주, 2000).

호주제 폐지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가족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호주제 폐지로 인하여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감소하고 제도적 차별이 약해졌으며, 이는 이혼과 재혼의 증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된 바 있다(김미숙, 2008). 인구학적 구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결혼시장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국제결혼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김두섭, 2006).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와 다원주의적 가치관의 확산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도 가족 변화의 원인으로 중요하게 지적된다. 서구의 현대 사회학자들은 1차 근대성과 2차 근대성의 변화를 강조하며 이에 따라 친밀성과 사랑, 결혼 및 가족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기든스(1996), 울리히 벡과 벡 게른스하임(2002), 지그문트 바우만(2009) 등은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를 2차 근대성과 개인화로 설명한다. 기든스는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2차 근대성은 가족 중심적인 근대적 친밀성을 해체하고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 한 친밀성을 등장시켰다고 주장하였고, 지그문트 바우만은 시공간의 문제, 일과 공동체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액체화되었으며 따라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자율성을 위하여 결혼과 가족도 유동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벡과 벡 게른스하임은 1차 근대성에서 나타난 불안정성과 위협, 위험사회의 특성들 때문에 개인은 가족, 친족 등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심영희(2011)는 서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1차 근대성과 2차 근대성에서 나타난 가족의 특성을 몇 가지로 구분하였다. 가령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2차 근대성은 남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삶을 중요하게 강조하며 가족 중심적이기보다는 개인 중심적이며 독립적이다. 과거에는 이성애와 같은 민족끼리의 결합을 가정하였다면, 2차 근대성에서는 이성애와 동성애 혹은 민족을 구분하지 않는다. 가족의 기능 중에는 정서적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과거의 성별 분업이나 불평등은 약화된다. 이러한 2차 근대성의 개인주의화 경향이 한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결혼 및 가족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족 변화의 원인 중 가치관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 가족의 경우에는 제도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Chang and Song, 2010), "가족주의적 개인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혜경, 2013; 심영희, 2011). 그러나 공통적인 사실은 여전히 결혼과 가족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약해지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구조, 가치관, 정책, 그리고 인구구성 등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가족 및 가구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제2절 가족형성과 해체의 변화 전망

1. 결혼과 동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율의 감소와 평균 초혼연령의 상승은 한국은 물론 많은 선진국에서 관찰된다. 이는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가치관이

약해지고 선택적인 측면이 증가하였음을 반영한다. 종단자료에 근거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례는 아직 소수에 불과함이 지적된 바 있으나(김두섭 외, 2005), 전반적인 변화의 추이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서 관찰되는 성별과 연령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2012년 사회조사 자료에 나타난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이 높다. 연령별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50세를 기준으로 차이가 관찰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표 6-2〉에서 제시된 전화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비중으로 구성되었는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31.7%, 여성 19.4%로 나타났다.

〈표 6-1〉 결혼에 대한 태도: 사회조사 결과

(단위: %)

구분	반드시 해야 함	하는 것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	하지 않는 것이 좋음	하지 말아야 함	잘모르겠음
전체	20.3	42.4	33.6	1.5	0.3	1.9
성						
남성	23.0	46.0	27.7	1.1	0.2	2.0
여성	17.7	38.9	39.4	1.9	0.3	1.8
연령						
13~19세	12.1	41.3	40.1	1.6	0.2	4.7
20~29세	14.9	42.8	38.0	1.5	0.4	2.3
30~39세	11.2	41.3	43.5	1.5	0.4	2.1
40~49세	13.4	41.8	40.9	2.2	0.4	1.2
50~59세	23.5	47.2	26.7	1.3	0.1	1.2
60세 이상	41.7	40.0	16.0	0.9	0.1	1.2

자료: 통계청(2012). 사회조사 결과.

〈표 6-2〉 결혼에 대한 태도: 전화조사 결과

(단위: %)

구분	반드시 해야 함	하는 것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	하지 않는 것이 좋음	하지 말아야 함	잘 모르겠음
전체	25.6	34.6	35.5	3.2	0.6	0.5
성						
남성	31.7	37.5	26.8	2.8	0.6	0.6
여성	19.4	31.7	44.4	3.6	0.6	0.4
연령						
19~29세	17.9	31.6	45.3	3.7	0.5	1.1
30~39세	19.4	32.0	43.2	4.4	0.5	0.5
40~49세	19.8	38.3	39.1	1.6	0.8	0.4
50~59세	32.4	38.2	24.9	3.6	0.4	0.4
60~69세	44.9	30.1	21.3	2.9	0.7	0.0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성별로 결혼에 대한 태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결혼의 부담이 많이 지워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남녀 간 불평등이 어떻게 조율되고 변화하는가에 따라 결혼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50세를 기준으로 관찰되는 확연한 연령별 가치관 차이는 앞으로도 결혼의 당위성이 계속 낮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것이 반드시 결혼에 대하여 반대를 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와 같은 결혼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의견은 연령에 관계없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결혼의 당위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반드시 결혼의 회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

서 관찰되는 평균초혼연령 상승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연령별 미혼율의 증가는 결혼은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결혼을 미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고 결혼을 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성별에 따라 큰 차별이 없다면, 결혼은 계속해서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1인가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라는 책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각종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반드시 인간관계의 소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혼자 사는 경우에도 여전히 연인이나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하여 끊임없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커뮤니티를 구성한다는 것이다(에릭 클라이넨버그, 2013). 이는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를 벗어나서 사는 경우에도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성은 유럽과 미국에서 관찰되는 동거로도 일부 설명될 수 있다.

동거는 많은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결혼과 동등한 합법적 결합으로 인정된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결혼의 제도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동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는 없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동거가 늘어나는 경향성이 소수 사례에 근거하여 보도되지만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최근 동거에 대하여 수행한 이연주의 연구(2008)에 따르면 2006년 사회조사의 20~59세 남녀 응답자 중 동거자는 1.4%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동거를 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가정하여도 낮은 편이다. 물론 동거율은 결혼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재 독신인 남녀의 동거율은 4%대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동일한 연구(이연주, 2008)에서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혼인신고 자료를 분석하여 동거 개시일을 파악한 결과 25~29세 여성 중 2.1%와 35~39세 여성의 14.1%가 혼전동거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혼한 사람들에 한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결혼으로 이어지는 동거 사례만이 파악되며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미룬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되어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동거 경험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한, 혼인신고자료에서 파악된 동거는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만 파악된다는 점에서 서양의 동거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동거에 대한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3〉을 통하여 201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동거에 대하여 반대하는 태도가 약 54%로 찬성하는 태도(46%)에 비하여 약간 높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으며, 40대 이상에 비하여 40대 미만의 찬성률이 높게 나타난다.

〈표 6-3〉 동거에 대한 태도: 사회조사 결과

(단위: %)

구분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전체	7.7	38.2	30.1	24.0
성				
남성	8.8	40.3	28.8	22.1
여성	6.6	36.2	31.4	25.8
연령				
13~19세	11.0	46.1	29.8	13.2
20~29세	12.9	48.3	26.8	12.1
30~39세	11.3	50.4	25.1	13.2
40~49세	6.3	37.3	31.3	25.1
50~59세	4.5	28.4	32.6	34.4
60세 이상	2.8	24.0	34.3	38.8

자료: 통계청(2012). 사회조사 결과.

〈표 6-4〉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의 태도

(단위: %)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전체	7.6	36.5	34.7	20.7	0.5
성					
남성	8.9	38.1	30.4	22.2	0.4
여성	6.3	34.9	39.1	19.2	0.6
연령					
19~29세	11.1	45.3	30	13.7	0
30~39세	9.2	46.1	28.6	15.5	0.5
40~49세	5.8	36.2	38.3	19.3	0.4
50~59세	6.2	25.8	40.4	27.1	0.4
60~69세	5.9	27.9	34.6	30.1	1.5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표 6-5〉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의 태도

(단위: %)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전체	5.2	40.9	32.6	21	0.3
성					
남성	5.6	45	28.8	20.2	0.4
여성	4.8	36.7	36.5	21.8	0.2
연령					
19~29세	8.9	44.2	32.6	14.2	0
30~39세	5.8	53.4	22.8	18	0
40~49세	4.5	43.2	36.2	16	0
50~59세	4.4	32	33.3	29.8	0.4
60~69세	1.5	27.9	39.7	29.4	1.5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표 6-4〉와 〈표 6-5〉는 전화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동거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와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 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약간 높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아직까지는 동거가 사회적으로 공식적·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통계로 집계되지 않지만, 동거에 대한 찬성도가 40% 가량 되고 젊은 연령일수록 찬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이혼과 재혼

한국의 2012년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은 2.3이고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은 4.7건이다(통계청, 2012). 과거 1970년대에는 조이혼율이 0.5 미만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2년 이혼한 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3.7년이며 혼인지속기간이 20년 이상과 4년 이하의 이혼이 유사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황혼이혼이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결혼 초기의 이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2012년 여전히 과반수 가량을 차지하였다.

이혼이 늘어나는 만큼 재혼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2000년대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결혼 건수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이며 한 쪽이라도 재혼인 경우를 포함하면 20% 가량을 차지한다(통계청, 2012). 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한부모가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전국에 미성년 자녀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약 57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중 어머니와 함께 사는 모자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의 부담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족형태는 재혼가족이며 이는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정의가 복잡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6-6〉과 〈표 6-7〉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조사 결과이다.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은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편이다. 나이가 젊을수록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낮아지지만 50세를 기준으로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재혼에 대한 의견은 중립적인 의견이 60% 가량을 차지하고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성별이나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40대 이상은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8〉에서 제시한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약간 높게 나타난다.

〈표 6-6〉 이혼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 결과

(단위: %)

구분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됨	이유가 있어도 가급적 이혼하면 안됨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음	잘 모르겠음
전체	13.3	35.4	37.8	10.9	2.7
성					
남성	15.4	38.7	33.6	9.3	3.0
여성	11.2	32.1	41.8	12.5	2.4
연령					
13~19세	8.6	31.7	40.9	11.9	6.8
20~29세	7.7	29.8	45.4	13.9	3.2
30~39세	7.6	32.4	45.7	12.2	2.1
40~49세	9.3	33.4	43.1	12.3	1.9
50~59세	15.0	39.4	33.7	9.8	2.1
60세 이상	28.1	42.9	20.7	6.2	2.0

자료: 통계청(2012). 사회조사 결과.

〈표 6-7〉 재혼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 결과

(단위: %)

구분	반드시 해야 함	하는 것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	하지 않는 것이 좋음	하지 말아야 함	잘 모르겠음
전체	1.3	18.1	61.1	10.4	2.8	6.4
성						
남성	1.8	21.8	59.5	8.0	2.3	6.6
여성	0.7	14.5	62.6	12.8	3.2	6.2
연령						
13~19세	1.1	15.4	60.8	6.8	2.8	13.1
20~29세	1.4	17.0	67.8	5.0	1.4	7.3
30~39세	1.0	17.1	67.3	7.9	1.6	5.2
40~49세	0.9	16.0	63.3	12.3	2.3	5.2
50~59세	1.4	18.3	57.8	13.3	3.5	5.8
60세 이상	1.8	23.1	50.9	14.5	4.8	5.0

자료: 통계청(2012) 사회조사 결과.

〈표 6-8〉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단위: %)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전체	4.8	36.6	38.6	19.0	1.0
성					
남성	3.4	31.9	38.7	25.0	1.0
여성	6.3	41.3	38.5	12.9	1.0
연령					
19~29세	7.4	38.9	35.8	17.4	0.5
30~39세	4.4	41.3	37.9	16.0	0.5
40~49세	5.3	43.6	37.0	13.2	0.8
50~59세	3.6	31.1	42.2	20.9	2.2
60~69세	2.9	22.8	40.4	33.1	0.7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별로 약간의 차이가 관찰될 지라도 이혼과 재혼에 대한 가치관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다. 물론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높긴 하지만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젊은 연령대의 허용도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이혼과 재혼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벡-게른스하임(2005)에 따르면 이혼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지면 실제 이혼율도 높아지며 이는 관련 정책의 수립으로 이어져서 이혼이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혼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관계 유지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혼의 경험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 전 동거가 늘어나는 경향성이 발생한다고도 주장하였다.

한국 역시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가치관이 허용적으로 변하였으며, 호주제 폐지와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 이혼가정을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가 수립되었다. 가치관의 변화와 정책 및 제도의 지원은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동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서양과는 달리 아직 동거가 공공연히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보호 전략으로 혼전동거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복합가족의 탄생은 서양에서 가족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과거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가 아니라 애정과 친밀감이 가족을 정의하는 핵심요인으로 등장하였다(벡-게른스하임, 2005).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처럼 혈연관계나 의무 혹은 책임이 아니라 애정과 친밀감을 중시하는 경향성은 애정과 친밀감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헤어짐이 가능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과거에는 의무나 책임감 때문에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폐해가 있었다면, 현재에는 감정에 기초하여 큰 제약 없이 쉽게 결혼생활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의 일부 상류층에서는 이혼에 대비하여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를 작성하는 예도 빈번해졌다. 이는 애정과 친밀감을 기초로 하는 현대 가족의 정의가 자칫하면 계약적인 관계로 변할 수 있는 역설적인 단면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위한 전화조사 결과, 응답자의 46.7%가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응답하였다. “조상을 같이 하는 피로 맺어진 모임”이란 정의는 29.1%로 2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도 가족의 정의가 전통적인 혈연 중심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혈연을 중시하는 경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혈연에서 벗어난 관계도 포함하여 가족의 정의가 유연하게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면서 가족의 정의가 보다 더 확장되고 포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족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 야기할 수 있는 제한점도 고려해야 한다.

3. 다양한 가족유형

동거,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재혼으로 인한 복합가족 뿐 아니라 현대에는 다양한 가족유형이 등장한다. 가족이 공간적으로 떨어져서 사는 분거가족과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공동체가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에서는 동성애 부부도 법적으로 인정되어 이들이 정자은행, 난자은행, 대리모 등을 통하여 자녀를 가져서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까지 동성애 부부 혹은 동성애 가족은 한국사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분거가족과 공동체 가족에 한해 논의하고자 한다.

분거가족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따로 사는 경

우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2013)에 따르면 2012년 사회조사 가구 중 분거가족의 비율은 19.6%였으며 이는 2010년보다 4%pt 정도 증가하였다. 이 중 배우자와 따로 사는 비율은 5.7%, 자녀와 따로 사는 비율은 16.3%였으며 가장 주된 이유는 직장과 학업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경우가 72.3%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자녀는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경우가 53.5%, 학업 때문이 38.2%이다.

분거가족의 증가는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 중 하나의 요인인 공동주거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분거가족에는 주말부부나 국내에서 단기간 떨어져 사는 경우와 국제적으로 장·단기간 떨어져 사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로 인한 기러기 가족도 분거가족의 한 예이다. 동일한 분거가족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사는 기간과 지리적 거리, 원래의 관계 등에 따라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의 질이나 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터넷, 화상통화 등 각종 통신기기의 발달로 떨어져 살더라도 단절되지 않고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미혼자녀와의 분거가 증가한 것은 1인가구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결혼 전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직장이나 학교가 같은 지역이나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분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족의 공동주거에 대한 개념의 약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공동체가족은 혼인과 혈연관계와 같은 기존의 가족을 정의하는 요인을 벗어나서 개별 가족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공동체가 해결하려는 개인이나 가족의 집합공동체를 의미한다(박민선, 1995). 이는 넓게는 육아나 돌봄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개인이나 가족들의 모임부터 좁게는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사는 집단을 포함한다. 좁

은 의미에서의 공동체가족은 대안가족의 하나로서 원 가족이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해체된 후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의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가족은 공식적인 통계로 집계되거나 조사된 적은 없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소개된 소수의 사례가 전부이다.

전화조사를 통하여 공동체가족의 증가가 야기할 것으로 생각하는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표 6-9〉에 제시되었다. 공동체가족이 증가하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30.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높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예상은 45% 가량을 차지한다. 공동체가족의 증가가 혈연 중심의 가족개념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을 부정적인 전망으로 본다면 공동체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령별 차이가 일관성을 띠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는 공동체가족인 실험적인 대안가족 형태로 등장하지만 보편적인 유형으로 보급되거나 받아들여지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9〉 공동체가족의 증가가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변화

(단위: %)

구분	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희박 및 가족관계 약화	공동체 중심의 폐쇄성과 집단이기주의 발생	공동보살핌으로 가족부양 문제 해소	공동체가족간 결속으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기타
전체	22.6	30.5	25.7	19.8	1.4
성					
남성	21.9	34.6	21.1	20.7	1.6
여성	23.3	26.4	30.2	18.9	1.2
연령					
19~29세	18.9	37.9	21.6	21.1	0.5
30~39세	22.6	26	30.3	20.2	1
40~49세	23.9	29.1	25.7	19.6	1.7
50~59세	21.2	33.8	26.1	17.1	1.8
60~69세	27.3	24.7	24	22	2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제3절 가족관계의 변화 전망

한국사회의 핵가족은 부부 중심의 서양과는 달리 부모-자녀 관계가 중심이었다. 이는 결혼과 가족이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한국적 특징에 기인한다. 개인 간의 애정과 친밀성에 기초한 결합이기보다는 가족 간의 결합으로 여겨지는 결혼을 통하여 부부의 연이 맺어졌고, 부부는 자녀를 위한 기능적, 도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는 부계가족주의에 근거하여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콜드웰의 부의 흐름 이론(wealth flow theory)을 적용하면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만큼 노후 부양과 같은 자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실하게 담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점차 개인 간의 애정과 친밀감에 기초한 결합이 등장하고 자녀의 노후부양이 확실하게 기대되지 않음에 따라 부부 중심의 관계로 변화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노후에 자식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준비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자는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광고에서 자녀의 결혼식날 부부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점차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투자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투자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굳건히 하려는 경향성이 드러난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6-10〉에 제시되었다. 연령별 차이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과거에는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반면 최근 젊은 연령일수록 부모로서의 책임을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난다. 자녀에 대한 무한책임에서 벗어나

서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자녀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이는 서양과 유사하다. 물론 이러한 가치관이 행동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며 기생독신과 같은 현상에서 나타나듯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예도 있다. 그러나 가치관이 변화하면 빠른 미래에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부모-자녀 관계보다는 부부 중심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생각된다.

〈표 6-10〉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범위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대학교 졸업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언제라도	잘 모르겠다
전체	17.6	37.9	12.0	19.3	12.2	0.7
성						
남성	19	39.5	11.5	15.1	14.3	0.2
여성	16.1	36.3	12.5	23.6	10.1	1.2
연령						
19~29세	28.9	33.7	12.6	8.4	15.3	1.1
30~39세	29.1	39.8	8.7	10.7	11.2	0.5
40~49세	14.8	46.1	14	14.4	9.9	0.8
50~59세	6.2	36.9	13.8	31.6	10.7	0.4
60~69세	8.1	27.9	9.6	36	16.2	0.7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전화조사 결과는 '부부보다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이다.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과반수를 넘어서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자녀가 삶에서 가장 우선을 차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가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앞으로는 과거처럼 부모-자녀 관계보다는 부부 관계가 가족관계의 중심을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고령화의 진전과 사회정책의 부족과도 일부 연관된다. 평균수명이 길어졌으나 사회적·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취약하고 과거처럼 자녀에의 의존도도 약해졌으니 노년기 부부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미리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의 중요성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 노후 준비에는 경제력이나 건강 뿐 아니라 부부가 공유하는 취미를 만들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준비도 포함된다.

〈표 6-11〉 '부부보다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하다'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르겠음
전체	9.0	23.1	53.6	14.1	0.2
성					
남성	8.5	24.4	52.4	14.3	0.4
여성	9.5	21.8	54.8	13.9	0
연령					
19~29세	7.9	33.2	48.9	10	0
30~39세	4.9	20.9	57.3	17	0
40~49세	7.4	17.7	59.3	15.6	0
50~59세	9.8	23.6	51.6	15.1	0
60~69세	18.4	21.3	47.8	11	1.5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결혼의 지연이나 이혼의 증가, 동거와 출산회피 등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결혼과 자녀의 중요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주의 경향이 증가하면서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는 결혼과 출산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고, 부모-자녀 관계보다는 부부간 유대감과 친밀감이 강조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4절 가족기능의 변화 전망

1. 자녀 출산

전통적인 가족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는 자녀를 출산하여 가계를 계승하는 것이었다. 부계중심의 가족주의 때문에 한국에서는 남아선호 사상도 강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정의가 변화함에 따라 자녀 출산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물론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이 자녀의 중요성의 약화나 출산에 대한 완전한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을 통한 출산만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출산이 가족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유지되고 있다. 장경섭(2011)은 한국의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개인주의 성향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강한 가족주의에 대한 역설적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자녀는 중요하고 자녀를 위하여 부모들이 모든 희생을 감내하며 자녀의 성공을 자신과 가족의 성공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러한 가족주의적 경향들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출산을 낮추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있는 편이 없는 편보다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포함한 긍정적인 경향성이 85%에 달한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여전히 자녀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2년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의 결과(2012)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기혼여성과 미혼남녀 모두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80% 전후로 나타났다.

〈표 6-12〉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꼭 있어야 함	있는 편이 좋음	있는 편이 없는 편보다 나을 것	없어도 상관없음	모르겠음
전체	22.5	31.8	30.4	15.2	0.1
성					
남성	27.2	34.1	27.0	11.5	0.2
여성	17.7	29.4	33.9	19.0	0.0
연령					
19~29세	21.1	32.1	27.4	18.9	0.5
30~39세	17.5	28.2	34.0	20.4	0.0
40~49세	19.8	30.0	34.2	16.0	0.0
50~59세	25.3	35.6	29.3	9.8	0.0
60~69세	32.4	33.8	24.3	9.6	0.0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자녀양육의 의미 혹은 자녀가 필요한 이유로는 전화조사 결과에서는 '가족결속 강화'가 42%,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이 37.5%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가계계승의 의미는 6.7%에 불과하였다.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2012)에서도 자녀가 필요한 이유로 심리적 만족감이나 가정의 행복과 조화가 중요하게 지적되었고, 가계계승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즉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자녀가 중요하긴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가계계승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삶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자녀를 출산할 것인지 혹은 몇 명을 언제 출산할 것인지 등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이 지는 위험부담이 커지고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협할 때에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장경섭(2011)은 '위험회피'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가족의 자녀출산 기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일단 앞서 살펴보았듯이 결혼과 자녀의 중요성이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혼외출산에 대한 인정은 당분간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자녀가 여전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낮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녀출산과 양육의 여건이 문제임을 반영한다. 즉 자녀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의 요건이 되도록 사회적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면 출산수준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담하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는 돌봄 정책에 대한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나친 경쟁위주의 교육투자, 자녀에 대한 지나친 몰입과 동일시와 같은 현상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사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애국심에 호소하여 국가를 위하여 출산을 줄이거나 늘리자는 과거 가족계획사업 방식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여건을 구성하고 이를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2. 돌봄의 기능

자녀와 노부모 돌봄은 가족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특히 사회적 돌봄 체계가 약한 한국사회에서는 자녀와 노부모 돌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여겨졌다. 가족의 돌봄 기능을 구성하는 두 가지 축 중에 노부모 돌봄에 비하여 자녀 돌봄 기능에 대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저출산 해결 방안의 일환으

로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보육정책이 활발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논의를 보면, 여전히 3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어머니의 양육이 중요하고 이 시기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이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남성들은 하루에 약 10분가량 만 돌봄에 투입한다는 것은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의 부담이 지어짐을 알 수 있다(통계개발원, 2012). 이러한 돌봄 부담이 결과적으로 출산 회피로 이어짐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남성은 가계부양, 여성은 가사와 돌봄'과 같은 전통적인 이분법적 분담에 대한 견해는 약화되었지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각각 따로 질문하였을 때에는 여전히 남성은 주된 가계부양의 책임을 지고 여성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임이 전화조사를 통하여 밝혀졌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는 각종 보육정책을 통하여 자녀양육 기능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녀양육 기능은 가족의 핵심축으로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부모 돌봄의 기능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며 함께 사는 경우는 5%에 불과하였으나,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만 살아계신 경우 동거율은 높아서 각각 11.5%, 17.1%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가구주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거율은 현저히 낮아진다. 이는 여전히 노부모 돌봄은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고령자통계 보도자료(2012)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2012년 총 가구 중 6.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00년 3.3%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2035년에는 노인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

망하였다. 노부모와 같이 사는 경향이 줄어들면서 부모가 사별을 하여 홀로 남은 경우에도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로 살지만 가까이 살면서 빈번하게 접촉하고 왕래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멀리 살더라도 자주 연락을 하면서 서로 교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조사 결과(2012년)를 보면, 과반수 이상이 따로 살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연락은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90% 이상이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통화를 한다.

그렇다면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노부모 돌봄의 주된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의견은 2002년 70%에서 2012년 33.2%로 낮아졌다.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2년 18.2%에서 2012년 48.7%로 증가하였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2002년 9.6%에서 2012년 13.9%로 늘어났다. 과거에는 가족 중에도 장남이 노부모 돌봄의 책임을 주로 맡았다면 2012년에는 아들 딸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4.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전화조사 결과도 유사하다. 가족이 중요한 돌봄 주체로 인식되지만 장남이나 아들 중심이 아니라 모든 자녀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으며 스스로 해결하거나 정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도 관찰된다. 노부모 돌봄의 책임이 전적으로 가족, 자녀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앞서 3절에서 논의한 바 있는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와도 연결된다.

그러나 노부모에 돌봄에 대한 주된 책임이 가족에 집중되는 경향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가족의 노부모 돌봄 기능은 중요하게 인식된다. 〈표 6-13〉을 살펴보면 성인자녀가 노부모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 '노부모가 원할 경우에 책임을 져야한다'

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경제력이 없을 때, 능력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7.0%, 21.9%, 16.8%로 나타났다.

〈표 6-13〉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책임 수준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노부모의 능력 여부를 떠나 무엇이든 책임져야 한다	노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책임져야 한다	노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 책임져야 한다	노부모가 원할 경우에 책임져야 한다	모르겠다/ 기타
전체	16.8	21.9	27.0	31.9	2.4
성					
남성	21.8	22.4	20.8	31.3	3.6
여성	11.7	21.4	33.3	32.5	1.2
연령					
19~29세	22.6	23.7	16.8	35.8	1.0
30~39세	21.8	20.4	21.8	34.5	1.5
40~49세	14.8	22.6	29.6	30.9	2.0
50~59세	12.4	17.3	34.2	32.4	3.6
60~69세	11.8	27.9	32.4	23.5	4.4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가족의 돌봄 기능은 과거에 비하여 사회화 되었다. 그러나 변화의 정도는 자녀 돌봄보다는 노부모 돌봄 기능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아무리 기능이 사회화되고 분담된다 하더라도 자녀 돌봄의 주된 기능은 가족에서 쉽게 벗어날 것 같지 않다. 반면 노부모의 경우는 같이 살면서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가족과 사회, 그리고 정부가 분담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3. 경제적 및 정서적 기능

가족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경제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을 꼽을 수 있다.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지 않았던 농경사회에서는 가족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생산적 기능은 약화되고 소비적 기능은 중요하게 남아있다. 최근에는 안전한 먹 거리를 위하여 혹은 귀농을 통하여 음식에 한해서는 생산기능을 부활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생산기능이 약화되었다.

정서적 기능은 가족의 여러 가지 기능 중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혼증가와 출산감소, 그리고 1인가구증가로 돌봄 의식이 약해짐에도 결코 사람들의 관계 형성의 욕구나 정서적 욕구가 약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은 앞서 언급하였다. 결혼과 자녀, 가족이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돌봄의 기능도 상대적으로는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전화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족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하고 가족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애정, 안식처, 따뜻함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이라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임은 가족의 정서적 기능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족의 정서적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5절 가구·가족 전망 및 정책적 의미 분석

앞으로 한국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결혼의 지연과 회피 및 저출산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과 출산의 지연 및 회피는 서양의 연구에서처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설명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가족주의적 특성이 지닌 역설적인 결과로도 해석된다. 가족에게 주어진 지나친 부담, 가령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와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이 주로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성 즉 결혼과 출산의 지연 및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장경섭, 2011). 결혼으로 얻게 되는 확대가족 예를 들면 시댁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 등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성별 차이를 야기하기도 한다(김혜경, 2013).

동거와 무자녀 부부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어지는 지나친 책임과 부담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 아직까지는 동거가 공공연히 드러나지 않고 유럽처럼 결혼과 동등한 공식적인 제도로 인정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동거는 늘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허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자녀 부부는 소수에 불과하나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도된다. 가치관 조사에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 긍정적인 것을 감안하면 자발적인 무자녀 부부보다는 불임에 의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과 출산을 지연하는 경향이 늘어나면 불임에 의한 무자녀 부부

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분거가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혼과 재혼, 이로 인한 한부모가족과 복합가족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 비하여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높아졌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실시되고 있다.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면 이로 인해 구성되는 복합가족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 기능 중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기능은 많은 부분 사회화 될 것이며 특히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의 경우에는 요양원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저하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실질적으로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적 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인 돌봄 장치가 더욱 체계적으로 갖추어진다면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사회에서 상당 부분을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자녀 양육은 사회화되더라도 여전히 가족의 기능이 강하게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은 약화되어 일정 연령이 되면(예: 대학생) 자녀가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현상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모들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 기간을 단축해야만 하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 자녀 중심의 가족관계가 서양의 부부 중심 가족관계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길어진 빈 둥우리 시기(empty nest)와 은퇴 후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되는 최근의 현상도 앞으로 부부 중심의 관계를 야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1인가구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의 경우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도 자녀와 같이 살기보다는 혼자 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20~30대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1인가구를 형성하는 예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혹은 홀로 된 노인들이 함께 공동체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변화들 중에는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인 경우도 있으나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연기 및 회피하는 것이라면 개인적 선택의 결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용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결혼과 출산을 원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는 경우라면 결혼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동거, 분거가족, 무자녀가족, 1인가구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혼과 재혼, 복합가족과 한부모 가족 등이 늘어나는 현실이라면 이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보다도 더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은 가족의 변화를 직시하고 그것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정의와 관점을 개방하고 다원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가족의 등장 및 가족의 변화가 '사회의 방향성 상실'(장현섭, 1994) 혹은 '가족의 종언'(장경섭, 2009)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다원성과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이 확산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서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관점에 따라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다원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다. 서구에서는 '규범으로서의 가족의 다양화(family diversity as the norm)'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족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혈연과 혼인에 기반 한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보다는 가족을 유연하게 재 정의하고 있다(김두섭 외, 2005).

Ostner(2001)는 가족을 친밀감, 신뢰, 상호의무, 일정기간 이상의 지속성 등에 근거한 모든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박민자(1995) 역시 가족형태가 어떠하든 장기간에 걸쳐 정서적으로 연루되어 서로 돌보고 지속적인 사랑과 친밀성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가족을 낳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가족 자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친밀감과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공통적이지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합하고 만족을 주는 가족생활을 제공하는 가족형태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가족'으로 합의하고 공유하는 가치·규범·재화는 모두 다를 수 있으며(전귀연·구순주, 1998) 특정한 종류의 헌신과 역할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선택'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현실의 다양성, 개개인의 욕구 및 처지의 다양성, 행복추구 방법의 다양성 등을 무시하고 특정한 가족형태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선호한다면 그와 다른 가족들과 이를 구성하는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차별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실의 다양한 가족형태들이 모두 동등한 '가족들'로 인정되어 이들 가족이 안고 있는 저마다의 문제들, 특히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가족에 대한 유연한 재정의가 담론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법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제7장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제1절 가구·가족변화 관련 정책방향

제2절 가구·가족변화 관련 정책적 대응방안

7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제1절 가구·가족변화 관련 정책방향

산업화와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을 통해 한국가족은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으며, 주된 변화양상인 가족규모 축소와 세대구성 단순화 등이 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추세로 가족의 사회구성원 충원 기능은 물론 가족 돌봄의 기능 약화도 예상된다.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욕구 증대 및 고용불안정 심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여러 구조적 요인에 의해 맞벌이 부양자 모델로의 전환이 심화되고 가족가치관의 약화로 이혼 및 재혼 급증, 나홀로 가구 증가로 다양한 가족이 확대되면서 가족관계의 약화와 가족 돌봄의 공백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구·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 및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변화에 대응하여 보편적 부양모델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가족안정성 및 다양성, 통계 및 조사도구 개선 등 가족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다변화되는 가족유형에 대응하여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생애주기별로 가족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유지를 위해 가족형성 및 부양인구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다양한 가족생활주기를 포괄하는 가족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가족화·핵가족화에 따른 바람직한 가족관계 모색을 위해 양성평등적 부부관계 확립,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새로운 관계 정립, 가족응집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족돌봄·부양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돌봄 망 확충 및 양육부담 완화, 가정 내 양성 평등적 돌봄문화 조성 및 갈등완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가족해체에 대응하여 가족해체를 최소화하고 경제·심리·정서적 등 취약화를 예방하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하며, 다양한 가족의 보호기능 강화 및 소가족화에 따른 주거 공간 구조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가구·가족변화 관련 정책적 대응방안

1. 가족변화관련 패러다임의 전환 및 기반마련

가. 보편적 양육자 가족모델 지향의 가족정책 모색

최근 선진국의 가구·가족변동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주목되는 점은 보편적 양육자 가족 모델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이다. 보편적 양육자 가족 모델이란 Fraser(1994)가 제시한 복지국가 유형의 네 가지 중 하나이다. Fraser는 복지국가에서 상정하는 가족모델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the male breadwinner model), 양육자 등가 모델(the caregiver parity model),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the universal breadwinner model), 보편적 양육자 모델(the universal caregiver model)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따라 남성부양자, 여성양육자의 분담을 따르는 가족모델이고, 양육자 등가 모델은 전통적 성역할 분담을 따르되, 양육자의 돌봄 가치를 국가가 급여를 통해 보상하는 모델이다.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은 남녀모두 노동시장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양육은 국가나 시장영역으로 사회화되는 모

델이고, 보편적 양육자 모델은 남녀 모두 일과 양육에 참여하고 양자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인정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보편적 양육자 가족 모델이 지향되어야 하는 이유는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증가하면서 부모 중 일방이 생계부양자와 양육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모델은 가족의 안정성이 높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비교적 낮은 사회에 적합한 분담체계이다. 가족의 안정성이 높으면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분담이 가족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효율적 기제가 될 수 있다(Becker, 1979). 그러나 가족의 안정성이 낮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후기 근대사회에서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모델은 가족 빈곤, 돌봄의 공백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진다. 즉 전통적 성역할 분담에 익숙해져있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돌봄과 경제활동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하고,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빈곤과 돌봄 공백이 아동 및 가족의 복지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가구·가족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가족정책은 보편적 양육자 가족 모델을 지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의 양육권과 노동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모두 일정한 기간의 출산휴가(부성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30일을 아버지에게 출산휴가로 제공하는 '아빠의 달' 제도는 아버지들의 양육자 역할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강제성이나 의무화 절차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불투명하다. 제도 도입 뿐 아니라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나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나. 가족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가족정책 확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을 시행할 때 특정한 가족유형을 모델화하거나 권장하는 대신, 가족형성의 다양성이나 가족유형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들 국가의 가족정책은 가족의 안정적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보는데, 이는 가족관계의 해체가 가족구성원,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안정성 보장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Cherlin, 2010).

가족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과 정서적 기반 두 가지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 기반을 위해서는 가족 갈등이나 해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적 문제에 대해 현실화된 기초생활보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능력을 판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양의무자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포함된다. 부양의무자가 최저생계비 130%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실제 부양을 받는지에 관계없이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2012년부터는 노인,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130%에서 185%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185% 기준 역시 현실성이 낮으며 이를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혼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양육비 분담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현재 자녀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와 자녀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차나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가족의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은 현재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가족상담과 가족교육, 그리고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의 사업을 내실화하고 확대하여 가족문제를 예방하거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혼 전 가족에게 이혼상담, 자녀양육 및 공동양육권 행사, 면접교섭권, 자녀양육비 분담에 대한 사전 조정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혼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이혼 후 가족에게도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해체 후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상의 조속한 적응을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 다양한 가족유형을 고려한 선택권 확대

최근 가구·가족변화에 따라 가족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단일한 정책으로 모든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우며, 여러 유형의 가족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 또한 어렵다. 따라서 단일한 정책을 보편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가족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의 다양성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유아기 자녀의 돌봄을 지원할 때 시설위주의 보육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친족양육 세금공제[6], 아이돌보미 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가족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

6) 친족양육 세금공제는 자녀를 돌봐주는 친족(예. 조부모)에게 드리는 비용을 자녀양육에 따르는 비용으로 간주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 비용을 받는 친족은 소득 신고를 해야 함.

으며, 가족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보육정책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선택권이 없는 단일한 정책은 그 서비스에 대한 가수요(假需要)를 유발한다. 보육료 지원만 있는 경우와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있는 경우에 가족들의 선택 행동은 다르게 나타난다. 2013년 3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가정 중 일부가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영유아 중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만 0세는 6.2%p, 만1세는 11.1%p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3.25).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휴직 기간과 급여 수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핀란드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시 44주의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의 급여를 받거나 56주 동안 8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간과 급여에 대한 최저 기준을 제시하여 부모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선택권의 확대가 자칫 서비스의 민영화 및 시장화, 가격 경쟁을 통한 하향평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족정책의 선택권 확대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탈 가족화하거나 가족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대신 가족의 다양한 가치관과 욕구를 인정하고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의 구조와 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 향후 가족정책은 다양한 정책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라. 가족의 다양성 수용 강화

가족규모 축소와 세대구성 단순화 등으로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주의 가치관 확대, 가족가치가 약화되면서 가족 결속력 약화로 1인가구, 이혼가족 등 가족해체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들 구조적 결손가족은 취약가족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응하여 '건강한 가정'이라는 의미는 단지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만 강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가족의 기능적·관계적·가치관적 측면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은 가족의 구조적 해체가 문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이혼은 가족의 기능·관계·가치관 측면에서 가족구성원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혼가족 등 해체가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이들 가족에게 있어서 고통을 초래하며, 문제가족으로 간주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가구·가족의 급격한 변동과 함께 구조적 결손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는 부부중심이 보편적인 가족형태라는 인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가족의 포용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가족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되며, 일환으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 가구·가족 변화 파악을 위한 통계 및 조사 도구 수정

OECD FD 통계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식적인 통계에서 법률혼 및 동거가구, 한부모가구 등을 주요 가구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률혼과 동거를 구분하지 않고 커플가구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통계 지표에서 법률혼 및 동거가구와 한부모가구를 구분하여 각각 통계치를 제시함으로써 이들 가구를 별도의 주요한 가구유형으

로 다루고 있다. 동거가 사실혼으로서 인정되고, 동거 관계에서도 자녀를 출생하고 사회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거의 차이는 혼인증명서의 유무 뿐 이라고도 할 수 있다(Hansson, 2011:25). 이 외에도 독일이나 핀란드에서는 부분적 동거(LAT, Living apart together; LTA, Living together apart)도 새로운 가구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양친부모가 모두 있는 가구에 비해 사실혼(동거)이나 다른 파트너십 유형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한부모가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가족·가구유형들이 규범적으로 수용되는지와 별개로 이러한 가족·가구유형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구조사 및 사회조사에 포함시켜 실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가구·가족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및 조사도구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로 보편화되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2. 가족변화관련 법·제도 개선

가. 다변화되는 가족유형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최근 우리나라의 가구변동은 개인주의화에 따른 자녀분가 현상과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만혼현상, 이혼율의 증대 및 저출산 등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1~2인 가구 중심의 소가족화와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중심의 가족형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소가족화·핵가족화는 형태적으로나 관계적 측면에서 개별화

개인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혼의 제도적 지위약화 및 집합으로서의 가족 중심성보다 개인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가족의 다양성과 함께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배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다변화되는 가족형태는 다양한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 주거정책 등 주요 사회정책은 가구 및 가족변화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기존 제도는 4인 가구 중심으로 설정되어 현 가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2인 가구의 특성과 욕구가 배제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1~2인 가구가 절반을 차지하므로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기존의 4인 가구에 기반 한 각종 사회정책의 지속여부를 진단하고 2인 이하 가구에 대한 정책기조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급격한 가족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사회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중립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 대상도 2인 이하 가구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기능 확대

우리 사회는 가족해체, 다문화가족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라는 다양한 구조적 환경으로 인해 가족문제는 가족의 구조가 아니라 관계적 특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결혼의 상품화로 인한 도구적인 가족가치의 추구,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로 인한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적응성의 약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식 약화,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의 단절과 경제적 가치에 기초한 가족관계 등 가족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과 이기주의적 태도 등이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누적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경제, 노동, 의료 등의 정책과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은 가족원들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들이다. 그럼에도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정책대상이 전 생애주기별 가족 대상이 아니고 대부분이 구조적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며 콘텐츠도 가족상담 및 교육이 수행되고는 있으나 일부 생활주기에 편중되며, 사전 예방적 접근보다는 사후치료적인 정책에 집중되어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향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노출된다.

따라서 불안전한 사회안전망을 대신하는 가족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가족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또 다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가족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족관련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일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재검토되고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확충과 프로그램의 확대 등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족형성 약화 및 주기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대응방안 모색

가. 미래지향적 가족문화 모색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개인주의가치관, 소가족 가치 확산과 함께 고용과 소득불안정,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과 양육 인프라 미흡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결혼과 출산 등 가족형성 가치관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맞벌이 가족 증가, 가족결속력 약화 등으로 가족갈등 심화, 이혼 허용적 규범증가로 빠른 속도로 가족해체가 증가추세이다.

건강한 가정형성 및 유지를 위해 결혼과 출산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및 보상 확대,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민주적 가정생활 정착을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함께 양성 평등적 부부관계 및 생활양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환으로 결혼생활과 가족제도에서 각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우리나라 가족문화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 평등적 가족문화와 '시(媤) 가족' 스스로 변화를 위한 또는 '시(媤)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복잡한 가족관계를 완화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족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결혼을 사적(私的) 영역으로 보기 보다는 가족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여전히 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족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문화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나. 출산정책의 재검토 및 출산 저해 요인 조사 및 분석

본 연구 분석 결과, 출산지원 여건이 마련되어도 향후 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2010년 64.7%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정책의 방향이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나, 출산정책으로 해결 되지 않는 출산 저해 요인이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정책의 재검토를 통한 출산정책의 개편 및 출산을 저해하는 개인적·사회적·문화적 요인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함께 출산과 자녀양육이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결혼문화 변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필요

출산 지연 및 저하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결혼의 지연과 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혼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결혼예식의 간소화를 위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이 집안간의 결합이라는 의식이 남아있으며 결혼비용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과거에 비하여 결혼의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높아지고 부부간에 친밀성이 강조되면서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은 약화되었다. 반면 결혼 준비과정과 비용은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며, 서양처럼 간소하게 출발하여 결혼 당사자들이 가꾸어 가기 보다는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성대한 출발을 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가치관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노력(예: 홍보와 교육 등)이 뒷받침 되어야 결

혼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결혼의 지연 및 회피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혼 후 여성에게 지워지는 자녀양육에의 부담, 시댁 관계와의 책임 및 의무 등도 변화되어야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남성의 자녀 양육 참여와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정책이 보편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라. 부양인구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

최근 1인가구 및 다양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저출산 문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결혼한 가족의 이상적인 자녀수도 3~4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5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자녀 1~2명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우리 사회의 저출산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 가치관의 확대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영향을 주게 되어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 및 부양인구의 감소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혼 및 출산은 개인적 선택으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개입되어도 그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므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부양인구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 다양한 가족생활주기를 포괄하는 가족정책 확대

우리나라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중[7]에서 보육·가족·여성분야는

3.3%에 불과하여 타 영역에 비해서 가장 낮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통해 실제 가족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012년 예산에서 가족생활주기별 맞춤형 복지예산은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확대,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에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시 내는 본인부담금 등에 주로 사용된다.

또한 맞춤형 복지의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각 가족생활주기별 중요한 정책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은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대이면서 가족에서도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불안전성과 평등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세대이다. 따라서 중장년기의 가족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및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스트레스 대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대상은 전 연령에 걸쳐서 다양함에도 실제로 일가족양립을 위한 보육정책의 대상은 맞벌이가족 중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정책이 출산장려정책의 틀 내에서 제공되기 때문으로 핵가족 형태의 맞벌이 가족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령층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가족양립정책은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중심의 정책에서 다양한 생활주기를 고려한 정책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김유경 외, 2011).

또한,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길어진 노년기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전반을 통해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비

7) 2011년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예산은 92조로 2010년보다 6.4%가 증가하였으며, 세부 예산은 공적연금 31.4조, 주택 19조, 노동 12.8조, 기초생활보장 8조, 보건 7.8조, 노인장애인 6조, 보훈 4.1조, 보육가족·여성은 3조로 구성됨.

노인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및 여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은퇴설계를 통해 수용성을 제고한다(김유경 외, 2011).

4. 소가족화·핵가족화에 따른 바람직한 가족관계 모색

가. 양성평등적 부부관계 확립

핵가족화 현상과 함께 가족주기에 있어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점차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성 평등적 부부관계 확립을 위해 가족유형 및 가족주기별로 부부관계, 부모역할 관련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 평등적 부부관계 인식을 개선한다.

또한 부부간의 평등한 역할공유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여가시간을 부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이나 사회교육기관 등을 통해 부부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 근로시간의 축소, 남성의 육아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나. 가족주기확대에 따른 성인자녀와 노부모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

성인자녀가 독립하는 가족축소기가 늦어지고 부모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종전에는 노부모가 집안의 어른으로서 경제적 및 정서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최근 노부모 부양 기피, 노부모 학대 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노부모를 유기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올바른 노부모-성인자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의존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기관 등을 활용하여 가족관계 교육 및 소통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정립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하고 부모자녀 관계 스트레스 및 갈등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 소가족·핵가족시대에 가족응집력 강화

전통적 확대가족과는 달리 고립화된 핵가족(isolated nuclear families)에서는 가족갈등이 야기될 경우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기제가 없어 감정적 표출이 쉽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가정폭력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가족갈등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가족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가족 내에 발생하는 주된 문제는 가족구성원의 건강, 직장 및 학교적응문제,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 자녀의 결혼, 부모의

은퇴 및 죽음, 이혼, 질병 및 실직 등으로 이와 같은 위기가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상담 및 치료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다른 한편, 가족응집력은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양호할 때 높으므로 가족응집력 제고를 위해 가족특성을 반영한 가족관계 향상과 함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교육 및 전문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의사소통 가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환으로 가족 지원기관 및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부부교육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그리고 가족단위의 교육 및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기관 중심의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개입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및 스트레스 치료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5. 가족돌봄 및 부양기능 강화를 통한 가족안정화 제고

가. 자녀양육 및 돌봄 기능 강화

소가족화·핵가족화 시대에 우리사회의 자녀양육 환경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적극적 역할을 하기 보다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변질되었고, 부모는 비용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이로 인해 자녀가 부모와 보낼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아동양육 지원은 돌봄의 사회화 관점에서 보육시설 중심의 양육이나 금전적 지원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에 치중하였다. 그러

나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돌봄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므로 가족 내 돌봄과 관련된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아동보호 및 발달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조기중재 및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가정방문, 조기교육 및 문해력 프로그램, 사회성 및 의사소통 발달지원, 부모역할 교육 프로그램, 아동영양 등 5가지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부모와 가족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발달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민간, 이용연령, 프로그램 및 이용시간 등에 따라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돌봄망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양육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의 노후생활 준비 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노인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일환으로 양육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 그리고, 양육비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이 크므로 취학자녀와 대학생의 양육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나. 소가족·핵가족시대에 돌봄 노동의 성별공유 인식 확대

전통적으로 돌봄 노동은 여성이 전담해왔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전형적인 성역할 분담이 약화되고 있지만, 돌봄 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는 돌봄 노동이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닌 남녀 모두에게 공

평한 양육 책임을 인지하고 확산시키고자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부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돌봄 노동 관련 정책이 미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마련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남녀가 평등하게 돌봄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와 정책 마련, 사회적인 가치관 교육은 물론 조직과 가정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여건 마련 및 실행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우리가족의 성역할의식은 뚜렷하여 성불평등적인 보수성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소가족·핵가족화 및 맞벌이 가족에 대응하여 가족관계 증진 및 합리적인 돌봄 역할 분담을 위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등한 양육문화를 조성하는 교육, 이벤트 등의 다양한 기회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방안

본 연구 결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으로 인해 돌봄 제공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하면 가장 큰 문제로 부각 되었다. 이는 돌봄 제공자의 정신 및 신체건강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돌봄 제공자가 돌봄 필요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여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 될 수 있다.

물론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위해 활동보조인 등의 바우처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지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돌봄 제공자를 위한 치유 또는 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돌봄 제공자를 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 노부모 돌봄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필요

노부모 돌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성질병 노인의 경우에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나 단기 보호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에 큰 이상이 없으나 사별하여 혼자 된 노인들이나 부부가 함께 살지만 자녀들과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은 부유층을 위한 실버타운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보호센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산층노인을 위한 실버타운 조성을 활성화 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이 함께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남녀가 함께 분담하도록 가치관 변화 교육과 실질적인 부양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6. 가족해체와 미래 다양한 가족의 대응방안 모색

가. 가족해체 최소화 및 취약화 예방

최근 급속한 가구·가족변동으로 소가족화·핵가족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가족결속력 약화와 이혼 등의 허용이 높아지면서 이혼·별거 등 가족해체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족해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가족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지지 제고

정책이 필요하다. 이혼직전의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의사소통 및 가족지지를 위한 정보교환 및 친교활동에 의한 가족유대망 형성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자조모임을 통한 이혼·별거 가족의 어려움, 갈등 및 위기극복 사례, 자녀양육 정보 등을 공유하고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여 이혼생활 적응력을 제고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체된 가족의 기능 제고를 위해 해체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고용안정, 양육부담 완화 등의 정책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녀를 가진 한부모를 위한 일자리 정책, 양육지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나. 해체가족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심리·정서적 유대강화

소가족화·핵가족화 및 개인주의 확대, 이혼 허용적 사회문화 등으로 이혼·별거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해체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해체가족은 가족 간에 역할 갈등을 비롯하여 직장 및 가정생활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안, 우울, 소외감에 시달리고,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무력감, 자신감 결여, 절망감, 사회로부터의 거부감 등을 느낀다. 특히 해체를 경험하면서 약화된 가족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자녀의 사회부적응 문제나 가족구성원 간의 심리적·관계적 갈등의 문제 등과 결부될 때 가족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므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해체가족을 대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및 치료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 한다. 또한, 해체가족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해체를 전후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를 받도록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해체 원인이 유사한 가족들이 모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심리·정서적 공황으로부터 회복되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다. 해체가구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 마련

이혼 및 재혼의 증가로 인한 한부모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 한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성 한부모가구와 여성 한부모가구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여성 한부모가구는 경제적인 취약성을 고려하여 취업 알선 및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남성 한부모가구 역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복합가족이 늘어나면 이러한 가족들이 가족관계를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한편, 최근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기존 정책이 저소득층 노인 1인가구에 집중되었다면 다양화된 1인가구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적인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 가령 고학력 전문직 여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산층 이상의 노인 1인가구는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 구축 등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라. 소가족·핵가족화에 따른 다양한가족의 보호기능 강화

인구 및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구형태 및 가족구조의 분화로 한부모 가족, 여성가구주 가족, 20대 독신가구, 노인 단독가구, 1인 가구, 새싹가정 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1인 가구는 주로 도시지역에서는 미혼자들에게서, 농촌지역에서는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며, 특히 농촌지역의 50~60대 여자들의 1인 가구주 비율이 매우 높다. 농촌지역의 노인 1인가구, 특히 노인독거가구의 경제적 곤란은 심각하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보살피는 가족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신체적 및 정서적 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해 단독가구주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보호제도가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나홀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충 및 보완이다. 선행적으로 개별노인에 대한 경제적 상태와 건강, 동거 및 비동거 친·인척과의 관계 등 자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자원정보에 따라 노인의 특성 및 욕구 대응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그리고 새싹가족의 보호를 위한 지역단위의 돌봄 지원의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치매노인의 증가가 예상되어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간호휴직제도의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거는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공식적인 관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보호가 어렵다. 그러나 점차 동거가 늘어난다면 동거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거를 하다 여성이 임신을 하였으나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미혼모 출산이 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마. 다양한 가족을 위한 주거 공간 구조 개편 방안 마련

다양한 가족의 증가는 가족유형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1인가구부터 공동체 가족에 이르기 까지 가족의 형태는 진화하고 있지만, 현 주택의 구조나 주택정책은 주거비용을 지원하거나 주택을 공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최근 1인가구나 공동체가구가 증가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공유하거나 또는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주거 공간을 다양한 가족이 나누어 쓰면서 거주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은 많지 않아, 주거비용 지원과 더불어 주거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든스, 앤서니(1996).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배은경, 황정미 역, 새물결.

김겸효, “1인가구를 위한 도시주거 계획 : 선택목록과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03.

김두섭 외(2005).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김두섭(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권 1호, pp. 25-56.

김승권 외(2000).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2005).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 외(2005).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철 외 2인 (2011).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김유경 외(2011). 중산층가족 복지 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외(2012).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행신 · 이영호,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4권 제8호, pp. 59-67, 1998.

김현진 · 김학민 · 안옥희, “단독가구 고령자가 거주하는 독립주택의 주거환경 실측”,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표논문집, 제11권, pp. 91-95, 2000.

김혜경(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IMF 경제위기 세대의 가족주의와 개인화. 한국사회학, 47권 2호, pp. 101-141.

김희자(2008). 서구의 가족법 · 가족정책의 변화와 포스트모던 가족 모형. 경제와사회, 통권 제78호, 2008. 6, pp.194-222.

네이버 두산백과사전에서 (2013. 6. 10 인출).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54247&mobile&categoryId=200000141

문소정(2008). 한국가족 다양화담론의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47(2), pp.73-107.

바우만, 지그문트(2009). 액체근대. 이일수 역, 도서출판 강.

박민선(1995). 다양한 가족생활, 가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서울: 경문사.

박민자(2002). 신소설에 나타난 혼인: 혼인의 의미, 정혼과정, 혼인의 형태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8권 0호. 2002 pp.131-159

박은아,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벡-게른스하임. 2005.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박은주 역, 새물결.

변미리·신상영·조권중·박민진(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서수경(2002). 서구의 " 포스트모던 가족 "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권 1호. 2002 pp.19-37

서용석 외(2011). 미래환경스캐닝을 통해서 본 가족환경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진용, “이제는 1-2인 가구 수요를 감안한 주택정책을 선택할 시기다”, 한국감정평가협회, 통권 86호, 2008.

심영희(2011). 21세기형 공동체 가족 모델의 모색과 지원방안: 2차 근대성과 개인화 이론의 관점에서. 아시아여성연구 50권 2호, pp.7-44.

안호용·김홍주(2000). 한국 가족 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사회 제3집.

양옥경(2005).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지원체계구축 및 정책개발 방안. 보건복지포럼.

에릭 클라이넨버그(2013).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 안진이 역, 더 퀘스트.

여성가족부(2005). 제1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옥선화, 진미정(2011).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의 세대 비교: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4), 77-86

유영주(1993). 가족학이란, 가족학, 한국가족관계학회편, 하우출판사.

이연주(2008). 동거와 한국가족.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31권 2호, pp. 77-100.

이영자 · 김태현,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19권, 제1호, pp.79-93, 1999.

이지순 외, "신수요 계층의 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계획 방안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3권, 제4호, pp.53-60, 2002.

이진숙, 김태원(2007). EU국가들의 가족정책의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 17권 제1호.

장경섭(2009). 가족·생애·정치경제(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작과비평사.

장경섭(2011).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23(2), pp. 1-23.

장현섭(1994). 가족의 미래.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장혜경 외(2011).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외(2012).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경희 외 7인(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창수(1997).

주택산업연구원, 1인가구 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 활성화 방안, 2007.

진미정(2012). OECD Family Database 지표 분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범위와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최재율(1983). 현대가족의 가족문제와 가족윤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논문집 28.

최경석 외(2003).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최연실(2013). 한국가족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변화 양상, 맥락 및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권 4호, pp. 41-65.

케인, 매들린(2003). 무자녀 혁명. 이한중 역, 북키앙.

통계개발원(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2. 통계청.

통계청(2012). 2012 혼인이혼조사 보도자료.

_____(2012). 2012년 사회조사결과 보도자료.

_____(2012). 2012년 고령자통계 보도자료.

_____(2013). 2012년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가족정책전략센터(2012). 1인가구의 증가와 가족정책조명. p.111.

함인희(1995). 사회변화와 가족, 가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황미리, "1인 가구 주택계획을 위한 거주자 주요연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Baran M. L., Diehnelt, E. E., & Jones, J. E. (2013). *Family policies in Norway*. In M. Robila (ed.), Handbook of family policies across the globe. New York: Springer.

Beck-Gernsheim, E. (2002). *Reinventing the family: In search of new lifestyles*. Cambridge: Polity Press.

Beck, U. & Beck-Gernsheim, E.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Publication.

Chang, K. S. and M. Y. Song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39-564.

Cherlin, A. J. (2010). *The marriage-go-round: The state of marriage and the family in America today*. Vintage.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European Commission (2002). *Family benefits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Unit E.2.

Fraser, N. (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591-618.

Hansson, L. (2011). Towards a definition of the family? In Farrer, L., & Lay, W. (Eds.), Spotlights on contemporary family life. Familyplatform. *Families in Europe* Vol.2.

Hantrais, Linda(2004). *Family Policy Matters: Responding to Family Change in Europe*, The Policy Press

Jokinen, K. & Kuronen, M. (2011). Research on families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Major trends. In U. Uhlendorff, M. Rupp., & M. Euteneuer (Eds.), *Wellbeing of families in future Europe: Challenges for research and policy*. Family Platform.

Kiernan, K. (2002). Cohabitation in Western Europe. Trends, issues and implicationa. In A. Booth, & A. C. Crouter (Eds.) Just living together. *Implication of cohabitation on families, children, and social polic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3-31.

Köppen, K. (2011). *Marriage and cohabitation in Western Germany and France.* Dissertation. Universität Rostock.

Kreyenfeld, M., Andersson, G., & Pailhé, A. (2012). Economic uncertainty and family dynamics in Europe.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orking Paper WP 2012-006.

Kumagai, F. (2010). Forty years of family change in Japan: A society experiencing population aging and declining fertilit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1(4), 581-610.

Kuronen, M., Kröger, T., & Jokinen, K. (2011). Changes in Finnish families: Towards full-time motherhood and a new familialism? In Farrer, L., & Lay, W. (Eds.), Spotlights on contemporary family life. Familyplatform. *Families in Europe* Vol.2.

Morgan, S. P., & Rackin, H. (2010). A half century of fertility chang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1(4), 515-535.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stner, Ilona(2001). Cohabitation in Germany: rules, reality and public discours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15, pp. 88-101.

Sano, Y., & Yasumoto, S. (2013).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declining society: Development and challenges of family policies in Japan. In M. Robila (ed.), *Handbook of family policies across the globe.* New York: Springer.

Therborn, G. (2004). Bewtween sex and power. London: Routledg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09). *A literature review of family policy in four East Asian Societies*.

Trzcinski, E., & Camp, J. K (2013). Family Policy in Germany. In M. Robila (ed.), *Handbook of family policies across the globe*. New York: Springer.

Wells, M. B., & Bergnehr, D. (2013). Families and family policies in Sweden. In M. Robila (ed.), *Handbook of family policies across the globe*. New York: Springer.

부 록

부록 1.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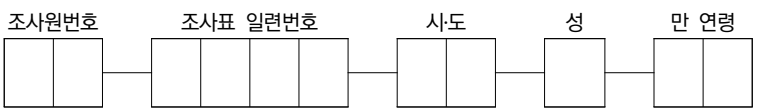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가족변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20~65세)의 의견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담당부서: 사회서비스연구실 (☎ 02-380-8210 김가희 연구원)



거주 지역	_____시·도
응 답 자	•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만 연령: _____세
	• 결혼상태: □① 유배우(동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이혼전제) □⑤ 미혼
전화번호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로 가족규모와 가족유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족변화는 가족부양 및 돌봄 등 가족기능의 공백 등으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 귀하의 생각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가족인식 및 태도

1. 귀하는 '가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① 조상을 같이 하는 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
□②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③ 같은 성(姓)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④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
□⑤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
□⑥ 공적인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
□⑦ 기타(_____)

1. □

2. 귀하는 '가족'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선택)

□① 혈연 □② 애정 □③ 안식처 □④ 같은 집에서 함께 동거
□⑤ 재정 공유 □⑥ 책임감 □⑦ 가장(家長) □⑧ 부담감
□⑨ 피곤함 □⑩ 따뜻함 □⑪ 기타(____)

2. □□

3. 귀하께서는 가족에 대한 다음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르겠음
3-1. 개인적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어려운 일에는 이웃이나 친구보다 친척이 더 큰 힘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3. 사회보다 내 가족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
3-2. □
3-3. □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4. 귀하께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경우에 따라서)
□④ 하지 않는 편이 좋다 □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⑥ 모르겠다

4. □

5. 귀하께서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② 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③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④ 이혼은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
□⑤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⑥ 모르겠다

5. ☐

6. 귀하께서는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④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⑤ 모르겠다

6. ☐

7. 귀하께서는 재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② 하는 것이 좋다
□③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④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⑥ 모르겠다

7. ☐

8. 귀하께서는 혼인에 관한 다음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르겠음	
8-1. 결혼은 개인이 가족 간의 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1. ☐
8-2.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①	②	③	④	⑤	8-2. ☐
8-3.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3. ☐
8-4. 남녀가 이혼 후에도 동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4. ☐
8-5. 노후에 외로우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5. ☐
8-6.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6. ☐
8-7.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7. ☐

9. 귀하께서는 혼인을 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꼭 있어야 한다 □② 있는 편이 좋다
□③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④ 없어도 상관없다 □⑤ 모르겠다

9. ☐

10. 귀하께서는 자녀를 기르는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① 가문의 대를 잇기 □② 가족결속을 든든하게 하기
□③ 노후안심 □④ 자녀를 키우는 일의 즐거움
□⑤ 결혼한 부부라는 사회적 인정
□⑥ 나의 꿈을 이루어 줄 후계자 □⑦ 기타(_____)

10. [ ]

11. 귀하께서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②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③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④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⑤ 언제(까지)라도 책임져야 한다
□⑥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⑦ 기타(_____)

11. [ ]

12. 귀하께서는 자녀에 관한 다음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르겠음	
12-1. 성인이라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1. [ ]
12-2. 노후를 위해서는 자식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2. [ ]
12-3. 자식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다	①	②	③	④	⑤	12-3. [ ]
12-4. 부부관계보다는 부모자녀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4. [ ]
12-5. 삶에서 자녀가 가장 우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12-5. [ ]
12-6. 노후에는 자식과 함께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2-6. [ ]

13. 귀하께서는 노부모 부양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① 장남 □② 아들 모두 □③ 딸
□④ 아들·딸 모두 □⑤ 능력 있는 자녀 □⑥ 스스로 해결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⑧ 기타(_____)

13. [ ]

14. 귀하께서는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책임을 어느 수준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① 노부모의 능력여부를 떠나 무엇이든지 책임져야 한다
□② 노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책임져야 한다
□③ 노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 책임져야 한다
□④ 노부모가 원할 경우에 책임져야 한다
□⑤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⑥ 기타(_____)

14. [ ]

15. 귀하께서는 가족부양에 관한 다음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르겠음	
15-1. 어머니는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1. [ ]
15-2. 남성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2. [ ]
15-3. 장남이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3. [ ]
15-4. 결혼한 여자는 친정부모보다 시부모를 우선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4. [ ]

16.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된 가족관계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__① 친부모와의 관계 __② 배우자와의 관계
__③ 자녀와의 관계 __④ 형제자매와의 관계
__⑤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__⑥ 조부모와의 관계
__⑦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__⑧ 손자녀와의 관계

16.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5순위 [ ]
6순위 [ ]
7순위 [ ]
8순위 [ ]

17. 귀하께서는 가족내 부부역할에 대한 다음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르겠음	
17-1.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7-1. [ ]
17-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2. [ ]
17-3.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7-3. [ ]
17-4. 아내가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아내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17-4. [ ]

응답자 일반사항

18. 귀댁의 총 가구원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18. □□ 명

19.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나의 아버지
□④ 나의 어머니 □⑤ 배우자의 아버지 □⑥ 배우자의 어머니
□⑦ 나의 형제자매 □⑧ 배우자의 형제자매 □⑨ 기타

19.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⑥ ⑦ ⑧ ⑨

20. 귀댁의 가구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조사원은 가족사항에 대한 응답을 듣고 아래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하십시오)

□① 1인 가구 □② 부부가구 □③ 부부+미혼자녀
□④ 한부모+미혼자녀 □⑤ 3세대가구
□⑥ 조부모+손자녀 □⑦ 기타가구(_____)

20. □

21. 귀하의 자녀수와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1. □□ 명

첫째 자녀: _____세 둘째 자녀: _____세
셋째 자녀: _____세 넷째 자녀: _____세

첫째 □□ 세
둘째 □□ 세
셋째 □□ 세
넷재 □□ 세

2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이하(무학 포함)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이상

22. □

23. 귀하께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일한다(근로자) □② 일하지 않는다(비근로자)☞질문24로

23. □

23-1. (일을 하고 있다면) 귀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종사자
□③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⑥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기타
□⑨ 비해당(비취업자, 학생, 전업주부 등)

23-1. □

23-2. (일을 하고 있다면)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③ 상용임시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
□⑨ 비해당(비취업자, 학생, 전업주부 등)

23-2. □

24. 지난 1년간(2012.1~12)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⓪ 소득없음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⑦ 잘 모르겠음

24. □

25. 귀하께서 판단하실 때 귀댁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상 □② 상중 □③ 상하 □④ 중상 □⑤ 중중
□⑥ 중하 □⑦ 하상 □⑧ 하중 □⑨ 하하
□⑩ 잘 모르겠음

25. □□ 명

부록 2.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가족변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20~65세)의 의견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담당부서: 사회서비스연구실 (☎ 02-380-8210 김가희 연구원)

조사원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시·도	성	만 연령
□□	□□□□	□□	□	□□

거주 지역	_____시·도
응 답 자	•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만 연령: _____세
	• 결혼상태: □① 유배우(동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이혼전제) □⑤ 미혼
전화번호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최근 우리사회는 가족구성원이 줄어들고,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1인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비혈연가족 등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변화로 인해 가족부양 및 돌봄 등 가족기능이 약해지고 부부 및 세대 간에 소통 단절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가족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① 사회가 산업화·도시화되어 교육·취업 등으로 인구이동이 많아짐
□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와 사회적 지위상승
□③ 결혼 및 자녀가치관 약화
□④ 개인주의적 사고로의 변화
□⑤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⑥ 기타(_____)

1. □

2. 귀하께서는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등 가족변화로 가족생활 중 어떤 부분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① 부부와 자녀 중심의 여가·문화생활이 증가됨
□② 부부중심의 생활방식으로 부모나 친인척관계가 소원해짐
□③ 1인 및 핵가족화로 가족돌봄과 부양기능이 약해짐
□④ 자녀양육 및 교육기능의 약화가 예상됨
□⑤ 가족관계 약화 및 갈등으로 별거·이혼 등이 증가함
□⑥ 기타(_____)

2. □

3. 귀하께서는 1인가구가 증가하면 우리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①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증가
□② 사회의 불안감 증대 □③ 친구·이웃의 중요성 증대
□④ 독거사 및 안전사고의 증가 □⑤ 수발서비스 필요 증가
□⑥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 촉진
□⑦ 기타(_____)

3. □

4. 귀하께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조부모와 손자녀만 사는 가족)이 증가하면 우리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① 부양자 상실로 인한 빈곤가족 증가
□② 이혼으로 인한 재혼가족 확대
□③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④ 가족의 돌봄 약화로 방임아동 및 비행청소년 증가
□⑤ 기타(_____)

4. □

5. 귀하께서는 공동체가족(혈연관계가 없는 개인들이 가족을 형성하여 생활)이 증가하면 우리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혈연가족 중심의 개념희박 및 가족관계 약화
□② 사람의 폐쇄성과 집단 이기주의 강화
□③ 평등한 인간관계 및 평등한 가족가치 확산
□④ 이웃의 다른 가족 등과 연대감 증대
□⑤ 기타(_____)

5. [ ]

6. 귀하께서는 핵가족화 및 1인가구, 한부모 및 비혈연가족의 증가 같은 가족변화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모르겠다

6. [ ]

7. 귀하께서는 가족변화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모르겠다

7. [ ]

8. 귀하께서는 소가족화 및 핵가족의 변화에 대응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가사관리 및 돌봄 서비스 제공
□② 소형주택/아파트 공급 확대
□③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④ 소가족 중심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
□⑤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강화
□⑥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한 환경 기반 마련
□⑦ 기타(_____)

8. [ ]

9. 귀하께서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의 증가에 대응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가사관리 및 돌봄 서비스 제공
□② 소형 및 공동 주택/아파트 공급 확대
□③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④ 1인가구 중심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
□⑤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 강화
□⑥ 1인가구 모임 등 사회적 지지 강화
□⑦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한 환경 기반 마련
□⑧ 기타(_____)

9. [ ]

10. 귀하께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증가에 대응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가사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
□② 양육비부담 경감 등 각종 양육지원
□③ 주택/아파트 공급 확대(주거지원)
□④ 자조모임 등 사회적 지지 강화
□⑤ 자립 및 취업지원 강화 □⑥ 사회적 편견 해소
□⑦ 기타(_____)

10. [ ]

11. 귀하께서는 공동체가족의 증가에 대응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사회적 편견 해소
□② 공동체가족의 법적·사회적 지위 확보
□③ 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
□④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⑤ 공동체와 지역사회 간 협력 모색
□⑥ 기타(_____)

11. [ ]

향후 가족변화 전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우리사회는 가족, 결혼, 자녀 등에 대한 가치관의 지속적인 변화와 제반 환경변화로 인해 독신자가족, 동거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공동체가족, 동성애 가족 등 다양하고 독특한 유형의 가족형태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가족변화의 원인을 무엇으로 예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①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② 여성의 독립의식 강화
□③ 개인주의적 사고로의 변화
□④ 결혼 및 자녀가치관 약화
□⑤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⑥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인구이동
□⑦ 기타(_____)

12. [ ]

13.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가족변화로 가족생활 중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우선순위로 두가지만 선택)

□① 가족 간에 정서적 유대감 약화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 증가함
□② 핵가족화로 부모자녀 중심에서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로 변화할 것임
□③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 관계 증가/새로운 형태의 가족 증가(동성부부, 무자녀가족, 동거가족, 공동체가족 등)
□④ 출산·양육 등 전통적인 남녀/부모 역할이 변화될 것임
□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임
□⑥ 결혼의 구속력 약화로 개인화 강화/혈연 중심의 가족주의 약화
□⑦ 기타(_____)

13.
1순위 [ ]
2순위 [ ]

14.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가족변화에 대응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① 가족돌봄의 지원 강화
□②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강화
□③ 다양한 사회참여 등 사회적 관계 강화
□④ 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
□⑤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⑦ 소수동호자 간의 네트워크 및 유대관계 강화
□⑧ 기타(_____)

14. □

가족의 생활실태

다음은 귀댁의 생활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분거로 나홀로 사는 가구, 재혼가족 등을 대상으로 변화원인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정책욕구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5. 귀댁에는 지금까지 혼인상태 및 주거 등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변화 있음 □② 변화 없음☞응답자 일반사항으로

15. □

15-1. 귀댁에서 발생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 변화 중심으로 한가지만 선택)

□① 이혼 □② 별거 □③ 사별
□④재혼 □⑤ 분가(주거상 독립) □⑥ 기타(_____)

15-1. □

15-2. 귀댁은 그 변화를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_____년도

15-2. □□□□ 년도

15-3. 귀댁에서 발생한 변화의 <u>가장 주된</u>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선택)

□① 이혼·별거(㉠ 성격차이 ㉡ 외도 ㉢ 경제문제 ㉣ 학대와 폭력 ㉤ 기타(_____))
□② 사별(㉠ 병사 ㉡ 사고사 ㉢ 자살 ㉣ 기타(_____))
□③ 재혼(㉠ 자녀에게 부모가 필요해서 ㉡ 부부생활이 필요해서 ㉢ 경제적인 안정 ㉣ 기타(_____))
□④ 분가(㉠ 경제력 ㉡ 직장·학교가 멀어서 ㉢ 개인생활을 누리려고 ㉣ 기타(_____))
□⑤ 기타(_____)

15-3. □□

16. 귀댁은 가족변화 전·후와 비교해 볼 때 다음 가족기능의 변화가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훨씬 좋아짐	좋아진 편임	변화 없음	나빠진 편임	훨씬 나빠짐	
16-1. 자녀를 출산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6-1.
16-2.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6-2.
16-3. 가족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6-3.
16-4. 가족원이 신체적으로 힘든 경우 도와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16-4.
16-5.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	①	②	③	④	⑤	16-5.
16-6. 가족원이 여가와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6-6.
16-7. 가족·친척·이웃이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16-7.

17. 귀하는 가족변화 후 가족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⓪ 어려움 없음
□① 가족돌봄의 어려움
□② 경제적 어려움
□③ 자녀양육 및 훈육의 어려움
□④ 가사노동의 부담
□⑤ 건강상의 문제
□⑥ 가족 및 친인척과의 관계
□⑦ 신변에 대한 불안감
□⑧ 주위의 편견
□⑨ 기타(_____)

17. [ ]

18. 귀하는 가족변화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한가지만 선택)

□① 가사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
□② 전문상담 및 교육 등 정서적 지원
□③ 각종 경제적 지원
□④ 가족관계 강화
□⑤ 자조모임 등 사회적 지지 강화
□⑥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⑦ 자녀양육지원 □⑧ 기타(_____)

18. [ ]

응답자 일반사항

19. 귀댁의 총 가구원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19. □□명

20.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나의 아버지
□④ 나의 어머니 □⑤ 배우자의 아버지 □⑥ 배우자의 어머니
□⑦ 나의 형제자매 □⑧ 배우자의 형제자매 □⑨ 기타

20.
① ② ③ ④ ⑤
□ □ □ □ □
□ □ □ □ □
⑥ ⑦ ⑧ ⑨

21. 귀댁의 가구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조사원은 가족사항에 대한 응답을 듣고 아래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하십시오)

□① 1인 가구 □② 부부가구 □③ 부부+미혼자녀
□④ 한부모+미혼자녀 □⑤ 3세대가구
□⑥ 조부모+손자녀 □⑦ 기타가구(_____)

21. □

22. 귀하의 자녀수와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첫째 자녀: _____세 둘째 자녀: _____세
셋째 자녀: _____세 넷째 자녀: _____세

22. □□명

첫째 □□세
둘째 □□세
셋째 □□세
넷재 □□세

2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이하(무학 포함)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이상

23. □

24. 귀하께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일한다(근로자) □② 일하지 않는다(비근로자)☞질문24로

24. □

24-1. (일을 하고 있다면) 귀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종사자
□③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및 관련 가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⑥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기타
□⑨ 비해당(비취업자, 학생, 전업주부 등)

24-1. □

24-2. (일을 하고 있다면)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③ 상용임시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
□⑨ 비해당(비취업자, 학생, 전업주부 등)

24-2. ☐

25. 지난 1년간(2012.1~12)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⓪ 소득없음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⑦ 잘 모르겠음

25. ☐

26. 귀하께서 판단하실 때 귀댁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상 □② 상중 □③ 상하 □④ 중상 □⑤ 중중
□⑥ 중하 □⑦ 하상 □⑧ 하중 □⑨ 하하
□⑩ 잘 모르겠음

26. ☐☐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회비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01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김남순
연구 20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3-03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대중
연구 20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윤강재
연구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2013-06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김정선
연구 2013-07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2013-08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3-09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2013-11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Ⅰ: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강희정
연구 2013-1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원종욱
연구 2013-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강신욱
연구 2013-14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남상호
연구 20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성장배경을 중심으로	김문길
연구 2013-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임완섭/노대명
연구 20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연구 2013-20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3-2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연구 2013-2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20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2013-24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박수지
연구 2013-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박인화
연구 2013-26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제이
연구 2013-27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신화연
연구 2013-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유근춘
연구 2013-29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정영철
연구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연구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 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2013-31-02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연구 20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연구 20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
연구 2013-31-07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도세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31-08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3-31-09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산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소영
연구 2013-31-1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황나미
연구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오영희
연구 2013-31-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외부위탁
연구 2013-31-13	남북한 통합 시 적정인구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연구 20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이윤경
연구 2013-31-1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윤석명
연구 20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3-31-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구 2013-31-19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정영호
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농촌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영향평가TWG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석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 -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영
연구 2013-39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_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산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